

연구 2006-22-1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김 승 권

전광희 김태헌 이성용

Hiroshi Kojima Toru Suzuki Ryuzaburo Sato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정부는 1962년부터 경제개발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해 온 인구증가억제정책을 도입 35년만인 1996년에 폐지하고, 인구자질 향상과 복지증진 정책으로 전환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배경은 그간에 이룩된 고도의 경제성장과 가족계획사업 위주의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1987년 이래 우리나라 여성의 합계출산율과 부인의 피임실천율이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인구증가억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경우 21세기 초에는 노동력 수급문제, 노년인구의 급증에 따른 복지부담, 핵가족화의 촉진과 가구원수의 감소에 따른 가족해체 등 제반 문제를 촉진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한편 1980년대부터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더불어 새로운 인구문제로 등장해온 출생성비의 불균형을 포함하여 인공임신중절의 만연, 청소년의 성문제, 에이즈의 증가 등 시급한 정책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전환은 인구정책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견도 없지 않았다. 이는 100여 년에 걸쳐 사회·문화적 변화와 더불어 이룩된 선진국에서의 인구전환 과정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주도의 강력한 인구정책에 의해서 불과 30년의 짧은 기간에 인구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급격한 정책전환은 그간 조성되어 온 저출산 및 피임실천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불과하였으며,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어 세계에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낮은 출산수준을 보이고 있는 초저출산국가 한국과 일본의 인구체제를 비교연구하고 있다. 특히, 동양권 사회에서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위치에 두 사회의 비교연구는 다른 저출산 국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

다. 본 연구는 당 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김승권 박사의 책임 하에 원내·외 연구진에 의해 완성되었다. 각 연구자들의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김승권)

제2장 초저출산 인구체제 국가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전광희)

제3장 한일 양국의 혼인력과 출산력 변화의 특징 (김태현)

제4장 한국의 고령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김승권)

제5장 한국의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의 변화 (이성용)

제6장 최근 일본의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추이 (Ryuzaburo Sato)

제7장 일본 가족정책 및 이민정책의 동향과 함의 (Hiroshi Kojima)

제8장 한일양국의 초저출산의 원인과 국가정책의 비효율성 (Toru Suzuki)

제9장 정책적 제언 (김승권)

원내의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일본 후생노동생의 인구학자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준 조남훈 초빙연구위원과 박세경 책임연구원, 그리고 보고서 에디팅을 맡아 준 이건우 연구원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2006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용문

목 차

요 약	17
제1장 서 론	6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6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71
제2장 초저출산 인구체제 국가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73
제1절 한국의 장래인구추계와 한일 양국의 저출산 인구체제	74
제2절 한일 양국의 출산력 수준과 템포: 비교의 관점	81
제3절 한일양국과 구미 선진국의 저출산 관련 특성의 비교	96
제4절 초저출산 체제의 지속과 인구정책의 효율성 문제	111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128
제3장 한일 양국의 혼인력과 출산력 변화의 특징	133
제1절 개요	133
제2절 혼인행태의 변화	135
제3절 출산율의 변화	144
제4절 출산행태의 변화	151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159
제4장 한국의 고령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163
제1절 개요	163
제2절 여성연령과 임신 및 출산	164
제3절 한국의 고령출산 실태	166
제4절 출산가정 및 출산당사자의 특성과 출산연령	174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182
제5장 한국의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의 변화	185
제1절 개요	185
제2절 기존연구 검토	186

제3절	분석자료의 구성 및 변수	192
제4절	분석결과	199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214
제6장	최근 일본의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추이	218
제1절	문제제기	218
제2절	출산통제 행위의 변화	226
제3절	성행위와 파트너십 행위의 변화	244
제4절	생식관련 요인들의 변화	253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255
제7장	일본 가족정책 및 이민정책의 동향과 함의	262
제1절	개요	262
제2절	출산율과 가족정책의 최근 발전 동향	263
제3절	국제이주와 관련 정책의 최근 동향	274
제4절	인구관련 태도	281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인구통합적 측면	286
제8장	한일 양국의 초저출산의 원인과 국가정책의 비효율성	288
제1절	개요	288
제2절	양(quantum)과 속도(tempo)	289
제3절	결혼율과 유배우출산율	291
제4절	출산율 결정요인	297
제5절	정부노력의 비효율성	305
제6절	비교적 관점에서 본 저출산과 정책노력	315
제7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323
제9장	정책적 제언	325
제1절	초저출산 사회의 사회정책방향	325
제2절	저출산 대책의 세부 방안	327
참고문헌	333

표 목 차

〈표 2- 1〉 한국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과 유엔의 추계결과와 주요가정	75
〈표 2- 2〉 한일 양국의 합계출산율과 인구성장률: 실적치와 추계치	78
〈표 2- 3〉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의 변화: 1975~2005	86
〈표 2- 4〉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의 변화: 1975~2005	88
〈표 2- 5〉 출산순위별 조정합계출산율의 한일양국 비교: 1976~2005	91
〈표 2- 6〉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출산간격의 변화: 1975~2005	95
〈표 2- 7〉 자립에 필요한 소득 수준에 대한 의견	102
〈표 2- 8〉 한일양국의 자녀출산에 대한 의견	103
〈표 2- 9〉 육아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한일 의견	109
〈표 2-10〉 한일 양국과 구미선진국 응답자들의 저출산 책임에 대한 의견	111
〈표 2-11〉 한일양국의 생애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추이: 1925~2005	125
〈표 2-12〉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 변동의 요인분해: 1970~2005	127
〈표 2-13〉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 변동의 요인분해: 1970~2005	128
〈표 3- 1〉 초혼연령 변화의 한일비교, 1990~2005	137
〈표 3- 2〉 성 및 연령별 미혼율 변화의 한일비교, 1980~2005	140
〈표 3- 3〉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 변화의 한일비교: 1980~2005	142
〈표 3- 4〉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과 유배우율의 한일 비교, 2005	144
〈표 3- 5〉 합계출산율 변화의 한일비교, 1975~2005	145
〈표 3- 6〉 연령별 출산율 변화의 한일비교, 1970~2005	149
〈표 3- 7〉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변화의 한일비교, 1980~2005	153
〈표 3- 8〉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연령변화의 한일비교, 1981~2005	155
〈표 3- 9〉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구성비 변화의 한일비교, 1975~2005	156
〈표 3-10〉 한국의 15~44세 부인의 임신회수 및 소모형태	158

〈표 3-11〉	일본의 연도별 인공임신중절 실태	159
〈표 4-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소모 횟수 분포	166
〈표 4-2〉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기초한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167
〈표 4-3〉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기초한 출산율의 3대 연령층 비중	168
〈표 4-4〉	「인구동태통계」에 기초한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169
〈표 4-5〉	「인구동태통계」에 기초한 출산율의 3대 연령층 비중	171
〈표 4-6〉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변동추이: 1960~2005	172
〈표 4-7〉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수: 1995~2005	174
〈표 4-8〉	가구특성에 따른 고령출산 양상	176
〈표 4-9〉	출산당사자의 특성과 출산연령	177
〈표 4-10〉	남아선호가치관과 출산연령	178
〈표 4-11〉	자녀양육책임 가치관과 출산연령	179
〈표 4-12〉	가구의 가사분담과 출산연령	180
〈표 4-13〉	현존자녀수 및 자녀 성에 따른 출산연령	181
〈표 4-14〉	고령출산여성의 추가자녀계획	182
〈표 5-1〉	결혼에서 첫 아이까지 피임·인공임신중절 모형의 빈도분석	193
〈표 5-2〉	첫 아이에서 둘째 아이까지 피임·인공임신중절 모형의 빈도분석	194
〈표 5-3〉	결혼에서 첫 아이까지에 대한 피임모형 분석 결과	201
〈표 5-4〉	결혼에서 첫째 아까지 임신중절 모형분석 결과	205
〈표 5-5〉	첫 아이에서 둘째 아 피임 모형 분석 결과	207
〈표 5-6〉	첫째 아에서 둘째 아까지 인공임신중절 모형 분석 결과	213
〈표 6-1〉	인공임신중절 수준과 관련되는 요인들	256
〈표 7-1〉	결혼연령에 따른 출산율 및 결혼율 성향: 1950~2005	264
〈표 7-2〉	주요 소자화 대책(가족정책안) 연보	266
〈표 7-3〉	결혼율과 출산율에 대한 지역별 소자화 대책의 효과	269
〈표 7-4〉	성별 국적별 순이민자수: 1960~2004	275
〈표 7-5〉	주요 국제 이민정책 대안 연보	277
〈표 7-6〉	외국인 결혼 비율: 1970~2004	279

〈표 7- 7〉 35세 미만 외국인 신부의 이민 지위와 연령에 따른 가족구성 유형	280
〈표 7- 8〉 인구노령화와 그 지연책 선택에 대한 태도: 1990, 1995	283
〈표 7- 9〉 자녀 불필요성, 소가족 선호, 이혼 선호에 대한 기혼여성의 동의 비율	285
〈표 8- 1〉 합계출산율의 감소율	296
〈표 8- 2〉 일본내 아동수당의 효율성	308
〈표 8- 3〉 일본에서의 육아 휴직의 효과	310
〈표 8- 4〉 30~34세 기혼 여성의 노동력 참여와 모성	314
〈표 8- 5〉 2000년 이후 초저출산	316

그림 목 차

[그림 1- 1]	한일 양국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1950~2005	69
[그림 2- 1]	한국과 일본의 인구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의 비교: 한국과 일본 ..	80
[그림 2- 2]	한일 양국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와 예정자녀수: 1976~2005 ..	84
[그림 2- 3]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의 비교: 1975~2005	87
[그림 2- 4]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의 비교: 1975~2005 ..	89
[그림 2- 5]	출산순위별 조정합계출산율의 한일양국 비교: 1976~2005	92
[그림 2- 6]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출산간격: 1975~2005	96
[그림 2- 7]	한일 양국과 구미선진국의 혼인상태	97
[그림 2- 8]	한일양국과 구미선진국 표본의 평균연령과 연평별 분포	98
[그림 2- 9]	응답자의 평균혼인연령과 혼인연령의 분포	99
[그림 2-10]	조사대상국의 응답자의 동거경험과 평균동거연령	100
[그림 2-11]	응답자의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의견의 분포	101
[그림 2-12]	조사대상국 응답자의 동거에 대한 의견	101
[그림 2-13]	한일 양국의 이상자녀수의 분포	104
[그림 2-14]	한일 양국의 실제자녀수의 평균과 분포	105
[그림 2-15]	혼외출산에 대한 각국 응답자의 의견 분포	106
[그림 2-16]	육아의 즐거움에 대한 한일 양국 응답자의 의견	107
[그림 2-17]	한일양국 응답자의 육아환경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의 분포 ..	108
[그림 2-18]	자녀양육의 부담상태에 대한 한일 양국 응답자의 분포	109
[그림 2-19]	육아지원시책을 둘러싼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의견 분포	110
[그림 2-20]	만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초혼율의 변화	113
[그림 2-21]	만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합계초혼율과 기간 합계초혼율의 변화 ..	114
[그림 2-22]	만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합계출산율과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 ..	115

[그림 2-23]	비혼화 모형에 따른 초혼연령의 변화	116
[그림 2-24]	비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합계초혼율과 기간 합계초혼율의 변화	117
[그림 2-25]	비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합계출산율과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	118
[그림 2-26]	만혼화/비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초혼율의 변화	119
[그림 2-27]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코호트 합계초혼율과 기간 합계초혼율의 변화	120
[그림 2-28]	만혼화/비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및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 ·	120
[그림 2-29]	여자의 기간별(연도별) 연령별 누적 초혼율: 1972~2004	122
[그림 2-30]	여자의 기간(연도별) 연령별 초혼율: 1972~2004	123
[그림 2-31]	여자의 연령별 초혼율의 시차별 증가율: 1975~2004	124
[그림 2-32]	한일양국의 생애미혼율의 추이: 1970~2005	126
[그림 2-33]	한일 양국의 초혼연령(SMAM)의 추이: 1970~2005	126
[그림 2-34]	한국의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2005	131
[그림 3- 1]	초혼연령 변화의 한일비교, 1990~2005	138
[그림 3- 2]	연령별 여성 미혼율 변화의 한일비교: 1990, 2005	141
[그림 3- 3]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 변화의 한일비교: 1990, 2005	143
[그림 3- 4]	합계출산율 변화의 한일비교: 1970~2005	146
[그림 3- 5]	연령별 출산율 변화의 한일비교: 1970~2005	150
[그림 3- 6]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변화의 한일비교: 1980~2005	153
[그림 4- 1]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기초한 출산율의 3대 연령층 비중 변화추이	169
[그림 4- 2]	『인구동태통계』에 기초한 출산율의 3대 연령층 비중 변화추이	170
[그림 6- 1]	출산 수와 합계출산율: 1947~2004	219
[그림 6- 2]	연령별 출산율: 1950~2003	220
[그림 6- 3]	자녀 순위별 임신연령: 1954~2003	221
[그림 6- 4]	인공중절의 수와 비율: 1955~2004	226
[그림 6- 5]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1955~2004	227
[그림 6- 6]	인공임신중절률, 임신율 및 인공임신중절 비율: 1955~2004 ·	230

[그림 6-7]	연령별 임신율: 1955~2004년	231
[그림 6-8]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비율: 1955~2004년	232
[그림 6-9]	1955년부터 1975년 사이의 변화	232
[그림 6-10]	1955년부터 1975년 사이 인공임신중절률 변화 분석	233
[그림 6-11]	1975년부터 2004년 사이 인공임신중절률 변화 분석	234
[그림 6-12]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235
[그림 6-13]	기혼여성의 피임실패	237
[그림 6-14]	기혼여성의 사용 피임방법	238
[그림 6-15]	기혼여성의 피임실패	239
[그림 6-16]	기혼여성의 연령별 피임실패	239
[그림 6-17]	다음 자녀를 갖기 전 희망 피임 실패	240
[그림 6-18]	현재 피임 실천자의 피임방법	241
[그림 6-19]	성경험이 있는 미혼여성의 피임실패	243
[그림 6-20]	결혼수와 조혼인율	245
[그림 6-21]	평균 결혼연령(첫 번째 결혼 및 모든 결혼): 1947~2004	245
[그림 6-22]	기혼여성의 연령별 비율: 1950~2000	246
[그림 6-23]	연애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	247
[그림 6-24]	성행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	248
[그림 6-25]	성경험이 있는 미혼남성들의 비율	249
[그림 6-26]	성경험이 있는 미혼여성들의 경험	249
[그림 6-27]	미혼남성과 여성들의 파트너십 유형	250
[그림 6-28]	연령별 기혼부부들의 성관계를 갖지 않는 비율	251
[그림 6-29]	일본에서의 콘돔 매출량(1979~2003년)	252
[그림 6-30]	불임을 걱정하는 기혼부부의 비율	254
[그림 8-1]	일본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290
[그림 8-2]	일본과 한국의 수정 합계출산율	291
[그림 8-3]	일본과 한국의 합계초혼율	293
[그림 8-4]	일본과 한국의 평균 초혼연령	294

[그림 8- 5]	일본과 한국의 결혼지속기간별 출산율	294
[그림 8- 6]	일본과 한국의 가상 합계출산율	295
[그림 8- 7]	일본과 한국의 실제 합계출산율	296
[그림 8- 8]	일본과 한국의 기혼부인 피임비율	298
[그림 8- 9]	일본과 한국의 이상자녀수 비교	299
[그림 8-10]	일본과 한국의 대학 입학비율	300
[그림 8-11]	일본과 한국의 가계소비 중 교육비 비율	301
[그림 8-12]	일본과 한국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302
[그림 8-13]	부정 상관관계를 보이는 영역	313
[그림 8-14]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318
[그림 8-15]	프랑스, 영국, 미국의 합계출산율	319
[그림 8-16]	1960년대 경 태어난 동년배들의 가정 이탈 평균 연령	321

Abstract

A Study on the trends of Fertility Behaviors and policies in the lowest fertility countries, Korea and Japan

There was an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defined as having TFR (Total Fertility Rate) of 1.3 or less in Europe in the 1990s. After the turn of century, lowest-low fertility started spreading in Eastern Asia. The TFR in the Republic of Korea (simply "Korea" henceforth) showed a drastic decline since 2001 and arrived at an incredibly low level of 1.08 in 2005. Japan's TFR of 1.25 in 2005 is also lower than most European countries.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was accompanied by various reversals in the relation with socioeconomic determinants at the aggregate level. Unlike in the 1970s, low fertility countries of today are characterized by low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obust marriage institution, and strong family ties. Thus, it is not the change in family values toward individualization and secularization as emphasized in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van de Kaa, 1984) that is responsible for lowest-low fertility. Rather, we should focus on the disharmony between the changing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fertility and unchanging family values in lowest-low fertility countries.

To develop the theory of lowest-low fertility, this paper attempts a detailed comparison between Japan and Korea. Efforts will be made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fertility between two countries, as well as to explain recent changes in each country. After considering the effect of tempo distortion, a decomposition of fertility decline to nuptiality and marital fertility will be attempted. It will be shown that demands for spouse and children are not declining rapidly and are not at lowest-low level.

Thus, recent fertility decline should be explained not from changing family values but from obstacles to fulfill the demand. Such obstacles as direct cost of children, difficulty for occupational achievement for youth and opportunity cost accompanied by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examined.

After describing the history of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promote fertility in Japan and Korea, the effects of policy measures such as child allowance, childcare leave, and daycare service will be examined. Analyses in Japanese literatures imply that those measures are not as effective as expected. Then, it will be shown that most of the differences between moderately low and lowest-low fertility are attributed to direct effects of cultural features, not to governmental efforts. A cultural deterministic view on fertility points out the cultural features in moderately low fertility countries that prevented fertility from declining to the lowest-low level. It will be shown that these cultural differences are beyond the family policy, and that a governmental intervention cannot induce continuous fertility recovery to the moderately low level.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지정학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동북아시아의 한일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한국의 급격한 출산력 저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정책의 효율성을 감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한국과 일본의 출산력 변천의 특징 분석과 초저출산의 공통원인 및 개별 원인을 규명함.
-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을 비교분석하고 효율적 방안을 도출하며,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시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한일 출산율 비교를 위한 Bongaarts Model의 효율성에 관한 검토를 위해 출산동향의 특성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실시함.

- 제3장에서는 인구동태자료에 근거하여 혼인력과 출산력의 특징을 한일간에 비교하고, 제4장에서는 한국의 고령출산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제5장에서는 한국의 피임과 인공유산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제6장~제8장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인구학자에 의하여 분석되었는, 제6장에서는 제5장과 관련하여 일본의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추이를, 제7장에서는 일본 가족정책 및 이민정책의 동향과 한국사회에서의 함의, 그리고 제8장에서는 한일양국의 초저출산의 원인과 국가정책의 비효율성을 분석하면서 효과성 증대방안을 논의함.
- 제9장에서는 전술한 제2장~제8장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대응방안을 위한 정책을 논의함.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기존자료 분석, 연구진 및 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

제2장 초저출산 인구체제 국가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제1절 한국의 장래인구추계와 한일 양국의 저출산 인구체제

□ 합계출산율

- 일본은 1960년대(1960년 2.00명)에 합계출산율이 여자 1인당 대체수준인 2.1 이하로 떨어졌고, 한국은 1980년대 중반(1984년 1.67명)에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음.
 - 1960년의 일본의 인구성장률과 1985년의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0.93%와 1.02%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어 약 25년의 시차를 보임.
-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며 떨어져서, 2000년에

는 여자 1인당 1.36에 이르렀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5년에는 1.25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한일 양국의 분명한 차이점은 1960대와 1970년대의 일본의 출산력 저하와 비교할 때, 1990년대(1995년 1.65명)와 2000년대(2005년 1.08명)에 한국의 출산력 저하가 대단히 빠르다는 사실임.

제2절 한일 양국의 출산력 수준과 템포: 비교의 관점

□ Bongarrrts 출산모형의 변수들

- Bonngaarts는 자신의 수리모형을 합계출산율(TFR), 정확히 기간합계출산율과 희망자녀수(DFS)와의 격차를 설명하는 6개 요인을 정리하고 있음.
 - 개별 승수요인(乘數要因) 이외의 여타 요인이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출산축진효과 또는 출산억제효과 존재여부에 따른 합계출산율의 비(比)로 추정하는 공식
 - 합계출산율, 출산연령의 상승 또는 저하의 효과를 제거한 이른바 ‘조정 합계출산율’과 희망자녀수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실제상황에 응용해볼 수 있는 공식
 - 출산속도 변화에 의한 출산억제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출생순위별 합계출산율에서 출산연령의 상승에 따른 속도효과를 제거한 조정합계출산율을 추정하는 공식
 - 조정합계출산율은 모든 출생순위에서 합계출산율을 $(1 - m_0)$ 로 나누어, 출산연령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실제로 관측 가능한 합계출산율을 구하는 공식
 - 출생순위별 보정합계출산율을 합산하면, 출산연령의 상승에 따른 속도효과를 제거한 보정합계출산율을 구하는 공식
 - 잔여범주인 F' 를 구하는 공식

□ 한일 양국의 출산력 비교: 수준과 템포의 비교

- 한국의 모든 자녀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1975년의 3.36명에서 2005년의 1.08명으로 격감 초저출산 인구체제가 2002년부터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1975~2005기간합계출산율의 저하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변화나 문화적 제약여건을 반영하면, 1978년의 말띠 해는 합계출산율이 격감하였다가 1979년에 다시 반등하였지만, 1983년에는 2.06명에 이르면서 대체수준 이하의 합계출산율로 떨어지기 시작하였음.
 -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은 2005년 현재 최근의 젊은 여성들의 혼인연령 상승이나 독신선호 경향의 강화로 인한 비혼화나 만혼화의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저하할 가능성이 큼.
-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5년의 1.91명에서 2005년의 1.26명으로 감소하여, 한국의 출산율 저하 추이보다는 심각성이 덜 해보이지만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국가로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음.
 - 일본은 1974년에 합계출산율이 2.05명으로 대체수준을 밑돌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의 합계출산율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가 2002년 1월에 발표한 일본장래추계인구의 중위추계에서 전제로 하는 2006년의 1.31명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3절 한일양국과 구미 선진국의 저출산 관련 특성의 비교

□ 혼인상태와 초혼연령

- 일본 내각부의 국제비교 의식조사 결과의 응답자 혼인상태를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자 중 ‘현재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4.4%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현재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8.3%로 나타났음.

- 25~29세에 ‘결혼을 했다’는 응답자가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25~29세의 비율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한국은 30~34세까지의 비율이 21.5%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일본은 20~24세까지가 33.6%로 나타나서 한국이 일본보다 만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줌.
- 한국과 일본은 ‘동거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특히, 한국은 93.1%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전통적 가족관리와 혼인규범의 보수성은 여전히 한국 응답자의 동거경험을 위축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음.
- 한국은 ‘결혼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8.3%를 차지하고 있었음.
 - 일본은 ‘결혼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53.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결혼도 동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22.7%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리고 ‘결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1.5%만을 차지하고 있었음.

□ 결혼과 자립에 대한 의견

-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소득수준에 대하여 한국의 응답자들은 200만에서 299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일본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에서 299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 자녀출산에 대해서는 한국은 ‘자녀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응답이 85.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아이는 ‘부부의 생활을 안정시켜준다’는 것이 46.1%, 세 번째로는 ‘아이가 생활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이 43.5%를 차지했음.
 - 일본은 ‘아이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응답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다음으로는 ‘아이가 있으면 생활

이 즐겁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세 번째로는 '좋아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싶기 때문이다'는 응답이 21.9%를 차지함.

- 한일 양국의 이상자녀수는 한국 2.3명 일본 2.4명으로 나타나, 이상자녀수는 큰 차이가 없었음.
- 실제자녀수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응답자는 평균 1.5명과 1.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육아에 대한 의견

- 한국의 응답자는 '육아에 대한 즐거움을 아주 많이 느낀다'의 비율이 63.2%로 가장 높으며, '즐거움을 느끼는 편이 약간 많다'의 비율이 3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음.
 - 일본은 "즐거움을 아주 많이 느낀다."와 "약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합한 비율이 85.1%로 나타났음.
- 아이를 낳아 기르기 쉬운 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일본은 보면,
 - 육아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국의 응답자들은 육아에 '지출이 늘어난다'가 75.6%, 일본은 '육아에 대한 지출 부담'과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높았음.
- 육아의 부담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모두 주로 아내가 부담하지만 남편이 가끔 도와준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똑같이 부담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1.2~31.4%로 비슷하게 나타났음.
- 한국과 일본은 육아지원정책을 꼭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일본이 62.0%, 한국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제4절 초저출산 체제의 지속과 인구정책의 효율성 문제

□ 세 종류의 시뮬레이션과 출산력 반전의 가능성

- 한일 양국의 합계출산율 반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만혼화, 비혼화, 만혼화/비혼화 등 세 종류의 모형에 공통으로 5개의 가정을 적용함
 - 만혼화 모형, 비혼화 모형, 만혼화·비혼화 모형의 변화 이전에는 초혼율의 연령분포가 똑 같음.
 - 변화 이전의 연령별 초혼율의 합계는 1.0으로서, 여자 출생코호트의 구성원 모두가 연령별 초혼율의 스케줄에 따라 예외 없이 결혼함.
 - 변화 이후 연령별 초혼율의 분포는 각각의 모형의 가정조건에 의하여 결정되겠지만, 변화 이전부터 변화가 일어난 후까지의 경과연수는 10년간임.
 - 결혼 직후에 모든 여성은 출산하며, 출생아수는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지만 결혼한 여성은 모두 평균 1.5명의 자녀를 출산한다고 가정함.
 - 이혼·재혼 등의 출산율을 떨어뜨리거나, 여성본인의 사망으로 당초의 코호트 규모가 줄어들지 않음.

□ 연령별초혼율 변화와 출산율 반전의 가능성

-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입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주요 특징은 혼인연령의 정점이 1970년대의 22~23세에서 2000년대에는 25~26세로 변하고 있다는 것임.
 - 1980년대에는 20세 후반에서 초혼율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며, 1990년대에는 30대 초반에서 초혼율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음.
- 20세 후반에서 30세 전반으로 관심을 옮겨보면, 1990년대보다 2000년대 초반의 초혼율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
 - 20세 후반부터 30세에 결혼하려는 움직임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음.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 고용 및 소득 불안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초저출산 대응정책은 결혼대책의 틀을 넘어서 거시적 차원의 정책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젊은 여성들이 자아성취를 실현시키면서 일과 결혼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일과 가정의 양립곤란과 결혼 후 직장에서의 차별을 염려하여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막기 위하여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의 창출은 물론 결혼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제도 필요.
- 지나친 결혼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혼화나 비혼화의 경향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혼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여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하여, 결혼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상담업(결혼중매, 미혼자데이트서비스)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할 것임.
 - 국공립 결혼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건전한 민간 결혼정보 회사를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임.

제3장 한일 양국의 혼인력과 출산력 변화의 특징

제1절 개요

-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합계출산율이 1998년

처음으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에는 1.3명으로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 2005년 1.08명으로 더 낮아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력(lowest-low fertility)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출산력이 우리보다 10여년이 빠른 1970년대 초에 대체수준에 도달하였으며, 1987년에 합계출산율 1.57명으로 1.6명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본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제2절 출산율의 변화

□ 합계출산율

-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율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밀레니엄 베이비로 일시적인 출산의 집중현상이 다음 해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2001년에는 1.30명으로 급감하였음.
 - 그 후 1.1명대로 낮아지는 초 저출산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이 수준은 2005년에 다시 1.08명까지 끝없는 감소가 이어지고 있음.
-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수준의 급감으로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2006년에 확정하여 강력한 저출산대책을 도입하였으므로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음.
- 일본의 출산율은 2000년(1.36명)이 지나면서도 1.3명대를 유지하였으며, 최근에 1.2명대로 낮아졌으나 그 감소 폭은 한국에 비하여 적었으며, 양국의 출산수준의 차이는 더욱 커졌음.

□ 연령별 출산율

- 2005년의 연령별 출산유형은 출산 중심 연령층은 25~34세로 이동하였으며, 25세 이후의 출산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그러나 20~24세의 한국 출산율이 일본 수준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2005년 한국의 출산수준이 일본보다 낮은 원인을 20~24세의 낮은 출산수준에서 찾을 수 있음.

- 따라서 결혼연령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20대 초의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일본과의 출산율 차이가 줄어들 것임.

제3절 혼인행태의 변화

□ 초혼연령

- 1990년에 한국 남성의 결혼연령이 일본보다 0.6년 빨랐으나 1997년부터 일본 남성의 초혼연령보다 늦어졌음.
 - 그 후 그 차이는 더욱 커져서 2005년에는 1.1년이 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1990년에 1.1년이나 빨리 결혼하던 차이가 1997년까지 매우 느리게 차이를 좁혀 갔으나 1998년부터 그 차이는 빠르게 감소하여 2003년에는 0.3년까지 줄어든 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에서는 1990년에 남녀별 평균혼인연령의 차이가 3.0년이었으며, 2000년대 초까지 이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
 - 일본 남녀의 결혼연령 차이는 1990년에 2.5년에서 2000년에는 1.8년으로 0.7년이 줄었음.

□ 혼인상태

-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여성의 미혼율은 한국 여성의 결혼연령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일본과 차이가 가장 큰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을 뿐 다른 연령별 미혼율의 유형의 차이의 변화가 특이하게 바뀌지 않았음.
 - 일본 여성의 경우 미혼상태에서 가임기간을 보내는 경우가 10%에 육박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2005년에 2.4%).
- 한국과 일본 여성의 유배우율 차이의 변화는 연령에 따라 뚜렷하였다. 20~24세에서 일본 여성의 유배우율이 한국에 비하여 낮았으나(1980 및

1990),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높아졌음.

- 25~29세에서는 그 차이가 199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크게 감소하였으며, 30세 이후 모든 연령층에서 한국과 일본의 유배우율 차이가 점점 더 커졌음.

제4절 출산행태의 변화

□ 출산시기

- 2000년까지 한국과 일본 모두 출산의 중심연령층은 25~29세였으나 2005년에는 중심연령이 30~34세로 높아졌음.
 - 그러나 두 번째로 출산수준이 높은 연령층은 양국이 분명히 차이가 있어, 한국에서는 1990년까지 20~24세의 출생아수가 25~29세 다음을 이었으며, 그 후 30~34세의 출생아수가 많아졌고, 일본의 경우는 1980년 이후 2000년까지 30~34세의 출생아수가 25~29세 다음으로 많았음.
- 한국 여성은 결혼하기 전의 출산수준이 매우 낮고(혼외 임신의 대부분이 인공임신중절 됨), 늦게 결혼하여 짧은 기간 내에 원하는 자녀를 낳고 단산함으로써 모의 연령별 출산자녀수는 25~29세 및 30~34세에 집중되었다고 하겠음.

□ 출산시기

- 한국 모(母)의 평균출산연령이 빠르게 높아져서 일본 모(母)의 연령보다 늦어지는 것은 초혼연령의 지연과 출산행태의 변화에 따른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임.
 - 1990년 첫째 아의 평균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은 한국에서 일본보다 0.7년이 빨랐으며, 2004년에는 그 차이가 0.3년으로 감소하였음.
 - 한국과 일본 모두 초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후 첫째 출산까지의 기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속도는 한국에서 빨랐음.

- 둘째의 평균 출산연령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려서 한국 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일본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2004년이었으며 셋째부터는 출생아수가 늘어날수록 출산시 평균연령이 일본보다 더욱 늦어졌음.
- 한국 여성의 출산행태가 결혼 후 두 명의 자녀를 짧은 기간 내에 출산하는 경향이 강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음.

□ 임신과 임신소모

-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일본에 비하여 2005년에 0.17명(약 15%)이 낮았으나 출생아수 대비 인공임신중절건수의 비율은 높았으므로 한국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건수를 줄이고, 혼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정상 출산할 수 있다면 출산율 회복에 도움이 클 것임.
- 총 임신회수(2005년 2.62회)의 약 3분의 2(67.2%)만이 정상출산하고 있고, 총 임신건수의 32.8%가 주로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로 임신을 종결하고 있음.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 양국의 출산수준 차이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커져 출산율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밀레니엄 베이비로 일시적인 출산의 집중 현상이 다음 해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서 급감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명까지 감소하였음.
-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2006년에 확정하여 강력한 저출산대책을 도입하였음.
- 일본의 출산율은 2000년(1.36명)이 지나면서도 1.3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1.2명대(2005년)로 낮아졌으나 그 감소 폭은 한국에 비하여 적었으며, 양국의 출산수준의 차이는 더욱 커졌음.
- 한국과 일본의 2005년도 출산중심 연령층은 25~34세로 이동하였으며, 25

세 이후의 출산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

- 20~24세의 한국 출산율이 일본 수준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2005년 한국의 출산수준이 일본보다 낮은 원인을 20~24세의 낮은 출산수준에서 찾을 수 있음.
- 일본여성의 경우 미혼상태에서 가임기간을 보내는 경우가 10%에 육박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2005년에 2.4%)임.
- 최근에는 일본에 비하여 낮아지는 것은 혼인연령이 30세 전후로 집중되었고, 늦은 결혼으로 자녀수를 1~2명으로 제한하는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음.
- 한국여성의 초혼연령이 상대적으로 이르는 하였으나 1990년의 차이가 불과 1.1년이었으며, 1999년 이후에는 0.5세 이하로 낮아졌음.
- 연령별 출생아수의 분포도 유사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매우 컸으며, 그 이유는 우선 한국 여성의 출산 시기가 25~34세에 집중되었다는 것임.
- 이상자녀수가 2명이 채 되지 않는 한국 여성들의 출산행태는 원하는 자녀수(1~2명)를 출산한 후에 단산하므로 셋째 이후의 출산이 빠르게 감소하였음.
- 이것은 30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이 극히 낮은 이유라고 할 수 있음.
- 출산율이 2000년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지만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3명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셋째 이후의 출생아수가 2000년 이후 꾸준히 14%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반면에 한국에서는 셋째 이상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첫째나 둘째에서 단산하는 현상으로 출산수준이 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일본에 비하여 2005년에 0.17명(약 15%)이 낮았으나 유배우자의 출생아수 대비 인공임신중절건수의 비율(31.3%)이 전체 인공임신중절 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일본의 비율(27.2%)보다 높았음.
- 한국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건수를 줄이고, 혼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정상 출산할 수 있다면 출산율 회복에 도움이 클 것임.

-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이 25~34세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완화하여야 할 것임.
- 즉, 결혼 시기가 30세 전후에 집중되어 있고, 결혼 후에 바로 첫째와 둘째의 출산을 하고 거의 모두 단산을 하는 혼인과 출산행태의 변화가 있을 때 출산율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제4장 한국의 고령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제1절 개요

□ 여성연령과 임신

- 30세 이하의 여성이 한달 중 임신 가능성은 약 20%이지만 40세 이상의 여성의 임신 가능성은 약 5%로 추정됨.
- 연령이 증가할수록 골반염증, 자궁내막증 등과 같은 가임능력을 저하시키는 여성질환이 증가하게 되며, 남성의 경우도 정자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부부의 임신능력이 저하되는 것임.
- 불임(*infertility, infecundity, sterility*)은 “피임을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성교를 12개월 동안 지속하여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99)이라고 하거나, “임신불능기간이 24개월인 경우”(세계보건기구)로 정의함.
- 인구학에서는 불임을 “피임을 하지 않고 성교를 하는 여성들의 출산능력 부재상태”로 정의하는데, 이는 불임을 임신에 기준을 두지 않고 출산에 두고 있음을 의미함.

□ 여성연령과 출산

- 부인의 연령에 따른 임신소모 경험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소모 경험률은 고연령층 부인이 높게 나타났다.
 -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35~39세 연령층 62.1%, 40~44세 연령층 62.6% 등이었음.
 - 2006년 조사결과는 35~39세 연령층 54.3%, 40~44세 연령층 61.3%이었다. 결국 평균 임신소모횟수는 2003년의 경우 35~39세 1.0회, 40~44세 1.1회이었음.

제3절 한국의 고령출산 실태

□ 연령별출산율에 기초한 고령출산 실태

- 40~44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1960년 1,000명당 80명에서 점차 저하하여 1984년에는 1명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 잠깐 상승하더니 1990년과 1993년에는 다시 낮아졌음.
 - 늦둥이 출산이 1996년 이후 증가하여 2005년에는 35~39세의 연령별 출산율이 1,000명당 14명, 40~44세는 4명이나 되었음.
- 따라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현저히 낮아져 최저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출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다소 상승함으로써 합계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

□ 유배우출산율에 기초한 고령출산 실태

- 유배우출산율의 전반적 변화를 살펴보면, 저연령층일수록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음.
 - 연령별 출산율이 25~34세 연령층이 높고 그 외의 연령층은 현저히 낮은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음.

- 고령출산으로 간주되는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현저히 저하하여 35~39세 연령층에서는 1,000명당 17명, 40~44세 연령층에서는 4명 수준을 보여주었음.
- 이는 초혼연령이 상승됨에 따라 결혼 후 즉시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으로 이해됨.

□ 고령출산여성의 출생아수

- 총 출생아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2005년까지 이어져 왔음.
- 34세 이하 연령층의 출생아수는 전체 출생아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이와는 달리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생아수는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는 200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 결국 전체 출생아 중 모(母)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비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함.
- 이는 한국사회에서 고령출산의 비중이 미미하지만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음.

제4절 출산가정 및 출산당사자의 특성과 출산연령

□ 출산가정의 특성과 출산연령

- 고령출산은 2003년 조사에서는 9.3%이었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한 9.1%로 나타났음.
- 2003년 조사에서는 읍·면부지역(11.7%)이 동부지역(8.9%)보다 고령출산이 많았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반대로 동부지역(9.2%)이 읍·면부지역(8.5%)보다 고령출산이 많았음.
- 따라서 동부지역의 고령출산은 0.3%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읍·면부지역의 고령출산은 3.2%포인트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음.

- 2003년 조사에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고령출산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초 저소득층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소득층이 많아 소득의 양 극단에서 고령출산이 많았음을 보여 주었음.
- 또한 2003년과 2006년의 양 조사에서 현존자녀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서 고령출산이 많았음.
 - 그렇지만 2006년에는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집중되는 경향이 다소 완화되고(33.1%에서 25.0%로 감소), 1~2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고령출산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11.4%에서 14.6%로 증가).

□ 출산당사자의 특성과 출산연령

- 고령출산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났음.
 - 이러한 경향은 2003년 조사(22.2%)에서보다 2006년 조사(33.3%)에서 더욱 현저하였음.
 -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 여성들의 고령출산도 2003년(6.6%)보다 2006년(8.3%)에 미미하나마 증가하였음.
- 출산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고령출산 비율은 2003년 조사에서는 비취업여성(9.3%)이 높았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취업여성(12.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결혼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의 고령출산 비율은 30세 미만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6년 조사에서는 다소 완화되었음.
 - 2003년 조사의 경우, 30세 미만에서 결혼한 여성의 6.1%가 고령출산인 반면 30세 이상에서 결혼한 여성의 43.5%가 고령출산이었음.
 - 2006년 조사의 경우, 30세 미만에서 결혼한 여성의 5.2%가 고령출산인 반면 30세 이상에서 결혼한 여성의 32.5%가 고령출산으로 다소 낮았음.

□ 자녀 가치관과 출산연령

- 2003년과 2006년 조사에서 고령출산은 아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응답한 계층이 가장 높았음.
 - 두 번째는 2003년 조사에서는 고령출산 비율이 아들이 ‘있는 것이 나음’이라고 응답한 계층이 11.2%이었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고령출산 비율이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음’이라고 응답한 계층이 11.0%로 가장 높았음.
- 2003년 조사에서는 자녀양육의 책임한계가 ‘혼인할 때까지’라고 책임성을 높이 느끼고 있는 계층의 고령출산 비율이 12.2%로 가장 높았음.
- 2006년 조사에서는 ‘혼인할 때까지’라고 책임성을 높이 느끼고 있는 계층의 고령출산 비율은 6.1%로 절반 수준 낮아진 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라고 비교적 책임성을 낮게 느끼고 있는 계층의 고령출산 비율이 12.8%로 가장 높았음.

□ 양성평등과 출산연령

- 가사분담 형태에 따른 2003년 조사에서는 고령출산 비율은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음’의 분담형태를 가진 가정이 10.0%로 가장 높았음.
- 2006년 조사에서는 고령출산 비율은 ‘남편이나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의 분담형태를 가진 가정이 14.3%로 가장 높았음.
 - 따라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가사분담 형태가 비교적 양성평등적인 가정에서 고령출산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인식하던 양육 및 가사에의 남성이 어느 정도 동참하느냐에 따라 추가자녀의 출산이 상당히 좌우됨을 엿볼 수 있음.
- 2003년 조사와 2006년 조사에서 모두 고령출산 후 두 자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 자녀 때 고령출산이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딸을 가진

경우가 아들을 가진 경우보다 고령출산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었음.

- 특히, 이러한 양상은 2003년 조사에서보다 2006년 조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
- 자녀가 한명도 없는 경우에 고령출산이 2003년 조사와 2006년 조사에서 약 5~6%가 있었음은 첫 출산의 늦음으로 인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됨.
- 35세 이상에서 출산을 한 고령출산 여성의 추가자녀 계획에 대하여 ‘추가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한 여성은 2003년 조사에서 81.0%, 2006년 조사에서 86.0%로 높게 나타났음.
 - ‘추가자녀를 낳거나 생각중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003년 조사에서 19.0%, 2006년 조사에서 14.0%나 있었음은 모자보건 측면에서 심각하게 관리하여야 할 대상이 다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 분석결과 요약

- 전체 출산율 중 35세 이상 고령출산율은 1960년대는 24.2%로 컸으나 급속히 감소하여 1980년대는 2%대에 머물렀고, 1990년대에 진입해서는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는 8.2%였음.
- 35~39세의 1,000명당 출산이 1996년 11명으로 최저를 보였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17명에 이르렀고, 40~44세의 1,000명당 출산이 1993년 1명에서 2005년에는 4명으로 증가하였음.
 - 따라서 연령별 출산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고령출산이 미미하지만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유배우출산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 35~39세 연령층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고령출산에 의한 출생아는 2000년 4만 2천 6백명에서 2002년 3만 9천 8백명까지 낮아졌다가

200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4만 6천 7백명이나 되었음.

- 고령출산 비율이 2003년 조사에서는 전통적 역할분리를 하거나 부인이 양육과 가사를 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높았으나, 반대로 2006년 조사에서는 양성 평등적 측면의 가사분담 형태를 가진 가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남편이 적극적으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맡을 경우에 고령출산이 나타나는 것은 부인의 출산결정에 남편의 역할이 매우 큼을 시사하는 것임.

□ 정책적 함의

-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은 고령출산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하는 연령에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직장안정, 결혼과정에서의 사회적 지원 강화가 절실함.
- 어쩔 수 없이 고령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30대 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산전·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더군다나 고령출산 여성이 추가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약 10%를 상회하고, 생각중인 경우도 다소 있음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자보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 남편이 자녀양육 및 가사에 적극적인 경우 고령출산이 나타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이 양성 평등적 가족문화라고 판단할 수 있음.
 - 따라서 양성평등가치관의 확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만 조기(早期)에 출산하도록 홍보계몽을 병행한다면 바람직할 것임.

제5장 한국의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의 변화

제1절 개요

□ 피임과 임신의 접근방법

- 인구학적 접근방식에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은 출산력을 하강시키기 위한 주된 도구라는 측면에 초점을 둠.
 - 인구학 접근방식에서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통하여 출산력 하강에 커다란 일조를 하게 할 수 있음.
- 페미니즘 접근방식에서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여성의 자율성 혹은 권리라는 측면에 보다 초점 둠.
 - 페미니즘 접근방식에서는 인구 억제라는 인구학의 거시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과 통제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음.
- 출산수준이 초저출산수준으로 하강되어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오늘날에서는 두 접근방식은 서로 간의 목표가 상충될 수 있음.
 - 출산장려정책은 페미니스트에게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의 통제권을 국가가 빼앗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인구학자는 출산장려를 위해 여성의 출산 통제권에 대한 상실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제2절 기존연구 검토

□ 피임사용 및 인공임신중절 비율

- 기혼여성 중 피임사용자 비율은 1961년과 1976년 사이에 9%에서 44%로 증가하였음.
 - 그 후 피임실천율은 계속 1982년 57.7%, 1988년 77.1%, 1994년 80.5%로 증가하였고, 그 후 약 80% 수준에 머물다가 갑자기 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에 진입한 2003년에 84.5%로 급증하였음.

- 인공임신중절은 전쟁 중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임신들로 인해 1950년대 초반에 급증되었지만, 출산제한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195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되었음.
 - 1974년 출산력 조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1000명 출생아 대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1960~'64년 77에서 1965~'69년 175, 1970~'74년 277로 급증하였다가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였지만, 1990년을 절정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함.

□ 2003년 출산력 자료 분석결과

- 피임실천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15~24세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천율은 1976년(15.4%)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88년 44.4%로 증가하였음.
 - 25~29세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천율도 1976년 31.9%에서 1988년 65.4%까지 증가한 뒤 1991~'97년 자료에서 약 60% 수준, 그리고 2000년 자료에서 57.0%로 하강했지만 2003년 자료에서 갑자기 64.8%로 급증하였음.
 - 30대 이후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천율은 그다지 변화가 없었음.

□ 교육수준 및 취업에 따른 피임 및 인공임신중절 실천율

- 1976년에는 학력이 높은 여성이 낮은 여성보다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으나, 1988년 이후부터는 역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중졸이하)이 높은 수준보다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임.
 - 특히, 1994년과 1997년에는 대학이상의 여성과 고졸 여성이 비슷한 수준의 피임실천율을 보였지만, 2000년과 2003년 조사에서는 대학이상의 여성이 고졸 여성보다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임.
-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결과에 의하면, 취업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87.7%로 비취업 부인의 81.%보다 6.2%가 높았음.

- 일반적으로 취업부인은 짧은 시기 안에 출산행위를 종료하는 데 반해 비취업부인은 터울을 두고 출산을 조절하고 있고, 또 취업부인이 비취업보다 보다 작은 수의 자녀를 출산함.

□ 남아선호 및 이상자녀수 가치관에 따른 피임 및 임신중절 실천율

- 자녀를 원하는 정도나 남아선호는 살아가면서 즉, 출산순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
 - 따라서 남아선호, 자녀의 필요성이 피임실천율과 인공임신중절률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 그리고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음.

제3절 분석자료의 구성 및 변수

□ 분석자료의 구성

-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1997년, 2000년, 2003년도 출산력 자료로 필요에 따라 재구성하였음.
 - 1997년 자료는 1994년 이후에 결혼한 사람의 첫 출산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한 뒤, 1994년 이후에 첫 출산을 한 여성의 둘째 아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였음.
 - 2000년 자료는 1997년 이후에 결혼한 사람의 첫 출산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한 뒤, 1997년 이후에 첫 출산을 한 여성의 둘째 아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였음.
 - 2003년 자료는 분석될 사례의 수가 적은 관계로 3년이 아닌 4년의 기간을 두었음.
- 그 결과 2003년 자료는 1999년 이후에 결혼한 사람의 첫 출산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한 뒤, 1999년 이후에 첫

출산을 한 여성의 둘째 아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였음.

□ 분석 변수들

- 피임의 종속변수로는 혼인 후 첫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사용하는지 여부, 첫 아이 출산 후 둘째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사용하는지 여부 등임.
- 인공임신중절의 종속변수로는 혼인 후 첫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낙태를 했는지 여부, 첫 아이 출산 후 둘째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낙태를 했는지 여부 등임.
- 독립변수로는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조사 당시 취업여부, 출생코호트, 혼인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아들필요, 결혼필요, 이혼반대, 자녀필요 등과 같은 가치관련 변수들이 포함되었음.

제4절 분석결과

□ 결혼 후 첫 아이 사이의 피임사용

- 부인 취업은 외환위기에 상관없이 피임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남편 취업은 외환위기 직후 피임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부인 교육수준은 2000년 자료분석에서만 전문대졸 여성이 대졸 여성보다 낮은 피임실천율은 유의미하게 보인 반면, 다른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남편 교육수준은 세 자료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부인의 출생코호트를 살펴보면, 2000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전 출생코호트의 여성들이 덜 피임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최근에 태어난 여성보다 이전에 태어난 여성들이 더 많이 첫 아이

를 원하는 경향 혹은 자녀의 필요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됨.

- 외환위기 이전에는 부인과 남편의 혼인연령 모두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자료에서는 부인의 경우는 24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이 30세 이후에 결혼한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는 25~29세 사이에 결혼한 남성이 30세 이후에 결혼한 남성보다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갖지 않기 위한 피임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3년 자료에서도 남녀 모두 30세 이상에 혼인한 사람이 그 이전의 연령에서 결혼한 사람보다 피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아들의 필요성은 2000년 자료까지는 첫 아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2003년 자료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음.
 - 이것은 2000대 이후 아들의 필요성 즉, 남아선호는 더 이상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줌.

□ 첫 아이의 인공임신중절

- 1997년 자료에서는 부인의 혼인연령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 30세 이후에 혼인한 여성이 첫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그 이전에 혼인한 여성에 비해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높았음.
- 2000년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는 가치관 변수인 아들 필요와 이혼반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첫 아이를 임신한 경우 그렇지 않고 응답한 여성들에 비해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낮았음.
-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 즉, 이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낮았음.
- 2003년 자료에서는 취업한 여성이 비취업의 여성보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높았음.
 - 초저출산수준으로 떨어진 2000년 이후 시기에 여성들은 이전 시기보다

자신의 경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그 결과 임신했을 경우 취업여성들은 자녀보다 자신의 경력을 더 우선시할 것임.

- 30세 이상에 혼인한 여성이 20~29세 사이에 혼인한 여성들보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인공임신중절 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20세 전반에 혼인한 여성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 혼전 임신과 관련된 인공임신중절로 해석할 경우, 2000년 이후에는 30대 이후에 결혼한 여성이 20대 후반에 결혼한 여성들보다 첫 아이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높음.

□ 첫 아이 출산 후 피임사용

- 결혼에서 첫 아이 출산까지 피임사용에 대한 분석에서 보다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차이가 출산순위 1에서 피임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미약해졌음.
 - 2000년 자료분석에서만 남편의 출산력 코호트와 혼인연령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뿐, 1997년과 2003년 자료분석에서는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피임사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부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졸출신과 고졸출신 여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고졸출신 여성들이 더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임.
- 부인취업은 출산순위 0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기에 있어 피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음.
 - 특히, 초저출산 시기인 2000년 이후에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해졌음.
- 남편의 취업여부는 첫째 아 출산후 피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자료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음.
- 부인의 출생코호트는 2003년 자료에서만 오랜 출생코호트의 여성들이 최근 출생코호트 여성보다 피임을 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음.

- 출산수준이 초저출산수준으로 떨어진 시기인 2000년 이후에는 첫 아이 뿐 아니라 둘째 아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막기 위해 최근 출생코호트 여성들이 피임을 더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줌.
- 남편의 출생코호트는 첫 아이 출생 피임에 대한 분석과 달리 2000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결혼 후 첫 아이 출산 사이에서는 오랜 출생코호트의 남성이 최근 출생코호트의 남성보다 부인의 피임실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둘째 아 출산에서는 거의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음.
- 남편의 혼인연령도 남편의 출생코호트와 마찬가지로 2000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 1997년 자료는 출산순위 0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003년 자료는 출산순위 0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 아들필요성은 출산순위 0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까지는 부정적인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쳤지만, 2000년 이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음.
- 이는 초저출산 시대에 이른 오늘날 시점에서는 아들선호가 더 이상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자녀의 필요성은 출산순위 0에서는 2000자료와 2003년 자료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출산순위 1에서는 초저출산력 수준으로 떨어진 2000년 이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 이는 초저출산력 수준으로 떨어진 시점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성만이 두 명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음을 의미함.

□ 둘째 아이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 부인의 교육수준은 2000자료에서 부인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인 여성이 대졸이상인 여성들보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영향을 보여주지 않음.

- 다른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남편의 교육수준이 2003년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 남편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경우 인공임신중절 할 가능성이 낮았음.
- 부인의 취업은 초저출산 이전 시대에는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 2000년 이후에 이르러서는 많은 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자녀의 출산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남성의 취업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음.
- 혼인연령을 살펴보면, 출산순위 0과 달리 부인의 혼인연령은 출산순위 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음.
- 아들의 필요성은 1997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둘째 아 출산을 막기 위한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음.
- 2000년 자료의 분석결과는 결혼의 필요성을 응답한 여성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들에 비해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낮았음.
 - 즉,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낮았음.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 여성취업은 피임분석에서 모든 시기에 출산순위 0과 출산순위 1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인공임신중절 분석에서는 출산력이 초저출산수준으로 떨어진 시기를 분석한 2003년 자료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결혼에서 첫째 아 출산까지의 피임분석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직후 전문대

- 줄 여성이 대졸여성보다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였음.
- 인공임신중절 분석에서는 2000년 자료의 첫째 아에서 둘째 아 사이의 인공임신중절 분석 결과를 제외하고는 교육수준과 인공임신중절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음.
- 남편의 교육수준은 출산력이 초저출산수준으로 떨어진 2000년 이후의 첫째 아에서 둘째 아 사이의 인공임신중절 분석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음.
- 혼인후 보다 의무적이라 할 수 있는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첫 아이보다는 선택적이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아이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결정은 두 번째 아이를 가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음.
- 부인의 출생코호트와 남편의 출생코호트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반영하듯이, 남녀 모두가 5년이란 짧은 출산 간격에도 출산에 대해 서로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냄.
- 혼인후 첫 번째 출산 사이의 피임 분석에서 혼인연령은 외환위기 이전에 유의미한 차이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만혼의 여성이 일찍 결혼한 여성보다 더 피임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줌.
- 이는 외환위기 이후 늦게 결혼하는 여성들의 무자녀 선호관이 급증하였음을 나타냄.
- 아들의 필요성은 결혼 후 첫 아이 출산 사이 그리고 첫째 아에서 둘째 아 사이의 피임사용에 대해 초저출산이 시작되기 이전인 2000년까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2000년 이후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2003년 자료분석에서 아들의 필요성은 첫째 아와 둘째 아 출산을 방지하거나 연기하기 위한 피임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자녀의 필요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음.

제6장 최근 일본의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추이

제1절 문제제기

□ 현대 일본의 초저출산율

- 195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여성들의 연령대별 출산율은 0.25에서 0.10으로 현저하게 낮아졌고, 최대출산 연령은 26세에서 29세로 증가했음.
 - 30대 여성의 출산율에 있어서 약간의 증가가 있었지만 전체 출산율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너무 낮음.
- 1955년부터 2003년 사이에 첫 아이 출산 평균연령은 25.1세에서 28.3세로 늘어났고, 둘째 애를 갖는 연령도 27.6세에서 30.6세로 증가하였음.
 - 이는 만혼이 만산의 원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일본 여성들의 첫출산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결혼 후 생리적으로 임신출산이 가능한 시기가 단축된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음.

□ 연구설계

-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성의식과 생물-의학-인구통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일본의 초저출산율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음.
 - 성의식 및 생식률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의학-적 요인의 변화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함.
 - 일본에서의 성행위 상황과 생식상황에 있어서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논의함.

□ 분석자료

- 인구규모와 성-연령 구조에 관한 자료
 - 일본 총무성 통계청에서는 정부가 5년마다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하며, 가장 최신 정보는 2000년 10월 1일 수집된 2000년 통계자료

- 결혼과 출산에 관한 자료
 - 일본 내에서의 모든 출생, 사망, 사산, 결혼, 그리고 이혼은 지방자치체 단위로 등록되어 후생노동성에 최종적으로 보고되는 자료
- 인공임신중절 자료
 -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하는 모든 의사들은 시술사실을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후생노동성에 보고하는 자료로, 이 통계의 명칭은 1996년에 Eugenic 보호통계로부터 모체보호통계로 바뀌었고 2002년도에 국민건강 행정보고서(the Report o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and Services)에 포함되었음.
- 피임관련 자료
 -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원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일본 국가출산율 통계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 성행위에 관한 자료
 - 청소년의 성적 태도와 행위에 대한 설문조사
 - 남성과 여성의 삶과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제2절 출산통제 행위의 변화

□ 인공임신중절

- 일본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 1948년에 합법화되었고 1955년에는 그 보고된 연간 시행숫자가 기록적인 1,170,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음.
 - 그 이후로는 2004년도에는 숫자가 302,00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5~49세 연령대의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률은 1955년의 50.2에서 2004년의 10.6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분석을 위하여 5년 단위 연령대별 여성들의 연간 인공임신중절 숫자와 비율을 포함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모든 자료들은 일본정부 통계자료로부터 인용하였음.

- 1955년부터 2004년 사이의 변화
 - 1955년부터 2004년 사이에 15~49세 연령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률과 임신율은 전체 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인공임신중절률은 0.050에서 0.011로, 임신율은 0.125에서 0.051로).
- 1955년부터 1975년 사이의 변화
 - 이 첫 기간 동안 15~49세 연령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률은 0.050에서 0.022로 감소한 반면, 15~49세 연령대 여성들의 임신율과 15~49세 연령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각각 0.125에서 0.085로, 40.3%에서 26.1%로 감소하였음.
- 1975년부터 2004년 사이의 변화
 - 이 제2차 시기에는 15~49세 사이 연령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률은 0.022에서 0.011로 감소한 반면, 동일 연령대 여성들의 임신율은 0.085에서 0.051로 감소하였고,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26.1%에서 21.4%로 감소하였음.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 항상 다수를 차지했던 의견은 조건부 인공임신중절 찬성으로서 늘 60%의 비율을 유지하였음.

□ 피임

- 1950년도 조사에서 피임방법 사용자는 20% 선에 머물렀었으나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60% 선까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 이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임.
 - 최근 1994년도 59%에서 2004년도 52%로 감소세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함.

제3절 성행위와 파트너십 행위의 변화

□ 독신자들 사이에서의 성행위와 파트너십 행위

- 최근의 만혼 및 결혼 감소 현상은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동거율이 매우 낮음.
 - 25~29세 연령층 남성과 여성들의 동거 비율은 매우 낮다. 2002년도 JNFS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는 2.8%, 여자는 3.0%임.
- JASE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각각 20%, 50%, 80%의 여학생들이 연애 경험을 가지고 있음.
 -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각각 80%, 50%, 그리고 20%의 여학생들이 전혀 연애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함.
- 197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시행된 학생 설문조사(JASE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기간중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비율은 남자 대학생의 경우 23.1%에서 63.0%로 증가하였고, 여자 대학생의 경우 11.0%에서 62.3%로 증가하였음.
 -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10.2%에서 26.6%로, 여학생은 5.5%에서 30.0%로 증가하였음.

□ 기혼부부들의 성행위

- 2004년에 시행된 전국 대상 성행위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 설문조사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설문조사 전달에 성관계를 갖지 않은 기혼 여성들의 비율이 20~24세, 25~29세, 30~34세, 그리고 35~39세 연령대에 있어서 각각 17.6%, 33.3%, 30.5%, 그리고 31.2%임.

제4절 생식관련 요인들의 변화

□ 여성연령과 불임

— 결혼과 출산의 고령화

- 2003년에는 여성의 초혼 평균연령이 27.6세, 그리고 첫 아이 출산 평균 연령도 28.3세에 도달하였음.

— 불임부부 증가의 가능성

- 2002년도에 시행된 제 12차 JNFS에서는 기혼부부들에게 불임문제와 의사 진료경험 등에 관하여 처음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의하면, 출산연령대 부인들의 26.1%(설문 당시 불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 포함)가 불임에 대해서 염려한 적이 있고, 12.7%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여성건강과 환경

— 성병 확산

-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가임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증상이 없고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클라미디아와 기타 성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줌.

— 여성들 생활양식의 변화

- 최근 일본에서는 직장 여성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들 중 일부는 연장 근무 및 야간근무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생활양식이 남성들과 비슷해져 가고 있음.

— 환경요인

- 최근, 일본 연구자들은 내분비계 질환과 기타 환경요인들이 인간의 출산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 인공임신중절의 변화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 1955년도부터 1975년 사이에 임신을 하락은 30~34세, 35~39세, 그리고 40~44세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 대규모 인공임신중절 감소 효과를 가져왔음.
 - 같은 기간 중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요인은 자발적 인공임신중절의 감소가 20~24세, 그리고 25~29세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 커다란 인공임신중절 감소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임.
- 1970년대 중반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본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및 출산을 미루려는 경향은 임신과 임신 후 인공임신중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
 - 만혼 경향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의 임신 감소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였음.

□ 문화적 배경: 가족제도와 성 제도

- 현대 일본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전무후무한 수요를 유발하고 출산율 억제를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들을 보여주었음
 - 여러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생식력의 감소
 - 성본능에 관한 부정적이고 성편파적인 태도와 문화
- 이상의 상황은 일본의 성문화, 혹은 성을 부정하거나 혹은 상업적인 태도로 간주하는 사회의 경향, 성에 관한 모호한 견해, 모든 연령대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서의 불충분한 토론과 의사소통, 정보 및 상담을 위한 시스템 부재 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줌.
 - 전체 인구의 성의식에 관한 전반적인 규모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포괄적인 연구가 부재한 까닭에 이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조

건 하에서는 파트너십 형성의 미발달, 성병 확산, 성행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성-관련 차별과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 다른 문제는 성편파적인 태도와 문화인데, 이는 일본 내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음.
- 정책 차원에서는, 성 평등에 입각한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과 성교육 장려가 한 가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음.
 - 출산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강문제의 해결과 성에 관한 평등하고 긍정적인 문화적 태도의 실현, 그리고 성행위에 대한 개인 통제권 확대의 결과로서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 합의

- 인구통계학적 분석의 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은 것은 낮은 임신율에 기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음.
- 피임방법 사용 증가 혹은 피임 효율성의 향상 등이 없이도 낮은 임신비율이 유지되는 것은 낮은 성행위 수준에 기인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음.
 - 낮은 수준의 성행위는 출산연령대 여성들 중 결혼 혹은 동거를 통해서 성관계 집단을 형성하는 여성들의 비율 감소에 기인함.
- 성통제 및 출산율 통제 행위(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일본의 성문화는 가족제도(전통적인 “ie” 제도와 그 변형들)와 성제도(전통적인 남성 우월성 개념과 여성에의 권력이양으로 인한 남성 우월성의 퇴조) 등과 같은 문화적인 영향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인하여 초저출산율이 초래되었음.
- 출산, 성기능, 그리고 문화 전반을 고려한다면, 현대 일본에서의 극적인 출산율 저하와 관련하여 “변화한 것들”과 “변화하지 않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제안으로서, 1994년도 카이로 회의(인구개발 국제회의) 이후 회자되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인 출산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출산건강에는 성관계 조기 초기화, 만혼, 낮은 수준의 동거, 파트너십 형성의 미발달(혹은 “미성숙한 연애 문화”), 부부들 간의 낮은 성행위 빈도, 미량 투약 피임약의 낮은 사용률, 십대들 사이에서의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성병의 확산, 여성 생활양식의 변화, 만산, 증가일로에 있는 불임에 관한 염려, 등과 같은 새로이 부각되는 현안들이 포함됨.

제7장 일본 가족정책 및 이민정책의 동향과 함의

제1절 개요

-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숙련된 노동자들의 대규모 은퇴현상이 2007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5년 말부터 시작된 인구감소현상은 일본 내에서도 정책현안이 되었음.
 - 이미 2004년부터 남성인구 감소가 관찰되어 왔다. 인구감소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불균형적인 국제이주의 결과이기도 함.
 - 자연인구증가의 정체시기에 인구증가는 주로 국제이주의 영향을 받음.

제2절 출산율과 가족정책의 최근 발전 동향

□ 출산율 변화의 동향

-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그 후, 출산율은 대체출산율 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 머무르다가 1970년대 중반 들어서서 더 감소하였음.
 - 한국과 대만도 1980년대 후반에 대체출산율 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최근 몇 년간은 최저 출산율에 있어서 일본을 추월하였음.

- 2000년에 일본은 출산율 1.36으로서 1.47이었던 한국에 비해서 약간 낮았었지만 1.68인 대만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았었음.
 - 그러나 2001년에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3으로서 한국(1.30)보다 높았고 대만(1.40)보다는 약간 낮았음.
- 사생아 출산율이 2% 이하인 일본에서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두 가지 구성요인 각각의 추세로 설명될 수 있음.
 - 기혼여성들에 있어서 출산율(기혼 출산율)
 - 여성결혼비율(결혼율)
- 25~29세 사이 남성 미혼율은 1975년의 46.5%에서 2005년의 71.4%로 50% 증가하였음.
 - 그러나 30~34세, 35~39세 사이 남성 미혼율은 각각 4배와 6배 이상 증가하였음.

□ 가족정책의 발전

- 고이즈미 수상의 강력한 지도력에 힘입어 2005년 9월 소자화 대책을 책임질 새로운 정부 부처가 출범하여 2006년 6월 ‘신 소자화 대책’이 제정되었음.
 - 그러나 불행히도 이 새로운 가족정책은 수상의 교체와 예산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음.
- ‘신 소자화 대책’에서는 각 부처와 재무부 간의 예산 삭감 협상, 그리고 각 현과 시에서의 재정 적자로 인하여 비교적 사소하면서도 비용이 덜 소요되는 대책들이 시행되면서 고비용 대책들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될 것임.

□ 가족정책이 인구통계에 미칠 수 있는 효과

- 가족정책은 출산율 증가보다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입안되었음.

- 비록 가족정책이 일관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분명 하나의 체계로서 여겨져야 하며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한두 가지 대책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임.
- 가족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동인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다만 임시적으로 도입시기와 사회적 환경이 우호적인 특정 지역 혹은 사회계층에 있어서만 효과가 있을 것임.

제3절 국제이주와 관련 정책의 최근 동향

□ 국제이주 추세

- 일본인들 사이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여성 순수이민자는 남성 순수이민자보다도 많았음.
 -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남성 순수이민자가 늘어났는데 이는 부양가족 없는 일본인 해외근무 지배인 혹은 계약직의 증가에 기인하는 듯함.
-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남성 순수이민자가 여성 순수이민자들보다 많았음.
 -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여성 순수이민자가 추월하였는데 이는 일본으로의 국제이주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신부'의 증가에 기인함.
 - 2004년도에 여성인구가 증가한 반면 남성인구가 감소한 원인들 중의 하나는 결혼이주를 통한 여성 외국인 배우자의 숫자가 수천 명에 달한 것인데, 2004년도에 일본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12,071명이고 일본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은 3,228명이었음.
- 한국과 대만도 최근 3D(Dangerous, Dirty and Difficult)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늘고 있고 많은 사업가, 학생, 그리고 가족들이 외국으로 출국하였음.
 - 대만 사업가들 중 최소 50만명 이상은 중국본토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제이주정책의 발전

- 2005년 말 현재 302,080명의 브라질인, 그리고 57,728명의 페루인이 일본에 등록되어 있음.
 - 비록 일본계 브라질인들은 영구적으로 일본에 머무르게 되기가 쉽지만, 일본정부는 이들을 위한 아무런 체계적 이민 혹은 사회통합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이민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임.

□ "국제결혼이주"가 인구통계에 끼칠 수 있는 효과

- 35세 미만의 외국인 부인들 사이에서는 결혼연령 대체 초산연령이 25.47세로서 남편의 34.27에 비하여 9.54년의 연령차가 남.
 - 양 배우자에 있어서 초산연령에서 부인의 연령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고, 대만에서처럼 배우자들 간의 연령차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음.
- 일본의 국제결혼 커플들 사이에서 기혼여성 출산자녀 평균 숫자는 1.03이었음.
 - 이 수치는 국제 결혼한 커플들 사이의 출산율이 대만인들 사이에서의 출산율에 비하여 명백히 낮았음을 보여줌.
- 기혼여성 출산자녀에 있어서 부인의 연령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음.
 - 출산수에 따른 커플 분포에서는 35.2%가 무자녀, 34.7%가 한 자녀, 23.5%가 두 자녀, 그리고 6.6%가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왔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출산수가 낮은 경우 부인의 연령이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음.
- 자녀수가 많은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대만과는 달리 출산수에서 남아비율은 일본에서는 첫 아이의 경우 51.4%, 둘째 아이의 경우

51.6%, 그리고 셋째 아이 혹은 그 이후의 경우는 50.9%로서 정상적인 분포를 보였음.

- 이 비율은 부인의 연령이 높거나 낮은 경우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대만에서는 부인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만 낮아졌음.

제4절 인구관련 태도

□ 노령화(혹은 고령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태도

- 1990년에는 5.0%의 응답자들이 노령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42.9%가 중립적인 태도(“대답하기 어렵다”)를 보였음.
 -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서 중립적인 태도의 비율이 높았음.
 - 노령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노령화를 늦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응답자의 52.1%) 중에서 4.5%는 이주 정책, 33.0%는 친인구증가정책, 9.3%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하였고, 5.3%는 불간섭에 찬성하였음.
 -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에 비해서 이민정책을 덜 선호하고 대신 친인구증가정책을 선호하였음.
- 1995년에는 3.4%의 응답자들이 노령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그리고 38.5%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 노령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노령화를 늦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응답자의 58.1%) 중에는 2.0%가 이민정책, 44.3%가 친인구증가정책을, 6.7%가 두 가지 모두를 그리고 5.1%가 불간섭에 찬성하였음.

□ 동아시아에서의 가치와 태도의 통합과 분기

-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에서의 출산율 급감은 출산율-관련 가치관과 태

도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음.

- 이는 또한 이들 국가들이 2단계 인구통계 변이(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를 뒤늦게 경험하게 된 것과는 관계가 있음.
-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은 다수의 유럽 국가들처럼 초저 수준 출산율 국가에 합류하였지만, 한국과 대만은 여전히 출생시 높은 성비(최근 자료에 의하면, 110명의 남아 대 100명의 여아)에 반영되어 있음.
- 이는 강한 남아선호사상이 유지되고 있어서 초저출산율 상황에서도 성비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과는 현저하게 다름.

제5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인구통합적 측면

□ 1980년대 초기 이후

- 장기적인 성비 불균형의 결과로 결혼시장에 있어서 여성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한 결혼상대자 부족현상은 이미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시작되었음.
 - 대만은 이미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결혼의 상당한 증가세를 보여 왔으며, 동일한 규모의 남성초과 현상이 인도에서도 추정되고 있음.
 - 이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제결혼시장에 방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틀림없음.
- 동아시아에서든 유럽에서든, 인구감소, 노령화, 그리고 베이비버스트 현상은 친인구증가정책, 국제이주정책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음.
 - 비록 친인구증가정책은 개별국가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지만, 국제이주정책은 초국가적인 단위 수준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함.

제8장 한일양국의 초저출산의 원인과 국가정책의 비효율성

제1절 개요

□ 일본과 한국의 구체적인 비교

- 두 국가간의 최근의 변화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출산의 차이도 설명할 것임.
 - 속도 왜곡의 효과를 살핀 후, 출산율 감소를 결혼율과 결혼출산으로 분리하고자 함.
- 자녀에게 소요되는 직접비용, 청년 구직 활동의 어려움, 그리고 여성의 노동참여에 따르는 기회비용 등의 장애들이 검토됨.
 - 일본과 한국에서의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 노력의 역사를 살펴 본 후, 아동수당, 육아휴직, 그리고 보육 서비스 등의 정책적 방안들의 효과를 검토함.
- 그 결과, 저출산과 초저출산 사이의 차이의 대부분은 정부의 노력보다는 문화적 요인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데서 비롯됨을 알 수 있음.

제2절 양(quantum)과 속도(tempo)

□ 일본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비교

-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부터 1988년 사이에는 일본에 비해서 낮지만, 1990년대에 한국은 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였음.
 - 2000년도 즈문동이 봄이 일고 난 후,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한국의 수정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일본보다 높음.
 - 만일 자녀 출산 지연이 2004년에 중단되었다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69로 올라가고,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45로 회복되는데 그쳤을 것임.

제3절 결혼율과 유배우출산율

□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 한국의 결혼율이 급격히 감소하긴 하여 일본 수준이 되었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의 출산율보다 낮게 만들 정도는 아님.
 - 그래서 이를 통해 볼 때 두 국가 사이에서의 최근 출산율 차이를 초래하는 것은 결혼율이 아니고 유배우출산율임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줌.

□ 가상합계출산율 가정

- 유배우출산율은 연령 보다는 결혼지속기간에 종속됨.
- 임신가능 연령 중 이혼 혹은 사망하지 않음.
- 혼인신고가 지연되지 않았음.
- 결혼 후 10년 이상 된 부부들은 출산을 하지 않음.

제4절 출산율 결정요인

□ 근사 결정요인들

- 한국에서는 피임실천율이 198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일본보다 훨씬 높았음.
 - 한국에서는 최근 출산율 감소에 있어서 피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 일본에서는 인공임신중절과 사산이 감소하여 왔음.
 - 인공임신중절, 자궁내 태아 사망, 혹은 산후 월경불순 등은 최근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지 못함.
- 나머지 유사 결정요인들은 성교 빈도 및 불임증임.

□ 자녀에 대한 수요

- 한국 부인들은 일본 부인들보다 지속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였지만, 이러한 차이의 일부는 설문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음.
 - 한국 부인들은 개인의 희망사항을 밝혔지만 일본부인들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답하였음.
- 이상적인 자녀수는 1960년의 5.0에서 1984년 2.0으로 감소하였음.
 -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강력한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 캠페인의 영향이었는데, 이 감소세는 한국 정부가 매우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철회하면서 다소 회복되었음.

□ 직접 자녀양육비용

-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교육기관 지출비는 2001년도 GDP의 8.2%에 달하여 관련 자료가 확보된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었음.
 - 일본의 수치는 4.6%로서 27개 국가 중 21위였음.

□ 여성의 노동력 참여

- 일본과 한국에서는 직장가정 사이의 낮은 양립성은 연령대별 참여율이 M형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음.
 - M형 곡선은 뉴질랜드에서도 볼 수 있지만, 25~29세 연령대와 30~34세 연령대 사이의 감소는 일본에서 가장 급격히 일어나며, 그래서 많은 일본 여성들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지만 자녀출산을 위해서 포기해야만 함.
- 성평등에 관한 한, 일본과 한국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일본의 경우 2005년도 0.534로서 28개 OECD 회원국가들 중 25위임.
 - 일본보다도 낮은 한국의 GEM 점수(0.479, 27th)를 고려하면 심각한 양립성 부재 문제가 남게 됨.

□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적 불확실성

- 최근 일본의 경제불황은 결혼율뿐만 아니라 유배우출산율까지도 저하시켰음.
 - 유배우출산율에 있어서 남편의 수입이 지나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 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한국은 1997년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재구조화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미래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높였음.
 -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로 결혼율 감소를 통한 출산율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여겨짐.

제5절 정부노력의 비효율성

□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

- 1999년 12월,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될 신천사계획(the New Angel Plan)을 발표하였음.
 - 성평등과 근로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였으며, 2000년 5월 육아휴직법과 아동수당 법령 수정안에서는 휴직 기간 중 월급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음.
- 2004년 12월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될 신신천사계획(the New-New Angel Plan)을 발표하였음.
 - 육아 지원과 성평등 개선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회사들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2006년 6월,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책에는 출생 후 첫 3년간 아동수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출생시 1회에 한해서 현금지원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지불방안 개선, 임신기간 중 의료진료 비용 지원, “가족의 날”과 “가족의 주일” 등을 제정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음.

- 한국 정부는 아마도 장기적으로 지속된 고출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출산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신속하지 못했음.
- 2004년 1월, 청와대 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과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 전략”을 출간하였음.
 - 노동시장, 노인복지,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졌음.
- 2004년 6월, 여성부와 노령화 미래 사회 위원회는 “미래인력 육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음.
 - 모성휴직을 활성화하고 영아가 있는 집안에는 보모를 파견하며, 육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운영, 그리고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특별 과정 창설 등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음.
- 2005년 8월, 정부는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6으로 높인다는 목표수치를 천명하였음.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출산 노령화 사회 특별위원회는 자녀출산과 노인수발을 위한 특별 정책안들을 세워서 “희망한국 21”이라는 기초안을 2006년 1월 공표하였음.

□ 아동수당

- 일본에서는 아동수당이 1971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이후,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월 5,000엔씩을, 그리고 셋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000엔을 지원해주고 있음.
 - 2000년 5월까지 3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지원되었으며, 2000년 6월부터 2004년 3월 사이에 모든 유치원생들까지 대상에 포함하게 확대되었음.
- 한국의 새로마지플랜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천명하였음.
- 아동수당 제도의 효과는 남편에게 추가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음.

- 부인의 수입은 수입효과와 기회효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그 일부로 봐서는 안 됨.

□ 육아휴직

- 육아휴직은 1991년 5월 일본의회에서 승인되어 1992년 4월 시행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현금혜택이 없었음.
 - 1994년 6월의 수정안에서는 월급의 25%에 해당하는 현금혜택과 휴직기간 중 사회보장 부금 면제 혜택을 합법화하였음.
 - 2001년 11월 수정안에서는 현금혜택을 40%로 올려서 2002년 4월 시행되었으며, 현 제도 하에서는 휴직기간 중 30%가 매월 지급되고 10%는 직장으로 복귀한 후 지급됨.
-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이 1987년에 정의되어,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2004년 이후 월 400,000원이 지급됨.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에 따르면, 2005년도에 모성휴직을 한 어머니들의 26%만이 육아휴직을 하였고, 2004년에 육아휴직을 한 어머니의 숫자는 9,304명이었음.
 - 이는 연간 출산 숫자의 겨우 1.9%에 해당하며 일본의 9.2%에 비해서 훨씬 저조함.

□ 육아서비스

- 1994년 공표된 천사계획은 “육아와 직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었음.
 -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1997년에 아동복지법에 중요한 수정이 더해졌고, 1999년의 신 엔젤플랜은 지속적으로 양립성 확보에 주안점을, 2004년의 신신천사 계획 또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성, 그리고 직장관습의 재고”에 관한 장을 포함하고 있음.

제6절 비교적 관점에서 본 저출산과 정책노력

□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의 초저출산의 확산

- 초저출산은 1990년대에 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어 유럽 지역의 인구통계지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음.
 - 2차 인구통계 전이 이론(van de Kaa, 1987)에서는 서구 및 북구 유럽 국가들에서 일기 시작한 새로운 현상을 대체 출산율 이하 그리고 동거나 혼외 출산 등과 같은 초현대적인 행동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였음.
- 한국은 2001년에 1.3명의 문턱에 도달하였고, 이어서 2003년에 일본과 대만도 비슷한 수준이 되었음.

□ 출산장려 정책의 비효율성

- 출산과 수입 간의 탄력성은 매우 적어서 출산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으로 큰 금액의 경제지원이 필요함.
- 육아휴직의 효과 또한 매우 적어서 이를 통해 출산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 역시 불가능하거나 또는 노동 관례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함.
- 탁아 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직장과 가정 간의 양립성을 높이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음.

□ 출산율에 대한 문화결정론적 견해

- 서부 유럽, 동부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초저출산 현상은 매우 상이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타남.
 - 이 현상은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여겨지게 되었음.
- 2003년도 제3차 국가가족설문조사(NIPSSR)에 의하면 82.9%의 일본 부인들이 “어머니는 출산 후 3년간 일하지 말고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데 동

의하였음.

- 어머니의 숭고한 역할에 대한 이와 같은 강조는 출산에 미치는 육아 서비스의 효과를 차단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동거와 혼외 출산에 있어서의 명백한 문화적 차이가 관찰됨.
-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던식 행위는 한 때, 출산율을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되었으나, 오늘날, 그러한 행위의 빈도가 낮게 유지되는 것은 초저출산에 있어서 좋은 전조증세임.
- 일본은 매우 건전한 결혼관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일본의 혼외 출산은 남부 유럽의 초저출산율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극히 낮음.

제7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정의되는 초저출산력은 2000년대에 들어와 동북아로 파급되었음.
- 일본과 한국의 경우, 모두 최근의 출산력 저하에 결혼력의 저하와 함께 결혼출산력의 저하도 기여하고 있음.
-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자녀비용의 급상승, 청년 노동시장의 악화, 불확실성의 증가, 여성의 노동력 참가 등이 이들 수요의 충족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아동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 출산장려대책들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함.
- 일본은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대안들을 채택하여 확충하여 왔음.
 -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은 출산감소를 예방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음.
- 비록 성평등이 널리 알려진 정치목표이긴 하지만,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부-북부 유럽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임.

제9장 정책적 제언

제1절 초저출산 사회의 사회정책방향

□ 초저출산 사회의 사회정책방향의 기본원칙 제시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효과적임.
- 결혼~자녀출가 기간동안의 단계별로 지출되는 비용규모를 감안하여 결혼과 자녀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단계별로 균등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함.
- 국민부담이 과중한 현금지원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와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

제2절 저출산 대책의 세부 방안

□ 결혼(가족형성)지원 강화

- 미혼남녀의 결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적절한 결혼환경을 조성토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함.

□ 철저한 임신·출산 관리

- 인공임신중절을 최소화하고, 혼외임신 및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정상출산을 늘리고, 모성건강을 증대시킴.
- 고령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30대 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산전·후 관리를 일선 보건소 및 민간병의원을 통하여 철저히 함.

- 여성들의 평균 초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불임에 대한 우려가 높으므로 불임예방, 불임치료 개발 및 지원 등을 강화함.
- 출산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된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함.

□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강화

- 젊은 여성들이 자아성취를 실현시키면서 일과 결혼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함.
- 자녀양육과 가사에 남녀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근무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함.

□ 민간차원의 의식개혁 운동 지원

- 셋째 아 이상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함.
- 장래 출산을 담당할 청소년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인식의 전환을 위한 국민적 운동을 추진함.
- 혼인과 출산이 25~34세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함.

□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적응 정책 강화

- 이주가정 및 이주근로자를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인식개선이 요구됨.
- 국제이주정책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이주인구의 질적 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를 추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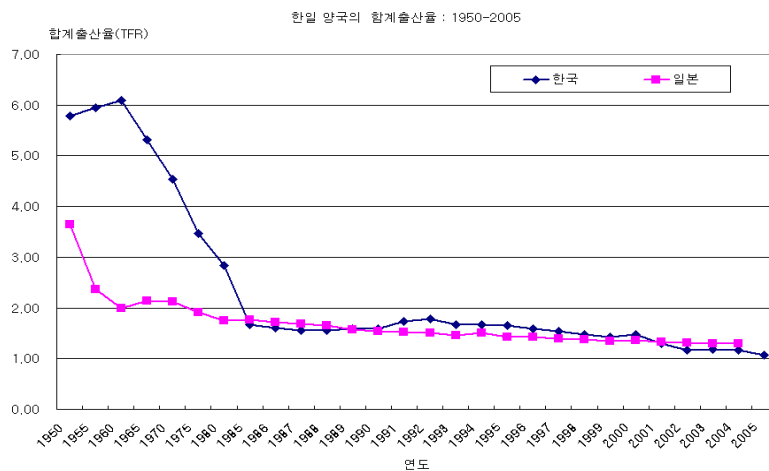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과 일본은 동북아시아의 국가로서 초저출산(超低出生) 인구체제의 동향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TFR)은 1970년 4.53명에서 1983년 2.1명(인구대체수준), 1985년 1.67명, 1995년 1.65명, 2005년 1.08명으로 변화하였다. 즉, 1980년대 중반까지는 급락을 보였으나 그 이후 약 10년간은 안정을 보였고, 다시 저하되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나타냈다.

일본사회의 출산율 변동도 한국의 경우와 유사하였는데, 한국보다 약 20년 앞선 1960년대 중반까지 급락을 보였으며, 그 이후 1970년 2.13명, 1985년 1.76명, 1995년 1.42명, 2004년 1.28명 등으로 변화하였다. 즉, 1960년 중반까지는 급락을 보였으나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는 약 40년간 서서히 낮아졌다.

[그림 1-1] 한일 양국의 합계출산율 변동추이: 1950~2005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변동에서의 공통점은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도 달하기까지는 급락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낮은 속도에서 저하하였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변동에서의 차이점은 한국이 일본보다 약 20년 앞서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저하되었다는 점과 그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에서 2000년대 진입해서는 출산율이 역전(逆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동북아시아의 한일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급격한 출산력 저하는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정책의 효율성을 감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경제사회 전반의 양극화와 격차구조의 확대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가속화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사회통합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저출산을 먼저 경험한 일본은 1989년 1.57 쇼크 이후, 중앙정부 수준에서 엔젤플랜, 뉴엔젤플랜 등의 소자화 대책을 개발하였으며, 지자체에서도 소자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저출산·고령사회대책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그리고 2006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저출산 대책을 일찍 추진한 일본의 경우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정책이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한국보다는 출산력 저하의 속도가 늦고, 현재 오히려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책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유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한국보다 출산력 저하의 속도가 늦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중장기적인 고령화·인구감소 대응정책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세계 초저출산 국가로 대표되는 한일 양국의 출산력 변천 양상과 원인을 규명하고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비교하여 보다 효과적인 정책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

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출산력 변천의 특징 분석과 초저출산의 공통원인 및 개별원인을 규명한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대책을 비교분석하고 효율적 방안을 도출하며, 새로운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9개 장(章)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제1장의 서론에 이어서 제2장에서는 한일 출산율 비교를 위한 Bongaarts Model의 효율성에 관한 검토를 위해 초저출산 인구체제 국가의 특성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를 실시한다. 제3장에서는 인구동태자료에 근거하여 혼인력과 출산력의 특징을 한일간에 비교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의 고령출산의 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한국의 피임과 인공유산의 변화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제6장~제8장은 일본 후생노동성의 인구학자에 의하여 분석되는데, 제6장에서는 제5장과 연관하여 일본의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추이를 분석한다. 제7장에서는 일본 가족정책 및 이민정책의 동향과 한국사회에서의 함의를 논의한다. 제8장에서는 한일양국의 초저출산의 원인과 국가정책의 비효율성을 분석하면서 효과성 증대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9장에서는 전술한 제2장~제8장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대응방안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2.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저출산의 원인, 실태, 대책 등과 관련된 한국과 일본 등 저출산 사회에서 수행된 기존연구와 통계자료를 검토한다. 아울러 각 국가의 다양한 저출산 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 기존자료 분석

한일 양국의 출산력 관련 조사자료를 심층 분석한다. 한국자료는 1990년대부터 2003년 출산력 조사, 최근의 인구주택총조사자료, 인구동태통계자료(출생사망편), 이주가정에 대한 자료 등 다양한 자료에 의한 재접근을 시도한다. 일본 자료는 후생성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출산동향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이들 자료를 다양한 인구학적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재분석한다. 즉, 개인조사의 정보에서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맥락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다. 이에 대하여는 제2장~제8장에서 상세하게 제시된다.

다. 연구진 및 정책자문회의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진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연구 방향, 분석방법, 시사점 도출, 정책제언 등을 논의하여 일관성을 가지도록 조정하였다. 아울러 저출산관련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분석결과의 이해에 적극 감안하였다.

제 2 장 초저출산 인구체제 국가의 특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 글은 최근에 남유럽과 구소련·동유럽에서 논의되어 왔던 합계출산율이 여자 1인당 1.3 수준을 밑도는 이른바 ‘초저출산(超低出産)’ 인구체제의 출현과 지속에 관한 특성들을 한일 양국 간에 비교하기 위한 연구이다(Kohler, Billari, & Ortega, 2001; Billari & Kohler, 2002; McDonald, 2001, 2005, 2006). 한국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05년 현재 여자 1인당 1.08로 급격히 저하하여, 그 수준이 일본의 합계출산율 여자 1인당 1.26을 밑돌기 시작하면서, 한국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으로 칭하는 저출산·고령사회의 부작용 극복을 위한 ‘국가전략’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 글은 먼저, 한국의 통계청과 유엔의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의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전망을 살펴보고, 최근의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출현과 지속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출산의 수준과 템포의 변화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통계청, 2002, 205, 2006; United Nations, 2007).

다음은 한일양국의 출산력의 수준과 템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Bongarrts 출산모형을 소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한일양국에 대하여 출산템포의 왜곡을 제거한 조정합계출산율을 계산하여 장래의 합계출산율에서 한국은 상대적으로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출산율이 반등하여,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을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다(Bongarrts, 1998a, 1998b, 2002; Bongaarts & Feeney, 2002, 2005).

이 글은 계속, 일본 내각부의 저출산 관련 국제비교조사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일 양국 간의 출산과 혼인에 관련된 특성을 살펴본다(日本內閣府共生社會政策擔當, 2006; 小島克久, 2006). 국제비교조사는 동북아시아의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에 들어있는 한일 양국은 물론, 유럽에서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생각되는 프랑스와 스웨덴, 선진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대체수준, 곧

여자 1인당 2.1을 넘는 유일한 국가인 미국을 조상 대상국으로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한일 양국이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특성과 관련하여,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정책은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만혼화, 비혼화가 중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을 위축시킬 가능성을 세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논의하고, 만혼화, 즉, 혼인연령 상승의 반전(反轉)을 통하여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구정책, 특히 혼인대책의 수단들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의 장래인구추계와 한일 양국의 저출산 인구체제

먼저, 한국의 통계청(2006)과 유엔(2007)이 최근에 발표한 한국의 장래추계인구의 출산력 가정설정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21세기 전반 한국의 저출산 인구체제의 전개과정에 대한 전망을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통계청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집계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인구를 설정하여, 2006년 10월에 장래추계인구를 발표하였다. 한편, 유엔은 2007년 3월에 제20차 세계 인구를 전망하면서 한국의 2004년 장래인구추계를 수정하였다. <표 2-1>은 두 기관의 장래인구추계가 채택된 인구지표와 추계가정을 요약하고 있다.

출산율은 한국 장래인구추계의 핵심변수이다. 그러나 출산율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다른 기관은 물론 동일 기관이라도 추계시점에 따라 가정설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2001년 발표된 한국의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율이 비교적 완만하게 떨어지다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합계출산율을 2000년의 여자 1인당 1.47에서 2010년의 1.37로 최저점에 이르렀다가 2030년 이후에는 1.40명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2000년은 “뉴 밀레니엄”의 원년으로 1997년 IMF 쇼크 이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던 시기였으며, 2000년의 “밀레니엄 베이비붐”을 지나 2003년에는 여자 1인당 1.29명의 초저출산 인구체제에 진입하였으며, 2005년 현재 합계출산율은 1.08명

으로 초저출산 인구체제는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는 2005년의 합계출산율을 여자 1인당 1.08명으로 하고, 2010년의 1.15명, 2015년의 1.17명을 거쳐 2030년 이후는 1.28명에 머무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2006년 장래인구추계의 종점인 2050년의 목표출산율은 2005년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의 2050년의 목표출산율보다 0.02명이 낮은 수치다.

〈표 2-1〉 한국의 장래인구추계: 통계청과 유엔의 추계결과와 주요가정

구분	연도	통계청				유엔	
		2006	2005	2001	1996	2006	2004
총인구 (단위: 1000명)	2005	4,813.8	4,829.4	4,846.1	4,727.5	4,787.0	4,781.7
	2030	4,863.5	4,992.9	5,029.6	5,274.4	4,841.1	4,916.1
	2050	4,234.3	4,234.8	4,433.7	-	4,232.7	4,462.9
65세 이상의 고령화 비율에 도달하는 연도	14%	2018년	2018년	2019년	2022년	2018년	2019년
	20%	2026년	2026년	2026년	2032년	2026년	2028년
합계출산율 (중위추계)	2005	1.08	1.19	1.37	1.71	1.21	1.23
	2030	1.28	1.28	1.40	1.80	1.34	1.56
	2050	1.28	1.30	1.40		1.54	1.77
평균수명	2005년 (남자, 여자)	(75.1, 81.9)	(74.8, 81.5)	(74.4, 81.2)	(72.3, 79.7)	(73.5, 80.6)	(74.0, 81.0)
	2030년 (남자, 여자)	(79.8, 86.3)	(79.2, 85.2)	(78.4, 94.8)	(75.4, 82.5)	(78.4, 85.5)	(78.4, 86.4)
	2050년 (남자, 여자)	(82.1, 88.9)	(80.7, 86.6)	(80.0, 86.2)	(80.8, 88.5)	(79.8, 87.1)	-
인구이동 (단위: 만명)		2000~2005년 평균 -8.1만 명 → -1.6만 명	2000~2003년 평균 -1.9만 명 → -0.6만 명	1995~2000년 평균 -2.1만 명 → -0.8만 명	1990~1995년 평균 -3만 명	2000~2003년 평균 -1.6만 명 → -0.6만 명	2000~2003년 평균 -1.6만 명 → -0.6만 명

자료: 한국의 장래인구추계는 통계청의 1996년, 2001년, 2005년, 2006년 발표자료; 유엔은 2004년과 2006년의 온라인자료(<http://esa.un.org/unpp/>)에 의거함. 유엔은 5년 단위로 정리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끝 연도의 수치를 표에 수록하였음.

한편 유엔의 장래인구추계는 2004년과 2006년의 추계결과를 비교할 때, 합계

출산율에 대하여 여전히 낙관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0~2005년의 1.21에서 2025~2030년에는 1.34명으로 증가하고, 2045~2050년에는 1.54명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유엔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45~2050년의 합계출산율 1.54는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설정된 목표출산율 1.28보다 0.26명이 큰 수치로서, 2030년대부터는 초저출산 인구체제로부터 이탈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는 수치다(주1)(전광희 등, 2005).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는 2005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와 비교할 때 평균수명을 0.3~0.4세 정도씩 상향조정하였다, 유엔의 2004년 장래인구추계는 여성의 평균수명을 2030년 86.4세 2050년 88.5세로 하여 아주 낙관적인 가정을 하고 있지만, 2006년의 장래인구추계는 이러한 가정을 상당부분 수정하여, 평균수명은 한국의 통계청 가정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이동에 대해서는 통계청은 연간 순이동(net migration)이 인구 -8.1만 명(2000~2005년의 평균치)에서 점점 줄어들어 -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가정하고, 유엔은 이보다 약간 수치인 인구 -1.6만 명(1995~2000년의 평균치)에서 -0.6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와 유엔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는 모두 한국의 인구가 2017년 또는 2018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들어서고, 8~9년 후인 2026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자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중위가정에 입각한 결과와 유엔 2006년 인구추계의 저위, 중위, 고위, 출산력 불변 가정에 입각한 결과를 비교하면,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율의 가정설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알 수 있다.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중위가정에 입각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주1) 유엔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는 저출산 국가의 출산율은 추계기간 중 여자 1인당 대체수준(2.1)에 머물고, 2045~'50년까지 1.85에 도달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음. 한편 2005~'10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85를 밑도는 국가에 대해서는 추계기간의 처음 5년 또는 10년 동안은 최근 추세를 따르고, 이 기간이 지나면, 5년 간격으로 출산율이 여자 1인당 0.05씩 증가할 것이라고 가정함. 결국, 현재 최저출산 인구체제에 진입한 대부분의 국가는 2050년까지 합계출산율이 1.85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

인구는 2020년에는 약 4,865만 명으로 정점에 이르고, 그 후에는 계속 줄어들어 2050년에는 4,230만 명을 밑돌게 된다. 유엔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에 입각한 결과는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중위가정에 입각한 결과와 비슷하거나 약간 적으며, 장래인구추계의 종점인 2050년의 인구는 약 4,237만명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과 유엔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율 가정 곧 저위가정과 고위 가정 간의 차이가 총인구 규모에서 무시할 수 없는 차이를 가져온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고위가정에 입각한 추계인구는 한국의 총인구가 직선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경에 5,185만 명 수준에서 정점에 이르러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고, 저위가정에 입각한 추계인구는 한국의 인구가 2010년경까지 4,80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그 후에는 계속 줄어들어 2050년에 3,6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두 가정에 의하여 추계된 총인구 규모의 차이는 추계기간의 종점인 2045~2050년에는 1,500만 명에 이르러, 장래 출산율의 변화 경로에 따라 21세기 전반의 인구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과 통계청이 2000~2050년의 50년 동안에 걸쳐 추계한 인구성장률의 수치를 비교하여 보면, 추계기간 전체에 대하여 통계청의 수치가 유엔의 수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온다. 한마디로, 통계청은 유엔보다 인구성장률이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의 장래인구추계에서 모두 인구성장률은 2015~2020년을 기점으로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변하고 있다.

<표 2-2>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합계출산율 가정을 보면, (1) 2001년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00년의 1.47명에서 1.36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목표출산율 1.40명을 회복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였고, (2) 2005년 특별추계에서는 2002년과 2003년에 관찰된 합계출산율, 1.17명과 1.19명을 최저치로 하여 목표치인 1.30명에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3)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는 2005년의 합계출산율 1.08명을 최저치로 하여 2030년부터는 목표치인 1.28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유엔의 경우 (1) 2004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00~2005년의 1.23명에서 2050년의 1.77명으로 꽤나 빠른 속도로 지

속적인 상승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2)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05~2010년의 1.21명에서 2045~2050년의 1.54명으로 약간 완만한 속도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통계청의 2001년과 2006년 장래인구추계와 유엔의 2004년과 2006년 장래인구추계가 21세기의 전반부에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한국 사회가 현재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을 벗어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장래인구추계의 목표출산율 설정에 따라 해답이 다른 것으로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유엔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가 출산율의 변화에 대하여 훨씬 더 비관적인 가정을 하고 있으며, 두 기관 간의 출산력 가정은 장래인구추계의 중점인 2050년에는 여자 1인당 0.28명에 이르고 있다.

〈표 2-2〉 한일 양국의 합계출산율과 인구성장률: 실적치와 추계치

(단위: 명, %)

연차 (한국 : 일본)	한국		일본	
	합계출산율	인구성장률	합계출산율	인구성장률
1975 : 1950	3.47	1.71	3.65	1.61
1980 : 1955	2.83	1.54	2.37	1.00
1985 : 1960	1.67	1.02	2.00	0.93
1990 : 1965	1.59	0.96	2.14	0.77
1995 : 1970	1.65	1.06	2.13	1.37
2000 : 1975	1.47	0.82	1.91	1.03
2005 : 1980	1.08	0.40	1.75	0.72
2010 : 1985	1.15	0.30	1.76	0.50
2015 : 1990	1.17	0.07	1.54	0.40
2020 : 1995	1.20	0.02	1.42	0.23
2025 : 2000	1.25	-0.04	1.36	0.29

주: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인구성장률은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하였고, 일본의 1950~2000년의 합계출산율과 인구성장률은 일본 후생노동성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2006년 통계자료(<http://www.ipss.go.jp>)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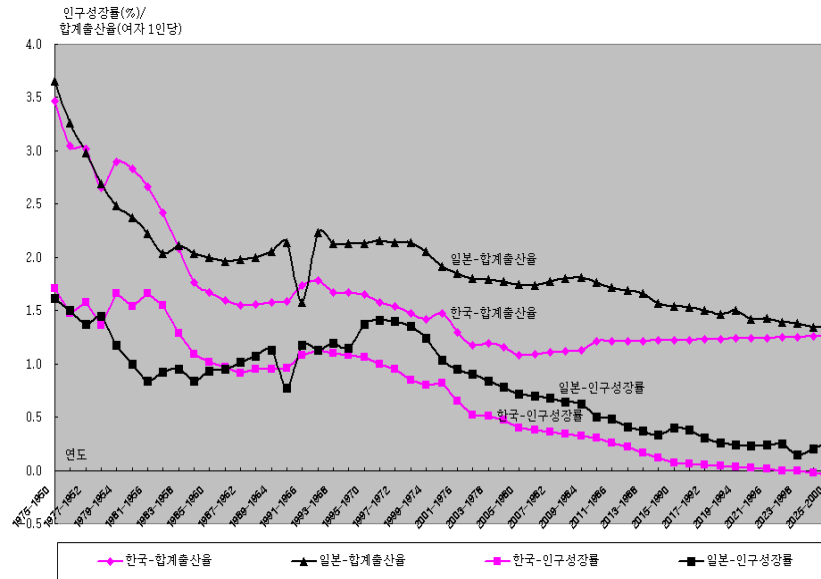
한국에서 인구대체수준(출산율 2.1명)의 절반에 해당하는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출현과 지속의 문제와 관련하여, 합계출산율의 장래 전개방향을 합리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인구이론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인구변천을 먼저 경험했던 일본이나 구미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저출산 인구체제의 특성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최근에 이르러 한국이 일본보다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기는 하지만, 일본의 인구변천, 특히 출산율과 인구성장은 한국의 인구변천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우선 한일 양국의 인구변천을 1950~2000년의 50년간에 걸쳐 비교할 때, 약 25년간의 시차가 있었던 점을 제외하고는 인구변천의 유형이나 속도의 면에서 상호 유사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2-1]은 일본에 대한 1950~2000년의 합계출산율과 인구성장률과 한국에 대한 1975~2025년의 합계출산율과 인구성장률을 보여준다. 따라서 일본 자료는 모두 실측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자료는 1975~2000년은 실측치, 2000~2025년은 추계치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림 2-1]에서, 일본은 1960년대(1960년 2.00명)에 합계출산율이 여자 1인당 대체수준인 2.1 이하로 떨어졌고, 한국은 1980년대 중반(1984년 1.67명)에 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그 시차는 대략 25년이 된다. 한일양국의 인구체제에서 흥미로운 것은 1960년의 일본의 인구성장률과 1985년의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각각 0.93%와 1.02%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며 떨어져서, 2000년에는 여자 1인당 1.36에 이르렀다. 한편,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2025년에는 1.25에 이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일 양국의 분명한 차이점은 1960대와 1970년대의 일본의 출산력 저하와 비교할 때, 1990년대(1995년 1.65명)와 2000년대(2005년 1.08명)에 한국의 출산력 저하가 대단히 빠르다는 사실에 있다. 2000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인구성장률은 1975년 현재 일본의 합계출산율과 인구성장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202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과 인구성장률은 2000년 일본의 합계출산율과 인구성장률에 근접하여 갈 것이라고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가 가정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1] 한국과 일본의 인구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의 비교: 한국과 일본



한일 양국의 추세동향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의 장래경로에 관한 것이다. 인구변천의 시차지체(time lag: 時差遲滯)를 준거기준으로 한다면, 유엔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는 물론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설정된 출산력 가정처럼, 한국의 장래 합계출산율이 불변의 상태에 있거나 완만하게라도 증가하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1975~2000년의 일본 합계출산율의 하향추이와 평행하여, 2000~2025년에는 1.0 수준으로 계속 떨어져야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최악의 함정에 들어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최근 한국 정부의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정책이 제대로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초저출산 함정의 위기는 한층 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2000~2005년 이후의 인구추계 기간에 대해서 합계출산율이 여자 1인당 1.1~1.2명의 수준에서 약간이라도 상승할 수 있으리라는 통계청의 200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설정한 가정이 무리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제 2 절 한일 양국의 출산력 수준과 템포: 비교의 관점

한국의 초저출산 인구체제가 그대로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 더욱 더 최악의 사태에 이르게 될 것인가? 여기에 명쾌한 대답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제로 사회과학은 이와 관련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가설이나 이론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Bongaarts의 출산모형에 제시된 출산력의 수준과 템포를 한일 양국의 비교를 통하여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초저출산의 함정가설(lowest-low fertility trap hypothesis)의 함의를 출산의 수준과 템포의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Bongaarts, 1998; Bongaarts & Feeney, 2002; Lutz & Skirbekk, 2005).

1. Bongaarts 출산모형의 변수들

Bongaarts는 자신의 수리모형을 합계출산율(TFR), 정확히 기간합계출산율과 희망자녀수(DFS)와의 격차를 설명하는 6개 요인을 정리하고 있다(Bongaarts & Feeney, 1998; Kohler, Billari, & Ortega, 2002). 그에 의하면

$$TFR = DFS \cdot F_u \cdot F_g \cdot F_r \cdot F_t \cdot F_i \cdot F_c \cdot E \quad (1)$$

위 방정식 (1)에서 F들은 개별요인 이 각각 출산수준에 미치는 승수효과(乘數效果: multiplier effect)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 (i) F_u = 희망자녀수(DFS)를 넘는 “원치 않은” 자녀수의 효과
- (ii) F_g = “남아선호”와 같은 성선호(gender preference)의 효과
- (iii) F_r = 자녀대체(child replacement)의 효과
- (iv) F_t = 출산속도 변화의 효과
- (v) F_i = “비자발적” 출산억제의 효과
- (vi) F_c = “경쟁적” 선호의 효과

(vii) E == 측정오차 때문에 발생하는 교란항

방정식 (1)은 개별 승수요인(乘數要因) 이외의 여타 요인이 불변이라고 가정하고, 해당 출산축진효과 또는 출산억제효과의 존재여부에 따른 합계출산율의 비(比)로 추정한다. 개별 승수요인은 그 효과가 제로이면 값이 1이지만, 1과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 요인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구체제에서는 F_u , F_g , F_r 는 1을 초과하지만 F_i 와 F_c 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출산연령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F_i 는 1보다 값이 커지고, 출산연령이 저하하는 경우에는 F_i 는 1보다 값이 적어진다.

실제 관찰하는 기간 합계출산율(TFR)과 희망자녀수(DFS) 사이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의 6가지 변수를 모두 필요로 할 것이다(Bongaarts, 1999a, 1999b, 2002; Bongaarts & Feeney, 1998, 2006). 그러나 이 변수 중 성선택, 자녀대체, “비자발적” 출산억제, “경쟁적” 선호(competing preference)와 같은 변수들의 합리적인 측정기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 특정요인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한국의 출생동태통계나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한국과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윤곽을 분석하는데, 비록 단순하지만 하나의 변수 F_i 의 역할에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위의 방정식 (1)은 다음과 같이 변형된다.

$$TFR = DFS \cdot F_i \cdot F' \quad (2)$$

방정식 (2)에서 F' 는 5개의 요인 F_u, F_g, F_r, F_i, F_c 와 교란항 E 의 결합효과라고 가정한다. 방정식 (2)는 합계출산율(TFR), 출산연령의 상승 또는 저하의 효과를 제거한 이른바 ‘조정합계출산율’(TFR')과 희망자녀수(DFS)에

관한 자료가 있다면 실제상황에 응용해볼 수 있는 공식이다. 물론, 희망자녀에 관한 자료는 비교의 목적을 위하여, 초저출산 인구체제를 규정하는 합계출산율 1.30 명으로 할 수도 있고, 개인적 수준의 적정출산율과 대비되는 집합적 수준의 적정출산율로도 대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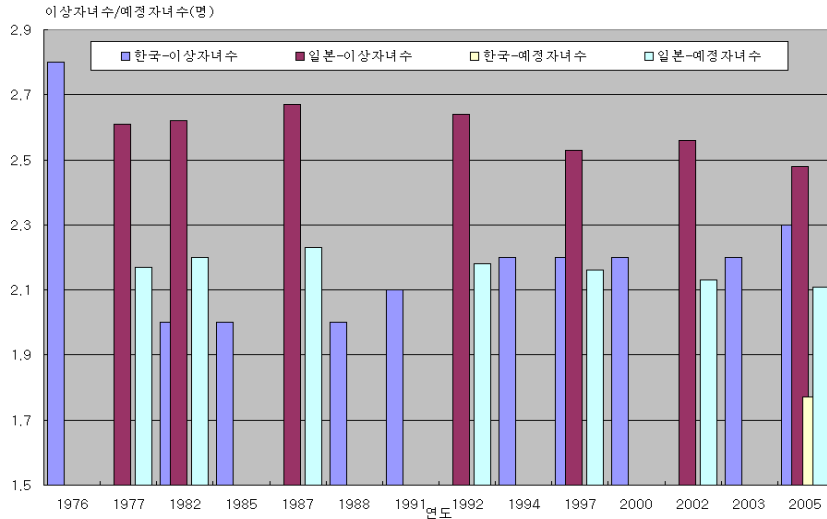
[그림 2-2]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출산력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희망자녀수를 보면 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초저출산의 인구체제가 출현하는 20세기 후반부터 2005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2.2~2.3명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김승권 외, 2000,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한편, 일본의 후생노동성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6)의 출산동향기본조사(出産動向基本調査)는 일본 여성의 희망자녀수가 2.4명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것은 한일 양국의 희망자녀수가 최근에 이르러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출산력의 수준과 템포의 변화를 통하여, 한일 양국의 초저출산 체제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F_t = \frac{TFR}{TFR'} \quad (3)$$

방정식 (3)의 출산속도 변화에 의한 출산억제효과를 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출생순위별 합계출산율(TFR_o)에서 출산연령의 상승에 따른 속도효과를 제거한 조정합계출산율²⁾을 추정한다.

주2) Bongaarts의 조정합계출산율은 기간관찰(period observ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라이더가 제안하는 “템포왜곡을 제거하는 합계출산율”은 코호트관찰(cohort observ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구분될 필요가 있음. 또 조정합계출산율은 출산순위별 템포왜곡을 모두 조정한다는 점에서 라이더의 출산순위를 구분하지 않은 합계출산율의 템포왜곡보다는 세련된 출산력 측정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음(Bongaarts, 1999a, 1999b, 2002; Bongaarts & Feeney, 1998, 2006; Ryder, 1980).

[그림 2-2] 한일 양국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와 예정자녀수: 1976~2005



자료: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結婚と出産に関する全国調査-出生動向基本調査-』, 2006; 이삼식 외, 『저출산원인 종합대책연구』, 2005.

$$TFR'_o = TFR_o / (1 - m_o) \tag{4}$$

방정식 (4)에서 TFR_o = 출생순위 o에 대한 합계출산율의 실제값, TFR'_o = 출생순위 o에 대한 합계출산율의 조정치, 그리고 m_o = 출생순위 o에 대한 평균 출산연령의 연간변화율을 의미한다. 이 경우, 조정합계출산율은 모든 출생순위에서 합계출산율을 $(1 - m_o)$ 로 나누어, 출산연령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실제로 관측 가능한 합계출산율을 구하게 된다.

방정식 (5)에서 출생순위별 보정합계출산율을 합산하면, 출산연령의 상승에 따른 속도효과를 제거한 보정합계출산율(TFR')을 얻는다.

$$TFR' = \sum_{o=1}^n TFR'_o \tag{5}$$

한편 F' 는 잔여범주로서, 방정식 (6)으로 표시된다.

$$F' = TFR / (DFS \cdot F_t) \quad (6)$$

2. 한일 양국의 출산력 비교: 수준과 템포의 비교

앞에서 한국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비관적 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의 인구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의 1975~2025년의 50년간에 걸친 변화추이를 일본의 인구성장률과 합계출산율의 1950~2000년의 50년간에 걸친 변화추이와 비교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모두 실측치를 사용하였지만, 한국의 경우는 1975~2005년에 대해서는 실측치를 사용하였고, 2005~2025년에 대해서는 한국의 통계청이 작성한 2006년 장래인구추계를 사용하였다. 특히, 한일양국의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특성과 비교할 때 기억해야 할 핵심은 1975~2000년의 일본 합계출산율의 하향추이와 평행하게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0~2025년에는 1.0명 수준으로 계속 저하하여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한국 정부가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는 출산장려정책이 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2000~'05년의 인구추계기간에 대해서 합계출산율이 1.1~1.2명 수준에서 현상을 유지하거나 약간이라도 상승할 수 있으리라는 2006년의 장래인구추계의 가정이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2-3>과 <표 2-4>는 한일 양국에서 1975~2005년의 30여년에 걸쳐 방정식 (4)의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과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율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과 [그림 2-3]에서 한국의 모든 자녀에 대한 합계출산율은 1975년의 3.36명에서 2005년의 1.08명으로 격감하여, 구미선진국에서도 남부 유럽이나 구(舊) 소련의 구성 공화국과 동유럽의 자본주의 이행국가들에서나 볼 수 있는 초저출산 인구체제가 2002년부터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3〉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의 변화: 1975~2005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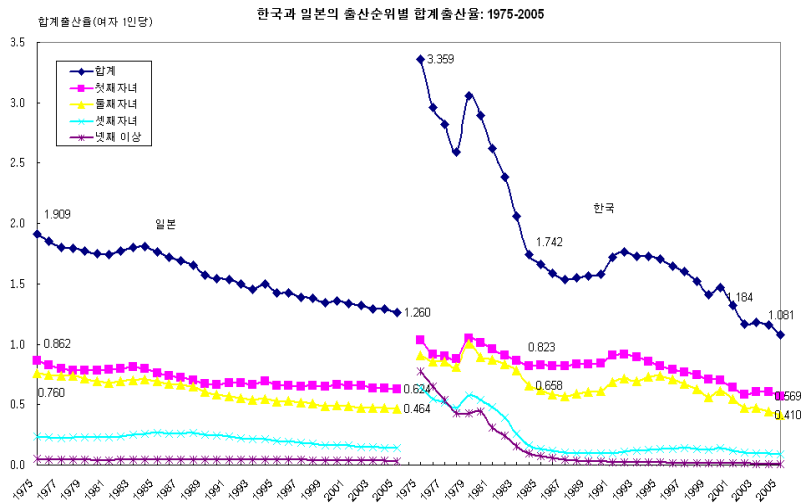
구분	한국					일본				
	합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이상	합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이상
1975	3.359	1.032	0.911	0.641	0.774	1.909	0.862	0.760	0.236	0.052
1976	2.964	0.914	0.854	0.548	0.649	1.852	0.829	0.748	0.227	0.047
1977	2.819	0.901	0.860	0.520	0.539	1.801	0.795	0.736	0.225	0.045
1978	2.592	0.875	0.811	0.476	0.430	1.792	0.785	0.735	0.229	0.043
1979	3.057	1.046	1.003	0.578	0.431	1.769	0.781	0.715	0.232	0.041
1980	2.891	1.012	0.894	0.539	0.447	1.747	0.785	0.692	0.229	0.040
1981	2.619	0.961	0.869	0.481	0.308	1.741	0.792	0.690	0.230	0.040
1982	2.387	0.911	0.836	0.393	0.246	1.770	0.798	0.691	0.239	0.041
1983	2.062	0.863	0.785	0.256	0.158	1.801	0.809	0.698	0.250	0.043
1984	1.742	0.823	0.658	0.163	0.097	1.811	0.798	0.706	0.261	0.046
1985	1.658	0.827	0.623	0.136	0.072	1.764	0.761	0.695	0.263	0.045
1986	1.585	0.822	0.587	0.119	0.057	1.723	0.742	0.675	0.261	0.045
1987	1.536	0.822	0.571	0.101	0.042	1.691	0.721	0.662	0.262	0.045
1988	1.549	0.832	0.587	0.096	0.034	1.656	0.699	0.647	0.264	0.046
1989	1.562	0.836	0.603	0.093	0.029	1.572	0.670	0.605	0.251	0.045
1990	1.577	0.842	0.610	0.097	0.027	1.543	0.663	0.587	0.246	0.046
1991	1.717	0.911	0.684	0.099	0.024	1.535	0.680	0.572	0.237	0.046
1992	1.765	0.914	0.714	0.113	0.024	1.502	0.676	0.557	0.225	0.044
1993	1.724	0.892	0.694	0.117	0.022	1.458	0.687	0.537	0.211	0.043
1994	1.730	0.855	0.729	0.125	0.021	1.500	0.693	0.550	0.211	0.045
1995	1.706	0.817	0.740	0.130	0.019	1.422	0.660	0.521	0.197	0.044
1996	1.647	0.790	0.705	0.134	0.017	1.425	0.659	0.532	0.192	0.043
1997	1.603	0.771	0.674	0.141	0.017	1.388	0.649	0.515	0.184	0.041
1998	1.522	0.743	0.627	0.136	0.016	1.384	0.657	0.509	0.178	0.039
1999	1.411	0.711	0.560	0.124	0.015	1.342	0.650	0.489	0.166	0.037
2000	1.467	0.701	0.613	0.138	0.015	1.359	0.662	0.492	0.165	0.038
2001	1.321	0.643	0.549	0.116	0.013	1.334	0.655	0.484	0.159	0.036
2002	1.170	0.584	0.474	0.102	0.011	1.319	0.659	0.475	0.150	0.035
2003	1.184	0.602	0.475	0.097	0.011	1.290	0.638	0.474	0.144	0.034
2004	1.159	0.607	0.446	0.095	0.011	1.289	0.637	0.476	0.142	0.034
2005	1.081	0.573	0.410	0.088	0.011	1.260	0.624	0.464	0.139	0.033

주: 한국의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정보시스템(KOSIS)과 내부자료를 통하여 작성되었으며, 일본의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은 일본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2006)과 일본 厚生勞動省, 「平成 7 年人口動態統計確定數の概況」(2006)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

1975~2005기간합계출산율의 저하는 한국사회의 경제적 변화나 문화적 제약 여건을 반영하면, 1978년의 말띠 해는 합계출산율이 격감하였다가 1979년에 다

시 반등하였지만, 1983년에는 2.06명에 이르면서 대체수준 이하의 합계출산율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출산율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지만, 1990년에는 말뚝해의 영향으로 출산력 상승의 모멘텀이 둔화되다가, 2000년의 밀레니엄 베이비붐을 제외하고 출산율은 빠른 속도로 저하하고 있다.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은 2005년 현재 최근의 젊은 여성들의 혼인연령 상승이나 독신선호 경향의 강화로 인한 비혼화나 만혼화의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저하할 가능성이 크다(Jun, K-H, 2005).

[그림 2-3]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의 비교: 1975~2005



주: <표 2-1>의 주 참고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75년의 1.91명에서 2005년의 1.26명으로 감소하여, 한국의 출산율 저하 추이보다는 심각성이 덜 해보이지만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국가로서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다(표 2-3, 그림 2-4 참고). 일본은 1974년에 합계출산율이 2.05명으로 대체수준을 밑돌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의 합계출산율은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2002)가 2002년 1월에 발표한 일본장래추계

인구의 중위추계에서 전제로 하는 2006년의 1.31명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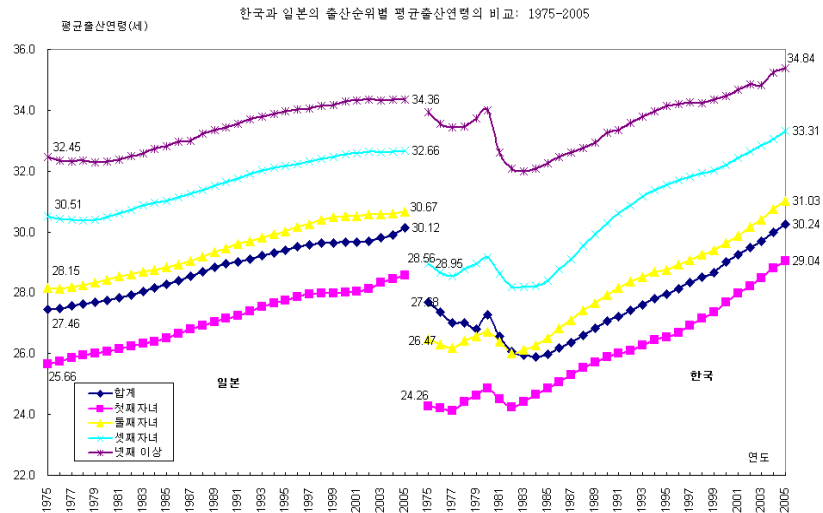
〈표 2-4〉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의 변화: 1975~2005
(단위: %)

구분	한국					일본				
	합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이상	합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이상
1975	27.68	24.26	26.47	28.95	33.95	27.46	25.66	28.15	30.51	32.45
1976	27.36	24.22	26.29	28.67	33.56	27.47	25.74	28.14	30.43	32.34
1977	27.00	24.12	26.18	28.54	33.45	27.56	25.87	28.19	30.39	32.32
1978	27.01	24.41	26.41	28.78	33.48	27.63	25.95	28.26	30.38	32.35
1979	26.80	24.63	26.56	28.97	33.73	27.70	26.02	28.35	30.40	32.28
1980	27.26	24.85	26.72	29.15	33.99	27.75	26.07	28.43	30.50	32.33
1981	26.56	24.51	26.40	28.63	32.61	27.84	26.17	28.53	30.61	32.38
1982	26.07	24.24	26.02	28.17	32.08	27.93	26.25	28.60	30.72	32.48
1983	25.94	24.43	26.13	28.18	31.99	28.03	26.32	28.69	30.86	32.59
1984	25.88	24.65	26.26	28.23	32.09	28.15	26.40	28.76	30.95	32.72
1985	25.99	24.86	26.51	28.41	32.25	28.28	26.52	28.84	31.03	32.83
1986	26.19	25.06	26.84	28.78	32.47	28.40	26.66	28.94	31.13	32.95
1987	26.37	25.30	27.10	29.11	32.06	28.55	26.80	29.05	31.25	33.00
1988	26.61	25.53	27.41	29.54	32.76	28.70	26.92	29.19	31.37	33.22
1989	26.84	25.72	27.67	29.94	32.93	28.84	27.05	29.34	31.52	33.34
1990	27.06	25.90	27.94	30.27	33.25	28.95	27.16	29.47	31.64	33.45
1991	27.22	26.02	28.15	30.60	33.35	29.01	27.24	29.59	31.77	33.55
1992	27.41	26.09	28.38	30.87	33.60	29.11	27.38	29.69	31.89	33.70
1993	27.59	26.27	28.52	31.16	33.79	29.21	27.53	29.80	32.01	33.80
1994	27.82	26.44	28.68	31.36	33.96	29.31	27.66	29.92	32.11	33.89
1995	27.95	26.53	28.76	31.56	34.13	29.39	27.76	30.01	32.16	33.97
1996	28.12	26.69	28.92	31.69	34.21	29.51	27.88	30.15	32.24	34.02
1997	28.32	26.92	29.07	31.83	34.27	29.57	27.94	30.26	32.33	34.06
1998	28.52	27.16	29.26	31.94	34.24	29.62	27.98	30.39	32.40	34.13
1999	28.67	27.37	29.40	32.02	34.35	29.64	27.99	30.49	32.47	34.18
2000	29.01	27.68	29.65	32.20	34.46	29.65	28.00	30.52	32.54	34.29
2001	29.24	27.97	29.87	32.43	34.69	29.66	28.03	30.53	32.59	34.33
2002	29.48	28.22	30.16	32.65	34.84	29.69	28.12	30.57	32.63	34.35
2003	29.70	28.49	30.40	32.84	34.82	29.81	28.33	30.59	32.60	34.33
2004	29.99	28.79	30.76	33.06	35.23	29.90	28.44	30.62	32.63	34.35
2005	30.24	29.04	31.03	33.31	35.37	30.12	28.56	30.67	32.66	34.36

주: <표 2-1>과 동일.

한국과 일본이 21세기 초입부터 대체수준을 훨씬 밑도는 강한 초저출산 경향을 보이는 것은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5년 현재 첫째 자녀 0.57명 둘째 자녀 0.41명 셋째 자녀 0.09명이며,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첫째 자녀 0.62명, 둘째 자녀 0.46명, 셋째 자녀 0.14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둘째 자녀는 물론 첫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2-4]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의 비교: 1975~2005



주: <표 2-2>의 자료.

한국의 경우 1975년만 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이 첫째 자녀 1.03명, 둘째 자녀 0.92명, 셋째 자녀 0.64명, 넷째 자녀 이상이 0.64명에 이르고 있지만, 2005년 현재 셋째 자녀는 물론 넷째 자녀 이상의 출산은 대단히 희귀한 현상이 되고 있으며 첫째 자녀는 1975년 수준의 40% 이상(1975년 1.03명 → 2004년 0.61명) 둘째 자녀는 1975년 수준의 50% 이상(1975년 0.91명 → 2004년 0.45명)이 줄어들었고, 제2차 출산력 변천이 본격화되는 1985년을 기준으로 보면 첫째 자녀는 25% 이상(1985년 0.82명 → 2004년 0.61명) 둘째 자녀는 40% 이상(1975년 0.62명

명 → 2004년 0.45명) 감소하였다. 한편 셋째 자녀와 넷째 자녀의 출산은 전체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남호선호로 인한 출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으며, 셋째 자녀와 넷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1985년대 이후 1990년대에 진입하면서 약간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부분은 1990년대 후반 합계출산율의 상승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975년에는 첫째 자녀는 0.76명, 둘째 자녀 0.76명, 셋째 자녀 0.24명, 넷째 자녀 0.05명으로 한국의 1983년 당시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한국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저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3년의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은 1975년의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과 비교할 때, 첫째 자녀의 경우는 35%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의 경우는 60% 가량 감소하였다. 한편, 기준연도를 1985년으로 하여 출산순위별 합계출산율을 비교하면, 첫째 자녀의 경우는 20% 둘째 자녀의 경우는 30% 가량 감소하였고, 셋째 자녀는 4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에서도 셋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동아시아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남아선호에 기인하는 것인지 확실하지는 않으며, 넷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약간씩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표 2-5>와 [그림 2-5]는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출산연령의 변화추이를 1975~2005년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 Bongarrts 출산모형에서 출산순위별 출산력 분석에서 기간합계출산율의 수준이 비슷하다면, 전체 자녀의 평균출산연령을 비교하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의 1983년과 일본의 1975년의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당 각각 2.06명과 1.91명으로 비슷한 수준에 있고, 한국의 2001년과 일본의 1999년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당 각각 1.32명과 1.34명으로서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평균출산연령을 비교하여 출산유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먼저, 1975년 당시 일본의 평균출산연령은 27.4세이고 한국의 평균출산연령은 25.9세, 일본이 한국보다 약 1.5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한국의 2001년의 경우에는 평균출산연령이 29.2세이며 일본은 1999년의 경우 평균출산연령이 29.6세에 이르고 있어서 일본이 한

국보다 평균출산연령이 0.4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2-5> 출산순위별 조정합계출산율의 한일양국 비교: 1976~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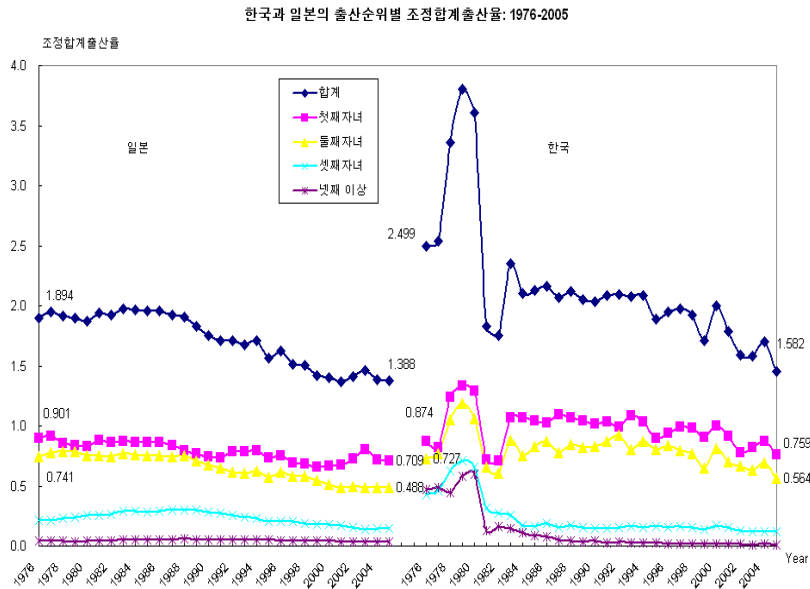
구분	한국					일본				
	합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이상	합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이상
1976	2.499	0.874	0.727	0.430	0.468	1.894	0.901	0.741	0.210	0.042
1977	2.537	0.821	0.771	0.461	0.483	1.949	0.914	0.775	0.216	0.044
1978	3.358	1.238	1.050	0.626	0.444	1.915	0.853	0.790	0.227	0.044
1979	3.807	1.333	1.187	0.708	0.579	1.901	0.840	0.786	0.237	0.038
1980	3.609	1.290	1.058	0.660	0.601	1.875	0.826	0.752	0.254	0.042
1981	1.826	0.722	0.659	0.316	0.129	1.936	0.880	0.756	0.258	0.042
1982	1.751	0.712	0.607	0.270	0.161	1.924	0.867	0.743	0.269	0.046
1983	2.350	1.066	0.882	0.256	0.146	1.976	0.870	0.767	0.291	0.048
1984	2.098	1.065	0.755	0.172	0.107	1.966	0.867	0.759	0.287	0.053
1985	2.124	1.041	0.831	0.166	0.086	1.957	0.865	0.755	0.286	0.051
1986	2.162	1.028	0.871	0.190	0.073	1.954	0.863	0.750	0.290	0.051
1987	2.069	1.090	0.780	0.151	0.048	1.927	0.838	0.744	0.298	0.047
1988	2.122	1.071	0.844	0.167	0.041	1.906	0.794	0.752	0.300	0.059
1989	2.050	1.041	0.817	0.156	0.035	1.828	0.771	0.712	0.295	0.051
1990	2.034	1.017	0.832	0.144	0.040	1.751	0.745	0.675	0.280	0.052
1991	2.083	1.037	0.874	0.147	0.026	1.713	0.739	0.650	0.272	0.051
1992	2.098	0.990	0.921	0.155	0.032	1.712	0.786	0.619	0.256	0.052
1993	2.080	1.082	0.806	0.166	0.027	1.676	0.785	0.603	0.240	0.048
1994	2.084	1.033	0.869	0.157	0.025	1.705	0.797	0.625	0.234	0.049
1995	1.888	0.898	0.806	0.162	0.023	1.561	0.733	0.573	0.207	0.048
1996	1.952	0.941	0.839	0.153	0.019	1.621	0.749	0.619	0.209	0.045
1997	1.973	0.994	0.796	0.164	0.018	1.514	0.690	0.579	0.202	0.043
1998	1.920	0.981	0.772	0.152	0.015	1.503	0.684	0.585	0.191	0.042
1999	1.712	0.908	0.651	0.136	0.017	1.417	0.657	0.543	0.178	0.039
2000	2.001	1.004	0.814	0.167	0.016	1.399	0.669	0.510	0.177	0.043
2001	1.782	0.911	0.702	0.152	0.017	1.369	0.675	0.489	0.167	0.038
2002	1.592	0.782	0.667	0.130	0.013	1.411	0.724	0.495	0.156	0.036
2003	1.582	0.823	0.630	0.118	0.011	1.464	0.808	0.484	0.140	0.033
2004	1.702	0.872	0.690	0.122	0.019	1.388	0.716	0.491	0.146	0.035
2005	1.453	0.759	0.564	0.117	0.013	1.374	0.709	0.488	0.143	0.033

주: <표 2-1>과 동일.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을 위에서와 같이 모든 자녀에 대한 합계출산율이 비슷한 연도를 대상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

의 1983년의 경우 평균출산연령이 첫째 자녀 24.4세 둘째 자녀 26.1세 셋째 자녀 28.2세 넷째 자녀 이상 32.0세에 이르며, 일본의 경우 1975년 평균 출산연령이 첫째 자녀 25.6세, 둘째 자녀 28.15세, 셋째 자녀 30.5세 넷째 자녀 32.45세에 이르고 있어서 일본의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이 한국보다 첫째 자녀 1.2세, 둘째 자녀 2.0세, 셋째 자녀 1.7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넷째 자녀의 경우는 한국의 평균 출산연령이 일본보다 1.5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환언하면, 앞에서 언급한 전체자녀에 대한 평균출산연령의 차이가 1.5세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일본의 여성들은 한국의 여성들보다 첫째 자녀를 상대적으로 빨리 출산하는 경향이 있으며, 출산의 템포가 둘째 자녀에 이르러서는 좀 더 완만해 지다가, 넷째 자녀 이상의 경우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출산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2-5] 출산순위별 조정합계출산율의 한일양국 비교: 1976~2005



주: <표 2-1>과 동일.

다음은 한국의 2001년의 경우 평균 출산연령이 첫째 자녀 28.0세, 둘째 자녀, 29.0세 셋째 자녀 32.4세, 넷째 자녀 이상 34.7세에 이르며, 일본의 경우 1999년 평균 출산연령이 첫째 자녀 28.0세, 둘째 자녀 30.5세, 셋째 자녀 32.5세, 넷째 자녀 34.2세에 이르고 있어서 일본의 출산순위별 평균 출산연령이 한국과 비교할 때 첫째 자녀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는 한국보다 1.5세와 0.1세가 높으며, 넷째 자녀는 한국보다 오히려 0.5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앞에서 언급한 전체자녀에 대한 평균 출산연령의 차이가 0.4세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첫째 자녀의 출산 템포는 일본여성이 한국여성보다 빠르며, 둘째 자녀의 출산부터는 출산속도가 역전되어 한국여성이 일본여성보다 빨라지며, 셋째 자녀와 넷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다시 일본여성들이 한국여성보다 빠른 속도로 출산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6>과 [그림 2-6]은 앞에서 본 Bongarrts 출산모형의 방정식 (4)과 (5)를 이용하여 합계출산율을 혼인연령의 상승 곧 만혼화에 대한 출산속도의 왜곡을 보정한 합계출산율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는 1978년의 말띠 해에 해당하는 주변의 몇 년간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1994년까지 조정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인 2.1명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95년 이후 조정합계출산율은 대체수준 2.1명 이하로 저하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2000년의 “밀레니엄 베이비붐”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혼인연령의 상승, 곧 만혼화나 비혼화의 경향을 고려하는 출산속도의 왜곡을 보정하더라도 출산수준은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2년과 2003년은 1997년 이후 어려워지고 있는 노동시장의 상황은 물론 말띠 해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변수는 1992년 말띠 해에 합계출산율의 반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최근 출산력 변천과 관련하여,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혼인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출산속도의 왜곡을 제거하면, 1994년까지는 대체수준에 가까운 출산율을 유지하였지만, 1995년 이후부터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 대한 조정합계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전체자녀에 대한 조정합계출산율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재로서는 한국의 합

계출산율을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도록 하는 요인은 일차적으로 혼인연령의 상승에 따른 여성들의 만혼화 경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정합계출산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6년부터 2005년까지 30년간에 걸쳐 약간의 기복이 있기는 하였지만, 여자 1인당 1.8~2.0의 대체수준을 약간 밑도는 합계출산율에서 최근에는 1.2~1.3 수준의 대단히 낮은 합계출산율로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조정합계출산율의 추이를 비교하여 볼 때, 일본의 출산력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으로는 혼인연령의 상승 곧 만혼화와 출산순위별 출산연령의 상승로만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곧 일본의 출산력 저하는 만혼화 현상과 함께 독신여성의 증가로 인한 비혼화 현상이 일본의 출산율에 대한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결국,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지속과 관련하여,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혼인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만혼화 현상과 더불어 독신여성의 증가에 따른 비혼화 현상이 한국의 장래 합계출산율을 더욱 더 위축시킬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것을 출산장려정책에 반영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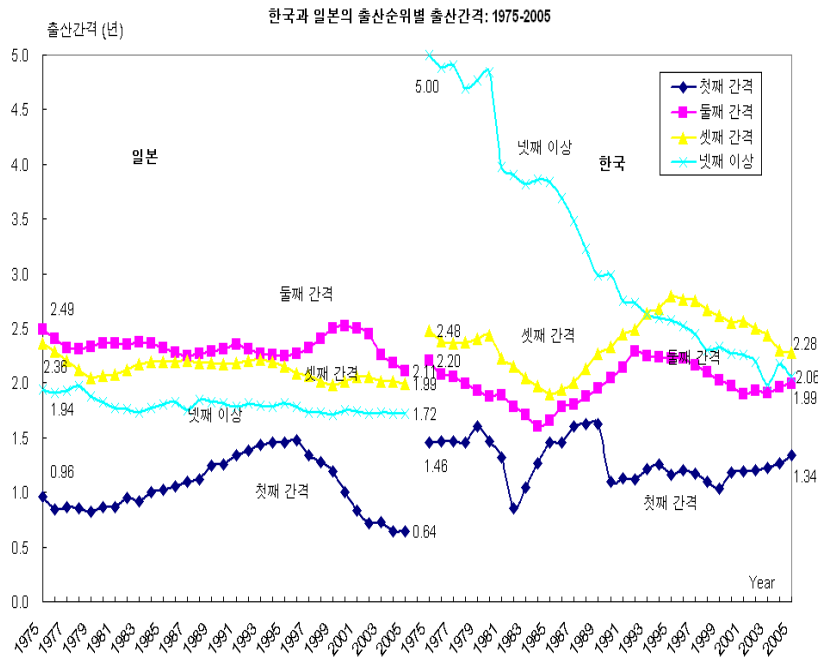
끝으로, 한일 양국의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지속과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출산간격의 변화를 1975~2005년에 걸쳐 <표 2-4>와 [그림 2-6]은 보여주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 여성의 경우 한국여성보다 무자녀에서 첫째 자녀로의 이행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며, 둘째 자녀로의 이행은 한국여성이 일본여성보다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시 셋째 자녀와 넷째 자녀에서 역전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한국에서 여성들의 혼인연령이 상승하면서 기간합계출산율이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적령혼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일본 여성의 무자녀에서 첫째 자녀로의 빠른 이행은 사실상 만혼화, 곧 혼인연령 상승의 효과를 상쇄하는 결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 여성의 경우 혼인연령의 상승과 상대적으로 출산간격이 긴 첫째 자녀로의 이행은 오히려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을 일본보다 더욱 더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표 2-6〉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출산간격의 변화: 1975~2005

구분	한국				일본			
	첫째 간격	둘째 간격	셋째 간격	넷째 이상	첫째 간격	둘째 간격	셋째 간격	넷째 이상
1975	1.46	2.20	2.48	5.00	0.96	2.49	2.36	1.94
1976	1.46	2.08	2.38	4.89	0.84	2.40	2.29	1.91
1977	1.46	2.06	2.36	4.90	0.87	2.32	2.20	1.93
1978	1.46	1.99	2.38	4.70	0.85	2.31	2.12	1.97
1979	1.60	1.93	2.40	4.77	0.82	2.33	2.05	1.88
1980	1.46	1.87	2.43	4.84	0.87	2.36	2.07	1.83
1981	1.31	1.89	2.23	3.98	0.87	2.36	2.08	1.77
1982	0.85	1.79	2.15	3.90	0.95	2.35	2.12	1.76
1983	1.04	1.71	2.05	3.82	0.92	2.37	2.17	1.73
1984	1.27	1.61	1.97	3.86	1.00	2.36	2.19	1.77
1985	1.46	1.65	1.90	3.84	1.02	2.32	2.19	1.80
1986	1.46	1.78	1.94	3.69	1.06	2.28	2.19	1.82
1987	1.60	1.80	2.01	3.49	1.10	2.25	2.20	1.75
1988	1.63	1.88	2.13	3.22	1.12	2.27	2.18	1.85
1989	1.62	1.95	2.27	2.98	1.25	2.29	2.18	1.82
1990	1.10	2.04	2.33	2.98	1.26	2.31	2.17	1.81
1991	1.13	2.14	2.44	2.75	1.34	2.35	2.18	1.78
1992	1.12	2.29	2.49	2.73	1.38	2.31	2.20	1.81
1993	1.21	2.25	2.64	2.63	1.43	2.27	2.21	1.79
1994	1.25	2.24	2.68	2.59	1.46	2.26	2.19	1.78
1995	1.16	2.23	2.80	2.57	1.46	2.25	2.15	1.81
1996	1.20	2.23	2.77	2.52	1.48	2.27	2.09	1.78
1997	1.17	2.16	2.75	2.45	1.34	2.32	2.07	1.73
1998	1.10	2.10	2.67	2.30	1.28	2.41	2.01	1.73
1999	1.04	2.03	2.62	2.33	1.19	2.50	1.98	1.71
2000	1.18	1.97	2.55	2.26	1.00	2.52	2.02	1.75
2001	1.19	1.90	2.57	2.25	0.83	2.50	2.06	1.74
2002	1.20	1.93	2.49	2.19	0.72	2.45	2.06	1.72
2003	1.22	1.91	2.43	1.99	0.73	2.26	2.01	1.73
2004	1.26	1.96	2.30	2.17	0.64	2.18	2.01	1.72
2005	1.34	1.99	2.28	2.06	0.64	2.11	1.99	1.72

주: <표 2-1>과 동일.

[그림 2-6]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출산간격: 1975~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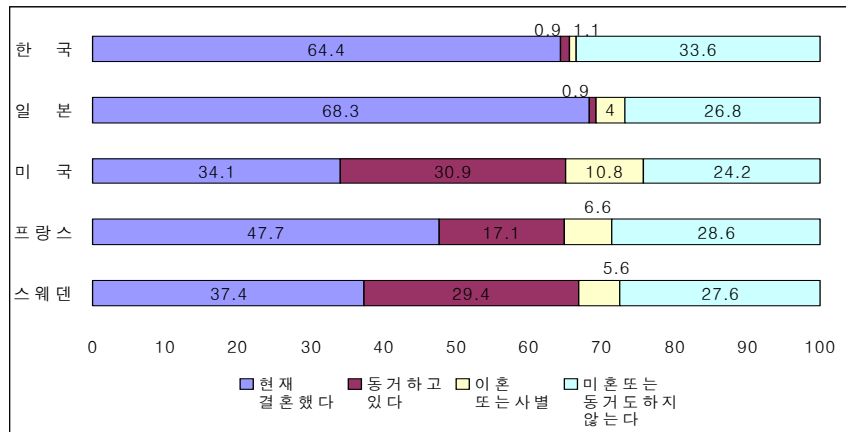
주: <표 2-1>의 주를 참고할 것.

제 3 절 한일양국과 구미 선진국의 저출산 관련 특성의 비교

한일양국의 초저출산 체제의 특성을 미시적 수준에서 비교하기 위하여, 일본 내각부가 실시한 5개국의 출산관련 국제비교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사대상국은 한국과 일본 외에 유럽의 프랑스와 스웨덴, 그리고 북미의 미국이 포함되었으며, 이들은 일본이나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위의 Bongarrts 출산모형의 인구정책적 함의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조사의 표본설계와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은 원래의 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일본 내각부 정책담당 통괄관실 보고서, 2006). 또, 국

제비교조사의 보고서는 일본과 한국의 비교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의 문항에 따라서 결혼에 대한 의식, 이혼에 대한 의식, 출산(자녀를 두는 것, 희망자녀수와 실제자녀수, 혼외출산)에 대한 의식, 육아(육아에 대한 의식, 육아의 역할분담, 남녀의 역할분담), 사회적 지원(미혼자의 결혼촉진, 임신·출산시의 부담경감책, 육아지원책의 실시) 등에 대한 횡단제표 수준의 분석이 들어있다(小島克久, 2006).

[그림 2-7] 한일 양국과 구미선진국의 혼인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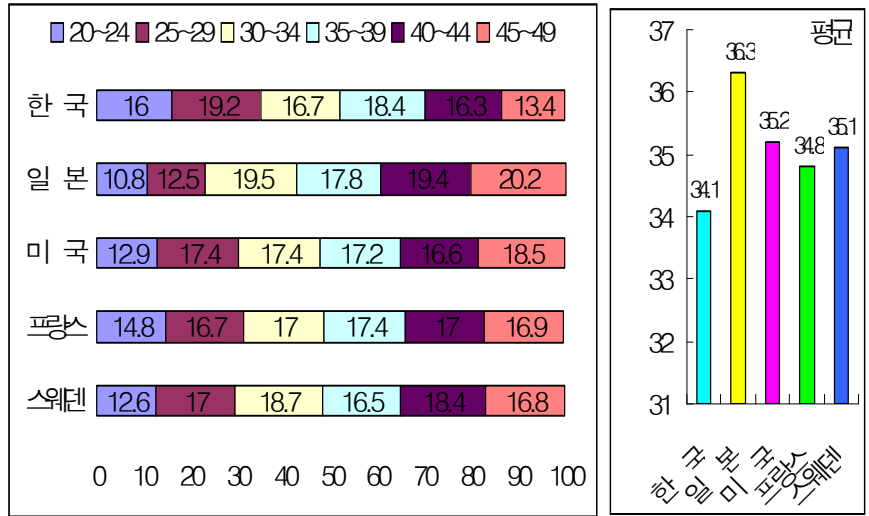
1. 혼인상태와 초혼연령

한국에서 최근의 합계출산율을 떨어뜨려 초저출산 인구체제를 야기한 요인으로 만혼화 곧 미혼율의 상승을 들고 있지만, 결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일본 내각부의 국제비교 의식조사 결과의 응답자 혼인상태를 보면, 한국은 조사대상자 중 ‘현재 결혼을 하였고,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4.4%로 가장 높았고, 일본은 ‘현재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8.3%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한 특이한 점은

미국에서는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과 현재 동거(법률적으로 결혼하지 않고 같이 살고 있는 거주형태)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스웨덴도, 동거가 결혼과 마찬가지로 일반화되어,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 동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8]은 일본이 구미선진국보다 40세 이후의 응답자가 많아서 표본의 평균연령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은 30세 미만의 응답자가 많아서 표본의 평균연령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구미선진국의 응답자는 연령별 분포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본의 평균연령은 심각한 편차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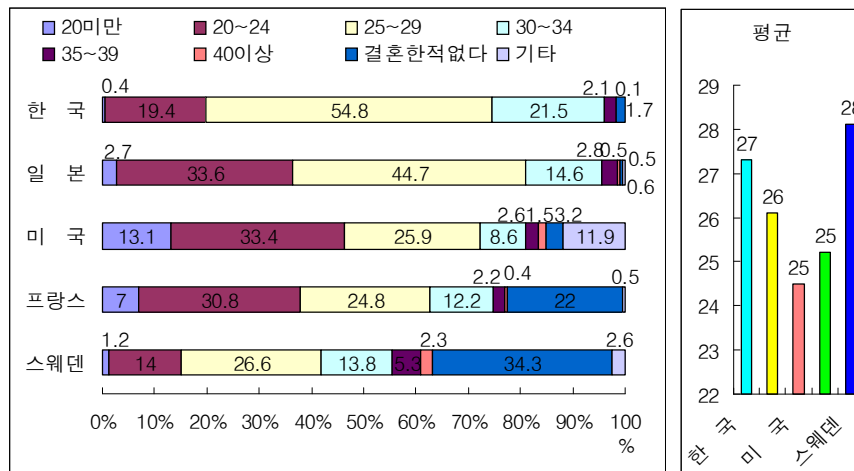
[그림 2-8] 한일양국과 구미선진국 표본의 평균연령과 연령별 분포



한국은 [그림 2-9]에서 25~29세에 ‘결혼을 했다’는 응답자가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25~29세의 비율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30~34세까지의 비율이 21.5%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일

본은 20~24세까지가 33.6%로 나타나서 한국이 일본보다 만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과 프랑스를 보면, 20~24세까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특이한 점은 ‘결혼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미국 11.9%, 프랑스 22.0%로 한국과 일본에 비하면 아주 높은 비율을 보인다. 그리고 스웨덴은 ‘결혼 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에서 가장 높아 34.3%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한일 양국의 결혼관 약화와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관계와 관련하여 주목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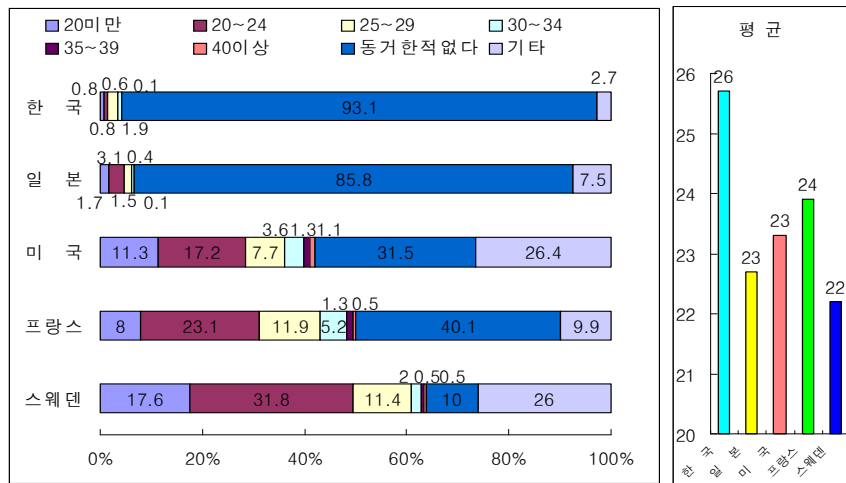
[그림 2-9] 응답자의 평균혼인연령과 혼인연령의 분포



[그림 2-10]에서 한일양국의 동거경험은 구미 선진국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거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일 양국을 비교하면, 한국은 93.1%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전통적 가족윤리와 혼인규범의 보수성은 여전히 한국 응답자의 동거경험을 위축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국가들은 처음 동거한 연령이 20~24세 사이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프랑스에서는 동거했던 적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오히려 9.9%에 이르러, 이것은 한국이나 일본의 동거경험

에 관한 사정들과 비교해 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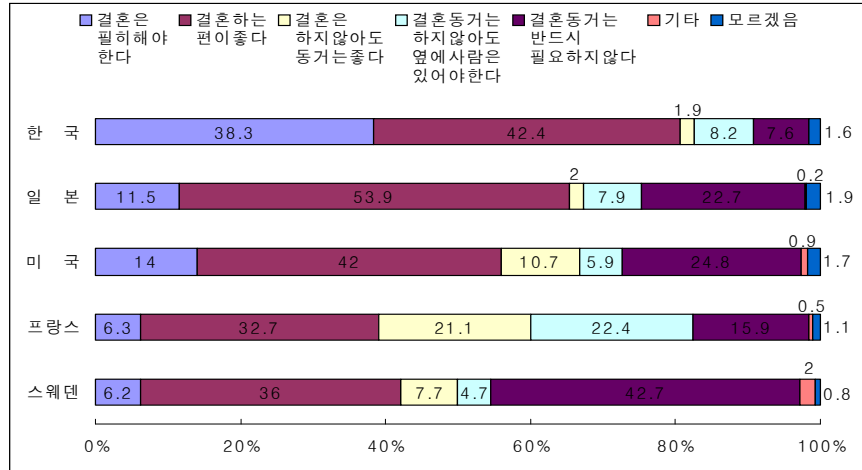
[그림 2-10] 조사대상국의 응답자의 동거경험과 평균동거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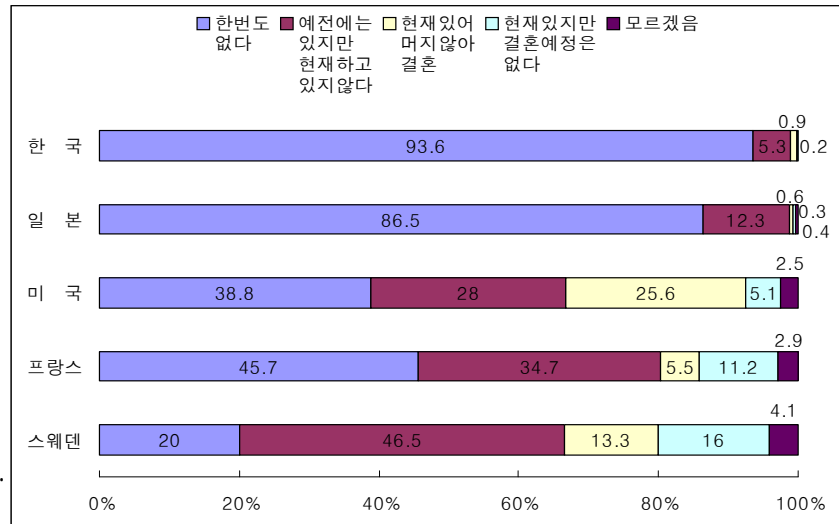
[그림 2-11]에서 한국은 ‘결혼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42.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이 38.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결혼하는 편이 좋다’는 응답이 53.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결혼도 동거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22.7%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결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1.5%만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결혼도 동거도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7.6%만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해 볼 만하다.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동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구미선진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동거를 하였지만, 현재는 동거를 하고 있지 않다’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동거를 하고 있지만, 결혼할 예정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응답자의 결혼과 동거에 대한 의견의 분포



[그림 2-12] 조사대상국 응답자의 동거에 대한 의견



한국과 일본은 법률혼이 주를 이루고, 프랑스, 스웨덴, 미국 등의 구미선진국에서는 동거 등의 사실혼도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은 한일양국과 구미선진국의 결혼상태에 큰 차이를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되며, 한일 양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초저출산 대응 인구정책을 마련하는데 고려하여 할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결혼과 자립에 대한 의견

다음은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소득수준에 관한 의견이다. <표 2-7>에서 한국의 응답자들은 200만에서 299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도 마찬가지로 200만원에서 299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미국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높았으며, 스웨덴에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응답자들이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경험한 이후, 일본이나 구미선진국보다 1인당 소득수준이 낮지만, 응답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자립에 상당한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결혼이나 출산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자립에 필요한 소득 수준에 대한 의견

구분	100만원 미만	100~199만원	209~299만원	300~399만엔	400~499만원	500~699만원	700~999만원	1000만 원 이상	모르겠음
한국	0.5	16.1	37.2	29.4	10.4	4.0	0.6	0.1	1.7
일본	0.0	6.9	45.5	32.4	9.9	3.1	0.4	0.3	1.6
미국	0.2	3.1	11.1	18.1	18.4	26.5	9.3	5.8	7.5
프랑스	0.2	4.1	23.3	21.8	12.5	5.2	2.6	0.4	30.0
스웨덴	0.3	4.6	20.1	35.7	25.5	10.0	1.5	0.8	1.5

주: 1엔=10원으로 환산하여 표시함

<표 2-8>에 보는 것처럼, 자녀출산에 대한 의견을 보면 한국과 일본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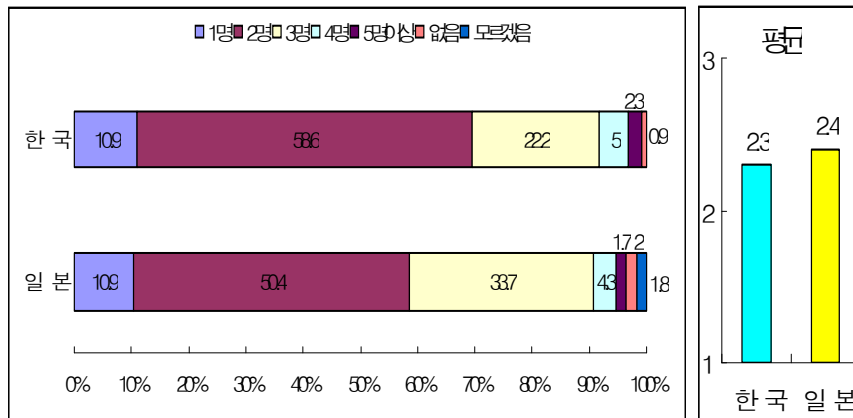
자 사이에 각자 약간의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은 ‘자녀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응답이 85.1%로 가장 높았고, 두 번째로 아이는 ‘부부의 생활을 안정시켜준다’는 것이 46.1%를 차지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이가 생활을 즐겁게 해준다’는 것이 43.5%를 차지했다. 또한 ‘자신의 자손이 생긴다’는 응답이 22.6%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아이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응답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다음으로는 ‘아이가 있으면 생활이 즐겁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세 번째로는 ‘좋아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싶기 때문이다’는 응답이 21.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아이의 부부를 안정시켜준다’는 응답이 네 번째를 차지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손이 생긴다’가 21.2%를 나타냈다.

〈표 2-8〉 한일양국의 자녀출산에 대한 의견

구분	아이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아이가 있으면 생활이 즐거워진다	좋아하는 사람의 아이를 가지고 싶다	아이의 부부를 안정시킨다	자신의 자손이 생긴다
한국	85.1	43.5	19.9	46.1	22.6
일본	68.5	59.7	21.9	21.5	21.2

[그림 2-13]에서 한일 양국의 이상자녀수는 한국 2.3명 일본 2.4명으로 나타나, 이상자녀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출산의 수준과 템포를 비교하는 한일 양국의 출산력 비교가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응답자를 보면 2명이 5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명이 22.2%로 두 번째로 높으며, 1인은 10.9%로 다소 낮게 나타난다. 한편, 일본의 응답자를 보면 2인이 50.4%로 한국의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으며, 3인도 33.7%로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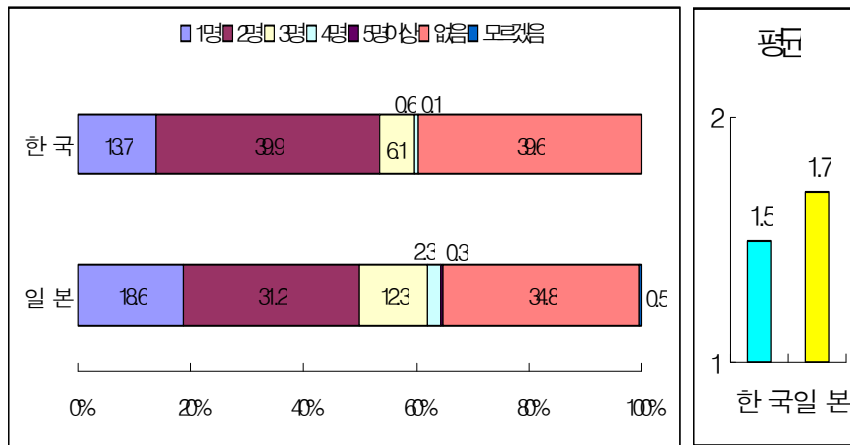
[그림 2-13] 한일 양국의 이상자녀수의 분포



[그림 2-14]에서 실제자녀수를 보면, 한국과 일본의 응답자는 평균 1.5명과 1.7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아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9.6%로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거의 비슷해 두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1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다. 일본은 아이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4.8%로 가장 높고 2명이 31.2%로 두 번째로 높다. 우리는 한일 양국의 실제자녀수에 대한 응답에서 아이가 없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통해 한일 양국, 특히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한일 양국에서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을 벗어나는 일은 현재 자녀를 두지 않는 남녀들을 어떠한 인구·가족정책을 활용하여 그들의 이상자녀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가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될 것이다.^{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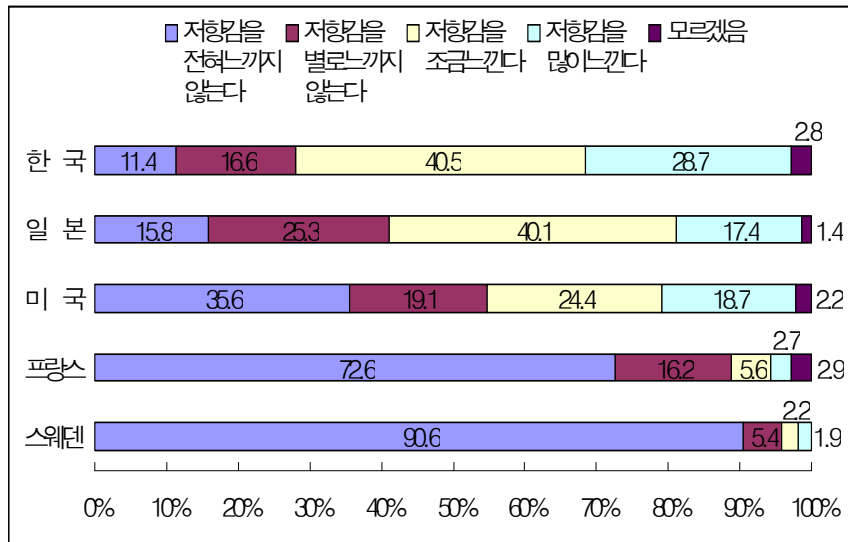
주3)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보장심의회 인구구조에 관한 특별부회(2007)는 급격한 저출산 인구체제의 출현과 지속을 결혼과 자녀에 대한 국민의 희망, 출생 등에 대한 희망과 실태의 확대 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희망한 반영하는 인구시산을 실시하고 있다. 이 인구시산에서는 일본 국민의 90%가 결혼을 희망하고, 이상자녀수는 여자 1인당 2명이상으로 보고, 2050년의 목표 합계출산율을 1.75로 설정하였음.

[그림 2-14] 한일 양국의 실제자녀수의 평균과 분포



[그림 2-15]에서 한국의 응답결과를 보면, 혼외출산에 대한 저항감을 조금 느낀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많이 느낀다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혼외출산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전체의 69.2%를 나타낸다. 일본도 혼외출산에 대해 저항감을 조금 느낀다가 가장 높고, 별로 느끼지 않는다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일본은 혼외출산에 대해 저항감을 느낀다가 57.5%로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대담한 비율이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눈에 띄는 점은 프랑스와 스웨덴은 혼외출산에 대해 저항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서 한국과 일본의 보수적인 성향을 엿 볼 수 있으며, 특히 한국이 혼외출산에 대한 저항감을 많이 느낀다는 점에서, 향후 초저출산 대응정책에서 구미선진국과 같은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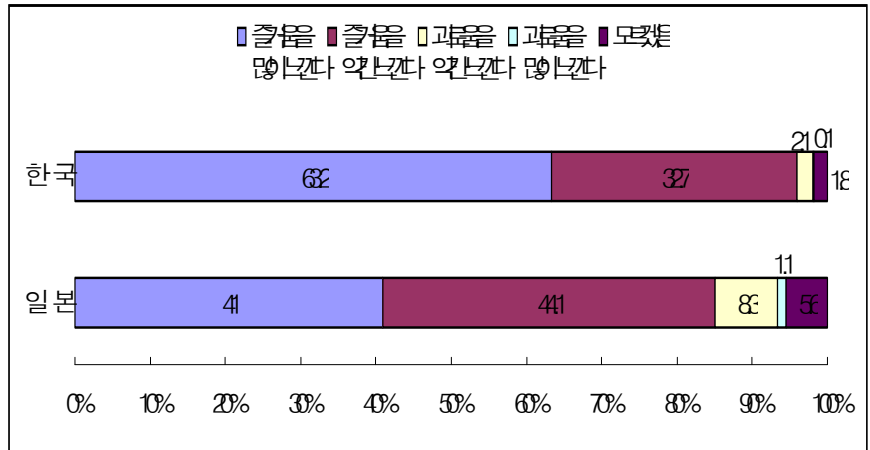
[그림 2-15] 혼외출산에 대한 각국 응답자의 의견 분포



3. 육아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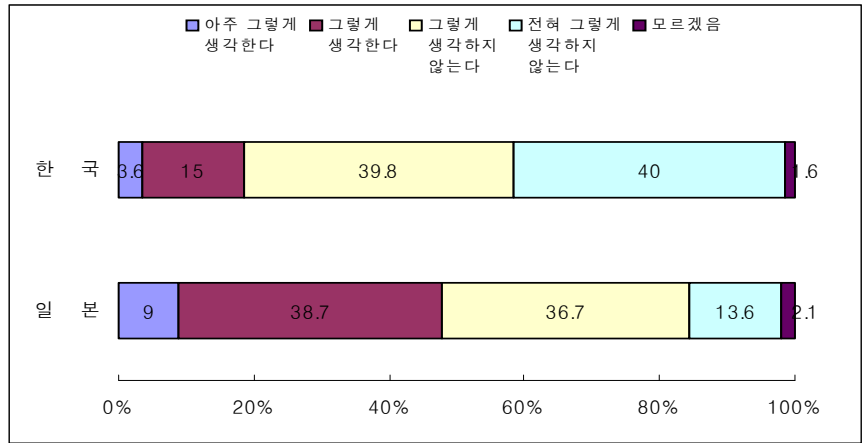
[그림 2-16]에서 한국의 응답자는 ‘육아에 대한 즐거움을 아주 많이 느낀다’의 비율이 63.2%로 가장 높으며, ‘즐거움을 느끼는 편이 약간 많다’의 비율이 32.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일본은 “즐거움을 아주 많이 느낀다.”와 “약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합한 비율이 85.1%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에 대한 괴로움을 약간 많이 느낀다가 8.3%로 한국의 2.1%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다. 한국은 육아에 대해 즐거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95.9%로 일본은 물론 구미선진국, 특히 프랑스, 스웨덴, 미국의 응답자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이것은 한국이 출산과 육아의 사회적 여건이 제대로 마련된다면, 이상자녀수 또는 예정자녀수대로 출산을 할 개연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16] 육아의 즐거움에 대한 한일 양국 응답자의 의견



[그림 2-17]은 한일 양국이 응답자의 육아환경에 적합한가에 대한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아이를 낳아 기르기 쉬운 국가인지에 대한 질문의 응답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가 39.8%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긍정적인 대담으로 ‘아주 그렇게 생각한다’는 3.6%로 아주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그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은 15.0%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보면, ‘그렇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전혀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일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대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다.

[그림 2-17] 한일양국 응답자의 육아환경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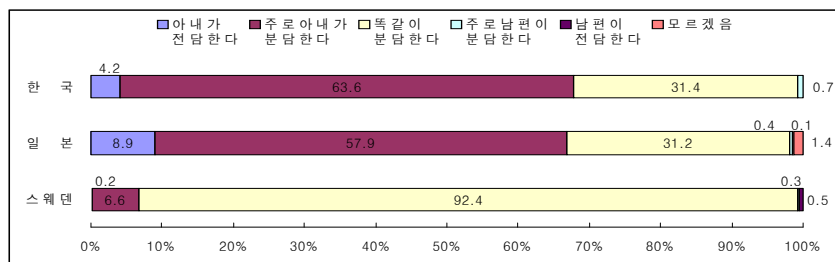
<표 2-9>에서 육아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국의 응답자들은 육아에 ‘지출이 늘어난다’가 75.6%로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최근 한국의 초저출산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없다’가 42.9%로 나타나며, 세 번째로는 ‘아이가 아플 때 육아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육아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30%를 약간 넘는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육아에 대한 지출 부담’과 ‘자신의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응답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며, 다음으로는 ‘아이가 아플 때 때 육아부담을 느낀다’, 또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 때문에 육아의 부담을 느낀다’는 순으로 나타난다. 한국인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2-9〉 육아를 부담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한일 의견

구분	육아에 금전적 지출이 늘어난다	자신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없다	아이가 아플 때	육아에 의한 정신적 피로가 크다	육아에 의한 육체적 피로가 크다
한 국	75.6	42.9	39.3	32.3	31.6
일 본	46.5	42.4	36.3	29.2	23.8

한국과 일본을 같이 보면, 두 나라 모두 주로 아내가 부담하지만 남편이 가끔 도와준다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똑같이 부담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31.2~31.4%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나머지 국가들은 똑같이 부담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특히 스웨덴은 92.4%가 가사의 부담을 동등하게 한다고 응답하였다. 한일 양국, 특히 한국은 자녀양육의 부부간 성평등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여성학자들에게 자주 지적되지만, 이것이 스웨덴과 같은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와 엄청난 대조를 이룬다는 사실을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에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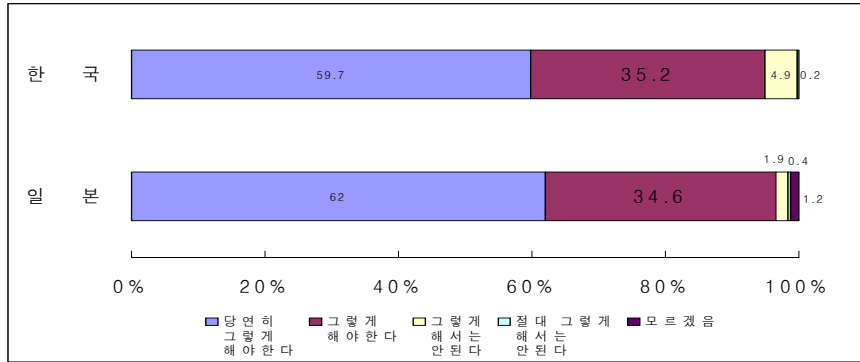
[그림 2-18] 자녀양육의 부담상태에 대한 한일 양국 응답자의 분포



[그림 2-19]에서 한국과 일본은 육아지원정책을 꼭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일본이 62.0%, 한국 5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한

국과 일본의 응답자들은 육아지원정책에 대해서 국가에 의존하려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나라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응답자들이 국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다소 높았다.

[그림 2-19] 육아지원시책을 둘러싼 국가의 의무에 대한 의견 분포



<표 2-10>에서 한일 양국과 구미선진국의 응답자들에게 초저출산 문제의 책임소재를 묻고 있는데, 한국은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62.9%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한편 일본은 ‘국가가 책임 져야 한다’는 비율이 34.3%로 한국보다는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 미국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이 9.6%를 보면 한일 양국의 응답자와 자유주의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미국의 응답자와 확연한 차이를 느낄 것 이다. 한국은 ‘국민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이 30.8%로 두 번째로 높은 반면, 다른 나라들은 일본의 45.7%에서 미국 62.1%에 이르기까지 ‘국민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표 2-10〉 한일 양국과 구미선진국 응답자들의 저출산 책임에 대한 의견

구분	국 민	국 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사회	기 타
한 국	30.8	62.9	0.7	0.9	0.4
일 본	45.7	34.3	3.0	2.1	0.1
미 국	62.1	9.6	4.6	1.8	0.7
프랑스	48.9	30.8	2.0	1.1	0.5
스웨덴	54.8	35.2	3.9	1.3	0.9

제 4 절 초저출산 체제의 지속과 인구정책의 효율성 문제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책정하고,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실천하고 있다. 또 2006년 7월에는 보육서비스의 충실, 경제적 지원의 강화, 임신·출산의 지원 등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본 절은 한국 사회에서 대체출산율 2.1명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고, 획기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장래의 출산율이 어떤 상태에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약간의 예측을 하고자 한다. 우선 혼인연령의 변화와 더불어 만혼화와 비혼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래 출산력 반등의 가능성과 인구정책의 효율성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세 종류의 시뮬레이션과 출산력 반전의 가능성

한일 양국의 합계출산율 반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세 종류의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세 종류의 모형에 공통으로 5개의 가정을 적용한다. 곧 ① 만혼화 모형, 비혼화 모형, 만혼화·비혼화 모형의 변화 이전에는 초혼율의 연령분포가 똑 같다. ② 변화 이전의 연령별 초혼율의 합계는 1.0으로서, 여자 출생코호트의 구성원 모두가 연령별 초혼율의 스케줄에 따라 예외 없이 결혼한다. 곧

미혼이나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는 여성은 있을 수 없다.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대의 수치인 24.5세 정도를 가정한다. ③ 변화 이후 연령별 초혼율의 분포는 각각의 모형의 가정조건에 의하여 결정되겠지만, 변화 이전부터 변화가 일어난 후까지의 경과연수는 10년간이다. ④ 결혼 직후에 모든 여성은 출산하며, 출생아수는 개인적으로 편차가 있지만 결혼한 여성은 모두 평균 1.5명의 자녀를 출산한다고 가정한다.주4) ⑤ 이혼·재혼 등의 출산율을 떨어뜨리거나, 여성본인의 사망으로 당초의 코호트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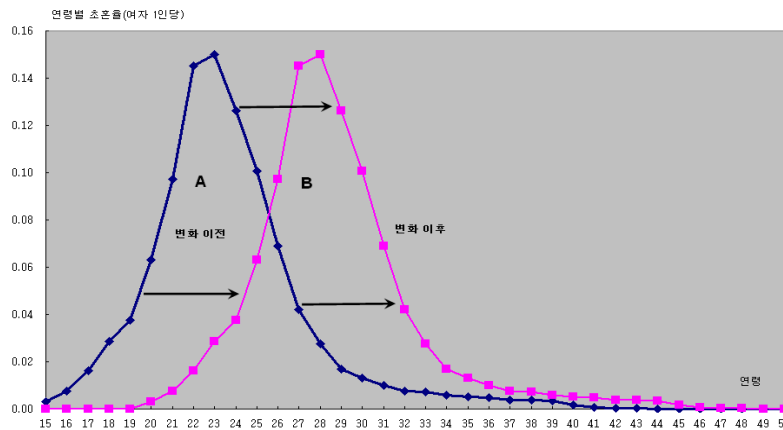
가. 만혼화 모형

위에서 언급한 모든 모형에 적용되는 5개의 가정과 함께, 만혼화 모형에서는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의 초혼율 분포의 모양은 똑 같지만, 초혼연령이 10년간에 4세 상승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림 2-20]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교란요인이 없이 만혼화가 진행되는 경우 A의 연령분포에서 B의 연령분포로 변화한다. 이 경우에, 연령분포의 면적(곧 여자의 출생코호트에서 한평생 동안 최소한 한번 이상 결혼을 하게 되는 사람의 비율)은 변하지 않고, 연령분포의 평균이 연령 축을 따라서 우측으로 평행이동을 한다. 이것은 순전히 만혼화, 곧 혼인연령의 상승만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생애 미혼율은 전혀 변화가 없고, 이 가정 아래서 초혼연령분포의 A가 10년 후의 B로 변하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수 있다.

주4) 초저출산 인구체제를 규정하는 합계출산율을 여자 1인당 1.3명으로 정의하는 경우와 1.5로 경우가 있음. 전자는 남유럽의 남성중심적 가톨릭 지역과 동유럽·구소련의 사회주의 몰락 후의 경제파괴에 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임.(Kohler, Billari, and Ortega, 2001; Billari and Kohler, 2002), 다른 하나는 저출산 함정론의 논의와 관련하여 국가의 인구·가족정책의 효율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도입한 출산율로 전자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책정하였다 (Lutz & Skirbekk, 2005; Lutz & Testa 200; McDonald, 2001, 2002, 20065).

[그림 2-20] 만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초혼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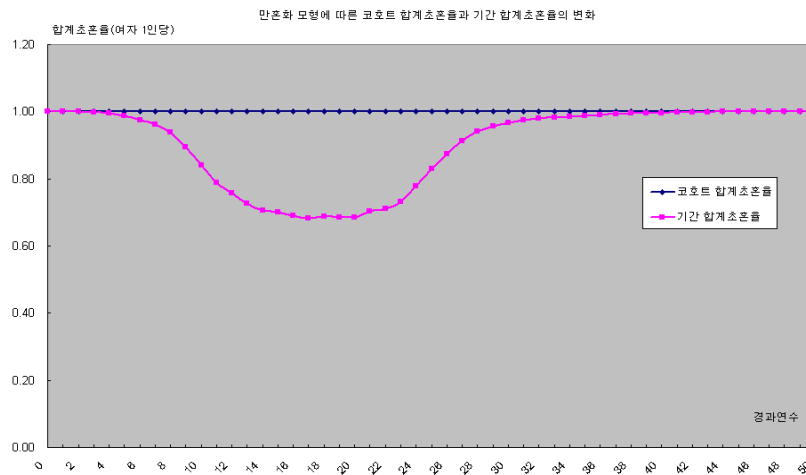


[그림 2-21]과 [그림 2-22]에서 보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하여, 코호트 합계출산율과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출생코호트 간에 혼인연령만 변하면서 출산연령의 마지막인 50세까지는 코호트의 구성원이 예외 없이 결혼하는 경우에, 코호트 합계초혼율이 전혀 변하지 않지만 기간 합계초혼율은 일시적이지만, 적어도 15년간에 걸쳐 여자 1인당 1.3 이하의 초저출산 인구체제가 지속된다.
- ② 기간(연차별) 합계초혼율이 일시적으로 저하하는 것은 코호트 초혼율의 연령이동 곧 만혼화로 기간(특정 시점)의 연령별 초혼율 스케줄에서 하나하나의 출생코호트의 낮은 초혼율이 역출(譯出)되어 발생하는 것이다.
- ③ 기간 합계출산율은 기간 초혼율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15년간에 걸쳐서 여자 1인당 1.3명 이하의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 ④ 초혼연령이 10년간에 걸쳐 24.2세에서 29.2세로 상승하는 경우, 기간 합계출산율은 최대 1.50명에서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2/3인 최저 1.0명으로 떨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원래의 수준으로 되돌아가서 원래의 수준인 1.5명으로

회복하여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을 벗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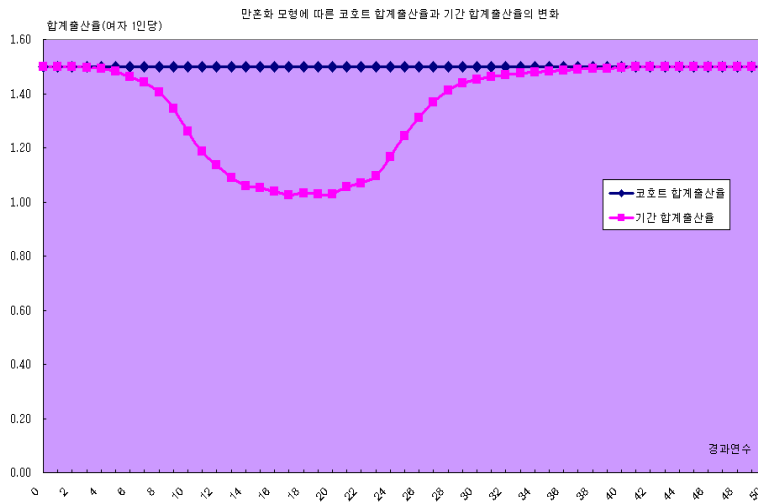
[그림 2-21] 만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합계초혼율과 기간 합계초혼율의 변화



이상에서와 같이 만혼화 모형의 경우, 결혼시점이 연기되면서 혼인연령이 상승하는 경우 모든 여성이 평균 1.5명의 자녀를 출산한다는 전제 아래서는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간 합계출산율은 젊은 연령층에서 천천히 변하기 시작하여 기간 합계출산율이 여자 1인당 1.0에 가까운 최저점에 이르는 시기에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의 혼인연령 변화 이전에 관찰되는 낮은 연령별 출산율과 젊은 연령층의 혼인연령 변화 이후에 관찰된 낮은 연령별 출산율이 뒤범벅이 되면서 기간 합계출산율이 대단히 낮은 상태, 곧 초저출산 인구체제가 일시적으로 출현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만혼화 모형의 특징은 독신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이른바 비혼화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간 합계출산율이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구조적 메커니즘을 설명해준다. 그러나 만혼화, 곧 혼인연령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안정화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기간 합계출산율은 원래의

수준인 1.5명으로 반등하여 안정화되면서,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을 벗어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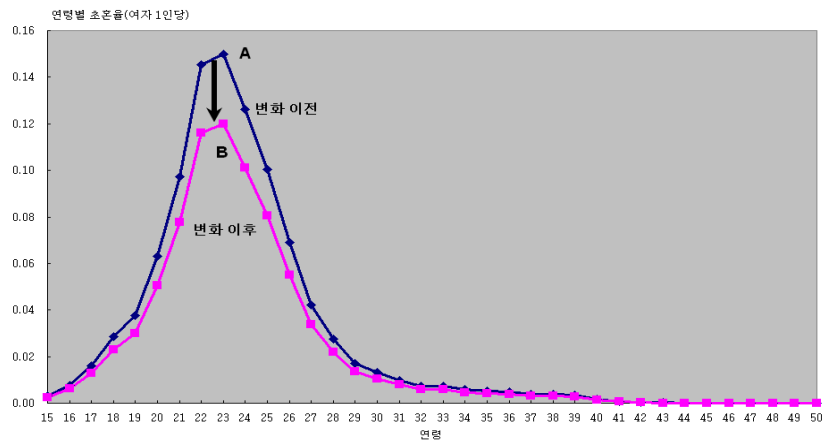
[그림 2-22] 만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합계출산율과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



나. 비혼화 모형

비혼화 모형은 만혼화 모형과 같은 공통의 가정에서 출발하는데, 변화 이전의 분포와 변화 이후의 분포의 모양이 다르며, 모든 연령에서 변화 이후의 연령별 혼인율은 변화 이전의 연령별 혼인율의 80%로 떨어진다고 가정하여, 초혼의 빈도는 10년 동안에 변화 전의 80%로 떨어지는 것으로 한다. 곧 [그림 2-23]에서 비혼화 모형은 생애미혼자의 비율이 0%에서 20%로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혼인체제를 상정하는 것이 된다.

[그림 2-23] 비혼화 모형에 따른 초혼연령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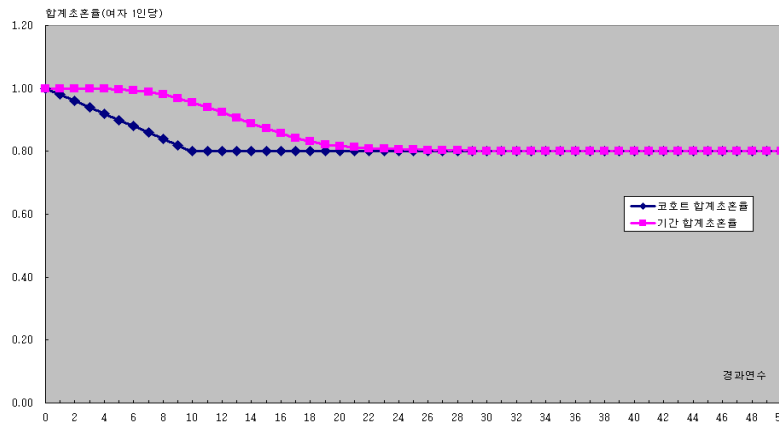
[그림 2-24]와 [그림 2-25]는 비혼화 모형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하고 있는데, 코호트 합계출산율과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초혼발생의 연령이 변하지 않고, 초혼발생의 빈도만 출생코호트 간에 변하는 경우, 기간 합계초혼율은 코호트 합계초혼율의 변화에 따라 저하한다.
- ② 기간관찰, 코호트관찰의 양쪽에서의 합계초혼율의 저하는 생애기혼율의 저하, 곧 생애미혼율의 상승 때문에 일어난다.
- ③ 기간합계출산율은 코호트합계출산율의 변동과 같은 모양의 수준변화를 기록하게 된다.
- ④ 초혼연령 분포의 수준 변화가 10년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 코호트 합계출산율이든 기간 합계출산율이든 둘 다 장기적으로 원래의 수준인 1.5로 복귀하지 않고, 1.2 수준에 머물러,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비혼화, 곧 15~49세의 전체 재생산 기간에서의 미혼 여성의 증가는 생애 미혼율이 0%에서 20%로 증가하기 때문에, 코호트 합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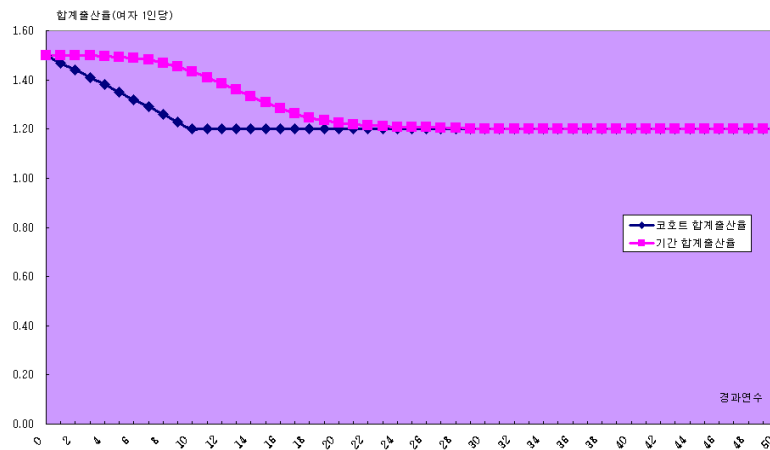
산율은 여성 1인당 1.2 수준으로 직선적으로 저하한다. 그 후,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20%의 생애 미혼율(또는 80%의 생애 기혼율)에 해당하는 출산율 수준인 여성 1인당 1.2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그림 2-24] 비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합계초혼율과 기간 합계초혼율의 변화



기간 합계출산율은 천천히 저하하여, 마침내 25년 후에는 여자 1인당 1.2 수준에 이르러 그 후에는 일정불변의 상태에 있게 된다. 장래인구의 예측에서 이처럼, 출생코호트별로 만혼화가 일어나는 경우와 비혼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기간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림 2-25] 비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합계출산율과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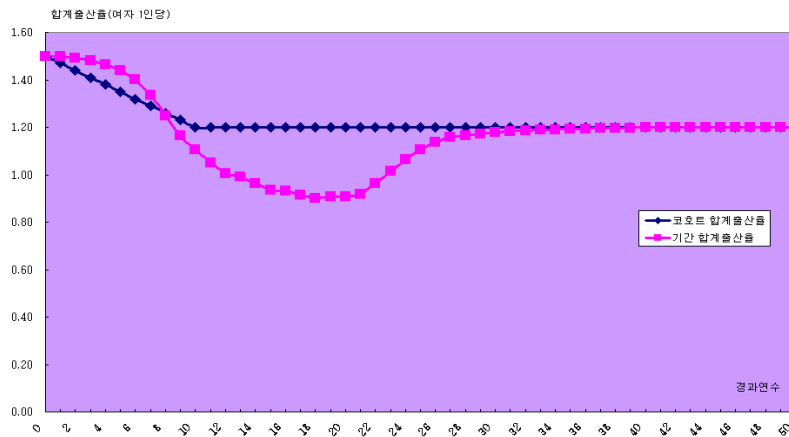


다. 만혼화/비혼화 모형

만혼화/비혼화 모형의 경우도 앞의 만혼화 모형이나 비혼화 모형과 마찬가지로, 만혼화/비혼화를 표현하는 가정, 곧 변화 이전의 분포와 변화 이후의 분포의 모양이 다르고, 초혼발생의 빈도가 10년 동안에 걸쳐서 변화 이전의 80% 수준으로 감소하는 동시에 10년 동안 걸쳐서 혼인연령이 5세 상승한다고 가정한다.

만혼화와 비혼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그림 2-26]에서 보는 것처럼 연령별 초혼분포는 2개의 유형이 가정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분포 A로서 변화 이전에는 코호트의 구성원이 예외 없이 결혼하는 이른바 코호트 보편혼의 연령 분포이며, 다른 하나는 분포 B로서 변화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경우는 평균초혼연령이 5세 상승하여, 초혼연령의 연령분포가 20%씩 축소된다. 곧 변화 이후에는 생애미혼의 비율이 20%로 올라가서 변화 이전의 생애미혼의 비율이 0%인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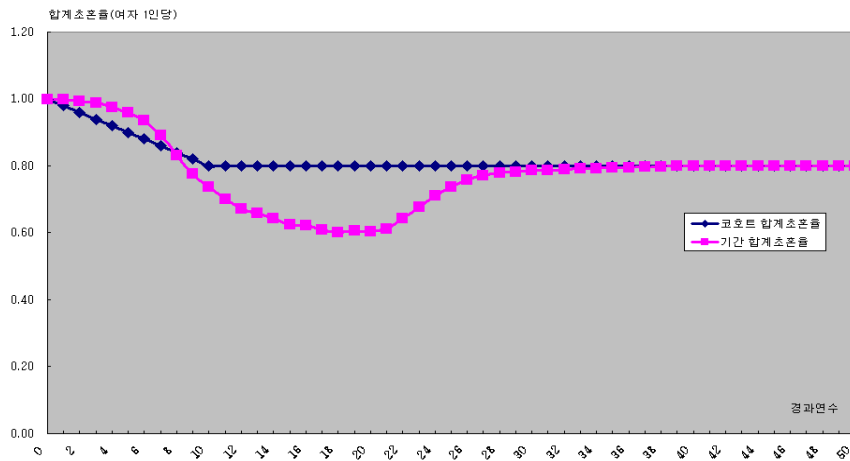
[그림 2-26] 만혼화/비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초혼율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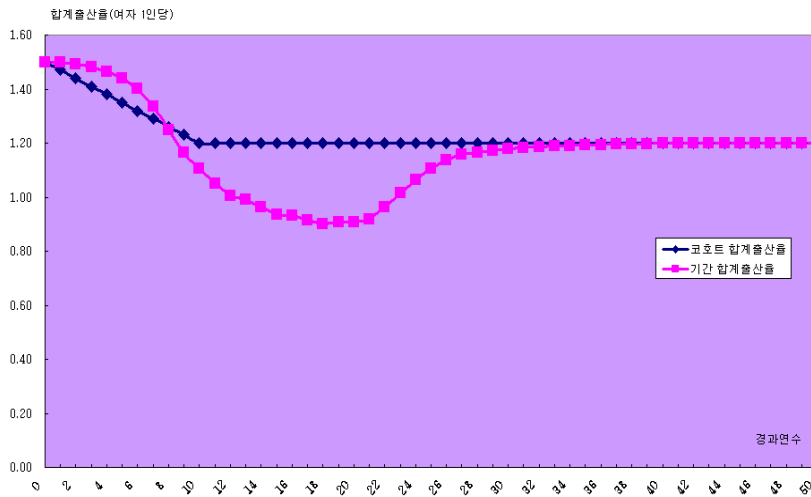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전제 아래서 시뮬레이션을 행하였을 때, 그 결과는 [그림 2-27]과 [그림 2-28]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결혼의 연령과 분포의 모양이 출생코호트 간에 변하는 경우, 기간 합계출산율은 코호트 합계초혼율이 비혼화하는 동안에 변화하기 시작하지만, 그 이상으로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대폭적으로 저하하여 여자 1인당 1.2에 이르러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을 벗어나지 못한다.
- ② 기간관찰에서의 일시적 저하는 코호트 초혼연령의 상승(만혼화)에 의하여, 기간별 연령별 초혼율이 대폭적으로 낮아짐으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 ③ 기간 합계출산율은 코호트의 합계출산율 변동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대단히 낮은 수준의 출산율이 출현하지만, 비혼화로 인하여 출산율이 원래의 수준인 1.5 수준으로 복귀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수준인 1.2에 머물면서 초저출산 인구체제는 영속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림 2-27] 만혼화/비혼화에 따른 코호트 합계초혼율과 기간 합계초혼율의 변화



[그림 2-28] 만혼화/비혼화 모형에 따른 코호트 및 기간 합계출산율의 변화



이상과 같이 만혼화/비혼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수준이 저하하고, 10년 후에는 여자 1인당 1.2 수준에 도달하였다가 그 후에는 일정불변의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그리고 기간합계출산율은 5년 정도 1.5 수준을 유지하였다가 그 후에는 빠른 속도로 기간합계출산율이 저하하여 10년을 경과하게 되면서 여자 1인당 1.0을 밑도는 최악의 초저출산 인구체제에 진입하였다가, 나중에는 다시 1.2 정도의 합계출산율로 안정화되지만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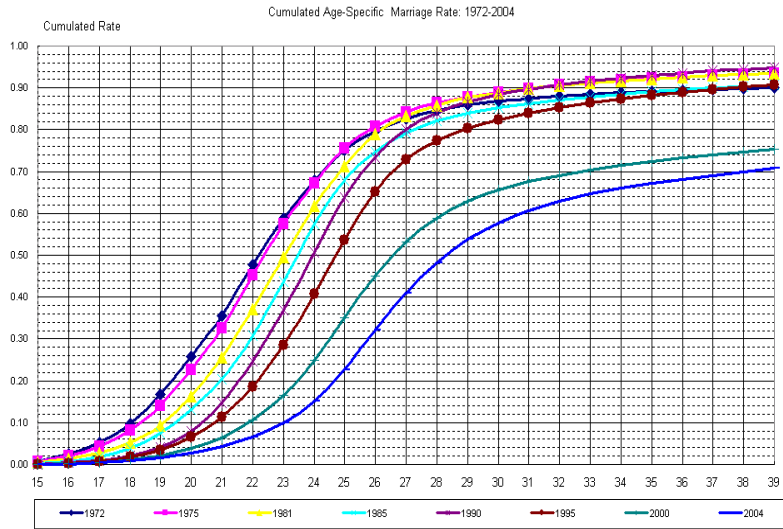
우리는 한일 양국의 저출산 인구체제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만혼화 모형, 비혼화 모형, 만혼화/비혼화 모형 등 결혼에 관하여 3가지 모형을 검토하였다. 만혼화 현상이 일시적으로 대단히 낮은 출산율을 야기하기는 하지만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합계출산율이 반전 상승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만혼화/비혼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메커니즘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간으로, 또는 연도별로 관찰된 합계출산율은 장기적으로 반전하게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령별 초혼율 변화와 출산율 반전의 가능성

본 연구의 한일 양국의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특성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우선 시뮬레이션 모형에 의한 검토를 마치고, 이제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앞에서 본 결혼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여 본다.

인구동태통계에 의하여 관찰된 연차별 연령별 초혼율을 1972년부터 2004년까지 비교한 것이 [그림 2-29]에 제시되어 있다. 또 [그림 2-30]은 여자의 기간(연도)별 연령별 누적초혼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자료는 1972년, 1975년, 1981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4년의 연령별 초혼율로서 5년간격으로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특정연도, 가령 1980년에는 혼인러시 현상이 있으면서 약간의 불규칙성이나 특이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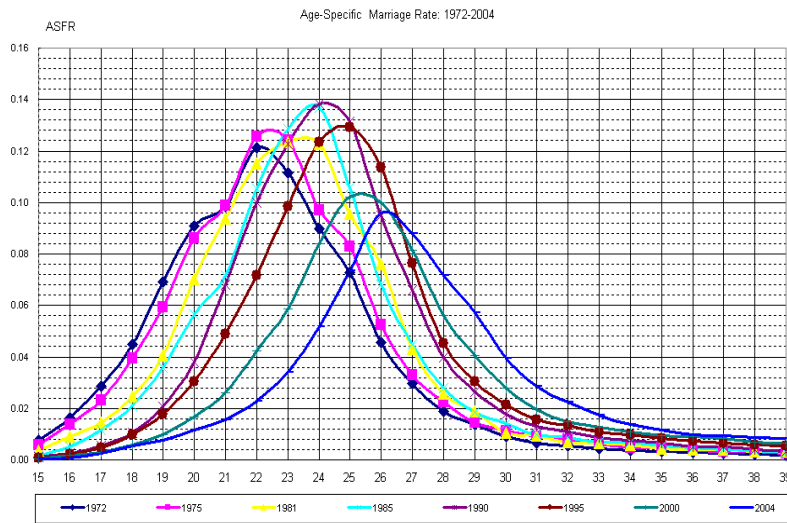
[그림 2-29] 여자의 기간별(연도별) 연령별 누적 초혼율: 1972~2004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입에 이르기까지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주요 특징은 혼인연령의 정점이 1970년대의 22~23세에서 2000년대에는 25~26세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25세 미만에서는 대단히 빠른 추세로 초혼율의 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곧 25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에서는 혼인연령의 상승을 부채질하는 만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80년대에는 20세 후반에서 초혼율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며, 1990년대에는 30대 초반에서 초혼율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31 참조).

[그림 2-30]에서 절선(broken lines)은 1972~2004년까지 4~5년 간격으로 여성들의 연령별 초혼율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실선은 1972~2004년까지 4~5년 간격으로 여성들의 연령별 초혼율 증가율의 추세선을 다항식으로 적합화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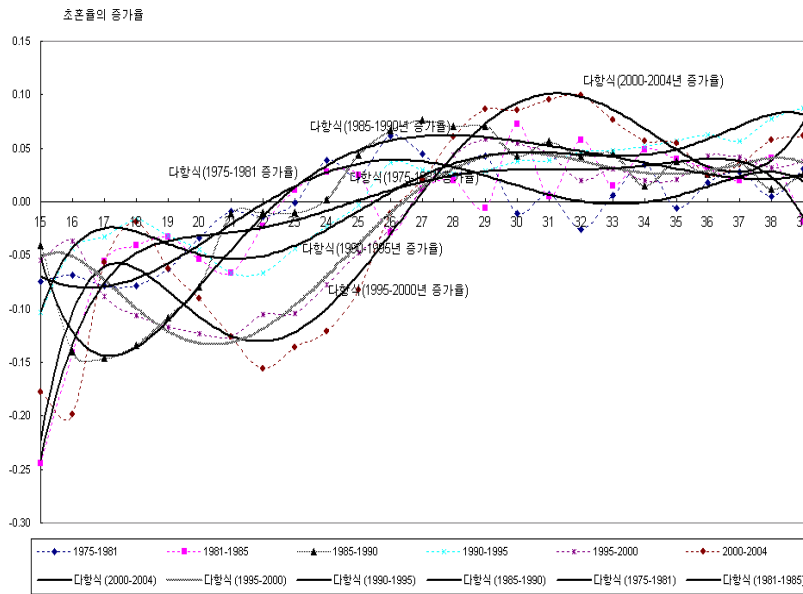
[그림 2-30] 여자의 기간(연도별) 연령별 초혼율: 1972~2004



[그림 2-30]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1990년대부터 25세 이전을 중심으로 확연히 초혼율 증가율이 마이너스 부호를 보여서 초혼율 저하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령, 1980년대에도 22세 또는 23세 이전에는 초혼율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1990년대에는 2~3세 지연되어 25세 이전을 중심으로 초혼율이 강한 추세로 감소하고 변하고 있다. 또 25~30세의 연령층을 보면, 1980년대에는 23세 이후부터 초혼율 증가율이 포지티브 부호를 보이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는 25세 이후부터 포지티브 부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다시 1980년대와 1990년대와 비교하면, 20세 후반에서 초혼율 증가율이 1980년대에는 포지티브 부호를 보였지만 1990년대와 2000년 초반에는 초혼율 증가율이 네거티브 부호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31] 여자의 연령별 초혼율의 시차별 증가율: 1975~2004



그리고 20세 후반에서 30세 전반으로 관심을 옮겨보면, 1990년대보다 2000년대 초반의 초혼율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 곧 20세 후반부터 30세에 결혼하려는 움직임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간의 연령별 초혼율의 변화로 표현되는 현상은 앞에서 본 초혼율에 관해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할 때, 만혼화/비혼화 현상이 실제의 현상이 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만혼화/비혼화 현상은 지금도 2000년대에 살고 있는 한국인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에 의하여 탈근대주의, 직장파 출산/육아의 양립불가능성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면서, 그대로 실천에 옮겨지고 있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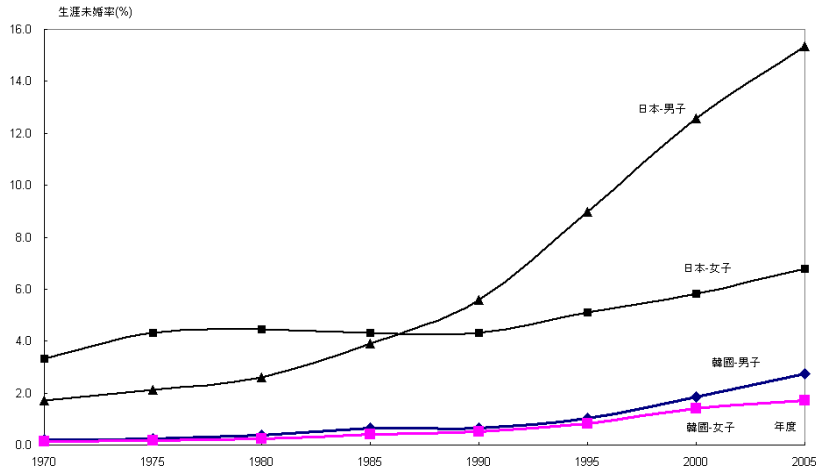
한국의 최근 초저출산 인구체제는 일본과는 달리, 상당부분 만혼화, 곧 혼인 연령의 상승에 의하여 일어나고 있다. <표 2-11>, [그림 2-32], [그림 2-33] 등에

제시된 생애 미혼율(生涯未婚率)과 평균 초혼연령(SMAM)의 추이를 볼 때, 한국에서 만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한국의 생애미혼율은 일본과 비교할 때 대단히 낮은 수준에 있다. 결국, 한국에서 여자 1인당 1.0명에 근접하는 최근의 초저출산이 혼인력과 관련이 있다면, 그것은 주로 만혼화, 곧 혼인연령의 상승이라는 메커니즘과 관련이 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변화순,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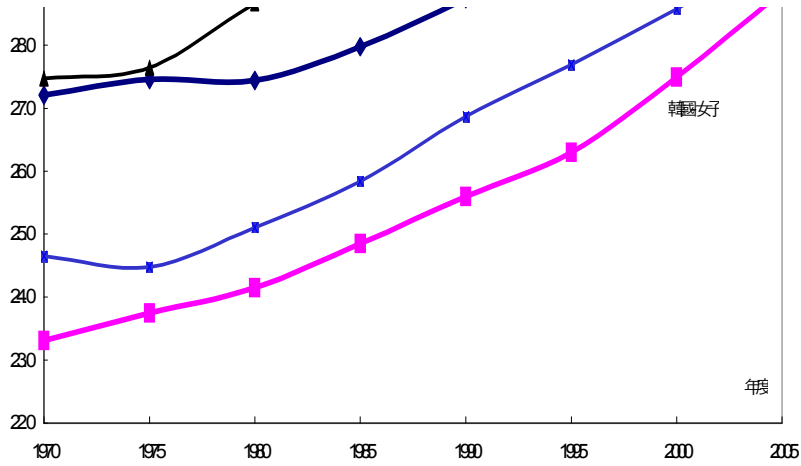
〈표 2-11〉 한일양국의 생애미혼율과 초혼연령의 추이: 1925~2005
(단위: %, 세)

구분	한국				일본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생애 미혼율	초혼 연령	생애 미혼율	초혼 연령	생애 미혼율	초혼 연령	생애 미혼율	초혼 연령
1925	1.60	20.10	0.72	16.60	1.72	25.09	1.61	21.18
1930	0.72	21.20	0.03	16.80	1.68	25.77	1.48	21.83
1935	0.71	21.40	0.12	17.10	1.65	26.38	1.44	22.51
1940	0.34	21.80	0.11	17.80	1.75	27.19	1.47	23.33
1955	0.35	24.70	0.16	20.50	1.46	26.21	1.35	23.60
1960	0.18	25.40	0.13	21.50	1.18	27.04	1.46	24.68
1966	0.13	26.70	0.09	22.90	1.26	27.44	1.87	24.96
1970	0.21	27.21	0.14	23.31	1.70	27.47	3.33	24.65
1975	0.25	27.46	0.18	23.75	2.12	27.65	4.32	24.48
1980	0.37	27.44	0.25	24.15	2.60	28.67	4.45	25.11
1985	0.66	27.98	0.40	24.85	3.89	29.57	4.32	25.84
1990	0.64	28.74	0.50	25.60	5.57	30.35	4.33	26.87
1995	1.02	29.63	0.82	26.30	8.99	30.68	5.10	27.69
2000	1.84	30.91	1.40	27.50	12.57	30.81	5.82	28.58
2005	2.73	32.13	1.73	28.86	15.36	31.15	6.77	29.51

[그림 2-32] 한일양국의 생애미혼율의 추이: 1970~2005



[그림 2-33] 한일 양국의 초혼연령(SMAM)의 추이: 1970~2005



<표 2-12>에 제시된 합계출산율 요인분해 결과를 요약하면, 1970~'85년의 15년 동안에는 혼인력보다 유배우출산율이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기록하는 1985년 이후. 특히 IMF 금융 위기를 경험하는 1997년 이후부터 혼인력이 유배우출산율보다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다.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특성에 관한 미시적 연구는 출산력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혼화나 비혼화를 가져오는 혼인체제의 미시적 변수의 효과에 대하여 의미 있는 대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2-12〉 한국의 기간합계출산율 변동의 요인분해: 1970~2005

구분	1970~'75	1975~'80	1980~'85	1985~'90	1990~'95	1995~ 2000	2000~'05
합계출산율							
기수(a)	4.328	3.359	2.891	1.658	1.577	1.706	1.467
기말(b)	3.359	2.891	1.658	1.577	1.706	1.467	1.081
차이(a) - (b)	-0.969	-0.467	-1.233	-0.082	0.130	-0.239	-0.386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차이							
합계	-0.830	-0.337	-1.013	0.150	0.272	0.032	-0.029
15~19세	-0.004	0.003	0.006	-0.003	-0.002	-0.001	0.001
20~24세	0.017	-0.022	-0.001	0.003	-0.010	-0.002	-0.008
25~29세	-0.049	-0.003	-0.080	0.020	0.035	-0.009	-0.010
30~34세	-0.053	-0.027	-0.077	0.011	0.024	0.014	0.009
35~39세	-0.045	-0.014	-0.033	0.000	0.006	0.003	0.002
40~44세	-0.025	-0.005	-0.013	-0.001	0.001	0.000	0.000
45~49세	-0.008	0.001	-0.005	0.000	0.000	0.000	0.000
연령별 유배우율의 차이							
합계	-0.139	-0.131	-0.220	-0.231	-0.142	-0.271	-0.357
15~19세	-0.002	-0.006	-0.009	-0.003	0.001	0.000	-0.001
20~24세	-0.023	-0.016	-0.025	-0.035	-0.011	-0.022	-0.015
25~29세	-0.005	-0.005	-0.010	-0.007	-0.018	-0.028	-0.046
30~34세	0.000	0.000	-0.001	0.000	-0.001	-0.004	-0.009
35~39세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40~44세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45~49세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연령별 유배우출산율과 연령별 유배우율의 상대적 기여도(%)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유배우출산율	85.6	72.0	82.1	-183.8	209.5	-13.4	7.4
유배우율	14.4	28.0	17.9	283.8	-109.5	113.4	92.6

한편, 일본 후생성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토루 스즈키(鈴木透)는 기간 합계출산율을 코호트 관찰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혼인력과 유배출산율을 분해하고 있는데, <표 2-13>에서 1990~200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 저하에 혼인력의 기여도는 56%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6~'99년의 3년간을 제외하고, 혼인력은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60% 정도를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1990~2002년의 12년간에 걸쳐 혼인력이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36%를 기여하고 있다. 1993~'96년의 3년간을 제외하고, 혼인력이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기여한 정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혼인력이 합계출산율의 저하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이 일본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鈴木透(2002; Suzuki, 2005)).

<표 2-13> 한국의 기간 합계출산율 변동의 요인분해: 1970~2005

(단위: %)

기간	한국			일본		
	합계출산율 저하	혼인력의 기여도	(혼인력의 기여도)/(합 계출산율 저하)*100	합계출산 율 저하	혼인력 의 기여 도	(혼인력의 기여도)/(합계출 산율 저하)*100
1990~1993	5.0	3.0	60.0	-5.2	-1.3	25.0
1993~1996	-5.4	-3.4	63.0	-2.1	-0.1	4.8
1996~1999	-10.1	-4.0	39.6	-6.3	-2.4	38.1
1999~2002	-17.6	-10.9	61.9	-3.5	-1.6	45.7
1990~2002	-26.4	-14.9	56.4	-14.3	-5.2	36.4

자료: Suzuki, T. (2005), "Why is Fertility Lower in Korea than in Japan." in 人口問題研究 61(2).
日本 厚生労働省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제 5 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한국에서는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출현배경으로, 만혼화 외에 자녀 교육비의 상승, 부모의 의식변화(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하겠다는 생각의 변화),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불가능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

여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2003년 12월에 고령화 및 미래 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등을 입안하고, 2004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마련하여, 같은 해 6월에는 육아지원방안을 책정하였다. 그 중에는 육아지원의 강화, 보육 서비스의 충실, 양성평등사회의 실현 등이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2004년 「복지업무주요계획」 중에 저출산·고령사회의 문제를 5개의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으며, 가족정책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후에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되어 왔다.

한국에서는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출산 대응정책은 만혼화·비혼화에 대응하는 혼인대책보다는 육아휴직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먼저, 출산휴가는 90일 간(출산 후는 45일 이상), 육아휴직은 12개월까지 취득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휴직에 따른 소득보전은 고용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따라서 육아휴직 취득지수는 2002년의 3,763명에서 2004년의 9,303명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지만 현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는 않고 있다. 보육서비스는 국공립 시설과 민간시설 외에 직장보육시설과 가정형 보육시설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다. 이들 보육 시설에 대하여 2004년의 입소자 수는 93.0만명으로, 0~5세 아동의 28.1%가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대기아동의 수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경제적 지원으로 세제에 의한 가족부양 공제 외에 교육비 공제(유치원, 보육시설 등에 관한 비용 등의 공제제도가 있지만, 일본의 아동수당과 같은 제도는 없으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전략에서도 “2008년까지 실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한국의 경우 결혼대책이 초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혼인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임력(可妊力: fecundity)이 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당초에 의도하였던 희망자녀수, 가령 2명의 자녀를 모두 출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하여 혼인연령의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 한국에서 비혼화(非婚化)의 문제는 일본과 비

교할 때, 현재로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비혼화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려는 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도 일어나지만, 19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경제사정 악화로 인한 혼인상태의 불안정, 이혼의 증가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비자발적인 독신여성의 증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독신여성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남녀 개인들이 혼인 적령기에 들어서면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혼인적령기의 남녀들이 자녀출산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가사와 육아의 부담을 우려한다는 점도 만혼화와 비혼화를 포함하는 혼인 대책의 요소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것 없이는 한일 양국의 초저출산 인구체제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서는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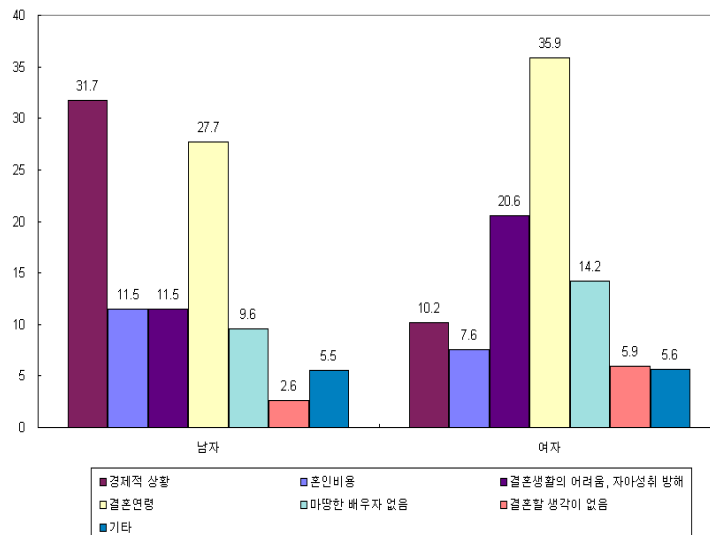
2005년의 출산·혼인 동향조사는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는데(그림 2-33 참고), 여기에서부터 결혼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할 것이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로 소득 및 고용 불안정(31.7%), 결혼비용 부담(11.5%), 결혼생활 부담 또는 자아성취 방해(11.5%), 마땅한 배우자 없음(9.6%), 평생독신 선호(2.6%)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여자는 가부장적인 결혼생활 부담 또는 자아성취 방해(20.6%), 마땅한 배우자 없음(14.2%), 소득 및 고용 불안정(10.2%), 결혼비용 부담(7.6%), 평생독신 선호(5.9%)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석결과는 정부의 결혼대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의 결혼대책은 미혼남녀가 원하는 시기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상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남녀 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고용 및 소득 불안정으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초저출산 대응정책은 결혼대책의 틀을 넘어서 거시적 차원의 정책수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령,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의 창출 방안, 청년층이 학교졸업 후 짧은 기간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

안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취업정보 제공, 장학금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자기개발 증진, 청년층 취로사업 지원(공공부문의 직업훈련, 연수기회 장 단기 일자리 제공 확대 등), 영유아보육 및 노인수발의 사회화 등을 통하여 일 자리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그림 2-34] 한국의 미혼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2005



(2) 젊은 여성들이 자아성취를 실현시키면서 일과 결혼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일/가정 양립곤란 및 결혼 후 직장에서의 차별을 염려하여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막기 위하여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의 창출은 물론 결혼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또, 결혼 및 자녀 양육 후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자녀양육과 가사에 남녀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근무관행을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여야 한다.

(3) 지나친 결혼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만혼화나 비혼화의 경향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결혼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가령,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저리융자제도를 강화하거나 전세금을 보조해주는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또 신혼제품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고비용 결혼절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시민단체나 주민운동과 연계하는 “결혼문화 개선운동”을 전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4) 적당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여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향을 줄이기 위하여, 결혼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상담업(결혼중매, 미혼자데이트서비스)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공립 결혼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건전한 민간 결혼정보회사를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한일 양국의 혼인력과 출산력 변화의 특징

제 1 절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합계출산율이 1998년 처음으로 1.5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00년에는 1.3명으로 낮아졌다.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명, 2005년 1.08명으로 더 낮아져 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력 (lowest-low fertility)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인 지속은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비용과 위험을 수반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율 감소 속도는 세계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령화를 촉진하고,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면서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현재 저출산국가가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삼식 외, 2005; 김태현, 2006).

출산율을 회복하는 정책적 노력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출산력 저하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율 회복을 위한 정책적 목표 집단(대상)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출산 원인에 대한 개별적인 접근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김태현 외, 2005 및 2006 참조).

우리나라와 문화적인 배경이 비슷하면서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출산수준보다 낮았던 일본의 출산력은 우리보다 10여년이 빠른 1970년대 초에 대체수준에 도달하였으며(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6), 1987년에 합계출산율 1.57명으로 1.6명 미만으로 낮아지면서 본격적인 저출산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1.25명까지 감소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부터 감소속도가 크게 완화하였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장래 출산수준은 완만하게나마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Suzuki, 2005).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1990년대에 출산수준이 1.6~1.7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8년부터 1.5명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1.47명)을 고비로 감소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2001년(1.30명)부터 일본의 출산수준보다 낮아졌으며, 그 후에도 계속 감소하여 양국의 출산을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을 일반적으로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가치에서 찾고 있다(김태현 외, 2005 및 2006). 사회적인 환경으로 젊은 연령층이 만족스러운 취업이 어렵다는 것, 일과 가정을 함께 돌보기 힘들다는 것, 임신과 출산으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것,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교육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김승권 외, 2003; 이삼식 외, 2005). 한편, 개인의 가치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원인으로 가족보다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약해졌다는 것, 자녀에 대한 경제적 비용가치를 크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들은 개별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원인별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저출산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김태현, 2005 참조). 출산은 개인의 출산행태로 나타나므로 이 연구에서는 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혼인과 출산행태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빠르게 감소하던 일본의 출산수준이 최근에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혼인과 출산행태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극히 낮은 출산수준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행태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출산력의 회복이나 저출산대책을 위한 대상이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혼이 보편적인 사회인 일본의 출산력변화의 특성과 우리나라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우선 혼인과 혼인상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초혼연령, 미혼율, 유배우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기혼부인의 출산특성인 출산시기(모의 연령), 출산간격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 활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매년 호적신고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있는 인구동태통계와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이용하였다. 일본의 경우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하고 있는 인구통계자료집의 통계자료와 총무성의 국세조사결과를 주로 이용하였다.

인구지표의 변동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장기간의 시계열 자료가 필요하다. 이 연구를 위한 자료로 이용한 최신자료는 2005년 총조사결과와 인구동태통계이다. 한국과 일본의 출산행태비교분석을 위해서 시계열 자료를 직접 비교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그래프를 이용하여 특성변화의 패턴을 비교하였다. 차이가 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였다.

제 2 절 혼인행태의 변화

출산력 지표와 관련하여 혼인력변천이론을 네덜란드의 사회학자 호프스테(E.W. Hofstee)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제1단계는 산업혁명 이전 농업 및 수공업이 지배적이었던 전근대적 시기다. 피임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신 만혼으로 인구증가가 억제되는 시기로, 이 시기는 맬서스적 변천시대에 해당한다. 제2단계는 산업혁명 초기단계의 노동자 계층 결혼양상이 성행했던 시기다. 결혼 후 피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혼인율과 함께 조혼으로 인하여 급격한 인구성장을 야기했던 시기이다. 마지막 단계는 조혼이든 만혼이든 관계없이 일단 높은 피임률로 특징지어진다. 이 단계는 1930년대 이후의 근대적 결혼양식이 출현하면서 시작하는 혼인력을 말한다. 이것은 흔히들 말하는 신맬서스적 변천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배우출산율이 피임실천 증가로 인하여 계속 감소하는 시기다. 곧 결혼연령이나 혼인율보다는 출산율이 피임을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므로, 제1단계나 제2단계와는 달리 혼인력이 출산력과 더 이상 직접적인 연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전광희, 2006).

그러나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결혼의 보편성이 최근까지 이어졌고, 대부분의 출산은 결혼 후 유배우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서양에서 결혼과 출산의 관계가 극히 약해진 상태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는 여전히 언제 결혼했는가에 따라 출산율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유럽 각국과 달리 한국과 일본에서는 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유배우상태에서 출산하는 것

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최근 유배우상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혼인상태의 불안정은 희망자녀수 또는 기대자녀수와 같은 자녀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완전피임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출산율을 더욱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초혼연령 및 혼인상태변화를 비교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변동을 비교하였다.

1. 초혼연령

우리나라와 같이 출산은 혼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사회에서 초혼연령은 출생아수와 출산시기를 결정하는 주요변수가 된다. 한국의 기간출산율이 감소한 요인으로 혼인시기의 지연과 유배우출산율의 감소를 들고 있다. 1980년대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유배우출산율의 감소(61%)와 결혼지연(39%)의 영향을 받았으나 1990년대에는 유배우출산율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이 부분을 상쇄하고 합계출산율을 더 떨어뜨리는데 기여하였다(김승권 외, 2003). <표 3-1>과 [그림 3-1]은 1990년 이후 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초혼연령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1990년에 한국 남성의 결혼연령이 일본보다 0.6년 빨랐으나 1997년부터 일본 남성의 초혼연령보다 늦어졌다. 그 후 그 차이는 더욱 커져서 2005년에는 1.1년이 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도 1990년에 1.1년이나 빨리 결혼하던 차이가 1997년까지 매우 느리게 차이를 좁혀 갔으나 1998년부터 그 차이는 빠르게 감소하여 2003년에는 0.3년까지 줄어든 후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녀 모두에서 1997~'98년을 기점으로 그 차이의 유형이 바뀌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IMF의 경제위기에 따른 결혼의 지연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두섭, 2007).

〈표 3-1〉 초혼연령 변화의 한일비교: 1990~2005

연도	한국		일본		차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90	27.8	24.8	28.4	25.9	-0.6	-1.1
1991	28.0	24.9	28.4	25.9	-0.4	-1.0
1992	28.1	25.0	28.4	26.0	-0.3	-1.0
1993	28.1	25.1	28.4	26.1	-0.3	-1.0
1994	28.3	25.2	28.5	26.2	-0.2	-1.0
1995	28.4	25.4	28.5	26.3	-0.1	-0.9
1996	28.4	25.5	28.5	26.4	-0.1	-0.9
1997	28.6	25.7	28.5	26.6	0.1	-0.9
1998	28.9	26.1	28.6	26.7	0.3	-0.6
1999	29.1	26.3	28.7	26.8	0.4	-0.5
2000	29.3	26.5	28.8	27.0	0.5	-0.5
2001	29.6	26.8	29.0	27.2	0.6	-0.4
2002	29.8	27.0	29.1	27.4	0.7	-0.4
2003	30.1	27.3	29.4	27.6	0.7	-0.3
2004	30.6	27.5	29.6	27.8	1.0	-0.3
2005	30.9	27.7	29.8	28.0	1.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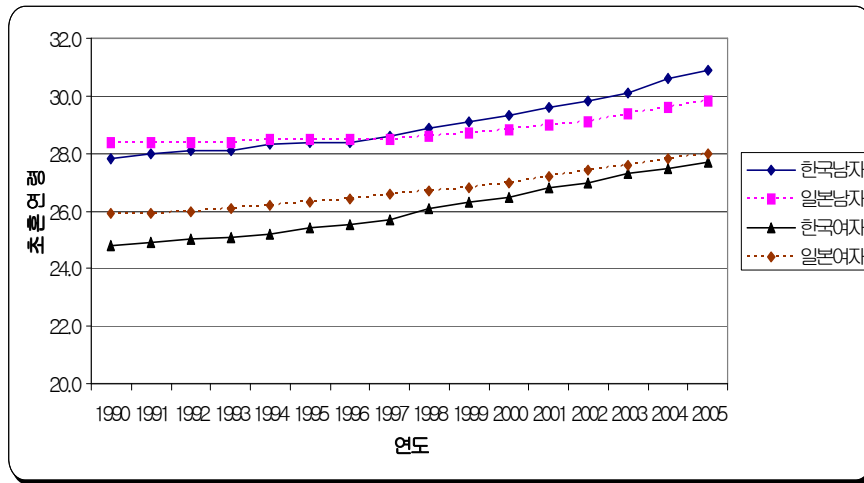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2006;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Population Statistics of Japan*, 2006.

한국과 일본의 성별 결혼연령의 차이변화는 양 국의 남녀별 결혼연령의 차이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에 남녀별 평균혼인연령의 차이가 3.0년이었으며, 2000년대 초까지 이 수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남녀의 결혼연령 차이는 1990년에 2.5년에서 2000년에는 1.8년으로 0.7년이 줄었다. 한국에서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기간(2년)의 영향을 받아 결혼이 늦어지고 있지만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도 남녀의 연령차이가 일정하다는 것은 배우자의 연령에 대한 가치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배우자 선택에서 연령의 영향이 크게 감소한 결과이다.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 자녀수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한국 여성의 초혼연령이 여전히 일본보다 낮으면서도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다. 혼인 내의 출산이 보편적인 사회에서 유배우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은 것은 유배우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연령별 출산율의 차이에
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1] 초혼연령 변화의 한일비교, 1990~2005



2. 혼인상태

출산율을 결정하는 혼인요인으로 초혼연령, 결혼을 전혀 한 적이 없는 미혼율, 혼인상태의 유지여부를 나타내는 유배우율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미혼율은 초혼연령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과 일본은 전통적으로 결혼의 보편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이지만 최근 사회경제적 변동과 함께 미혼자가 늘어나고, 이혼이 증가하면서 혼인상태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미혼율을 <표 3-2>와 [그림 3-2]에서 비교하였다. 1980년에 한국 남성의 미혼율은 일본에 비하여 25~29세 이후 전 연령층에서 낮았다. 그러나 24세 이하에서는 일본의 미혼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우는 전 연령층에서 한국의 미혼율이 일본에 비하여 낮았다. 한국의 결혼행태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남녀 모두 집중적으로 결혼하는 사회적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 유럽의 자유스러운 결혼시기의 선택에는 못 미치지만 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혼인시기의 다양성이 높다고 하겠다.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미혼율의 변화에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1990년까지 24세 이하에서만 한국의 미혼율이 일본에 비하여 높았으나 2000년에는 25~29세에서도 높아졌고, 그 차이는 더욱 커졌다. 한편, 여성의 경우에는 1980년에 전 연령층에서 한국의 미혼율이 낮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낮은 연령층의 미혼율이 빠르게 높아져서 2005년에는 25~29세 이하의 미혼율이 일본보다 높아졌다.

또 하나의 특징은 한국 남성의 경우 집중적인 결혼이 이루어진 30~34세 이후에서 미혼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반면에 일본의 경우에는 이 연령층에서 미혼율의 감소가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25~29세까지 한국의 미혼율이 높던 것이 30~34세 이후의 미혼율이 일본보다 10% 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한국 남성의 미혼율이 일본보다 높아서 그 차이가 가장 큰 연령층이 1980년에 30~34세에서 2000년에는 35~39세, 2005년에는 다시 40~44세 이후로 늦어졌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에는 양국의 미혼율 차이가 큰 연령대의 변화는 있었으나 40대에서는 미혼율의 차이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1980년에 여성의 미혼율 차이가 가장 컸던 연령층은 20~24세였으나, 1990년에 25~29세로 늦어지고, 2000년 이후에는 다시 30~34세로 늦어졌다.

한국과 일본 모두 남녀 공히 미혼율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한국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25~29세까지의 미혼율 증가는 일본에 비하여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미혼율이 1980년에 남자 20세 미만에서만 일본보다 높았으나 2005년에는 남녀 공히 25~29세 연령계층에서도 높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미혼율이 대폭 감소하여 일본보다 크게는 10% 포인트 이상 낮았다. 이것은 한국 남녀의 혼인이 25~29세까지 지연된 후 30대에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혼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출산수준을 결정하는 여성의 미혼율은 한국 여성의 결혼연령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일본과 차이가 가장 큰 연령층이 높아지고 있을 뿐 다른 연령별 미혼율의 유형의 차이의 변화가 특이하게 바뀌지 않았다. 일본 여성의 경우

미혼상태에서 가임기간을 보내는 경우가 10%에 육박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2005년에 2.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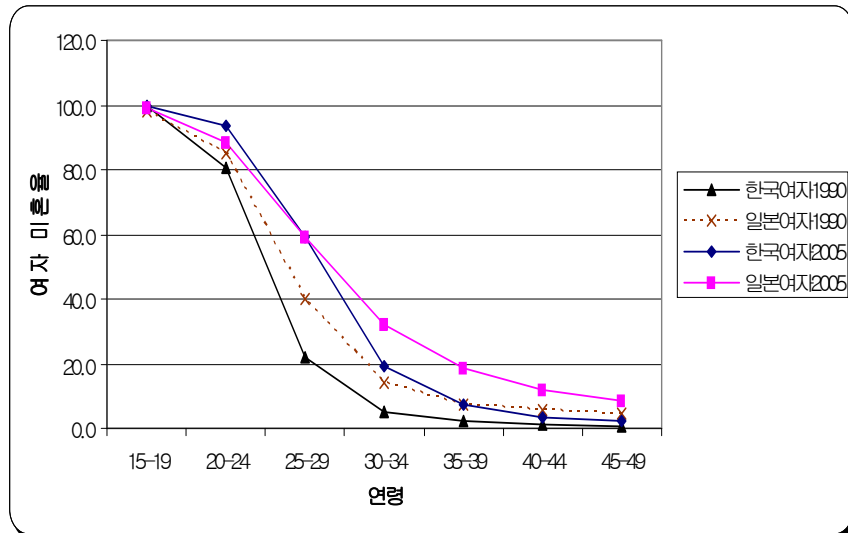
〈표 3-2〉 성 및 연령별 미혼율 변화의 한일비교: 1980~2005

연도	한국		일본		차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980						
15~19세	99.8	98.2	99.6	99.0	0.2	-0.8
20~24세	93.1	66.1	91.5	77.7	1.6	-11.6
25~29세	45.2	14.1	55.1	24.0	-9.9	-9.9
30~34세	7.3	2.7	21.5	9.1	-14.2	-6.4
35~39세	1.7	1.0	8.5	5.5	-6.8	-4.5
40~44세	0.7	0.5	4.7	4.4	-4.0	-3.9
45~49세	0.4	0.3	3.1	4.4	-2.7	-4.1
1990						
15~19세	99.9	99.5	98.5	98.2	1.4	1.3
20~24세	96.4	80.5	92.2	85.0	4.2	-4.5
25~29세	57.3	22.1	64.4	40.2	-7.1	-18.1
30~34세	13.9	5.3	32.6	13.9	-18.7	-8.6
35~39세	3.8	2.4	19.0	7.5	-15.2	-5.1
40~44세	1.5	1.1	11.7	5.8	-10.2	-4.7
45~49세	0.8	0.6	6.7	4.6	-5.9	-4.0
2000						
15~19세	99.7	99.3	99.5	99.1	0.2	0.2
20~24세	97.5	89.1	92.9	87.9	4.6	1.2
25~29세	71.0	40.1	69.3	54.0	1.7	-13.9
30~34세	28.1	10.7	42.9	26.6	-14.8	-15.9
35~39세	10.6	4.3	25.7	13.8	-15.1	-9.5
40~44세	4.9	2.6	18.4	8.6	-13.5	-6.0
45~49세	3.3	1.7	14.6	6.3	-11.3	-4.6
2005						
15~19세	99.8	99.6	99.6	99.1	0.2	0.5
20~24세	98.2	93.7	93.4	88.7	4.8	5.0
25~29세	81.7	59.1	71.4	59.0	10.3	0.1
30~34세	41.3	19.0	47.1	32.0	-5.8	-13.0
35~39세	18.4	7.6	30.0	18.4	-12.4	-10.8
40~44세	8.5	3.6	22.0	12.1	-13.5	-8.5
45~49세	4.5	2.4	17.1	8.2	-13.7	-5.8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 각 연도;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2006; 日本 總務省, 『2005 國勢調査結果』, 2007.

그러면서 양국의 출산율의 차이가 급격하게 좁혀지고, 결국은 한국의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여 최근에는 일본에 비하여 낮아지는 것은 혼인연령이 30세 전후로 집중되었고, 늦은 결혼으로 자녀수를 1~2명으로 제한하는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여성들은 젊은 연령층(24세 이하)부터 고르게 결혼연령이 분포되면서 자녀의 수에 대한 편중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한데서 출산행태가 고르게 이루어지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그림 3-2] 연령별 여성 미혼율 변화의 한일비교: 1990, 2005



미혼율의 변화는 유배우율을 결정하나 결혼 후의 이혼(또는 별거)율에 따라 유배우율의 수준이 달라진다. 결혼시기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출산은 유배우 상태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여성의 연령별 유배우율을 <표 3-3>과 [그림 3-3]에서 비교하였다.

한국과 일본 모두 1980년 이후 유배우율이 감소하고 있다. 1980년에 한국 여성의 유배우율은 30대에서 94%의 높은 수준이었으나 그 후 계속 감소하여 2000년에는 30대 후반에서만 겨우 90%를 유지하였으며, 2005년에는 40대 초에

87.3%를 고비로 감소하였다. 일본 여성의 경우는 더욱 빠르게 변화하여 1980년에 30대 후반에서 90%가 넘는 유배우율이 2000년에는 40대에서 83% 정도로 최고수준을 이루었다. 양국 모두 유배우율이 가장 높은 연령층이 늦어졌는데 한국에서는 30~34세(1980)에서 35~39세(1990 및 2000)와 40~44세(2005)로, 일본에서는 35~39세(1980)에서 45~49세(2000 이후)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가장 높은 유배우율을 보인 연령층이 늦어지고, 유배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결혼연령의 상승과 미혼율의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3>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 변화의 한일비교: 1980~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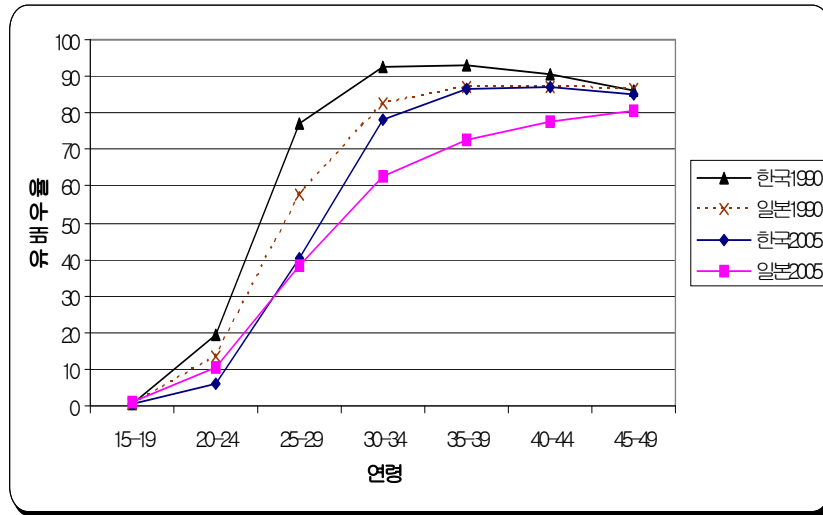
(단위: %)

연령	1980		1990		2000		2005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15~19세	1.7	0.9	0.5	0.7	0.7	0.9	0.4	0.8
20~24세	33.7	21.9	19.5	13.5	10.7	11.3	6.2	10.4
25~29세	84.9	74.5	77.3	57.5	59.1	43.5	40.1	38.2
30~34세	94.3	88.0	92.4	82.7	86.9	68.9	78.2	62.7
35~39세	93.4	90.2	92.8	87.3	90.7	79.2	86.8	72.4
40~44세	90.1	89.5	90.3	87.1	88.9	83.3	87.3	77.5
45~49세	83.1	86.8	86.1	86.4	86.1	83.7	84.9	80.5

자료: <표 3-2>의 자료 참조.

한국과 일본 여성의 유배우율 차이의 변화는 연령에 따라 뚜렷하였다. 20~24세에서 일본 여성의 유배우율이 한국에 비하여 낮았으나(1980 및 1990), 2000년 이후에는 오히려 높아졌다. 25~29세에서는 그 차이가 1990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크게 감소하였다. 그리고 30세 이후 모든 연령층에서 한국과 일본의 유배우율 차이가 점점 더 커졌다. 이 차이의 절대값은 미혼율의 차이보다 컸다. <표 3-4>에서 2005년 양국 여성의 미혼율과 유배우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림 3-3] 가임기 여성의 유배우율 변화의 한일비교, 1990 및 2005



15~19세 여성은 양국 모두 대부분(99% 이상)이 미혼상태이고, 이 수준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4세에서는 한국여성의 미혼율이 93.7%로 일본보다 5.0% 포인트 높았으나 유배우율은 불과 4.2% 포인트만 높았다. 25~29세에서는 미혼율이 비슷하였으나 유배우율의 차이(-1.9%)는 뚜렷하였다. 30세부터 40대 초까지 미혼율의 차이보다 유배우율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 이와 같이 미혼율이 높은 20~24세 이하에서 유배우율의 차이는 작아지고, 반대로 미혼율이 낮은 25세 이상에서 유배우율의 차이가 커지는 것은 일본 여성의 이혼(또는 별거)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며, 40대 후반에서 감소하는 것은 한국여성의 재혼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여성에 비하여 일본 여성의 미혼율이 낮고 유배우율은 더욱 낮으면서 출산율은 비슷하거나 오히려 한국에서 더 낮아지는 것은 일본 여성의 유배우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출산이 나타나는 연령별 출산유형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4〉 여성의 연령별 미혼율과 유배우율의 한일 비교: 2005

연령	미혼율			유배우율		
	한국	일본	차이	한국	일본	차이
15~19세	99.6	99.1	0.5	0.4	0.8	-0.4
20~24세	93.7	88.7	5.0	6.2	10.4	-4.2
25~29세	59.1	59.0	0.1	40.1	38.2	1.9
30~34세	19.0	32.0	-13.0	78.2	62.7	15.5
35~39세	7.6	18.4	-10.8	86.8	72.4	14.4
40~44세	3.6	12.1	-8.5	87.3	77.5	9.8
45~49세	2.4	8.2	-5.8	84.9	80.5	4.4

자료: <표 3-2>과 동일.

제 3 절 출산율의 변화

1. 합계출산율

한국과 일본의 지난 30년간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표 3-5> 및 [그림 3-4]에서 비교하였다. 1975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3.47명으로 이미 대체수준(2.1명) 이하(1.91명)로 낮아진 일본보다 약 1.5명이 높았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57년에 2.04명으로 이미 대체출산수준보다 낮아진 후 백말띠 해인 1966년(1.58명)을 제외하면 1974년까지 1.96명(1961)부터 2.23명(1967)의 범위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6: 24). 그러나 한국은 1960년에 6.0명까지 증가한 합계출산율은 정부의 강력한 출산억제정책과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국민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빠르게 감소하여 1975년에 3.47명에 이르렀다(김태현, 1993 참조).

그 후 한국의 출산수준은 계속 빠르게 감소하여 1983년에 2.08명으로 대체출산수준에 도달하였다. 일본의 출산수준은 1957년 이후 대체수준 전후의 출산수준을 약 20년간 유지하였으며, 1976년에 처음으로 1.9명 밑으로 낮아졌다. 1987년에 1.7명 밑으로 낮아지기까지 12년 동안 출산수준은 1.7~1.8명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베이비붐 전기 세대(1955~1965년 출생)^{주5)}가 결혼하

고 출산하는 시기인 1980년대 초에 제2차 베이비붐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여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소자녀관의 확산과 함께 남아 선별 출산이 가능해지면서 출산율은 대체출산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도 빠르게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김태현,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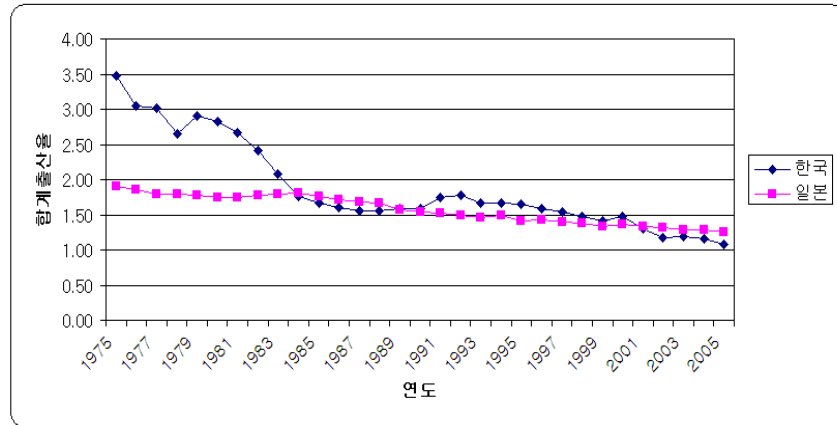
<표 3-5> 합계출산율 변화의 한일비교: 1975~2005

연도	한국	일본	연도	한국	일본
1975	3.47	1.91	1991	1.74	1.53
1976	3.05	1.85	1992	1.78	1.50
1977	3.02	1.80	1993	1.67	1.46
1978	2.65	1.79	1994	1.67	1.50
1979	2.90	1.77	1995	1.65	1.42
1980	2.83	1.75	1996	1.58	1.43
1981	2.66	1.74	1997	1.54	1.39
1982	2.42	1.77	1998	1.47	1.38
1983	2.08	1.80	1999	1.42	1.34
1984	1.76	1.81	2000	1.47	1.36
1985	1.67	1.76	2001	1.30	1.33
1986	1.60	1.72	2002	1.17	1.32
1987	1.55	1.69	2003	1.19	1.29
1988	1.56	1.66	2004	1.16	1.29
1989	1.58	1.57	2005	1.08	1.25
1990	1.59	1.54	-	-	-

자료: <표 3-1>과 동일.

주5)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를 정의하는 데는 몇 가지 주장이 혼재되어 있다. 한국전쟁 후에 출산율이 높아지면서 출생아수가 빠르게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한 시기인 1955~'63년의 9년간 출생자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함(이여봉, 2006). 그러나 1966년부터 출생아수가 증가하여 1970~'71년경에 최대에 이르고, 1974년경에 다시 1965년 수준으로 출생아수가 감소하므로 이 9년(1966~'74)을 포함하여 총 20년간(1955~'974)을 베이비 붐 시기로 이용하기도 있음(김태현, 2003). 일본에서는 출생아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베이비붐의 자녀가 출산하는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제2차 베이비붐이 나타났다. 제1차 베이비붐 세대를 「단카이(團塊)세대」라고 하고, 제2차 베이비 붐 세대를 「단카이(團塊) 주니어」라고 함. 단카이 세대가 2007년부터 60세 정년을 맞이하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2007년 문제'로 부르고 있음(日本內閣府, 2006).

[그림 3-4] 합계출산율 변화의 한일비교: 1970~2005



일본의 출산수준은 1987년에 1.6명대로 낮아지고, 2년 후인 1989년에 1.57명으로 1.5명대로 다시 낮아지면서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나타나면서 소위 “1.5명 쇼크”^{주6)}라는 사회적 충격을 받게 된다. 이 때 이미 일본은 고령화 사회(7%)에 들어온 지 20년이 되는 해로 65세 노인인구가 총인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12%에 도달하였으며, 곧 고령사회(14%)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출산수준이 대체수준보다 낮은 수준에서 오래 지속되면 인구는 고령화되고, 중국에는 인구규모 자체가 감소하게 되므로 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일본은 저출산수준이 지속되면 사회발전에 제약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저출산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고, 출산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서는 2차 베이비붐을 막기 위한 출산억제정책은 출산수준이 대체수준보다 낮아진 후에도 계속되었다.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보다 두 배나 되었으나 1984년(1.76명)부터는 한국의 출산수준이 더 낮은 역현상이

주6) “1.57 쇼크”란 1989년의 합계출산율 1.57명이 「병오년(이 해에 태어난 여자는 남편의 수명을 줄인다는 미신이 있음)」이라는 특수요인에 의해 과거 최저였던 1966년(백말띠해)의 합계출산율 1.58명 보다 낮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의 충격을 말함(日本 内閣府, 2006).

나타났다. 이렇게 빨리 감소하는 출산율은 1987년에 일본보다 0.14명이나 낮은 1.55명까지 감소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출산억제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무상으로 지원하던 각종 산아제한사업을 축소내지 폐지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중단되면서 출산율은 다시 상승하였다. 1990년까지 1.59명이던 출산율은 1992년에 1.78명까지 증가하였다. 출산수준이 다시 상승하면서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다자녀관이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출산억제에 대한 정부시책이 철회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출산수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개인의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줄어든 부담을 늘려가면서 출산율을 높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출산억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끊어지면서 1980년대 말부터 증가한 것은 일종의 ‘스프링 효과’로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늘려있던 출산수준이 재정지원이 끊어지면서 상승하는 일시적 현상이 나타나지만 이미 소자녀관이 형성된 상태이므로 출산수준은 다시 낮은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김태현, 2004). 그러므로 1993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한 출산율은 3년 후인 1996년부터 다시 1.5명대로 낮아지고, 2년 후인 1998년에는 다시 1.4명대로 끝없는 감소추세가 이어졌다.

일본의 출산수준은 1.57명의 쇼크(1989)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소가 이어졌다. 1993년에 1.4명대로 낮아지고, 1997년에는 1.3명대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출산억제정책을 위한 예산의 삭감으로 일시적인 출산증가 현상이 나타날 때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일본의 출산수준은 1989년부터 한국보다 낮은 수준이 이어졌다. 그러므로 1990년대 초의 정책준비기를 거쳐 1995년부터 「엔젤플랜」이라는 소자화대책을 마련하여 저출산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출산수준은 계속 감소하였으므로 2000년에는 다시 뉴엔젤플랜을 수립하여 출산력 회복을 위한 더욱 강력한 정책들(보육접근성 강화, 고용환경 개선, 교육비 부담경감 등)을 도입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6; 日本 内閣府, 2006).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5명대로 다시 낮아진 후인 1996년에야 기존의 출산억제정책을 완전히 폐지하고, 인구정책을 모자보건을 비롯한 복지정책으로 전환

하였다. 그러나 이미 소자녀 가치관이 굳어진 상태였으며, 1998년에는 IMF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결혼과 출산의 지연으로 출산율은 더욱 빠르게 감소하였다. 1999년에 1.42명까지 감소한 출산율은 2000년에 Millenium 베이비의 영향으로 1.47명으로 증가하나 2001년에는 1.3명으로 급감함으로써 일본(1.33명)보다 낮아졌다. 1980년대 중반(1984~1988년)에 일시적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았으나 그 후 다시 높아졌던 현상이 13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일본은 1995년부터 정부의 출산력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감소의 속도가 완만해진 반면에 한국은 장기간에 걸쳐 이어오던 출산억제정책의 여파로 계속 감소하였고,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감소속도는 더욱 빨라졌다(김두섭, 2007).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양국의 출산수준 차이는 더욱 커졌다. 출산율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밀레니엄 베이비로 일시적인 출산의 집중현상이 다음 해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2001년에는 1.30명으로 급감하였으며, 그 후 1.1명대로 낮아지는 초 저출산 사회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 수준은 2005년에 다시 1.08명까지 끝없는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출산수준의 급감으로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2006년에 확정하여 강력한 저출산대책을 도입하였으므로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대한민국정부, 2006). 한편, 일본의 출산율은 2000년(1.36명)이 지나면서도 1.3명대를 유지하였으며, 최근에 1.2명대로 낮아졌으나 그 감소 폭은 한국에 비하여 적었으며, 양국의 출산수준의 차이는 더욱 커졌다. 향후 출산력회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양국의 출산수준의 차이가 결정될 것이다.

2. 연령별 출산율

앞에서 한국과 일본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출산수준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대응책을 검토하면서 출산수준 감소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합계출산율은 전 가임연령층 여성들의 평균 출생아수를 가리키므로 가임기 여성의 연령별 출산행태를 비교할 수는 없다. 출산율의 변화는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의 변화로 표시되므로 연령별 출산율의 행태와 변화에 따라 출산수준이

결정된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변화는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양국 출산수준의 차이의 원인을 연령별 출산율의 수준과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양국의 연령별 출산율을 1970년부터 2005년까지 5년 간격으로 <표 3-6>과 [그림 3-5]에서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출산은 20대와 30대초에 집중된다. 1970년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출산율을 비교하여 보면 25~29세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으며, 20세부터 34세 사이에서 거의 모든 출산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별 출산유형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20대초와 30대 후반의 출산율이 먼저 감소하고, 25~34세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표 3-6> 연령별 출산율 변화의 한일비교: 1970~2005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한국								
15~19세	19.30	14.30	12.40	10.10	4.20	3.60	2.50	2.10
20~24세	193.10	178.30	135.90	118.70	83.20	62.90	39.00	17.90
25~29세	320.60	263.80	242.70	159.10	169.40	177.10	150.60	92.30
30~34세	205.70	146.10	114.00	41.10	50.50	69.60	84.20	82.40
35~39세	105.90	58.10	40.20	8.80	9.60	15.20	17.40	19.00
40~44세	46.00	20.80	15.10	2.20	1.50	2.30	2.60	2.50
45~49세	13.10	5.00	5.60	0.50	0.20	0.20	0.20	0.20
일본								
15~19세	4.17	4.10	3.78	4.58	3.61	3.70	5.38	5.51
20~24세	103.70	102.57	77.09	63.47	47.14	40.42	39.29	37.18
25~29세	210.50	186.62	182.80	177.94	140.63	119.33	99.33	87.96
30~34세	86.29	71.32	70.58	87.94	93.26	93.47	92.41	87.26
35~39세	19.51	15.02	13.31	16.92	21.57	26.19	31.44	35.10
40~44세	2.65	2.11	1.67	1.89	2.26	3.97	5.25	4.79
45~49세	0.16	0.08	0.07	0.06	0.05	0.07	0.10	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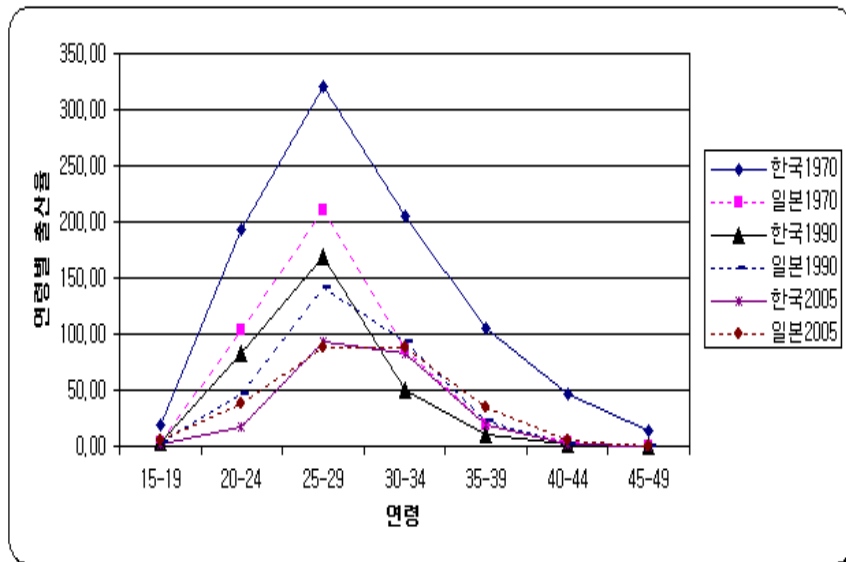
자료: <표 3-1>과 동일.

1970년의 한국(4.53명)과 일본(2.13명)의 연령별 출산율의 차이는 전 연령층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양국의 연령별 출산율의 유형이 유사하였다. 출산율의 감소의 중요 원인이 결혼연령의 지연이므로 출산시기가 늦어지면서 합계출산율

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연령별 출산율은 출산수준이 낮아지면서 20~24세의 출산율은 빠르게 감소하는 대신 30~34세의 경우에는 감소속도가 느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1970년의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모두 대체수준 이상인 경우이므로 출산율의 차이는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관찰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출산수준이 대체수준보다 훨씬 낮은 1.5명대에서는 양국의 연령별 출산율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출산유형은 일본의 1970년 유형과 유사하고, 다만 각 연령층의 출산수준이 고르게 감소한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유형을 보이고 있다. 즉, 1970년(2.13명)보다 1990년(1.54명)에 0.59명이 감소하는 과정에서 연령별 출산율은 주로 20대에서 감소하였으며 30대 이후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이것은 출산율 감소가 출산시기의 지연으로 나타나는 결과이다. 그러나 한국의 1990년 연령별 출산율은 여전히 20대에서 가장 높은 전형적인 유형을 보이고 있다.

[그림 3-5] 연령별 출산율 변화의 한일비교: 1970~2005



양국의 연령별 출산유형은 2005년에 다시 유사하게 되었다. 즉, 출산 중심 연령층은 25~34세로 이동하였으며, 25세 이후의 출산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24세의 한국 출산율이 일본 수준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5년 한국의 출산수준이 일본보다 낮은 원인을 20~24세의 낮은 출산 수준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한국의 결혼이 일률적으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결혼연령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20대 초의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일본과의 출산율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제 4 절 출산행태의 변화

1. 출산시기

앞에서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행태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혼인 시기의 지연유형과 유배우상태의 변화가 연령별 출생아수의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표 3-7>과 [그림 3-6]은 1980년 이후 연도별로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분포이다. 2000년까지 한국과 일본 모두 출산의 중심연령층은 25~29세였으나 2005년에는 중심연령이 30~34세로 높아졌다.

그러나 두 번째로 출산수준이 높은 연령층은 양국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1990년까지 20~24세의 출생아수가 25~29세 다음을 이었으며, 그 후 30~34세의 출생아수가 많아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는 1980년 이후 2000년까지 30~34세의 출생아수가 25~29세 다음으로 많았다. 일본의 혼인연령이 한국보다 늦었고, 출산율이 한국보다 먼저 낮아진 결과이다.

또한, 20~24세 여성의 출생아수의 구성비가 높았던 한국에서 1985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00년(11.7%)에는 일본(13.6%)보다 낮아졌으며, 2005년에는 그 역전현상이 더욱 커졌다. 35~39세에서는 한국 여성의 출생아수 구성비가 증가하기는 하지만 일본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30~34세 여성

의 출생아수 구성비의 변화도 매우 특이하였다. 출산율이 대체수준 미만으로 낮아진 1985년에 30~34세 출생아수 구성비가 극소(9.1%)하던 것이 그 후 빠르게 증가하여 2005년에는 40.9%로 일본의 구성비(38.1%)보다 높아졌다. 한국 여성의 연령별 출생아수 구성비는 25~29세와 30~34세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도 이 연령층에 출생아수가 집중되어 있으나 그 강도가 약하고, 대신 20~24세와 30~34세의 출생아수 구성비가 한국에 비하여 높았다.

한국의 출산율이 대체수준에 도달한 1983년 이후에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변하기는 하지만 1985년 이후 일본의 출산율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변동하였다. 또한 한국 여성의 초혼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리기는 하였으나 1990년의 차이가 불과 1.1년이었으며, 1999년 이후에는 0.5세 이하로 낮아졌다. 그러면 연령별 출생아수의 분포도 유사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위에서 비교한 것과 같이 매우 컸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우선 한국 여성의 출산시기는 25~34세에 집중되었다.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출산시기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로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결혼 후 출산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은 한국 여성은 결혼 후 자녀를 한명 또는 두 명을 짧은 기간 내에 출산하고 단산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끝으로, 이상자녀수가 2명이 채 되지 않는 한국 여성들의 출산행태는 원하는 자녀수(1~2명)를 출산한 후에 단산하므로 셋째 이후의 출산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30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이 극히 낮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한국 여성은 결혼하기 전의 출산수준이 매우 낮고^{주7)}(혼외 임신의 대부분이 인공임신중절 됨), 늦게 결혼하여 짧은 기간 내에 원하는 자녀를 낳고 단산함으로써 모의 연령별 출산자녀수는 25~29세 및 30~34세에 집중되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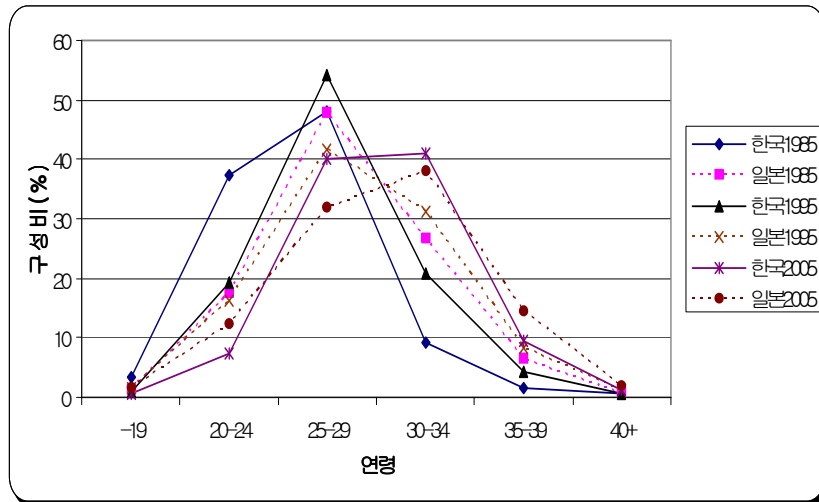
주7) 한국과 일본 모두 부모가 법적 혼인 외에 출산하는 경우가 극히 적다. 특히 한국의 경우 원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이 사실상 허용되고 있으므로 혼외 임신의 경우 대부분 인공임신중절하고 있음. 그러므로 2005년에 혼인 외의 출생자녀수는 6,492명으로 전체 출생아수의 1.87%이며(통계청, 2006), 일본은 2004년에 1.99%(일본 내각부, 2006)로 30%에서 50%대에 이르는 서구의 프랑스, 스웨덴 등에 비하여 극히 낮음.

<표 3-7>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변화의 한일비교: 1980~2005

연령	한국						일본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9세 이하	3.1	3.3	1.4	1.0	0.7	0.7	0.9	1.2	1.4	1.4	1.7	1.6
20~24세	31.6	37.4	26.6	19.2	11.7	7.5	18.8	17.3	15.7	16.3	13.6	12.1
25~29세	41.7	48.1	54.1	54.2	51.9	40.2	51.4	47.7	45.1	41.5	39.5	31.9
30~34세	15.9	9.1	15.4	20.9	29.0	40.9	24.7	26.6	29.1	31.3	33.3	38.1
35~39세	6.3	1.6	2.2	4.2	5.9	9.4	3.7	6.5	7.6	8.4	10.6	14.4
40세 이상	2.6	0.5	0.3	0.5	0.8	1.3	0.4	0.6	1.0	1.1	1.2	1.9

자료: <표 3-1>과 동일함

[그림 3-6]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 변화의 한일비교: 1980~2005



2. 출산시기

혼인 중의 출산이 보편적인 사회에서 출산시기는 혼인시기와 터울의 영향을 받는다. 한국과 일본의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연령변화를 <표 3-8>에서 비교하였다. 한국의 출산수준이 대체수준 아래로 떨어진 1985년 모의 평균출산연

령도 26.4세로 일본(28.3세)보다 1.9년이 낮았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한국의 모의 연령은 빠르게 증가하여 2003년에 29.8세로 일본과 같아지고, 그 후에는 오히려 출산시기가 늦어졌다.

출산순위별로 비교하면 첫째 아이 출산시 모의 연령은 1985년에 한국과 일본 모의 평균연령이 각각 25.3세와 26.5세로 일본 모의 연령이 1.2년 높았다. 그 후 한국 모의 평균출산연령이 빠르게 증가하여 2001년에 28.0세로 일본과 같아졌으며, 그 후에는 한국 모의 평균연령이 높아졌으며, 그 차이는 점점 커졌다. 둘째 출산시기도 한국과 일본 모의 평균 출산연령의 변화 패턴이 유사하였으나 한국 모의 연령 상승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서 일본 모의 연령보다 높아진 시기는 2004년이였다. 그러나 셋째 이후에는 한국 모의 평균 출산연령의 상승 속도가 다시 빨라져서 2002년부터 높았으며, 넷째의 경우는 1995년부터 일본 모의 연령보다 높아졌다. 한국의 출산시기가 혼인연령이 늦어지면서 첫째 출산이 상대적으로 빨라졌으며, 둘째 출산은 일본에 비하여 더욱 빨라졌으나 셋째 이후에는 점점 늦어졌다. 이것은 한국 모의 출산이 결혼 후 둘째까지 출산한 후 극히 일부에서 출산하고, 지연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모의 평균출산연령이 빠르게 높아져서 일본 모의 연령보다 늦어지는 것은 초혼연령의 지연과 출산행태의 변화에 따른 차이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1990년 첫째 아의 평균 출산시 모의 평균 연령은 한국에서 일본보다 0.7년이 빨랐으며, 2004년에는 그 차이가 0.3년으로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국의 문화를 고려한다면 초혼연령이 빠르거나 유사하여야 하나 한국 모의 출산시기의 지연속도가 초혼연령의 상승속도보다 빨랐다. 한국과 일본 모두 초혼연령이 늦어지면서 결혼 후 첫째 출산까지의 기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속도는 한국에서 빨랐다. 이것은 일본의 혼인연령이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출산시기도 혼인시기가 다양한 것과 같이 넓은 연령층에서 비교적 분산되었으나 한국의 경우 출산시기가 20대 후반과 30대 전반에 밀집되었기 때문이다.

둘째의 평균출산연령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느려서 한국 모의 평균 출산연령이 일본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2004년이였으며 셋째부터는 출생아수가 늘어날수

록 출산시 평균연령이 일본보다 더욱 늦어졌다. 한국 여성의 출산행태가 결혼 후 두 명의 자녀를 짧은 기간 내에 출산하는 경향이 강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여성의 경우 30대 후반과 40대 전반의 출생아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셋째 아 이후 출생아수의 구성비도 높으므로 모의 평균출산연령의 상승이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한국 여성의 경우에는 초혼연령이 계속 상승하고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셋째이후의 출생아수가 줄어들면서 출산시기가 크게 늦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여성의 경우 2001년 이후에 셋째 출산시 모의 연령이 32.6세로 일정하였으며, 넷째의 경우 2000년 34.3세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넷째의 경우 2004년에 35.3세까지 늦어진 후에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8>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출산연령변화의 한일비교: 1981~2005

연도	한국					일본				
	전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전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980	26.4	24.7	26.6	28.8	31.1	27.8	26.1	28.4	30.5	32.3
1985	26.4	25.3	27.0	28.9	31.4	28.3	26.5	28.8	31.0	32.8
1990	27.5	26.5	28.4	30.8	33.1	29.0	27.2	29.5	31.6	33.5
1995	28.0	26.5	28.8	31.6	34.2	29.4	27.8	30.0	32.2	34.0
2000	29.0	27.7	29.7	32.2	34.5	29.7	28.0	30.5	32.5	34.3
2001	29.3	28.0	29.9	32.5	34.8	29.7	28.0	30.5	32.6	34.3
2002	29.5	28.3	30.2	32.7	34.9	29.7	28.1	30.6	32.6	34.4
2003	29.8	28.6	30.5	32.9	34.9	29.8	28.3	30.6	32.6	34.3
2004	30.1	28.9	30.8	33.1	35.3	29.9	28.5	30.7	32.6	34.2
2005	30.2	29.1	31.0	33.3	35.3	-	-	-	-	-

자료: <표 3-1>과 동일함

지난 30년간 연도별 출생아수의 출산순위별 구성비 변화를 <표 3-9>에서 비교하였다. 높은 출산율이 감소할 때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는 연령층은 30대 후반 이후이고, 출산순위가 높은 출생아수가 급감한다. 1975년에 넷째 이후 출생아수는 전체의 20.9%였으나 10년 후인 1985년에는 3.3%에 불과하였다. 한국의 출산율이 대체수준보다 낮아진 1985년 이후에도 넷째 이상의 비중이 빠르게

감소하여 1990년에 1.5%, 1995년에 1.0%까지 감소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의 비중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6.0~7.5% 수준에서 2000년에 9.4%로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03년 이후에 8.5%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첫째 출생아 수는 출산율이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한 후인 1985년 이후에 총 출생아수의 5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1995년 이후에 50% 미만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이 비중은 출산수준이 극히 낮아진 2002년부터 다시 상승하여 2005년(합계출산율 1.08명)에 51.3%까지 높아졌다.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이 일본보다 낮아진 2001년 이후의 출생순위별 한국과 일본의 출생아수 구성비를 비교하면 한국에서 첫째 아의 비중이 출산율 감소와 함께 증가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반대로 감소하였다. 둘째의 경우 한국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일본에서는 증가하였다. 셋째와 넷째 이후의 경우 한국에서는 각각 ‘감소 후 유지’와 ‘유지 후 감소’의 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모두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3-9〉 출산순위별 출생아수 구성비 변화의 한일비교: 1975~2005

구분	한국					일본				
	합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합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975	100.0	33.9	27.7	17.3	20.9	100.0	45.4	40.4	11.8	2.5
1980	100.0	39.2	31.7	16.9	12.1	100.0	42.3	40.7	14.4	2.5
1985	100.0	51.5	37.7	7.5	3.3	100.0	42.1	39.3	15.7	2.9
1990	100.0	53.6	39.0	6.0	1.5	100.0	43.5	37.6	15.8	3.1
1995	100.0	48.1	43.3	7.5	1.0	100.0	47.8	36.1	13.2	2.9
2000	100.0	47.1	42.2	9.4	1.0	100.0	49.0	36.5	11.8	2.6
2001	100.0	47.5	42.1	9.0	1.0	100.0	49.0	36.6	11.8	2.6
2002	100.0	48.4	41.0	8.9	1.0	100.0	49.5	36.5	11.4	2.6
2003	100.0	49.1	40.6	8.4	1.0	100.0	48.7	37.3	11.4	2.6
2004	100.0	50.7	39.0	8.5	1.0	100.0	48.4	37.6	11.4	2.6
2005	100.0	51.3	38.3	8.5	1.8	-	-	-	-	-

주: 합계에는 ‘미상’이 포함되었으며, ‘넷째’는 ‘넷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 연도;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2006.

출산율이 2000년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지만 일본의 출산율은 합계출산율 1.3명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셋째 이후의 출생아수가 2000년 이후 꾸준히 14%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 셋째 이상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첫째나 둘째에서 단산하는 현상으로 출산수준이 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3. 임신과 임신소모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임신소모이며, 이 중에서도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임신소모이다. 일본의 경우 전체 인공임신중절건수를 파악하여 공표(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2006)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혼전 임신과 인공임신중절건수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유배우 부인에 대한 임신과 종결형태를 비교하였다. <표 3-10>에서 한국의 15~44세 부인의 임신회수 및 소모형태를 정리하였으며, 일본의 자료로 인공임신중절실태를 <표 3-11>에 제시하였다.

인공임신중절은 혼외 또는 혼 내에서 자유스럽게(적어도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건수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한국에서는 15~44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과거경험을 설문조사하여 이들의 임신소모실태를 파악하였다. 1994년 이후 기혼부인의 임신건수는 2.96회(1994)에서 2.62회(2005)로 0.3회 감소하였으며 출생아수는 1.80명(1994)으로부터 1.76회(2005)로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그러므로 총 임신대비 인공임신중절 건수의 비율은 28.3%(1994)에서 21.0%(2005)로 감소하였다. 출생아수 대비 인공임신중절건수도 1994년에 46.7%에서 31.3%(2005)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일본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출생대비 인공임신중절 건수의 비율은 1990년까지 37~38% 정도를 유지하였으나 그 후 빠르게 감소하여 2004년에는 27.2%까지 감소하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일본에 비하여 2005년에 0.17명(약 15%)이 낮았으나 출생아수 대비 인공임신중절건수의 비율은 높았으므로 한국 유배우 부인의 인공

임신중절건수를 줄이고, 혼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정상 출산할 수 있다면 출산을 회복에 도움이 클 것이다. 즉, 총 임신회수(2005년 2.62회)의 약 3분의 2(67.2%)만이 정상출산하고 있고, 총 임신건수의 32.8%가 주로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로 임신을 종결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이 주로 혼 내에서 이루어지고 2005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므로,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31.3%^{주8)}을 줄인다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약 0.3명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약 1.4명까지 높아질 수 있다.

〈표 3-10〉 한국의 15~44세 부인의 임신회수 및 소모형태

(단위: 명, %)

구분	임신	출생	임신소모형태			현 임신	응답자수
			사산	자연유산	임신중절		
1994	2.96	1.80	0.01	0.24	0.84	0.06	15,316
1997	2.83	1.78	0.01	0.26	0.74	0.04	15,311
2000	2.69	1.72	0.01	0.26	0.65	0.06	17,241
2000	2.72	1.78	0.01	0.26	0.63	0.04	17,920
2005	2.62	1.76	0.01	0.27	0.55	0.03	3,802
구성비(%)							(소모율)
1994	100.0	61.0	0.4	8.2	28.3	2.1	36.9
1997	100.0	62.9	0.3	9.1	26.1	1.6	35.5
2000	100.0	63.8	0.3	9.7	24.1	2.1	34.0
2003	100.0	65.5	0.2	9.6	23.1	1.6	32.9
2005	100.0	67.2	0.4	10.3	21.0	1.1	31.7

주: 1) 2005년 자료는 20~44세 부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임.

2) '소모율'은 총 임신 중에서 임신소모의 구성비임.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각 연도.

주8) 총 임신건수를 100으로 놓을 때 출생은 67.2이고, 임신중절은 21.0이다(표 10 참조). 그러므로 출생(67.2%) 대비 임신중절(21.0%)은 31.3%가 됨.

〈표 3-11〉 일본의 연도별 인공임신중절 실태

연도	중절건수	실시율(천분비)	출생대비 비율(%)
1980	598,084	19.5	37.9
1985	550,127	17.8	38.4
1990	456,797	14.5	37.4
1995	343,024	11.1	28.9
2000	341,146	11.7	28.7
2004	301,673	10.6	27.2

주: 1) 실시율은 가임기(15~49세) 여자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건수.
2) 출생대비 비율은 출생아수에 대한 인공임신중절건수의 백분비.

자료: 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 2006.

제 5 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빠르게 감소하던 일본의 출산수준이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혼인과 출산행태의 변화와 우리나라의 극히 낮은 출산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행태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출산력의 회복이나 저출산대책을 위한 대상이나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 이용한 자료는 2005년 총조사결과와 인구동태통계이다. 한국과 일본의 출산행태비교분석을 위해서 시계열 자료를 직접 비교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그래프를 이용하여 특성변화의 패턴을 비교하였다. 차이가 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였다.

양국의 출산수준 차이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더욱 커졌다. 출산율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에서 밀레니엄 베이비로 일시적인 출산의 집중현상이 다음 해의 출산율에 영향을 미쳐서 급감하였으며, 2005년에는 1.08명까지 감소하였다. 정부는 「새로마지플랜 2010」을 2006년에 확정하여 강력한 저출산대책을 도입하였다. 한편, 일본의 출산율은 2000년(1.36명)이 지나면서도 1.3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1.2명대(2005년)로 낮아졌으나 그 감소 폭은 한국에 비하여 적었으며, 양국의 출산수준의 차이는 더욱 커졌다.

한국과 일본의 2005년도 출산중심 연령층은 25~34세로 이동하였으며, 25세

이후의 출산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24세의 한국 출산율이 일본 수준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2005년 한국의 출산수준이 일본보다 낮은 원인을 20~24세의 낮은 출산수준에서 찾을 수 있으며, 한국의 결혼이 일률적으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결혼연령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20대 초의 결혼과 출산이 가능하게 된다면 일본과의 출산율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일본여성의 경우 미혼상태에서 가임기간을 보내는 경우가 10%에 육박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낮은 수준(2005년에 2.4%)이다. 그러면서 양국의 출산율의 차이가 급격하게 좁혀지고, 결국은 한국의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하여 최근에는 일본에 비하여 낮아지는 것은 혼인연령이 30세 전후로 집중되었고, 늦은 결혼으로 자녀수를 1~2명으로 제한하는 환경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여성들은 젊은 연령층(24세 이하)부터 고르게 결혼연령이 분포되면서 자녀의 수에 대한 편중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한데서 출산행태가 고르게 이루어지는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이 대체수준에 도달한 1983년 이후에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변하기는 하지만 1985년 이후 일본의 출산율과 매우 유사한 수준으로 변동하였다. 또한 한국여성의 초혼연령이 상대적으로 이르는 하였으나 1990년의 차이가 불과 1.1년이었으며, 1999년 이후에는 0.5세 이하로 낮아졌다. 그러면 연령별 출생아수의 분포도 유사할 수 있으나 그 차이는 매우 컸으며, 그 이유는 우선 한국 여성의 출산 시기가 25~34세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결혼시기가 늦어지면서 출산시기가 20대 후반과 30대 초로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결혼 후 출산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음은 한국 여성은 결혼 후 자녀를 한명 또는 두 명을 짧은 기간 내에 출산하고 단산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끝으로, 이상자녀수가 2명이 채 되지 않는 한국 여성들의 출산행태는 원하는 자녀수(1~2명)를 출산한 후에 단산하므로 셋째 이후의 출산이 빠르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30대 중반 이후의 출산율이 극히 낮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출산율이 2000년 이후에 빠르게 감소하지만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3명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셋째 이후의 출생아수가 2000년 이후 꾸준히 14%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셋째 이상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첫째나 둘째에서 단산하는 현상으로 출산 수준이 극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일본에 비하여 2005년에 0.17명(약 15%)이 낮았으나 유배우자의 출생아수 대비 인공임신중절건수의 비율(31.3%)이 전체 인공임신중절건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일본의 비율(27.2%)보다 높았으므로 한국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건수를 줄이고, 혼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정상 출산할 수 있다면 출산율 회복에 도움이 클 것이다. 즉, 유배우자의 평균 총 임신회수(2005년 2.62회)의 약 3분의 2(67.2%)만이 정상출산하고 있고, 총 임신건수의 32.8%가 주로 자연유산이나 인공임신중절로 임신을 종결하고 있다. 한국의 출산이 주로 혼 내에서 이루어지고 2005년 현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08명이므로, 유배우 부인의 인공임신중절(31.3%)을 줄인다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약 0.3명까지 증가할 것이며,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약 1.4명까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이 25~34세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완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결혼 시기가 30세 전 후에 집중되어 있고, 결혼 후에 바로 첫째와 둘째의 출산을 하고 거의 모두 단산을 하는 혼인과 출산행태의 변화가 있을 때 출산율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혼인의 시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출산시기와 출생아수에 대한 사회적인 제약이 사라지거나 약해 질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자면, 혼인과 출산을 담당할 연령층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다양성을 수용하는 가치관이 필요하며,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출산율 회복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원래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장래 출산을 담당할 청소년의 가치관을 형성하기위한 학교교육과 사회인식의 전환을 위한 국민적 운동을 통하여 노력할 일이다.

특히, 제2차 베이비붐 세대(1979~1981년생)가 현재 26~28세로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출산을 담당할 세대이므로 이들의 출산행태가 우리나라 출산 수준에 바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들에게서 다양한 출산행태가 나타날 수 있

도록 사회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1980년대에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수행하다가 1980년대 말에 출산수준이 빠르게 감소하므로 재정적인 지원을 단기간에 중단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 초에 출산율 상승(일명 ‘스프링 효과’)으로 출생아수가 많았던 1991~1995년생(현재 12~16세로 중·고생)에 대한 혼인, 가족,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장래 출산율 회복과 출생아수의 증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장 한국의 고령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

제 1 절 개요

한국사회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낮은 출산율의 원인은 초혼연령의 상승과 소자녀관의 정착에 있다. 특히,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연령이 늦어져 출산율은 저하되고 주 출산층의 연령이 상승되어 결과적으로 고령출산도 증가하고 있음이다.

건강한 아이를 갖는 데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만 우선 남녀의 생식기가 가장 건강할 때를 먼저 따져봐야 하겠다. 남녀 모두 만 25세 전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인간의 생식기는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는 10세 정도부터 자라기 시작하여 만 19세까지 성장이 계속된다고 한다. 그동안은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생식기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키와 몸무게, 가슴 등의 크기는 어른보다 더 클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생식기는 다 컸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생식기가 미완성되었기에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는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 19세가 넘으면 거의 다 완성되었다고 하여 성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5세까지 마지막 완성을 이루다가 25세가 되면 남녀 모두 조금씩 퇴화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그래프의 정점, 꼭대기는 25세가 되며 그 이후로는 하강곡선으로 접어드는데 30대 중반까지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40대 이후에는 조금 급하게 내려오는 모양으로 볼 수 있다. 생식기의 건강성으로 본다면 20~30세, 한 10년 기간을 잡을 수 있겠고, 더 좁혀서 본다면 25세 전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고령출산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정연령에서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고령출산의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의 35세 이상의 여성의 고령출산의 실태를 파악하고, 고령출산의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연령에서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즉, 고령출산 부부의 인구사회학적 및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고령출산으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제 2 절 여성연령과 임신 및 출산

1. 여성연령과 임신

여성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가임능력이 감소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사실이다. 30세 이하의 여성이 한달 중 임신 가능성은 약 20%이지만 40세 이상의 여성의 임신 가능성은 약 5%로 추정된다(인구학대사전, 2007). 연령이 증가할수록 골반염증, 자궁내막증 등과 같은 가임능력을 저하시키는 여성질환이 증가하게 되며, 남성의 경우도 정자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부부의 임신능력이 저하되는 것이다.

불임(*infertility, infecundity, sterility*)은 “피임을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성교를 12개월 동안 지속하여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것”(서울대학교 의과대학, 1999)이라고 하거나, “임신불능기간이 24개월인 경우”(세계보건기구)로 정의한다. 반면에 인구학에서는 불임을 “피임을 하지 않고 성교를 하는 여성들의 출산능력 부재상태”로 정의하는데, 이는 불임을 임신에 기준을 두지 않고 출산에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는 임신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의 1995년 출산력 조사(National Survey of Family Growth)에 의하면, 자녀를 낳기 위해 노력하는 고령여성이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는 과거조사의 결과에서 보여준 비율보다 높은 불임률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주9)}

2. 여성연령과 출산

모든 임신은 어떤 형태로든 종결되는데, 종결형태는 본인의 의도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며, 원한 임신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며, 임신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신소모로 종결되기도 하겠으나 출산으로 종결될 수도 있다. 어떠한 과정을 겪든 모든 임신은 정상출생과 임신소모라고 하는 사산, 자연유산, 인공임신중절 등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임신의 결과는 그 사회의 경제수준, 문화적 배경, 보건의료 수준, 양성평등의 정도와 부부 또는 출산당사자의 사회경제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령에서의 임신이 출산으로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고령으로 인하여 임신소모로 연결될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부인의 연령에 따른 임신소모 경험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소모 경험률은 고연령층 부인이 높게 나타났다. 즉, 2003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35~39세 연령층 62.1%, 40~44세 연령층 62.6% 등이었고, 2006년 조사결과는 35~39세 연령층 54.3%, 40~44세 연령층 61.3%이었다. 결국 평균 임신소모횟수는 2003년의 경우 35~39세 1.0회, 40~44세 1.1회이었고, 2006년에는 35~39세 0.8회, 40~44세 1.0회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5세 이상의 고연령층 부인에게서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고연령층 부인의 임신소모가 많음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저연령층 부인보다 결혼기간이 길어 자연적으로 임신기간이 길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임신의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불원임신을 인공임신중절 등의 임신소모로 종결시킬 개연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둘째, 결혼이 늦어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출산의 위험성을 인식하게 되고, 원하는 수의 자녀를 두었는지에 상관없이 자연유산 또는 사산 등의 임신소모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고령임신의 경우에는 임신소모가 많을 확률

주9) 미국의 1995년 출산력조사에 따르면, 약 10%의 여성이 36개월 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음(인구학대사전, 2007).

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고의 논의 주제인 고령출산의 경우 고령여성의 임신종결형태 중 임신소모를 제외한 것으로 어느 연령층에서의 출산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겠다.

〈표 4-1〉 15~44세 유배우부인의 특성별 임신소모 횟수 분포: 2003

특성	총 임신소모 횟수 분포							평균 임신소모 횟수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계(수)	
2003년	45.8	29.9	16.7	5.5	1.3	0.8	100.0(6,598)	0.9
15~24세	73.0	19.8	6.3	-	0.8	0.1	100.0(126)	0.4
25~29세	68.7	21.5	7.3	1.7	0.7	0.1	100.0(837)	0.5
30~34세	51.3	29.0	14.1	4.2	0.8	0.6	100.0(1,708)	0.8
35~39세	37.9	33.3	19.9	6.9	1.5	0.5	100.0(1,963)	1.0
40~44세	37.4	31.6	20.6	7.2	1.9	1.3	100.0(1,964)	1.1
2006년	52.4	30.6	12.3	3.4	0.8	0.4	100.0(5,395)	0.7
15~24세	77.8	16.7	4.0	0.8	0.8	-	100.0(126)	0.3
25~29세	77.9	17.7	3.6	0.5	0.3	-	100.0(637)	0.3
30~34세	61.2	28.2	8.2	1.8	0.3	0.2	100.0(1,432)	0.5
35~39세	45.7	34.9	14.7	3.7	0.8	0.3	100.0(1,663)	0.8
40~44세	38.7	34.7	17.9	6.1	1.6	1.0	100.0(1,537)	1.0

자료: 1)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제 3 절 한국의 고령출산 실태

1. 연령별출산율에 기초한 고령출산 실태

최근 한국사회에서 출산율 변동의 특징은 출산율이 큰 폭으로 저하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체 연령층에서 나타난 보편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다른 출산율 변화의 특징은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ASFR)에 의하여 특징지어진다. 비록 그 정도는 미미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늦둥이 출산이 다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40~44세 연령층의 출산율은 1960년 1,000명당 80명에서 점차 저하하여 1984년에는 1명에 불과하였

으나, 1987년 잠깐 상승하더니 1990년과 1993년에는 다시 낮아졌다. 그러던 틈 등이 출산이 1996년 이후 증가하여 2005년에는 35~39세의 연령별 출산율이 1,000명당 14명, 40~44세는 4명이나 되었다(표 4-2 참조).

따라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은 현저히 낮아져 최저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출산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다소 상승함으로써 합계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기초한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단위: 명)

연령	1960	1974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15~19세	37	11	7	3	3	3	3	2	1	1
20~24세	283	159	162	104	62	71	62	50	24	19
25~29세	330	276	187	168	188	195	181	142	110	94
30~34세	257	164	52	39	50	64	83	75	83	87
35~39세	196	74	8	6	7	15	10	13	13	14
40~44세	80	29	1	3	1	1	4	3	2	4
45~49세	14	3	-	-	-	-	-	-	-	-
합계출산율	6.0	3.4	2.1	1.6	1.6	1.75	1.71	1.43	1.17	1.09

- 자료: 1)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가족계획연구원, 『1974년 한국 출산력조사』, 1977.
 2) 문현상 외, 『1985년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3) 문현상 외, 『198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9.
 4) 공세권 외, 『한국에서의 가족형성과 출산행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5) 홍문식 외, 『1994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6) 조남훈 외, 『1997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7) 김승권 외,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8) 김승권 외,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9) 김승권 외,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출산율의 3대 연령층 비중은 연령별 출산율의 합계 대비 3대 연령층 출산율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떤 연령층이 합계출산율의 구성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구성비가 시계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 지에 따라 각 연령층의 출산율에 기여하는 수준이 연도별로 어떤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기초한 출산율의 3대 연령층 비중은 젊은 출산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15~24세는 1960년대 26.7%로 컸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에는 9.1%의 가장 작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에 주출산연령층인 25~34세의 비중은 연도에 따라 다소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여 2005년에는 82.7%로 매우 컸다. 고령출산으로 간주되는 35~49세의 비중은 1960년대는 24.2%로 컸으나 급속히 감소하여 1980년대는 2%대에 머물렀고, 1990년대에 진입해서는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는 8.2%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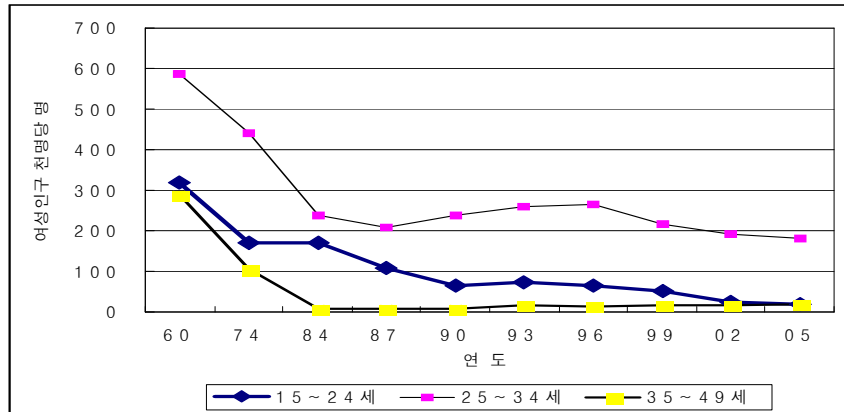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고령출산 비중의 변화양상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1960~'70년대의 높은 고령출산율은 다출산(多出産)의 영향에 의한 것이고, 큰 폭으로 낮아졌던 고령출산이 1990년대에 다시 출현하게 된 것은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과 건강증진 및 영양개선에 따라 늦둥이 출산의 위험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표 4-3〉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기초한 출산율의 3대 연령층 비중
(단위: 명/여자 1,000명당, %)

연령	1960	1974	1984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15~24세	320 (26.7)	170 (23.7)	169 (40.5)	107 (33.1)	65 (20.9)	74 (21.2)	65 (18.9)	52 (18.3)	25 (10.7)	20 (9.1)
25~34세 (주출산연령)	587 (49.1)	440 (61.5)	239 (57.3)	207 (64.1)	238 (76.5)	259 (74.2)	264 (77.0)	217 (76.1)	193 (82.8)	181 (82.7)
35~49세 (고령출산연령)	290 (24.2)	106 (14.8)	9 (2.2)	9 (2.8)	8 (2.6)	16 (4.6)	14 (4.1)	16 (5.6)	15 (6.5)	18 (8.2)
연령별출산율의 합(%)	1,197 (100.0)	716 (100.0)	417 (100.0)	323 (100.0)	311 (100.0)	349 (100.0)	343 (100.0)	285 (100.0)	233 (100.0)	219 (100.0)

자료: <표 4-1>과 동일

[그림 4-1]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기초한 출산율의 3대 연령층 비중 변화추이



통계청에서는 매년 「인구동태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이에 기초하여 출산율을 산출한다. 따라서 전술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고령출산 실태와 「인구동태통계」 자료의 고령출산 실태를 비교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고령출산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4> 「인구동태통계」에 기초한 연령별 출산율의 변화 (단위: 명/여자 1,000명당)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5~19세	19.3	12.4	4.2	2.5	2.2	2.6	2.5	2.3	2.1
20~24세	193.1	135.9	83.2	39.0	31.6	26.6	23.7	20.4	17.9
25~29세	320.6	242.7	169.4	150.6	130.1	111.3	112.3	104.6	92.3
30~34세	205.7	114.0	50.5	84.2	78.3	75.0	79.9	84.2	82.4
35~39세	105.9	40.2	9.6	17.4	17.2	16.7	17.3	18.6	19.0
40~44세	46.0	15.1	1.5	2.6	2.5	2.4	2.5	2.5	2.5
45~49세	13.1	5.6	0.2	0.2	0.2	0.2	0.2	0.2	0.2
합계출산율	4.53	2.83	1.74	1.47	1.30	1.17	1.19	1.16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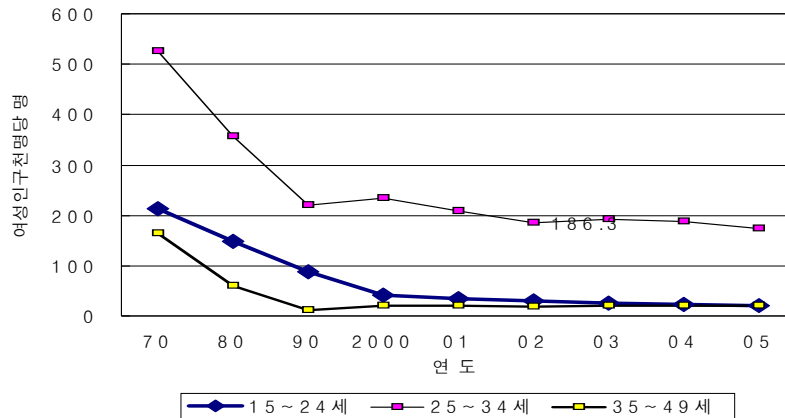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인구동태통계」 자료에 근거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35~39세의 출산율은

2002년에 16.7명으로 가장 낮았으나 2005년에는 19.0명으로 증가하였고, 40~44세의 출산율은 1990년 1.5명에 불과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약 2.4~2.6명 수준으로 미미하나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45~49세 연령층은 1990년 0.2명으로 낮은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라 낮아진 3개 연령층의 출산율이 1990년대 들어서는 고령출산의 추가 저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령출산은 미미하지만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합계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진 최근에도 이와 같은 고령출산은 명맥을 유지함으로써 합계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하겠다.

[그림 4-2] 「인구동태통계」에 기초한 출산율의 3대 연령층 비중 변화추이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기초한 출산율의 3대 연령층의 비중은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 자료에 기초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더군다나 35~49세의 고령연령층의 비중은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의 분석결과보다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0년대에 진입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 비중을 보였던 35~49세 연령층이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10.0%로 높아졌다.

더군다나 전술한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분석에서 나타난 것과는 달리, 「인구동태통계」 자료의 은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즉, 2005년에는 35~49세 고령출산연령층의 출산율 비중(10.0%)이 젊은 출산연령층인 15~24세의 출산율 비중(9.3%)을 역전하였음은 고령출산의 위력을 짐작케 한다.

〈표 4-5〉 「인구동태통계」에 기초한 출산율의 3대 연령층 비중

(단위: 명, %)

연령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5~24세	212.4 (23.5)	148.3 (26.2)	87.4 (27.4)	41.5 (14.0)	33.8 (12.9)	29.2 (12.4)	26.2 (11.0)	22.7 (9.8)	20.0 (9.3)
25~34세 (주출산연령)	526.3 (58.2)	356.7 (63.0)	219.9 (69.0)	234.8 (79.2)	208.4 (79.5)	186.3 (79.4)	192.2 (80.6)	188.8 (81.1)	174.7 (80.7)
35~49세 (고령출산연령)	165.0 (18.3)	60.9 (10.8)	11.3 (3.6)	20.2 (6.8)	19.9 (7.6)	19.3 (8.2)	20.0 (8.4)	21.3 (9.1)	21.7 (10.0)
연령별출산율의 합(%)	903.7 (100.0)	565.9 (100.0)	318.6 (100.0)	296.5 (100.0)	262.1 (100.0)	234.8 (100.0)	238.4 (100.0)	232.8 (100.0)	216.4 (100.0)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연도.

2. 유배우출산율에 기초한 고령출산 실태

한 사회의 출산행태 및 그 수준의 변화는 전술한 합계출산율과 후술하는 출생아수 및 현존자녀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기혼부인(never-married women)의 연령별 유배우출산율(Age-specific Marital Fertility Rate, ASMR)에 의해서도 파악될 수 있다. 유배우출산율은 결혼을 한 경험이 있는 여성, 즉, 유배우부인, 사별, 이혼 및 별거 부인의 출산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실제 가정을 이루었거나 또는 현재 이루고 있는 여성의 출산행태를 알아 볼 수 있는 지표라 하겠다(김승권 외, 2004). 이는 모(母)의 연령별로 세분한 출생아를 해당 연령별 전체 여자인구 중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여자인구로 나눈 지표이다.

특히 한국사회는 서구 국가에 비하여 결혼율이 높기 때문에 배우출산율에 의한 출산수준 측정의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본 분석에서는 기혼부인 중 결혼상태가 이혼 및 별거 또는 사별인 경우는 제외하고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주10)

유배우출산율의 전반적 변화를 살펴보면, 저연령층일수록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낮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연령별 출산율이 25~34세 연령층이 높고 그 외의 연령층은 현저히 낮은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고령출산으로 간주되는 3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현저히 저하하여 35~39세 연령층에서는 1,000명당 17명, 40~44세 연령층에서는 4명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는 초혼연령이 상승됨에 따라 결혼 후 즉시 자녀를 출산하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연령별 출산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고령출산이 미미하지만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유배우출산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즉, 35~39세의 1,000명당 출산이 1996년 11명으로 최저를 보였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17명에 이르렀고, 40~44세의 1,000명당 출산이 1993년 1명에서 2005년에는 4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4-6〉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의 변동추이: 1960~2005

(단위: 명/유배우부인 1,000명당)

연령	1960 ¹⁾	1970 ¹⁾	1980 ¹⁾	1990 ²⁾	1993 ³⁾	1996 ⁴⁾	1999 ⁵⁾	2002 ⁶⁾	2005 ⁷⁾
20~24세	447	450	458	306	320	377	386	313	202
25~29세	351	356	292	234	237	264	224	250	231
30~34세	298	223	103	53	65	88	86	106	108
35~39세	232	122	28	7	15	11	14	16	17
40~44세	117	53	7	1	1	4	4	2	4
45~49세	22	8	1	-	-	-	-	-	-

자료: 〈표 4-1〉과 동일

주10) 기존의 출산력관련 조사 및 분석이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로 유배우부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3. 고령출산여성의 출생아수

한 사회의 출산수준은 합계출산율과 연령별 출산율 외에도 한 부인이 출산한 총 출생아수(children ever-born)에 의해서도 간접적인 측정이 가능하다. ‘출생아’란 부인이 낳은 모든 아이를 말한다. 즉, 아이가 성장과정에서 사망하였든, 입양시켰든, 혼외 출산이든, 혼인중의 출산이든, 재혼부인인 경우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도 그 아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기서의 출생아에 포함된다. 물론 쌍태아 또는 삼태아인 경우도 2명 또는 3명의 출생아로 계산된다(김승권 외, 2003).

연도별 총 출생아수는 연령별 출산율뿐만 아니라 가임여성 수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출산수준과 가임여성 변화에 따라 출생아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가임여성수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면 출생아는 감소되고, 반대로 출산율이 낮아지더라도 가임여성수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출생아는 증가하게 된다. 또한 출산율이 높아지고 가임여성수가 동시에 증가하면 출생아는 큰 폭으로 늘어나고, 반대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가임여성도 줄어들면 출생아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표 4-7>은 한국사회의 출생아수의 변동추이를 나타낸다. 총 출생아수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2005년까지 이어져 왔다. 그런데 34세 이하 연령층의 출생아수는 전체 출생아수와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나, 이와는 달리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생아수는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하고는 200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즉, 35세 이상 여성이 출산한 자녀는 2000년 4만 2천 6백명에서 2002년 3만 9천 8백명까지 낮아졌다가 200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4만 6천 7백명이나 되었다. 특히, 35~39세 연령층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40~44세 연령층과 45세 이상 연령층은 각각 약 5천명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과 약 4백명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정체를 보이고 있었다.

결국 전체 출생아 중 모(母)의 연령이 35세 이상인 비율이 낮은 수준이지만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고령출산의 비중이 미

미하지만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표 4-7〉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수: 1995~2005

(단위: 천명)

연도	계	34세 이하	35세 이상				미상
			소계	35~39세	40~44세	45세 이상	
1995	717.0	681.7	34.0	30.3	3.3	0.3	1.3
2000	636.8	592.1	42.6	37.2	5.1	0.3	2.1
2001	557.2	513.7	41.2	35.7	5.2	0.3	2.3
2002	494.6	454.2	39.8	34.3	5.2	0.4	0.6
2003	493.5	450.7	41.8	36.0	5.3	0.4	1.0
2004	476.1	429.6	45.6	39.8	5.4	0.4	0.9
2005	438.1	390.4	46.7	41.0	5.2	0.4	1.0

자료: 통계청, 「출생사망통계」, 각 연도.

제 4 절 출산가정 및 출산당사자의 특성과 출산연령

본 절에서 논의하고 있는 출산가정 및 출산당사자의 특성과 출산연령은 2003년과 2006년에 실시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이다. 이들 두 실태조사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이 논의된다. 이들 조사는 본원의 연구진이 설계한 조사표를 기초로 사전 훈련된 전문조사원이 조사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직접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2003년 실태조사의 표본추출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에서 본 조사의 조사구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조사구(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관광호텔)를 제외한 일반조사구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였고, 조사는 16,00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조사완료된 15~59세 기혼가구는 11,111가구이었다. 2003년 조사에서의 출생에 관한 사항은 2001년 1월 이후 출생아의 출생 연월일, 성, 출생시 모(母)의 연령, 생존여부 및 사망일시, 출생아 및 모의 현 동거여부 및 비동거 이유, 생존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실태조사의 표본추출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자료에서 본

조사의 조사구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조사구(기숙사, 사회복지시설, 관광호텔)를 제외한 일반조사구 자료를 모집단으로 하였고, 조사는 16,380가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조사완료된 15~59세 기혼가구는 10,132가구이었다. 2006년 조사에서의 출생에 관한 사항은 2004년 1월 이후 출생아의 출생 연월일, 성, 출생시 모(母)의 연령, 생존여부 및 사망일시, 출생아 및 모의 현 동거여부 및 비동거 이유, 생존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출산가정의 특성과 출산연령

고령출산은 2003년 조사에서는 9.3%이었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다소 감소한 9.1%로 나타났다(표 4-8 참조).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2003년 조사에서는 읍·면부지역(11.7%)이 동부지역(8.9%)보다 고령출산이 많았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반대로 동부지역(9.2%)이 읍·면부지역(8.5%)보다 고령출산이 많았다. 따라서 동부지역의 고령출산은 0.3%포인트 증가하였으나, 읍·면부지역의 고령출산은 3.2%포인트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구소득과 현존자녀수에 따른 고령출산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2003년 조사에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고령출산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초 저소득층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소득층이 많아 소득의 양 극단에서 고령출산이 많았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2003년과 2006년의 양 조사에서 현존자녀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서 고령출산이 많았다. 그렇지만 2006년에는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집중되는 경향이 다소 완화되고(33.1%에서 25.0%로 감소), 1~2명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고령출산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11.4%에서 14.6%로 증가).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지역 거주여성이 교육수준, 사회활동참여, 그리고 자아충족에 대한 욕구 등이 높아 결혼연령을 지연시키고 있고, 늦은 결혼은 출산연령의 상승과 고령출산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서도 고령출산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8〉 가구특성에 따른 고령출산 양상

(단위: %, 명)

특성	2003년 조사에서의 출산연령			2006년 조사에서의 출산연령		
	15~34세	35세 이상	계(수)	15~34세	35세 이상	계(수)
지역						
동부	91.1	8.9	100.0(989)	90.8	9.2	100.0(880)
읍·면부	88.3	11.7	100.0(180)	91.5	8.5	100.0(164)
가구소득						
99만원 이하	88.6	11.4	100.0(35)	81.0	19.0	100.0(21)
100~199만원	89.8	10.2	100.0(322)	90.7	9.3	100.0(215)
200~299만원	93.0	7.0	100.0(440)	93.0	7.0	100.0(372)
300~399만원	88.6	11.4	100.0(185)	92.7	7.3	100.0(206)
400~499만원	96.5	3.5	100.0(85)	87.4	12.6	100.0(111)
500만원 이상	82.7	17.3	100.0(75)	88.0	12.0	100.0(108)
가구유형						
1세대	87.5	12.5	100.0(16)	100.0	-	100.0(12)
2세대	89.6	10.4	100.0(963)	90.7	9.3	100.0(899)
3세대	96.2	3.8	100.0(185)	91.0	9.0	100.0(134)
현존자녀수						
0명	100.0	-	100.0(1)	100.0	-	100.0(2)
1명	94.3	5.7	100.0(436)	95.2	4.8	100.0(458)
2명	94.3	5.7	100.0(564)	90.2	9.8	100.0(459)
3명 이상	66.9	33.1	100.0(145)	75.0	25.0	100.0(108)
전체	90.7	9.3	100.0(1,169)	90.9	9.1	100.0(1,04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2003 및 2006).

2. 출산당사자의 특성과 출산연령

2003년과 2006년 조사결과에서 파악된 교육수준, 취업여부, 결혼연령별 고령출산 비율을 살펴보면 <표 4-9>와 같이 제시된다. 고령출산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2003년 조사(22.2%)에 서보다 2006년 조사(33.3%)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또한 대학 이상의 고학력층 여성들의 고령출산도 2003년(6.6%)보다 2006년(8.3%)에 미미하나마 증가하였다.

출산여성의 취업여부에 따른 고령출산 비율은 2003년 조사에서는 비취업여성(9.3%)이 높았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취업여성(12.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결혼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의 고령출산 비율은 30세 미만의 경우보

다 현저히 높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2006년 조사에서는 다소 완화되었다. 즉, 2003년 조사의 경우, 30세 미만에서 결혼한 여성의 6.1%가 고령출산인 반면 30세 이상에서 결혼한 여성의 43.5%가 고령출산이었다. 2006년 조사의 경우, 30세 미만에서 결혼한 여성의 5.2%가 고령출산인 반면 30세 이상에서 결혼한 여성의 32.5%가 고령출산으로 다소 낮았다. 이는 30세 이상에서 결혼한 여성의 경우 첫 출산을 신속히 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4-9〉 출산당사자의 특성과 출산연령

(단위: %, 명)

특성	2003년 조사에서의 출산연령			2006년 조사에서의 출산연령		
	15~34세	35세 이상	계(수)	15~34세	35세 이상	계(수)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7.8	22.2	100.0(72)	66.7	33.3	100.0(18)
고등학교	90.7	9.3	100.0(569)	90.7	9.3	100.0(442)
대학 이상	93.4	6.6	100.0(497)	91.7	8.3	100.0(567)
취업여부						
취업중	92.2	7.8	100.0(293)	87.2	12.8	100.0(374)
비취업	90.7	9.3	100.0(845)	92.2	7.8	100.0(753)
결혼연령						
29세 이하	93.9	6.1	100.0(1,057)	94.8	5.2	100.0(889)
30세 이상	56.5	43.5	100.0(92)	67.5	32.5	100.0(151)
전체	90.9	9.1	100.0(1,149)	90.9	9.1	100.0(1,04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2003 및 2006).

3. 자녀 가치관과 출산연령

2003년과 2006년 조사결과에서 파악된 출산여성의 자녀가치관에 따른 고령출산 비율을 제시한다. 본 고에서 자녀 가치관은 남아선호 가치관과 자녀양육 책임 가치관을 활용한다. 특히, 남아선호 가치관은 ‘아들의 필요성’으로 측정된 자료를 이용한다.

이들 두 조사에서 고령출산은 아들의 필요성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응답한 계층이 가장 높았다. 두 번째는 2003년 조사에서는 고령출산 비율이 아들이 ‘있는 것이 나음’이라고 응답한 계층이 11.2%이었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고령

출산 비율이 아들이 ‘없어도 상관없음’이라고 응답한 계층이 11.0%로 가장 높았다. 따라서 남아선호 여부와 고령출산과는 관련성이 없음을 엿볼 수 있다(표 4-10 참조).

〈표 4-10〉 남아선호가치관과 출산연령

(단위: %, 명)

아들의 필요성	2003년 조사에서의 출산연령			2006년 조사에서의 출산연령		
	15~34세	35세 이상	계(수)	15~34세	35세 이상	계(수)
꼭 있어야 함	90.2	9.8	100.0(163)	92.8	7.2	100.0(111)
있는 것이 나음	88.8	11.2	100.0(498)	92.6	7.4	100.0(421)
없어도 상관 없음	93.1	6.9	100.0(481)	89.0	11.0	100.0(502)
모르겠음	83.3	16.7	100.0(6)	75.0	25.0	100.0(4)
전체	90.8	9.2	100.0(1,148)	90.8	9.2	100.0(1,0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2003 및 2006).

2003년과 2006년 조사결과에서 파악된 자녀양육책임 가치관에 따른 고령출산 비율을 제시한다. 자녀양육의 책임한계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타, 그리고 생각해 보지 않음 또는 모르겠음도 포함하였다.

2003년 조사에서는 자녀양육의 책임한계가 ‘혼인할 때까지’라고 책임성을 높이 느끼고 있는 계층의 고령출산 비율이 12.2%로 가장 높았다. 이와는 달리 2006년 조사에서는 ‘혼인할 때까지’라고 책임성을 높이 느끼고 있는 계층의 고령출산 비율은 6.1%로 절반 수준 낮아진 반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라고 비교적 책임성을 낮게 느끼고 있는 계층의 고령출산 비율이 12.8%로 가장 높았다(표 4-11 참조).

〈표 4-11〉 자녀양육책임 가치관과 출산연령

(단위: %, 명)

자녀양육 책임의 한계	2003년 조사에서의 출산연령			2006년 조사에서의 출산연령		
	15~34세	35세 이상	계(수)	15~34세	35세 이상	계(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94.1	5.9	100.0(119)	96.5	3.5	100.0(144)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91.0	9.0	100.0(490)	87.2	12.8	100.0(500)
취업할 때까지	90.7	9.0	100.0(107)	90.1	9.9	100.0(91)
혼인할 때까지	87.8	12.2	100.0(296)	93.9	6.1	100.0(229)
언제까지라도	92.2	7.8	100.0(90)	95.5	4.5	100.0(67)
기타	93.8	6.3	100.0(16)	100.0	-	100.0(1)
생각해보지않음 모르겠음	100.0	-	100.0(24)	100.0	-	100.0(6)
전체	90.8	9.2	100.0(1,142)	90.8	9.2	100.0(1,038)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2003 및 2006).

3. 양성평등과 출산연령

2003년과 2006년 조사결과에서 파악된 출산가정의 양성평등에 따른 고령출산 비율을 제시한다. 본고에서 양성평등은 가구의 가사분담 형태와 현존자녀수 및 자녀 성에 따른 출산 여부를 활용한다.

먼저 가사분담 형태에 따른 고령출산 비율을 살펴본다. 2003년 조사에서는 고령출산 비율은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음’의 분담형태를 가진 가정이 10.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의 분담형태를 가진 가정이 9.9%로 높았다. 이는 전통적 역할분리를 하거나 부인이 양육과 가사를 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고령출산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2006년 조사에서는 고령출산 비율은 ‘남편이나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의 분담형태를 가진 가정이 1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의 분담형태를 가진 가정이 13.6%로 높았다. 이들 두 분담형

태 뒤를 이어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의 분담형태를 가진 가정이 12.3%,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의 분담형태를 가진 가정이 11.1% 등으로 나타났다(표 4-12 참조).

따라서 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가사분담 형태가 비교적 양성평등적인 가정에서 고령출산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몫으로 인식하던 양육 및 가사에의 남성이 어느 정도 동참하느냐에 따라 추가자녀의 출산이 상당히 좌우됨을 엿볼 수 있다.

〈표 4-12〉 가구의 가사분담과 출산연령

(단위: %, 명)

가사분담 형태	2003년 조사에서의 출산연령			2006년 조사에서의 출산연령		
	15~ 34세	35세 이상	계(수)	15~ 34세	35세 이상	계(수)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부인은 양육과 가사를 맡음	90.0	10.0	100.0(670)	94.2	5.8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92.9	7.1	100.0(211)	88.9	11.1	100.0(171)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100.0	-	100.0(2)	100.0	-	100.0(2)
남편과 부인이 모두 밖에서 돈을 벌며,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95.7	4.3	100.0(46)	86.4	13.6	100.0(89)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부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90.1	9.9	100.0(162)	87.7	12.3	100.0(310)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100.0	-	100.0(1)	100.0	-	100.0(2)
누가 돈을 버는 것은 상관없이 남편과 부인이 반씩 양육과 가사를 맡음	92.9	7.1	100.0(28)	95.5	4.5	100.0(44)
남편이나 부인 중 집에 있는 사람이 주로 양육과 가사를 맡음	100.0	-	100.0(12)	85.7	14.3	100.0(7)
전체	91.0	9.0	100.0(1,132)	90.9	9.1	100.0(1,026)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2003 및 2006).

이어서 현존자녀수와 이들 자녀의 성 구성에 따른 고령출산 비율을 살펴본다. 2003년 조사와 2006년 조사에서 모두 고령출산 후 두 자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 자녀 때 고령출산이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딸을 가진 경우가 아들을 가진 경우보다 고령출산이 많이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이러한 양상은 2003년 조사에서보다 2006년 조사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표 4-13 참조).

그런데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아선호가치관이 고령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현존자녀수의 성(性)에 따라 고령출산율이 달리 나타나는 것은 '가치관'이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즉, 실제 출산이라는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사자의 가치관도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어쩌면 이 보다 강하게) 집안 어른이나 주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자녀가 한명도 없는 경우에 고령출산이 2003년 조사와 2006년 조사에서 약 5~6%가 있었음은 첫 출산의 늦음으로 인한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된다.

<표 4-13> 현존자녀수 및 자녀 성에 따른 출산연령

(단위: %, 명)

현존자녀수 및 자녀 성	2003년 조사에서의 출산연령			2006년 조사에서의 출산연령		
	15~34세	35세 이상	계(수)	15~34세	35세 이상	계(수)
한자녀 : 아들	94.2	5.8	100.0(226)	95.0	5.0	100.0(242)
딸	94.3	5.7	100.0(210)	95.4	4.6	100.0(216)
두자녀: 2남	94.9	5.1	100.0(118)	91.6	8.4	100.0(119)
1남 1녀	95.0	5.0	100.0(319)	90.8	9.2	100.0(240)
2녀	92.2	7.8	100.0(128)	87.0	13.0	100.0(1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전·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2003 및 2006).

35세 이상에서 출산을 한 고령출산 여성의 추가자녀 계획을 살펴보았다. '추가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한 여성은 2003년 조사에서 81.0%, 2006년 조사에서 86.0%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추가자녀를 낳거나 생각중이다’라고 응답한 비율도 2003년 조사에서 19.0%, 2006년 조사에서 14.0%나 있었음은 모자보건 측면에서 심각하게 관리하여야 할 대상이 다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표 4-14 참조).

〈표 4-14〉 고령출산여성의 추가자녀계획

(단위: %, 명)

	추가자녀 계획			계(수)
	낳겠다	낳지 않겠다	생각중이다	
2003년 조사에서의 고령출산여성	12.4	81.0	6.6	100.0(105)
2006년 조사에서의 고령출산여성	10.8	86.0	3.2	100.0(9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 재분석(2003 및 2006).

제 5 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1. 분석결과 요약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기초한 분석에 의하면, 전체 출산율 중 35세 이상 고령출산율은 1960년대는 24.2%로 컸으나 급속히 감소하여 1980년대는 2%대에 머물렀고, 1990년대에 진입해서는 점차 증가하여 2005년에는 8.2%였다. 그렇지만 그 의미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1960~1970년대의 높은 고령출산은 다출산(多出産)의 영향에 의한 것이고, 1990년대에 다시 고령출산이 미미하나마 출현하게 된 것은 초혼연령의 지속적 상승과 건강 증진 및 영양개선에 따라 늦둥이 출산의 위험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인구동태통계」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통계청 자료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35~49세의 고령연령층의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는 10.0%로 높아졌다. 더군다나 이는 젊은 출산연령층인 15~24세의 출산율 비중(9.3%)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고령출산이 점차 위력을 얻고 있다고 보겠다.

연령별 출산율에서 살펴본 일반출산율에서 차지하는 고령출산 비중이 유배우

출산율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이용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35~39세의 1,000명당 출산이 1996년 11명으로 최저를 보였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17명에 이르렀고, 40~44세의 1,000명당 출산이 1993년 1명에서 2005년에는 4명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연령별 출산율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 고령출산이 미미하지만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유배우출산율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35세 이상 여성의 실제 출생아수에서 잘 보여준다. 통계청의 「출생사망통계」에 의하면, 35~39세 연령층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고령출산에 의한 출생아는 2000년 4만 2천 6백명에서 2002년 3만 9천 8백명까지 낮아졌다가 2003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4만 6천 7백명이나 되었다.

고령출산 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조사에서는 읍·면부지역(11.7%)이 동부지역(8.9%)보다 고령출산이 많았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반대로 동부지역(9.2%)이 읍·면부지역(8.5%)보다 고령출산이 많았다. 2003년 조사에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고령출산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초 저소득층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소득층이 많았다. 2003년과 2006년의 양 조사에서 현존자녀수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에서 고령출산이 많았다. 고령출산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고령출산 비율은 2003년 조사에서는 비취업여성(9.3%)이 높았으나, 2006년 조사에서는 취업여성(12.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의 고령출산 비율은 30세 미만의 경우보다 현저히 높았다.

고령출산 비율이 2003년 조사에서는 전통적 역할분리를 하거나 부인이 양육과 가사를 하는 가정이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높았으나, 반대로 2006년 조사에서는 양성 평등적 측면의 가사분담 형태를 가진 가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자녀양육과 가사를 맡을 경우에 고령출산이 나타나는 것은 부인의 출산결정에 남편의 역할이 매우 큼을 시사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도시지역 거주여성이 교육수준, 사회활동참여, 그리고 자아충족에 대한 욕구 등이 높아 결혼연령을 지연시키고 있고, 늦은 결혼은 출산연령의 상

승과 고령출산의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른 한편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서도 고령출산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2. 정책적 함의

전문가들은 모성건강, 아동건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한 연령에서 첫출산과 마지막 출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초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은 고령출산이 증가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하는 연령에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혼을 앞둔 미혼남녀의 직장안정, 결혼과정에서의 사회적 지원 강화가 절실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감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제공, 가정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릴 수 있는 경제적 기반 조성, 결혼비용과 주거마련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이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고령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30대 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산전·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고령출산 여성이 추가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약 10%를 상회하고, 생각 중인 경우도 다소 있음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자보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자질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편이 자녀양육 및 가사에 적극적인 경우 고령출산이 나타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면, 출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이 양성 평등적 가족문화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가치관의 확산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다만 조기(早期)에 출산하도록 홍보계몽을 병행한다면 바람직할 것이다.

제 5 장 한국의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의 변화

제 1 절 개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은 인구학적 접근방식과 페미니즘 접근방식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인구학적 접근방식에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은 출산력을 하강시키기 위한 주된 도구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는 반면, 페미니즘 접근방식에서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여성의 자율성 혹은 권리라는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왔다(Hodgson & Watkins, 1997). 출산력의 하강을 목표로 하는 시기에서 두 접근방식은 서로 상호 간의 목표는 상부상조한다. 즉, 인구학 접근방식에서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통하여 출산력 하강에 커다란 일조를 하게 할 수 있고, 페미니즘 접근방식에서는 인구 억제라는 인구학의 거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과 통제 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출산수준이 초저출산수준으로 하강되어 출산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오늘날에서는 두 접근방식은 서로 간의 목표가 상충될 수 있다. 이를테면, 출산장려정책은 페미니스트에게 여성의 몸에 대한 여성의 통제권을 국가가 빼앗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배은경, 2004; 손숙영 2005), 인구학자는 출산장려를 위해 여성의 출산 통제권에 대한 상실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성학자들은 주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출산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통해 출산을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출산의 통제권이 거의 전적으로 여성에게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이 가족제도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출산 통제권을 여성뿐 아니라 남성 배우자 및 그의 가족들도 상당 부분 행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Balk 19997; Guiley & Jayne 1997; Mason & Smith 2000; Omondi-Odhiambo 1997). 우리나라

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이혼이 급증하는 등 가족관계가 급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피임과 인공임신중절과 같은 출산 통제권에 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남성 배우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피임과 인공임신중절과 같은 출산 통제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출산순위에 의해서도 변할 수 있다(이성용 2004). 게다가 첫째 아 혹은 둘째 아의 출산 시점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Gustasson, S. 2001). 따라서 우리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 등의 출산통제권 분석을 출산시기 뿐 아니라 출산순위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1997년, 2000년 그리고 2003년 출산력 자료를 이용하여 출산 순위와 출산시기에 따라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한다.

제 2 절 기존연구 검토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이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통해 출산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는 출산 변천이론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출산율 하강은 경제적으로 그다지 발전되지 않았지만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보급시키는 가족계획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던 시기인 1960년대에 시작하였다(Kwon, 1993).

가족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자 30대 이후 연령별 출산율이 급감하였다. 인공임신중절과 피임은 이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기혼여성 중 피임사용자 비율은 1961년과 1976년 사이에 9%에서 44%로 증가하였다(Donaldson, Nichols & Choe, 1982). 그 후 피임실천율은 계속 1982년 57.7%, 1988년 77.1%, 1994년 80.5%로 증가하였고, 그 후 약 80% 수준에 머물다가 갑자기 출산율이 초저출산수준에 진입한 2003년에 84.5%로 급증하였다.

인공임신중절은 전쟁 중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의 임신들로 인해 1950년대

초반에 급증되었지만, 출산제한을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195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960년대 한 인공임신중절 설문조사에 의하면, 1963년에 원하지 않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기 위해 두 명 당 한명 꼴로 인공임신중절을 하였다(Kwon, 1993). 1974년 출산력 조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1000명 출생아 대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1960~1964년 77에서 1965~1969년 175, 1970~1974년 277로 급증하였다(Donaldson, Nichols and Choe, 1982). 이러한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그 후에도 계속 증가하였지만, 1990년을 절정으로 하여 감소하기 시작한다.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1976년 39%에서 1985년 53%로 증가하였다. 그 후 1994년까지 약 50% 수준에 머물다가 1997년 44%로 떨어진 뒤, 2000년 39%, 2003년 40%를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1990년까지 인공임신중절이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이 막강했음을 시사한다. 한 연구(Park, 1988)는 만일 1984년까지 인공임신중절이 한국에서 유용하지 않았다면, 합계출산율은 1976년 3.2에서 4.4, 1978년 2.7에서 4.0으로, 1984년 2.1에서 2.7로 증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의 추정에 의하면, 1963년에는 총 출생아의 5.7%인 72,000명, 1975년 약 32%인 279,000명, 1978년에는 37.5%인 328,000명, 1984년에는 40.7%인 275,000명이 인공임신중절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 추정치는 미혼자의 인공임신중절과 1985년 이후의 높은 피임실천율을 고려한다면, 두 명의 임신 중 한 명은 인공임신중절로 사산되고 있다는 것이다(Cho 1990).

연령별로 살펴보면, 1975년 조사에서는 30대의 인공임신중절률이 1000명 당 약 150을 넘는 높은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였다. 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미 원하는 수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유배우 부인들이 원하지 않는 임신의 출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던 30대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그 후 계속 감소하였다. 20~2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1975년 63이었던 것이 1990년 186까지 증가하였다가 1999년 53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2002년 다시 74로 증가하였다. 25~29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1975년 86이었던 것이 1984년 146까지 증가하였다가 1987년 103으로 감소한 뒤 1990년 112로 증가하였다가 다시 그 후 계속 감소하여 1999년에는 약 33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던 것이 20대 전반 인공임신중절률과 마찬가지로 2002년에

다시 38로 약간 증가하였다. 20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이 최근 증가하였다는 사실은 최근 결혼한 여성이 부부만의 생활을 좀 더 연장하기 위해 첫 아이의 출산을 연기하는 추세를 반영할 수 있다.

또한 2003년 출산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김승권 외 2003)에 의하면, 피임실천율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15~24세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천율은 1976년(15.4%)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1988년 44.4%로 증가하였다. 그 후 40~45% 수준에 머물다가 2003년 56.8%로 급증하였다. 25~29세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천율도 1976년 31.9%에서 1988년 65.4%까지 증가한 뒤 1991~'97년 자료에서 약 60% 수준, 그리고 2000년 자료에서 57.0%로 하강했지만 2003년 자료에서 갑자기 64.8%로 급증하였다. 인공임신중절과 마찬가지로 일찍 혼인한 여성이 출산을 연기하려는 경향을 반영한다. 그러나 30대 이후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천율은 그다지 변화가 없었다. 29세 이하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천율의 갑작스런 증가는 2001년 이후의 초저출산율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의 실천율은 연령과 시기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이는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의 실천율이 여성의 출생코호트 및 혼인연령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그러한 차이도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를테면, 1997년 출산력조사 분석 결과는 임신 당시의 연령과 인공유산 관계 분석에서 24세 이하의 부인 집단이 25~29세 부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30세 이상 부인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은기수, 2001), 2000년 자료분석에서는 임신 당시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공임신중절을 수용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은기수·권태환, 2002).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의 실천율은 또한 여성의 교육수준 및 취업상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먼저 교육수준과 유배우 여성의 피임실천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1976년에는 학력이 높은 여성이 낮은 여성보다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으나, 1988년 이후부터는 역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중졸이하)이 높은 수준보다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인다. 특히 1994년과 1997년에는 대학이상의 여성과 고졸 여성이 비슷한 수준의 피임실천율을 보였지만, 2000년과 2003년 조사에서는 대학이상의 여성이 고졸 여성보다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인다.

이에 대해 김승권 외(2003)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보다는 최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연령에 의한 영향으로도 볼 수 있다. 즉, 15~44세 유배우 부인의 교육수준별 평균연령을 보면 초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인의 평균 연령은 40.8세, 중학교 학력의 부인은 39.6세, 고등학교는 35.4세, 대학교 출신의 부인은 34.6세로 나타나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피임실천의 초기단계에서는 고학력층을 중심으로 피임실천이 이루어졌으나, 피임이 보편화되고 여성의 학력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출산시기가 늦어지면서 원하는 자녀수를 가진 후 피임을 수용하는 경향이 정착됨에 따라 고학력층 여성의 피임실천율이 낮아진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연령이 피임과 교육수준 간의 관계를 역으로 만든 왜곡변수(distorter variable)로 작용할 수 있지만, 출산시기 역시 그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이는 출생코호트와 혼인연령이 통제된 상태에서 교육수준과 피임간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대구지역과 미국 베이지역의 한국 기혼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부인의 교육수준은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한곤, 1997). 하지만 서구에서는 비교적 사회경제적 여유가 있는 대학이상의 여성이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보다 낮은 피임실천율 즉, 더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추세가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연구가 있다(McLanahan, 2004).

여성의 취업은 출산 및 피임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결과에 의하면, 취업부인의 경우 피임실천율은 87.7%로 비취업 부인의 81.1%보다 6.2%가 높았다. 일반적으로 취업부인은 짧은 시기 안에 출산행위를 종료하는 데 반해 비취업부인은 터울을 두고 출산을 조절하고 있고, 또 취업부인이 비취업보다 보다 작은 수의 자녀를 출산한다(김승권 외, 2003).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은 남녀평등 의식을 촉진시키고 기존의 전통적 규범을 거부하게 하고(Balk, 1997), 또 가족 내에서의 자율성 및 의사결정권을 증진 시킴으로서 출산 및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친다(Cleland, Kamal, & Sloggett, 1996). 그러나 여성의 교육수준과 취업이 가족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

하는 정도는 사회에 따라 다르다. 이를테면 가부장적 문화가 지배적인 공동체, 이를테면 무슬림 사회에서 여성의 자율성은 출산행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Morgan et al., 2002). 남성이 여성보다 강력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에서는, 남성의 교육수준과 취업이 출산, 피임, 인공임신중절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Moursund & Kravdal, 2003). 또 일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부인이 피임사용 시 남편의 동의 및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Omondi-Odhiambo, 1997), 가부장적 제도가 강한 사회일수록 피임의 사용을 통한 가족계획의 성공은 여성보다 남성에 더 많이 의존할 필요성이 있다(Bankloe & Sing, 1983; Beckman, 198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전통적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가부장제인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못지않게 남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도 여성의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 가부장적 제도가 근대화 혹은 가족계획도입 이래 서서히 약화되어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급증된 가족해체 비율은 가정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더욱 더 불명료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테면 여성은 남성을 일차 가족 생계 책임자로 간주하는 전통적 가부장제를 더욱 더 불신임하게 되고, 또 여성도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질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들이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은 또한 남아선호나 이상자녀의 수와 같은 가치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피임은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인공임신중절은 원치 않는 자녀의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갖은 후에는 피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원하지 않는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에는 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은기수 2001).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남아선호 국가에서는, 딸만 있는 여성은 아들이 있는 여성 보다 아들을 낳기 위해 피임을 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Arnold, 1985), 또 인공임신중절은 강한 남아선호(또는 성감별 인공임신중절)와 결합하여 비이상적으로 높은 출생 성비를 발생시킬 수 있다(이삼식, 1998; Park & Cho, 1995). 하지만, 자녀의 성구조(혹은 남아선호)는 현존 자녀의 수에 의해 제한을 받을 수 있다(이성용, 2003).

자녀를 원하는 정도나 남아선호는 살아가면서 즉, 출산순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남아선호, 자녀의 필요성¹¹⁾이 피임실천율과 인공임신중절률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순위 그리고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게다가, 부인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피임실천율과 인공임신중절률에 미치는 정도도 출산순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우선적으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부인과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남편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로, 기존의 연구들은 현존아이의 수와 피임 혹은 인공임신중절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나머지, 부인과 남편의 인구사회경제학적 특성과 가치관들이 출산순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여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출산 순위별로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출산순위에 따라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부인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변화할 수 있음을 분석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은 한 시점의 출산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임과 출산력에 미치는 요인들이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하여, 1997년, 2000년 그리고 2003년 자료를 분석하여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요인들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11) 이를테면 자녀가 없는 여성의 피임실천율은 계속 급증하였다. 2003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은 38.7%로 2000년에 비해 무려 9.4%가 증가하였음.

제 3 절 분석자료의 구성 및 변수

1. 분석자료의 구성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1997년, 2000년, 2003년도 출산력 자료이다. 이 세 자료들은 출산순위별, 즉, 결혼에서 첫째 아 출산(출산순위 0)과 첫째 아에서 둘째 아 출산(출산순위 1) 시기별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구성되었다. 1997년 자료는 1994년 이후에 결혼한 사람의 첫 출산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한 뒤, 1994년 이후에 첫 출산을 한 여성의 둘째 아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였다. 2000년 자료는 1997년 이후에 결혼한 사람의 첫 출산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한 뒤, 1997년 이후에 첫 출산을 한 여성의 둘째 아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였다. 하지만 2003년 자료는 분석될 사례의 수가 적은 관계로 3년 이 아닌 4년의 기간을 두었다.

그 결과 2003년 자료는 1999년 이후에 결혼한 사람의 첫 출산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한 뒤, 1999년 이후에 첫 출산을 한 여성의 둘째 아에 대한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자료구성의 결과는 2000년도와 2003년도에서의 전반적인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의 증가율을 보여주는데 있어 한계를 보여주지만, 보다 많은 사례들의 수를 분석에 포함시킴으로써 로지스틱 다변량 분석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렇게 재구성된 자료들에서의 종속변수들과 독립변수들에 대한 빈도들은 <표 5-1>과 <표 5-2>에 제시된다.

〈표 5-1〉 결혼에서 첫 아이까지 피임·인공임신중절 모형의 빈도분석

구분		1997	2000	2003
총수		806	845	822
피임		82	138	158
인공임신중절		53	69	55
부인의 교육수준	대졸(준거집단)	183	225	240
	전문대졸	91	149	167
	고졸이하	532	471	405
부인의 현재 취업	비취업	566	586	505
	취업	240	259	307
남편의 교육수준	대졸	299	399	305
	전문대이하	79	107	141
	고졸이하	428	339	366
남편의 현재 취업	비취업	36	34	34
	취업	770	811	778
부인의 출생코호트	1965년생 이전	55		
	1966~'70년생 (1970년생 까지)	395	211	119
	1971~'75년생	356	525	438
	1976년생 이후		109	255
부인의 혼인연령	24세 이하	371	284	234
	25~29세(25세 이상)	392	489	450
	30세 이상	43	72	128
남편의 출생코호트	1965년생 이전	238	93	65
	1966~'70년생	450	419	259
	1971~'75년생(이후)	118	333	488
남편의 혼인연령	24세 이하	111	85	57
	25~29세	503	507	427
	30세 이상	192	253	328
아들 필요성	있는 편이 낫다	410	430	397
	없어도 상관없다	396	412	415
결혼 필요성	결혼하는 편이 좋다		415	454
	경우에 따라서 혹은 필요 없다		430	358
이혼 필요성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306	332
	경우에 따라서 해도 된다		539	480
자녀 필요성	자녀는 있는 것이 낫다		743	692
	없어도 무방		102	120

〈표 5-2〉 첫 아이에서 둘째 아이까지 피임·인공임신중절 모형의 빈도분석

구분		1997	2000	2003
	총수	579	572	860
	피임	271	341	417
인공임신중절		141	149	224
부인의 교육수준	대졸(준거집단)	139	149	234
	전문대졸	54	93	171
	고졸 이하	386	330	455
부인의 현재 취업	비취업	455	470	607
	취업	124	102	23
남편의 교육수준	대졸	305	225	311
	전문대 이하	59	69	145
	고졸 이하	215	278	404
남편의 현재 취업	비취업	23	15	30
	취업	556	557	830
부인의 출생코호트	1965년생 이전	69		
	1966~'70년생 (1970년생 까지)	316	200	114
	1971~'75년생	194	318	359
	1976년생 이후		54	387
부인의 혼인연령	24세 이하	277	209	284
	25~29세(25세 이상)	275	318	479
	30세 이상	27	45	97
남편의 출생코호트	1965년생 이전	234	90	114
	1966~'70년생	293	313	359
	1971~'75년생(이후)	52	169	387
남편의 혼인연령	24세 이하	79	59	77
	25~29세	368	345	498
	30세 이상	132	168	285
아들 필요성	있는 편이 낫다	307	308	463
	없어도 상관없다	272	264	397
결혼 필요성	결혼하는 편이 좋다	-	267	435
	경우에 따라서 혹은 필요 없다	-	305	425
이혼 필요성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	203	346
	경우에 따라서 해도 된다	-	369	514
자녀 필요성	자녀는 있는 것이 낫다	-	517	767
	없어도 무방	-	55	93

2. 분석 변수들

이 연구에서 분석된 종속변수는 네 개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속변수는 결혼 후 첫 아이의 출산을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한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여부이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종속변수는 첫 출산 후 두 번째 아이의 출산을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한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여부이다.

가. 종속변수

먼저 이 연구는 두 개의 피임 변수를 분석하였다. 하나는 혼인 후 첫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사용하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첫 아이 출산 후 둘째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사용하는지 여부이다. <표 5-1>에서 보듯이, 결혼에서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갖지 않기 위해 피임하는 확률이 증가하였다. 1997년에는 단지 10%에 불과했으나, 2000년 16.3%, 2003년 19.2%로 증가하였다. 또한 둘째 아이를 연기하거나 가지 않기 위해 피임하는 확률이 1997년 46.8%에서 2000년 59.6%, 2003년 48.4%^{주12)}로 증가하였다.

이어서 인공임신중절도 두 개의 변수가 분석되었다. 하나는 혼인 후 첫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낙태를 했는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첫 아이 출산 후 둘째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해 낙태를 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첫 번째 낙태 변수에서 혼인 후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낙태 경험이 있더라도 첫 출산을 하지 않기 위한 낙태로 간주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은 낙태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두 번째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이 여성은 두 번째 아이를 막기 위한 낙태를 했다고 간주할 수 없으므로 낙태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회고자료(retrospective data)의 한계점을 나타낸다.

주1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자료는 1997년과 2000년 자료와 달리 3년이 아니라 4년 이란 유예기간을 둔 결과 사례수가 증가하였다. 만일 이러한 방식으로 자료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2003년도의 피임실천율과 인공임신중절률은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을 것임.

나. 독립변수

설명될 독립변수로는 부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조사 당시 취업여부, 출생코호트, 혼인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 아들필요, 결혼필요, 이혼반대, 자녀필요 등과 같은 가치관련 변수들이 포함되었다.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고, 각 출산 순위에서의 변수들에 대한 빈도들은 <표 5-1>과 <표 5-2>에 나타나 있다.

부인 교육수준 변수는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을 말하며, 세 범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는 고등학교 졸업 이하, 두 번째 범주에는 전문대 졸업이하, 세 번째 범주에는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을 지닌 기혼여성들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낮은 피임실천율과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인다고 가정된다. 고졸 이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그 다음이 대졸 이상, 그리고 전문대졸 이하가 가장 낮은 백분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출산력 자료가 1997년도에서 2000년도, 그리고 2003년도로 갈수록 대졸 이상과 전문대 이하의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고졸이하의 여성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표 5-2>도 <표 5-1>과 비슷한 같은 추세를 보인다.

부인취업 변수는 응답한 기혼 여성이 조사시점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표 5-1>에서는 조사 당시 여성이 취업을 하고 있는 비율이 최근으로 다가올수록 증가되고 있다. 반면 <표 5-2>에서는 1997년에 비해 2000년도에 감소하였다가 2003년 자료에서 급증하였다. 여성 취업과 출산 간의 관계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2001년 이후의 초저출산은 이러한 여성 취업 추세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남편 교육수준 변수는 남편의 교육수준을 말하며, 부인의 교육수준과 마찬가지로 세 범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고등학교 졸업이하, 두 번째 범주에는 전문대 졸업이하, 세 번째 범주에는 4년제 대학 졸업이상인 기혼여성들이다. 부인의 교육수준과 달리, <표 5-1>에서 1997년과 2003년 자료에서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2000년 자료에서는 대졸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편이 고졸 이하의 교육

수준을 가진 남편보다 많다. 전문대 졸업 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남편은 세 자료 모두에서 중간이다. 반면 <표 5-2>에서는 1997년 자료만이 대졸 이상의 남편 비율이 고졸 이하의 남편비율보다 높을 뿐 2000년과 2003년 자료에서는 고졸이하의 남편 비율이 대졸 이상의 남편 비율보다 높다. 전문대 졸업 이하의 남편 비율은 <표 5-1>과 마찬가지로 중간이다.

남편취업 변수는 응답 여성의 남편이 조사시점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표 5-1>에서는 조사 당시 남편의 취업 비율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 <표 5-2>에서 남편의 비취업은 2000년에 감소하였다가 2003년 자료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남성의 취업은 여성의 취업과는 반대로 출산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부인 혼인연령 변수는 기혼여성이 초혼한 연령을 말하며, 세 범주(25세 미만, 25~30세, 30세 이상)로 구성된다. 세 조사자료를 통해, 최근에 올수록 24세 이하에 초혼을 한 여성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만 30세 이상에서 혼인하는 여성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 있다. 25~29세의 혼인연령에 대해서는, 2000년 이후 자료가 1997년 자료에 비해 급증한 뒤 안정세를 보인다. <표 5-2>에서도, <표 5-1>과 마찬가지로, 24세 이하에 초혼한 여성의 비율은 최근 조사 자료로 올수록 감소하고 30세 이상에 혼인하는 여성의 비율은 증가한다. 25~29세에 초혼한 여성의 비율도 2000년과 2003년 자료가 1997년 자료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부인 출생코호트 변수는 기혼여성이 태어난 코호트를 말한다. 출생 코호트에 따라 출산에 대한 생각과 행위가 다를 수 있다. 이 변수는 각 조사에서 세 범주로 구성된다. 1997년 자료는 1965년 이전 출생여성, 1966~1970년 출생여성, 1971년 이후 출생 여성의 세 범주로 이 변수가 형성된다. 2000년과 2003년 자료에서는 1970년 이전 출생여성, 1971~1975년 출생여성, 1976년 이후 출생 여성의 세 범주로 형성된다. 최근 자료로 볼수록 최근 출생 코호트의 여성 비율이 증가되는 반면, 오랜 출생 코호트의 여성 비율은 감소한다.

남편 혼인연령 변수는 응답한 여성의 남편의 초혼 연령을 말한다. 부인의 혼인연령과 마찬가지로 세 범주, 즉, 만 24세 이하, 만 25~29세, 만 30세 이상으로 구성된다. 부인의 혼인연령과 마찬가지로, 최근의 자료일수록 24세 이하에

초혼을 한 남성의 비율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만 30세 이상에서 혼인하는 남성의 비율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5~29세의 혼인연령 비율은 1997년 자료에 비해 2000년 자료가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2003년도 자료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과 마찬가지로 1990년대 후반에 남성의 혼인연령이 급증하였던 추세를 반영한다. <표 5-2>는 <표 5-1>과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첫 아이를 가진 남편의 혼인연령 비율을 살펴보면, 24세 이하에 초혼한 남성의 비율은 최근 조사 자료로 올수록 감소하고 혼인연령이 25세 이상인 남성의 증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후반 이래 증가한 남성의 혼인연령에 기인한 현상으로 추측된다.

남편 출생코호트 변수는 응답여성의 남편이 태어난 코호트를 말한다. 부인의 출생코호트와 마찬가지로, 이 변수도 세 범주, 즉, 1965년 이전 출생, 1966~1970년 출생, 1971년 이후 출생 남편의 세 범주로 구성된다. 최근 자료일수록 최근 출생 코호트의 남편 비율이 증가되는 반면, 오랜 출생 코호트의 남편 비율은 감소한다. 아들 필요성 변수는 아들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꼭 있어야 한다거나 있는 편이 없는 편보다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아들 필요성을 인정한 범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들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범주로 구성하였다.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의 비율은 <표 5-1>에서 1997년 50.9%, 2000년 50.9, 2003년 48.3%이고, <표 5-2>에서는 1997년 53.0%, 2000년 53.8%, 2003년 53.8%로 약 50%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과거보다 아들 선호 사상이 상당히 약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 필요성 변수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꼭 있어야 한다거나 있는 편이 없는 편보다 낮다고 응답한 경우는 자녀의 필요성을 인정한 범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범주로 구성하였다. 자녀가 필요 없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의 비율은 <표 5-1>에서 2000년 12.1%, 2003년 14.6%이고, <표 5-2>에서는 2000년 9.6%, 2003년 10.8%이다.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집단의 기혼 여성들이 자녀가 한명이거나 두 명인 집단의 기혼 여성들보다 자녀가 필요 없다는 비율을 약간 낮게 보였고, 2000년보다 2003년에 그 비율은 약간 증가하였다.

결혼 필요성 변수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편이 낫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한 범주로, 경우에 따라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거나 혹은 할 필요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결혼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범주로 구성하였다. 결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의 비율은 <표 5-1>에서 2000년 49.1%, 2003년 55.2%이고, <표 5-2>에서는 2000년 46.7%, 2003년 50.6%이다.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집단의 기혼 여성보다 자녀가 한명이거나 두 명인 집단의 기혼 여성이 결혼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낮았고, 또 2000년보다 2003년에 그 비율은 약간 증가하였다.

이혼 반대 변수는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한 묻는 질문에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 혹은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이혼을 반대하는 범주로, 경우에 따라서 혹은 이유가 있으면 이혼을 해도 좋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이혼을 반대하지 않는 범주로 구성하였다. 이혼을 반대한다고 응답한 기혼여성의 비율은 <표 5-1>에서 2000년 36.2%, 2003년 40.4%이고, <표 5-2>에서는 2000년 35.5%, 2003년 40.2%이다. 자녀가 없거나 한 명인 집단의 기혼 여성과 자녀가 한명이거나 두 명인 집단의 기혼 여성 사이의 이혼 반대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2000년보다 2003년에 그 반대 비율은 증가하였다.

제 4 절 분석결과

분석자료를 통해 결혼해서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한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수용 여부를 분석한다. 그런 다음 다시 위의 세 자료를 이용하여 둘째 아이를 연기하거나 갖지 않기 위한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수용 여부를 분석한다.

1. 결혼 후 첫 아이 사이의 피임사용

1997년 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취업한 여성이 비취업한 여성에 비해 첫

아이를 출산을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1971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에 비해 1966~1970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이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1970년 이후에 태어난 남편을 둔 여성들보다 그 이전에 태어난 남편을 둔 여성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2000년 자료 분석결과도, 1997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첫 아이를 출산을 연기하거나 안하기 위해 피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반면 남편의 취업은 여성의 취업과 반대로 피임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은 반면, 부인의 경우 대졸여성과 고졸이하의 여성은 차이가 없는 반면 전문대졸 여성은 대졸여성에 비해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인의 출생코호트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1971년 이후에 태어난 남편을 둔 여성들에 비해 1970년 이전에 태어난 남편을 둔 여성이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혼인연령을 살펴 볼 때, 24세 이전에 결혼한 여성이 30세 이후에 결혼한 여성에 비해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할 가능성이 낮았고, 또 남편의 혼인나이가 30세 이상인 여성에 비해 남편의 혼인나이가 25~29세인 여성이 피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았다. 또 아들 혹은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2003년 자료의 분석결과도 1997년과 2000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첫 아이를 출산을 연기하거나 안하기 위해 피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1997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부인의 교육수준,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취업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0년 자료와 다르지만, 1997년 자료와 비슷하게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에 비해 그 이전에 태어난 여성들이 첫 아이를 낳지 않거나 연기하기 위한 피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았고, 1971년 이후에 태어난 남편을 둔 여성들에 비해 1970년 이전에 태어난 남편을 둔 여성이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표 5-3〉 결혼에서 첫 아이까지에 대한 피임모형 분석 결과

	1997	2000	2003
상수	-1.647	.828	.643
부인의 교육수준			
대졸(준거집단)			
전문대졸	-.460	-.971 ***	-.254
고졸이하	-.436	.049	.354
부인의 현재 취업			
비취업			
취업	2.222 ***	2.258 ***	1.765 ***
남편의 교육수준			
대졸			
전문대이하	.758	.320	.047
고졸이하	.197	-.320	-.026
남편의 현재 취업유무			
비취업			
취업	.669	-1.171 ***	-.105
부인의 출생코호트			
1965년생 이전	-1.152		
1966~'70년생(1970년생 까지)	-1.020 **	-.635	-1.798 ***
1971~'75년생		.043	-1.279 ***
1976년생 이후			
부인의 혼인연령			
24세 이하	-.312	-.974 *	-1.076 **
25~29세	.235	.578	-.651 *
30세 이상			
남편의 출생코호트			
1965년생 이전	-2.012 ***	-.825	-1.033 ***
1966~'70년생	-1.238 ***	-.823 ***	-1.377 ***
1971~'75년생(이후)			
남편의 혼인연령			
24세 이하	-.390	.032	-.936 *
25~29세	-.141	-.899 ***	-.705 **
34세 이상			
아들필요			
필요	-.662 ***	-.852 ***	-.022
결혼 필요			
결혼하는 편이 좋다		.193	.141
이혼반대			
가급적 헤쳐는 안 된다		-.115	-.125
자녀필요			
자녀는 있는 것이 낫다		-.711 **	-1.280 ***

혼인연령을 살펴보면, 30세 이후에 혼인한 여성에 비해 20대에 혼인한 여성이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할 가능성이 낮았고, 남편의 혼인연령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혼인 나이가 30세 이상인 여성에 비해 남편의 혼인나이가 그 이전인 여성이 피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낮았다. 아들의 필요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살펴보면, 1997년 모형에서는 부인의 취업, 부인의 출생코호트, 남편의 출생코호트, 아들 필요이고, 2000년 모형은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의 취업, 남편의 취업, 부인의 혼인연령, 남편의 출생코호트, 남편의 혼인연령, 아들필요, 자녀 필요이며, 2003년 모형에서는 부인의 취업, 부인의 출생코호트, 부인의 혼인연령, 남편의 출생코호트, 남편의 혼인연령, 자녀 필요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첫 아이 출산을 막거나 연기하기 위한 부인의 피임 실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시기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자.

우선적으로 부인 취업은 외환위기에 상관없이 피임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남편 취업은 외환위기 직후 피임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여성 취업과 남성 취업은 첫 아이 출산에 정반대 방향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의 일차 생계책임자임을 중시하는 가부장적 전통 하에서, 남성의 비취업이나 취업불안은 가족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쉽고, 그러한 경향은 외환위기 직후에 강하게 인식되었다. 반면 여성 취업은 여성 자신의 삶을 가족 혹은 자녀의 삶보다 중시하게 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으로 인하여 첫 아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쉽다.

부인 교육수준은 2000년 자료분석에서만 전문대졸 여성이 대졸 여성보다 낮은 피임실천율은 유의미하게 보인 반면, 다른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남편 교육수준은 세 자료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부인의 출생코호트를 살펴보면, 2000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이전 출생코호트

의 여성들이 덜 피임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최근에 태어난 여성보다 이전에 태어난 여성들이 더 많이 첫 아이를 원하는 경향 혹은 자녀의 필요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인 출생코호트보다 남편 출생코호트가 그러한 경향을 보다 확실하게 보여준다.

혼인연령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부인과 남편의 혼인연령 모두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2000년 자료에서는 부인의 경우는 24세 이하에 결혼한 여성이 30세 이후에 결혼한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는 25~29세 사이에 결혼한 남성이 30세 이후에 결혼한 남성보다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갖지 않기 위한 피임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3년 자료에서도 남녀 모두 30세 이상에 혼인한 사람이 그 이전의 연령에서 결혼한 사람보다 피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환위기 이후 혼인연령의 증가는 특히 30대 이후에 결혼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갖지 않기 위한 피임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의 필요성은 2000년 자료까지는 첫 아이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2003년 자료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은 2000대 이후 아들의 필요성 즉, 남아선호는 더 이상 출산행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자녀의 필요성을 언급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첫 아이의 출산을 연기하거나 멈추기 위한 피임을 덜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2. 첫 아이의 인공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 모형은 피임 모형과 달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작다. <표 5-4>에 보면, 1997년 자료에서는 부인의 혼인연령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30세 이후에 혼인한 여성이 첫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그 이전에 혼인한 여성에 비해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것은 결혼을 늦게 한 여성이 일찍 한 여성보다 혼전 임신으로 인한 임신을 인공임신중절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0년 자료의 분석 결과에서는 가치관 변수인 아들 필요와 이혼반대가 유의

미한 영향을 미쳤다.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첫 아이를 임신한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들에 비해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낮았고, 또 보수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 즉, 이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요컨대 전통적 가족 가치관을 가진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첫 아이를 인공임신중절 할 가능성이 낮았다.

마지막으로 2003년 자료에서는 취업한 여성이 비취업의 여성보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초저출산수준으로 떨어진 2000년 이후 시기에 여성들은 이전 시기보다 자신의 경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그 결과 임신했을 경우 취업여성들은 자녀보다 자신의 경력을 더 우선시할 것이다. 30세 이상에 혼인한 여성이 20~29세 사이에 혼인한 여성들보다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인공임신중절 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20세 전반에 혼인한 여성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혼전 임신과 관련된 인공임신중절로 해석할 경우, 2000년 이후에는 30대 이후에 결혼한 여성이 20대 후반에 결혼한 여성들보다 첫 아이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20대 전반에 결혼한 여성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00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필요하다고 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피임과 달리, 아들 선호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공임신중절 분석과 피임분석과 마찬가지로, 혼인시기별로 첫 아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막기 위한 인공임신중절 수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시기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피임분석과 달리, 혼인 후 첫 아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막기 위한 인공임신중절은 주로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여줄 뿐,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표 5-4〉 결혼에서 첫째 아까지 임신중절 모험분석 결과

구분	1997	2000	2003
상수	.225	-1.867 *	-3.382 ***
부인의 교육수준			
대졸(준거집단)		****	***
전문대졸	.429	.334	-.152
고졸 이하	-.184	.550	.665
부인의 현재 취업			
비취업		*****	***
취업	.467	.315	1.144 ***
남편의 교육수준			
대졸		****	***
전문대 이하	-.611	.556	.238
고졸 이하	.625	-.540	.077
남편의 현재 취업유무			
비취업		****	****
취업	.956	-.737	.612
부인의 출생코호트			
1965년생 이전	-1.956		
1966~'70년생(1970년생 까지)	.076	.198	-.095
1971~'75년생		.213	-.270
1976년생 이후		*****	****
부인의 혼인연령			
24세 이하	-2.832 ***	.119	-1.154
25~29세	-2.709 ***	-.225	-1.468 ***
30세 이상		****	****
남편의 출생코호트			
1965년생 이전	-.861	.546	.229
1966~'70년생	-.156	-.515	.025
1971~'75년생(이후)		****	****
남편의 혼인연령			
24세 이하	-.088	-.700	.246
25~29세	-.007	-.236	.224
30세 이상		*****	****
아들필요			
필요	.026	-.790 ***	-.753 **
결혼 필요			
결혼하는 편이 좋다		-.212	0.15
이혼반대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523 *	0.99
자녀필요			
자녀는 있는 것이 낫다		.389	.276

3. 첫 아이 출산 후 피임사용

<표 5-5>에서 1997년 자료의 분석결과는 첫 아이 대한 피임과 마찬가지로,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둘째 아이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금하기 위해 피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둘째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부인 취업과 아들필요 변수는 출산순위 0에서와 마찬가지로 피임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출산순위 0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부인의 출생코호트와 남편 출생코호트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피임실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출산순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피임사용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들이 출산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실이 2000년 자료와 2003년 자료분석에서도 보여준다.

2000년 자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부인의 취업은 피임사용에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남편의 취업은 첫 출산과 달리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남편의 취업 여부는 저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이후의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부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대졸여성에 비해 고졸이하의 여성이 둘째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 대졸 여성과 전문대 여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 교육수준은 첫 출산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첫 출산과 마찬가지로 부인의 출생코호트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1971년 이후에 태어난 남편을 둔 여성들에 비해 1966~1970년 사이에 태어난 남편을 둔 여성이 둘째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혼인 연령을 살펴 볼 때, 여성의 혼인연령 차이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지만, 첫 출산과 반대로 남편의 혼인나이가 30세 이상인 여성에 비해 남편의 혼인나이가 25~29세인 여성이 피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녀의 필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아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둘째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표 5-5〉 첫 아이에서 둘째 아 피임 모형 분석 결과

구분	1997	2000	2003
상수	-.100	.101	1.026 **
부인의 교육수준			
대졸(준거집단)	*****	*****	*****
전문대졸	.182	-.085	-.257
고졸 이하	-.406	-.689 ***	-.600 ***
부인의 현재 취업			
비취업	*****	*****	*****
취업	.846 ***	.663 ***	1.023 ***
남편의 교육수준			
대졸	*****	*****	*****
전문대 이하	.052	-.136	.207
고졸 이하	-.155	.111	.200
남편의 현재 취업유무			
비취업		*****	*****
취업	.302	-.564	.187
부인의 출생코호트			
1965년생 이전	-.161		
1966~'70년생(1970년생 까지)	.135	.065	-.833 ***
1971~'75년생	*****	.156	-.405 *
1976년생 이후		*****	*****
부인의 혼인연령			
24세 이하	-.124	.193	-.925 ***
25~29세	-.108	.156	-.500 *
30세 이상	*****	*****	*****
남편의 출생코호트			
1965년생 이전	-.453	-.374	.119
1966~'70년생	-.238	.372 *	.231
1971~'75년생(이후)	*****	*****	*****
1976생 이후			
남편의 혼인연령			
24세 이하	.012	.574	-.065
25~29세	.304	.387 *	.089
30세 이상	****	*****	****
아들필요			
필요	-.389 **	-.413 ***	-.061
결혼 필요			
결혼하는 편이 좋다		-.169	.051
이혼반대			
가급적 해서는 안 된다		-.122	-.134
자녀필요			
자녀는 있는 것이 낫다		.189	-.457 **

2003년 자료의 분석결과도 1997년과 2000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둘째 아이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금하기 위해 피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2000년 자료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교육수준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졸여성에 비해 고졸이하의 여성이 둘째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낮았고 또 대졸 여성과 전문대 여성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생코호트를 보면, 1976년 이후에 태어난 부인이 그 이전에 태어난 부인들보다 둘째 아이를 낳지 않거나 연기하기 위해 피임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남편의 출생코호트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혼인연령을 살펴보면, 첫 아이 피임과 마찬가지로 30세 이후에 혼인한 여성에 비해 20대에 혼인한 여성이 둘째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할 가능성이 낮았다. 하지만 남편의 혼인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다. 첫 출산과 마찬가지로 아들의 필요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첫 아이를 연기하거나 낳지 않기 위해 피임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결혼에서 첫 아이 출산까지 피임사용에 대한 분석에서 보다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차이가 출산순위 1에서 피임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미약해졌다. 오직 2000년 자료분석에서만 남편의 출산력 코호트와 혼인연령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뿐, 1997년과 2003년 자료분석에서는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피임사용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가족해체가 급증했던 외환위기 직후 시기인 1998~2000년 사이가 다른 시기보다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이것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보다 남성의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어째든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변수들이 출산순위에 따라 그 영향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부인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외환위기 이전에는 대졸출신과 고졸출신 여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고졸출신 여성들이 더 낮은 피임 실천율을 보인다. 어쩌면, 대졸여성이 고졸여성보다 양육 과정에서 아이의 질을

더 중시한 결과—즉, 아이들에 들어가는 사교육비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두 명의 아이보다 한명의 아이로 단산하거나, 두 번째 아이를 연기하는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남편의 교육수준은 모든 시기에 걸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부인취업은 출산순위 0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기에 있어 피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초저출산 시기인 2000년 이후에 그러한 경향이 더 강해졌다. 남편의 취업 여부는 첫째 아 출산 피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세 자료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았다.

부인의 출생코호트는 2003년 자료에서만 오랜 출생코호트의 여성들이 최근 출생코호트 여성보다 피임을 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출산수준이 초저출산 수준으로 떨어진 시기인 2000년 이후에는 첫 아이 뿐 아니라 둘째 아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막기 위해 최근 출생코호트 여성들이 피임을 더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남편의 출생코호트는 첫 아이 출생 피임에 대한 분석과 달리 2000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혼 후 첫 아이 출산 사이에서는 오랜 출생코호트의 남성이 최근 출생코호트의 남성보다 부인의 피임 실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둘째 아 출산에서는 거의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남편의 출생코호트는 출생순위가 바뀐에 따라 그 영향력이 변화함을 보여준다.

남편의 혼인연령도 남편의 출생코호트와 마찬가지로 2000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997년 자료는 출산순위 0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2003년 자료는 출산순위 0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2000년 자료분석에서 혼인연령이 25~29세인 남편의 부인 출산순위 0과 반대로, 혼인연령이 30세 이상인 남편의 부인보다 더 피임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남편의 혼인연령이 30세 이상인 여성은 다른 여성들보다 첫 아이를 갖지 않기 위한 피임을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외환위기 직후 2000년까지 일단 첫 아이를 출산하면 남편의 연령을 감안하여 둘째 아 출산을 막거나 연기하기 위한 피임을 혼인연령이 25~29세인 남편의 부인보다 덜 사용하는 경향을 2000년 자료는 말한다. 남편의 혼인연령이 피

임실천에 미치는 영향력이 출생순위가 바뀔에 따라 방향도 반대로 바뀌었다.

아들필요성은 출산순위 0에서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까지는 부정적인 피임실천에 영향을 미쳤지만, 2000년 이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초저출산 시대에 이른 오늘날 시점에서는 아들선호가 더 이상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 남아선호가 개인적 차원에서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간주된다.

자녀의 필요성은 출산순위 0에서는 2000자료와 2003년 자료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출산순위 1에서는 초저출산력 수준으로 떨어진 2000년 이후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초저출산력 수준으로 떨어진 시점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여성만이 두 명이상의 아이를 출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결혼 필요성과 이혼반대 가치관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둘째 아이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우선적으로 각 자료별 분석결과를 살펴보자. 먼저 <표 5-6>에서 1997년 자료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출산 피임에서 유일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부인의 혼인연령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인의 출생코호트, 남편의 혼인연령 및 아들 필요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자료의 분석결과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 부인의 출생코호트, 남편의 혼인연령, 결혼의 필요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혼 후 첫 출산 시기의 인공임신중절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아들선호와 이혼반대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03년 자료분석에서는 부인 취업, 남편 교육수준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부인취업은 출산순위 0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지만, 부인의 혼인연령은 출산순위 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출산순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 출산순위 0과는 달리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도 출산순위 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출산순위 0과 마찬가지로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도 변화하였다.

이제 변수들이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영향들을 시기별로 비교해 보자. 먼저 부인 교육수준은 2000자료에서 부인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인 여성이 대졸이상인 여성들보다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경향이 높았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차이 영향을 보여주지 않는다. 반면 다른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던 남편의 교육수준이 2003년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남편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경우 인공임신중절 할 가능성이 낮았다. 초저출산 시대에 이르러 남편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대변하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두 번째 아이에 대한 부인의 인공임신중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사실은 2000년 이후 둘째 아 출산에 대한 부인의 의사결정에 남편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보다 중시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초저출산 시대에 두 명의 자녀는 남편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의미할 수 있다. 여전히 남성을 일차적 가정경제 책임자로 간주하는 우리 사회에서, 비록 여성이 첫 아이 출산은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두 번째 아이는 남성의 경제적 능력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출산할 것이다.

부인의 취업은 초저출산 이전 시대에는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이후에 이르러서는 많은 여성이 자신의 경력을 자녀의 출산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남성의 취업여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주13)}

부인의 출생코호트에서는 1997년 자료에서 1965년 이전에 태어난 여성이 1970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들에 비해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인공임신중절 할 가능성이 높았고, 또 2000년 자료의 분석에서 1976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들이 비해 그 이전에 태어난 여성들이 둘째아를 임신한 경우 인공임신중절 할 가

주13) 만일 여성이 남편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두 번째 아이의 출산을 결정한다면, 남성의 취업유무보다 남성의 취업 유형과 안정성이 인공임신중절(혹은 둘째 아 출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2003년 자료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유의미한 출생코호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남편의 출생코호트는 세 자료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는다.

혼인연령을 살펴보면, 출산순위 0과 달리 부인의 혼인연령은 출산순위 1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여주지 않는다. 한편 남편의 혼인연령은 1997년 자료에서는 남편의 혼인연령이 30세 이후인 여성에 비해 남편의 혼인연령이 25~29세 사이인 여성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낮았고, 또 2000년 자료에서는 남편의 혼인연령이 24세 이하인 여성이 30세 이상인 여성보다 둘째 아를 임신한 경우 인공임신중절을 수용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하지만 2003년 자료의 분석결과에서는 남편의 혼인연령은 이러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아들의 필요성은 1997년 자료를 제외하고는 둘째 아 출산을 막기 위한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 결과는 오직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지 않았던 1997년 자료의 분석결과가 보여주었던 출산순위 0과는 정반대의 결과이다. 첫 아이와 달리 둘째 아의 출산의 경우 아들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성이 성감별을 통해 출산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2000년도와 2003년도 자료의 분석 결과는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에 이르러서는 딸만 있는 경우 아들을 갖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행위가 거의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자료 분석결과는 결혼의 필요성을 응답한 여성이 둘째 아이를 임신한 경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여성들에 비해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즉, 긍정적인 결혼관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인공임신중절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표 5-6〉 첫째 아에서 둘째 아까지 인공임신중절 모형 분석 결과

	1997	2000	2003
상수	-2.802 ***	-2.727 ***	-1.072 **
부인의 교육수준			
대졸(준거집단)	*****	*****	*****
전문대졸	.198	.530 *	.374
고졸 이하	.234	-.075	.583
부인의 현재 취업			
비취업	*****	*****	*****
취업	.304	-.344	.514 ***
남편의 교육수준			
대졸	*****	*****	*****
전문대 이하	.031	-.445	.518 **
고졸 이하	.117	.337	.561 **
남편의 현재 취업유무			
비취업	*****	*****	*****
취업	-.290	-.061	-.473
부인의 출생코호트			
1965년생 이전	.896 *		
1966~'70년생(1970년생 까지)	.055	1.529 ***	-.134
1971~'75년생 이후	*****	.887 **	-.221
1976년생 이후		*****	*****
부인의 혼인연령			
24세 이하	.696	.110	-.321
25~29세	.586	-.125	-.230
30세 이상	*****	*****	*****
남편의 출생코호트			
1965년생 이전	.279	.387	.234
1966~'70년생	.060	.158	.049
1971~'75년생(이후)		*****	*****
남편의 혼인연령			
24세 이하	.533	1.628 ***	.586
25~29세	.627 **	.275	.377
30~34세	*****	*****	*****
아들필요			
필요	.451 **	-.278	-.049
결혼 필요			
결혼하는 편이 좋다		-.364 *	-.012
이혼반대			
가급적 헤쳐는 안 된다		-.210	.374
자녀필요			
자녀는 있는 것이 낫다		.220	.027

제 5 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이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를 목적으로 하였다. 첫째,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연구와 달리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도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둘째,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가치관 변수들이 출산순위 별로 변화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셋째, 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과 가치관 변수들의 영향력은 시기에 따라, 특히 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부터 초저출산율 수준 직전까지의 시점 그리고 초저출산 시점의 시기에 따라 변화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예상한 바와 같이,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수용의 결정은 부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뿐 아니라 남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변화하였다. 또 그 요인들의 영향력은 출산순위뿐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도 변화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중요한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취업은 피임분석에서 모든 시기에 출산순위 0과 출산순위 1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인공임신중절 분석에서는 출산력이 초저출산수준으로 떨어진 시기를 분석한 2003년 자료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여성취업자에게 우호적인 저출산 정책이 북서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출산력 향상에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남편의 비취업은 외환위기 직후 혼인에서 첫째 아 출산에서 피임의 사용을 증가시켰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 남편의 취업여부는 첫 아이 출산 유무와 직결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결혼에서 첫째 아 출산까지의 피임분석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직후 전문대졸 여성이 대졸여성보다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였다. 첫째 아에서 둘째 아 출산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고졸여성이 대졸보다 낮은 피임실천율을 보인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교육수준보다 낮은 여성보다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인다는 일반적인 주장은 피임실천율이 낮고 여성의 교육수준도 낮은 사회에서 검증되기 쉽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이미 피임실천율이 보편적인 사회에서는 피임지식

보다는 개개인이 인식하는 피임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의해 결정되기 쉽다. 즉, 외환위기 이전에는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피임사용의 필요성이 부인의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그 필요성이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났고, 또 그 차이는 출산순위와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분석에서는 2000년 자료의 첫째 아에서 둘째 아 사이의 인공임신중절 분석 결과를 제외하고는 교육수준과 인공임신중절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셋째, 남편의 교육수준은 출산력이 초저출산수준으로 떨어진 2000년 이후의 첫째 아에서 둘째 아 사이의 인공임신중절 분석에서만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혼인후 보다 의무적이라 할 수 있는 첫 아이를 출산한 뒤, 첫 아이보다는 선택적이라 할 수 있는 두 번째 아이에 대한 인공임신중절 결정은 두 번째 아이를 가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 결정 과정에서 여성은 필히 둘째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 두 아이의 경제적 지원을 책임져야 할 남편의 능력을 고려하기 쉽다. 그러한 남편의 경제적 능력은 일반적으로 남편의 교육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외환위기 이후 남녀 젊은이들의 고용불안은 증가되었지만, 일반적으로 대졸 출신의 고용자보다 그 이하의 학력수준 젊은이들이 고용불안을 더 겪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여성은 대개 자신의 교육수준과 동등하거나 약간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편의 교육수준이 전문대나 고졸인 경우, 여성의 교육수준은 그 이하가 되기 쉽다. 이것은 교육수준이 낮은 부부는 모두 높은 부부보다 고용불안을 더 느끼기 쉽고, 그러한 불안감은 둘째 아를 임신했을 경우에 인공임신중절로 유도하게 할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 직후 첫 아이 출산을 연기하거나 막기 위한 피임실천과 마찬가지로 젊은 남성의 사회경제적 능력이 저출산 시점에서의 출산에 직결됨을 보여준다.

넷째, 부인의 출생코호트와 남편의 출생코호트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사회의 급격한 사회변동을 반영하듯이, 남녀 모두가 5년이란 짧은 출산 간격에도 출산에 대해 서로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 세대 차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격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짧은 간격에서 나타난다. 2003년 자료에서의 피임에 대한 부인 출생코호트 분석 결과를 보면 1976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은 그 이전에 태어난 여성들보다 첫 아이와 둘째 아이를 안 갖거나 연기하기 위해 피임을 사용하는 경향이 더 많다. 또한 1997년 자료의 혼인 후 첫 아이 사이의 피임분석에서 1971년 이후에 태어난 여성은 1966년과 1970년 사이에 태어난 여성들보다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였지만, 1965년 이전에 태어난 여성들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 후 첫 번째 아이 사이의 인공임신중절에서는 부인의 출생코호트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전과 외환위기 직후에는 오랜 출생코호트 여성들이 최근 출생코호트 여성들보다 둘째 아를 갖지 않거나 연기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경향이 높았다.

남편 출생코호트를 살펴보면, 결혼 후 첫째 아 출산 사이의 피임실천율은 오랜 출생코호트의 남편을 가진 여성들이 최근 출생코호트의 남편을 가진 여성들보다 피임을 실천할 가능성이 낮았지만, 첫째 아 출산에서 둘째 아 출산까지 사이의 피임실천에서는 2000년 자료에서만 1966년에서 1970년 사이에 출생한 남편을 둔 여성이 1971년 이후에 태어난 남편을 둔 여성보다 높은 피임실천율을 보인다. 인공임신중절 분석에서는 혼인 후 첫째 아 출산과 첫째 아 이후의 모든 분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섯째, 혼인후 첫 번째 출산 사이의 피임 분석에서 혼인연령은 외환위기 이전에 유의미한 차이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만혼의 여성이 일찍 결혼한 여성보다 더 피임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늦게 결혼하는 여성들의 무자녀 선호관이 급증하였음을 나타낸다. 또한 첫 아이와 둘째 아 출산에 대한 분석도 초저출산 시대에서 30세 이후에 결혼한 여성들이 두 번째 자녀에 대한 회피현상을 보여준다. 인공임신중절 분석에서는 혼인 후 첫째 아 출산 사이에서 늦게 결혼한 여성이 일찍 결혼한 여성들보다 높은 인공임신중절 비율을 보여주었지만, 첫 번째 아이 출산 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여섯째, 아들의 필요성은 결혼 후 첫 아이 출산 사이 그리고 첫째 아에서 둘

째 아 사이의 피임사용에 대해 초저출산이 시작되기 이전인 2000년까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2000년 이후 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2003년 자료분석에서 아들의 필요성은 첫째 아와 둘째 아 출산을 방지하거나 연기하기 위한 피임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자녀의 필요성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우리는 초저출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아들 선호가 더 이상 첫째 아와 둘째 아의 출산을 방지하는 피임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 분석에서는 외환위기 이후에 아들의 필요성이 혼인 후에서 첫 아이 출산 사이에서의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아들의 필요성은 첫 출산에서 둘째 아 사이의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은 반대로 외환위기 이전이다. 즉, 외환위기 이전에는 아들의 필요성은 첫 아이의 출산 이전의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둘째 아 출산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아들의 필요성이 첫 임신의 인공임신중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둘째 아의 인공임신중절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아들의 필요성이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을 유도했던 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단지 첫 아이 출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필요성과 이혼 반대와 같은 전통적 가족 가치관은 피임사용에는 모든 출산 순위와 시기에 걸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인공임신중절 분석에서는 2000년 자료에서 이혼반대가 혼인 후 첫째 아 출산 사이의 인공임신중절에, 결혼의 필요성은 첫째 아에서 둘째 아 사이의 인공임신중절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제 6 장 최근 일본의 피임실천과 인공임신중절 추이

제 1 절 문제제기

1. 현대 일본의 초저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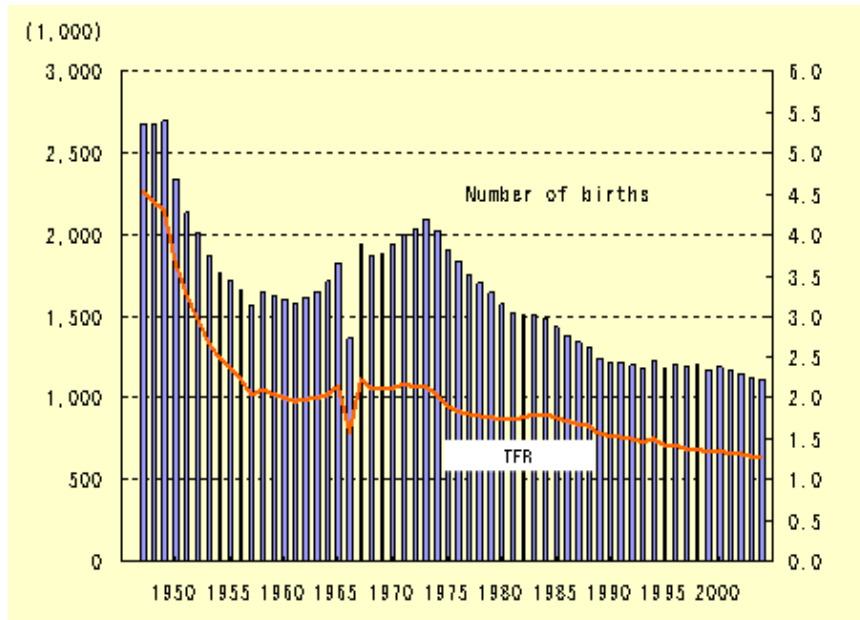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3년 가장 낮은 1.29로까지 낮아졌고, 이에 따라서 1980년대 말부터 저출산율에 관해 많은 우려가 일게 되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 중에서 여성들의 지속적인 업무와 분만과 유아보육 사이의 갈등은 과도한 기회비용으로 인하여, 가장 두드러진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정부도 이의 해소를 위해서 여러 정책적 방안들을 입안하여 왔다. (요양 시설 확충, 아동보육 휴가제 도입, 자녀를 키우면서 일하는 부모들을 돕기 위한 취업체계 및 기타 방안의 개선 등.) 그러나 출산율은 이러한 정책적 방안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즉, 노동경제이론에 주로 근거한 일본의 초저출산율에 대한 설명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대안 이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고에서는 현재 일본의 초저출산율에 있어서 성분능과, 생물-의학적이고 행태학적인 측면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주14)}

주요 문제들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인들의 생식행위

주14) 현대 일본의 초저출산율과 관련하여 극히 소수의 연구자들만이 성의식과 생물-의학적인 관점에서 주목하여 왔음. 이들 중, Atoh(1998)는 “미성숙 연애 문화” 혹은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파트너를 찾는데 활발하지 않은 경향을 일본의 초저출산율의 원인들 중 하나로 보았음. 그는 또한, 산업화된 국가들 간의 비교를 통하여, 여성들이 출산권을 가진 국가들에서 출산율이 높음을 지적하였음. 여성들이 자신의 신체, 성분능, 그리고 출산통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원치 않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를 찾고, 성관계를 맺고, 결혼하고 출산하는 데 있어서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Atoh 2000). 이는 바로 출산건강과 출산권 개념에 근거한 교육과 건강정책이 필요함을 반영함.

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다. [그림 6-1]에 보인 대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사이에 대체수준(2.1명)에 머물렀던 합계출산율은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2003년에는 최저기록인 1.29로 떨어져서 일본은 “최저출산율” 국가 집단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림 6-1] 출산 수와 합계출산율: 1947~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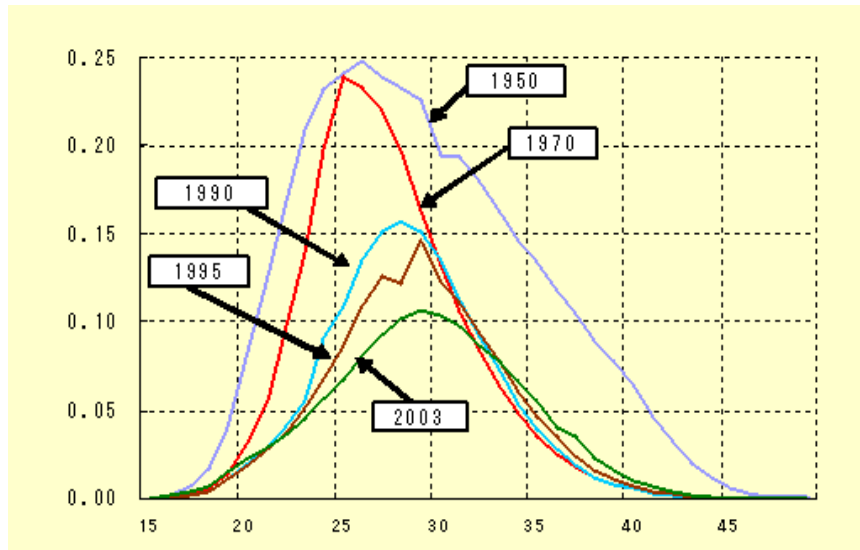
자료: Vital Statistics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그림 6-2]에서는 1950년에서 2003년 사이에 여성들의 연령대별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연령별 최대 출산율은 0.25에서 0.10으로 현저하게 낮아졌고, 최대출산 연령은 26세에서 29세로 증가했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에 있어서 약간의 증가가 있었지만 전체 출산율 감소를 상쇄하기에는 너무 낮다. 1955년부터 2003년 사이에 첫 아이 출산 평균연령은 25.1세에서 28.3세로 늘어났고, 둘째 아이를 갖는 연령도 27.6세에서 30.6세로 증가하였다(그림 6-3 참조). 이는 만혼이

만산의 원인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일본 여성들의 첫출산 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하여 결혼 후 생리적으로 임신출산이 가능한 시기가 단축된다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하는 수대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부부의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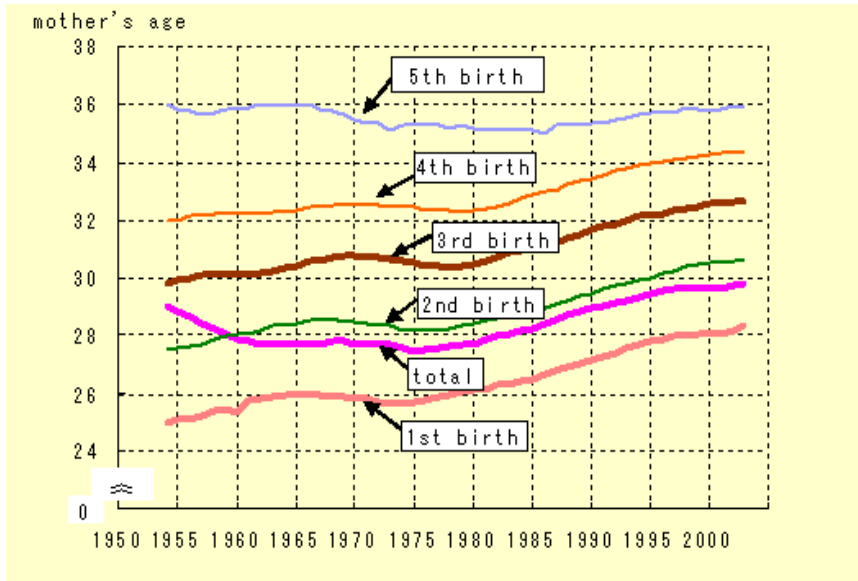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의 전이과정에는 2단계가 있다. 그 첫 단계에서는 1947년 4.54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이 1956년 2.22명으로 감소하여 순수출산율이 최초로 1명 이하로 떨어졌다. 1970년대 이후의 제2단계 출산율 감소는 대체수준에서 그 이하로 떨어진 시기이다. 이 제2단계가 바로 본 논문의 주된 연구주제이다.

[그림 6-2] 연령별 출산율: 1950~2003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2005), Calculated from Vital Statistics.

[그림 6-3] 자녀 순위별 임신연령: 1954~2003



자료: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2005): Calculated from Vital Statistics.

2. 연구설계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거의 연구된 바 없는 성의식과 생물-의학-인구통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일본의 초저출산율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연구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산업국가들에 비해서 피임약 사용이 상당히 덜 보급되었고, 또 인공유산이 장기간에 걸쳐서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출산율이 그토록 저조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일본에서는 생식능력(인구가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감소하였는가?

일본에서의 이토록 독특한 성분능 상황을 유도하는 특정 문화적 특징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두 단계로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성의식 및 생식률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요인의 변화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 요소들에는 생식능력지수(생리의학적 요인들), 성행위와 파트너십 행위, 그리고 생식률 통제 행위(피임약과 인공임신중절)등이 포함된다. 인간 생식과정의 마지막 지점인 출산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통계자료를 얻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연구순서를 뒤집어 본 고에서는 각각의 절에서 다양한 요인들의 변화를 연구한다. 즉, 생식 통제 행위, 성행위와 파트너십 행위, 생식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분능과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실제 출산율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인공임신중절에 관점을 맞추어서 논의한다.

둘째, 본 논문에서는 일본에서의 성행위 상황과 생식상황에 있어서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논의한다. 가족제도와 성제도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이 두 단계 연구의 틀에는 모든 인간의 성행위 및 생식과정,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인 특징들이 포함된다. 이 시점에서 상당한 공통점을 보이는 일본과 한국의 비교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분석자료

연구용 자료는 성행위 및 생식과정에 관한 최신 정부통계와 국가 설문자료에서 수집하였다. 다음은 본 논문의 기초자료로 사용한 통계와 설문지 목록이다.

가. 인구규모와 성-연령 구조에 관한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청에서는 정부가 5년마다 인구통계조사를 실시한다. 가장 최신 정보는 2000년 10월 1일 수집된 2000년 통계자료이다. 매년 10월 1일자로 인구통계를 내기 위해서 총무성에서 매년 인구연감을 출간한다.

나. 결혼과 출산에 관한 자료

일본 내에서의 모든 출생, 사망, 사산, 결혼, 그리고 이혼은 지방자치체 단위로 등록되어 후생노동성에 최종적으로 보고된다. 후생노동성은 일본 주요 통계(Vital Statistics of Japan)라는 제목으로 매년 이 통계자료들을 출간한다.

다. 인공임신중절 자료

모체보호법(전, 우생보호법)에 따르면 여성은 신체적,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 문제가 있거나 강간을 당한 경우에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입증하기 위한 아무런 증거도 요구되지 않는 까닭에 일본 내에서 인공임신중절은 희망하는 경우 시술된다. 단지 임신 후 22주(즉, 만 21주) 내에 산부인과 전공의들만이 시술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을 시술하는 모든 의사들은 시술사실을 지역 보건소를 통해서 후생노동성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후생노동성에서는 숫자를 집계하고 매년 보고한다.

이 통계의 명칭은 1996년에 Eugenic 보호통계로부터 모체보호통계로 바뀌었고 2002년도에 국민건강행정보고서(the Report o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 and Services)에 포함되었다. 보고 체계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지만 2002년 이후 회계연도 기간 동안 시술된 인공임신중절 통계와 비율을 보고한다. 이에 따라서 2002년도 통계와 비율은 2002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며, 이후 그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회계연도 기준 빈도와 비율을 일반 역달력 기준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라. 피임 관련 자료

1) 일본 국가출산율 통계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일본 국가 출산율 통계(JNFS)는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원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 출산율 건본통계이다(최근의 제13차 통계조사는 예정되었던

2007년도보다 2년 앞선 2005년 6월 시행되었다). 매 번, 18~49세 사이의 10,000명의 독신자들과 15~49세 사이의 9,000명의 기혼여성들이 통계조사에 참여한다. 제13차 JNFS 통계조사에서는 일본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견본으로 임의 선정된 7,976명의 기혼여성들과 12,482명의 독신남성과 여성들이 참여하였다(이들 중 기혼여성의 85.7%와 독신남성과 여성의 70.0%가 타당한 반응을 보임).

기혼부부들 사이의 피임방법의 사용은 제7, 9, 11, 13차 JNFS(1977년, 1987년, 1997년, 2005년)에서 조사되었다. JNFS에서는 보통 기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피임방법 사용여부를 측정해왔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독신여성의 성행위와 피임행위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97년도 JNFS에서는 가장 최근의 성행위에서 독신여성들의 성경험과 피임방법 사용 여부에 관한 실험 설문지를 도입하였다.^{주15)} 그리고 2005년도 JNFS에서는 이 설문방식을 따랐다.

가) 가족계획에 관한 국가 통계조사

가족계획에 관한 국가통계조사(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NSFP)는 가족계획에 대한 KAP(knowledge, attitude, practice)에 관한 대표적인 국가 통계조사로서 매일신문에서 격년제로 시행해왔다. 이 통계조사의 역사는 50년이 넘는데 1950년 시작되어 2000년도에 25회 통계조사가 시행되었다. 매번 50세 이하의 4,000명의 기혼여성들이 응답해왔는데, 최근 통계조사에서는 같은 연령대 미혼여성들도 응답자로 참여하였다. 제25차 NSFP에는 일본 전역에서 임의로 선정된 4,000명의 여성이 참여하였다(이중 66.2%가 타당한 응답을 하였다). 이 가족계획 설문조사는 2000년 조사를 마지막으로 하여 중단되었고, 2004년 4월에는 인구, 가족, 세대 설문조사(SPPG)라는 새로운 설문조사가 도입되었다. SPPG는 일본 전역에서 임의로 선정된 4,000명의 여성들이 참여한다(이중

주15) 결과를 이용하여 Sato와 Iwasawa(2006)은 독신여성들 사이에서의 피임방법 보급 상황을 추정하였음. 그리고 이 두 가지 비율(기혼과 독신)을 합쳐서, 출산연령대 일본 여성들에 있어서 피임방법의 보급에 대하여 추정치를 제시하였음. 이 추정치는 국제적인 비교자료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됨.

60.5%가 타당한 응답을 하였다). SPFG에는 기혼여성들 사이에서의 피임방법 사용에 관한 유사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2004년도까지의 추세를 따를 수 있게 되어 있다.

마. 성행위에 관한 자료

1) 청소년의 성적 태도와 행위에 대한 설문조사

일본 성교육협회(The Japanese Association for Sex Education (JASE))에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성적 태도와 행위에 관한 국가적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왔다. 지금까지 6년 간격으로(1974년, 1981년, 1987년, 1993년, 1999년, 2005년) 6차의 설문조사가 시행되어 왔다. 2005년도 설문조사에는 11,147명의 학생들이 응답하였다.

2) 남성과 여성의 삶과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성행위에 관한 이 국가설문조사는 후생노동성의 후원을 받는다. 첫 번째 조사(2002년도 시행)에서는 16~49세 사이의 3,000명의 남성과 여성이 참여하였고, 이중 52.4%가 타당한 응답을 하였으며, 제2차 조사(2004년 시행)에서는 16~49세 사이의 3,000명의 남성과 여성이 참여하여 이중 52.7%가 타당한 응답을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을 시행하기보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포괄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상기한 자료들에 관하여 기출간된 종합자료들에 대한 인구통계학적인 분석을 위주로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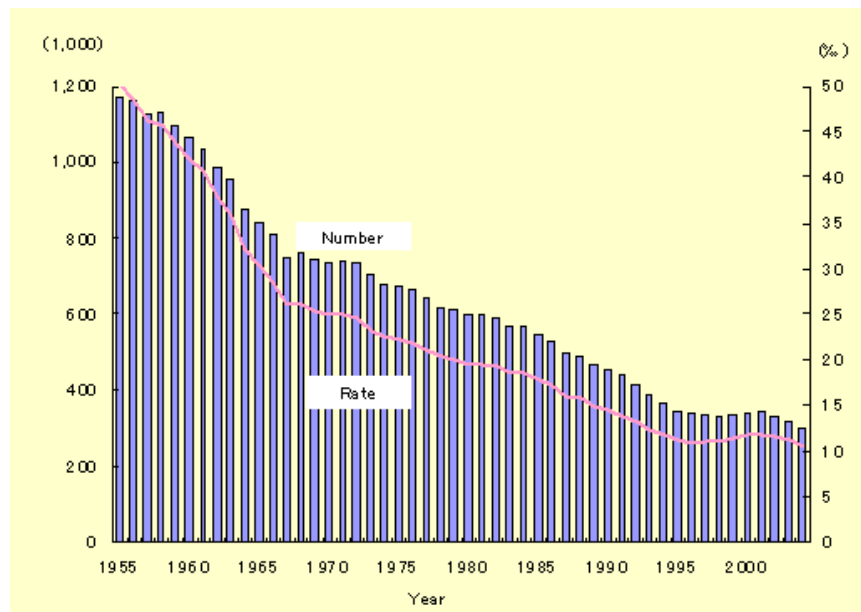
제 2 절 출산통제 행위의 변화

1. 인공임신중절

가. 배경

일본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이 1948년에 합법화되었고 1955년에는 그 보고된 연간 시행숫자가 기록적인 1,170,000건을 넘어설 정도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 이후로는 2004년도에는 숫자가 302,000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5~49세 연령대의 1,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률은 1955년의 50.2에서 2004년의 10.6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그림 6-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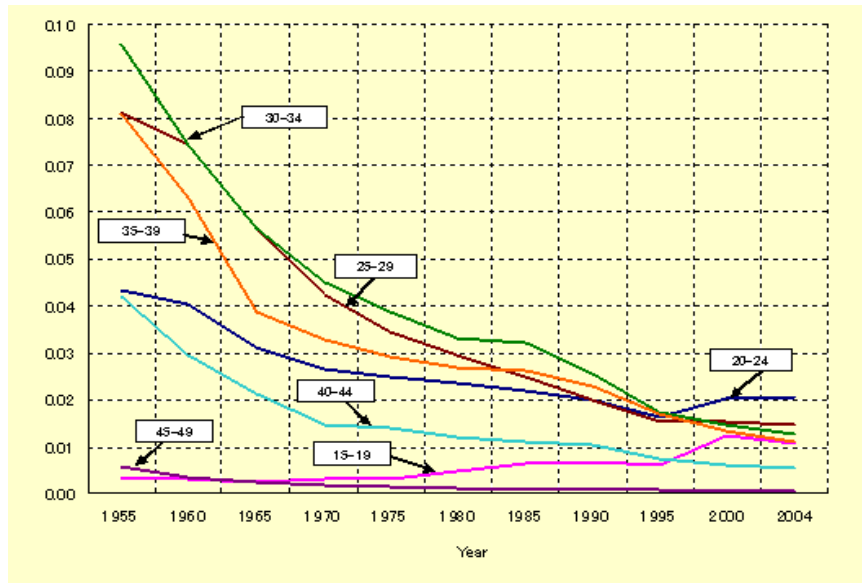
[그림 6-4] 인공중절의 수와 비율: 1955~2004



자료: Eugenic Protection Statistics(1955~1995), Maternal Body on Protection Statistics(1996~2001), and Report on Public Health Administration(2002~2004).

[그림 6-5]에서는 1955년부터 2004년까지의 연령대별 인공임신중절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인공임신중절률은 20세 미만의 젊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률을 제외하고는 거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왔다. 청소년 인공임신중절률의 증가추세는 청소년 건강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큰 걱정거리이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추세로는 20~24세 사이의 여성들의 최근 인공임신중절률의 증가추세이다. 가장 높은 인공임신중절률을 보이는 연령대의 여성들은 30~34세에서 20~24세로 변화하였다.

[그림 6-5] 연령별 인공임신중절률: 1955~2004



그러나 이 변화의 원인은 지금까지 거의 조사된 바 없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인공임신중절률 통계로는 불충분한데, 그 이유는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결혼여부 혹은 출산경력 등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임신중절 숫자가 적게 신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내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에 관한 의료보험 혜택이 없

는 가운데 의사들이 이를 정확히 보고할 동기가 충분치 않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연구자들은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원인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1955년 이후의 인공임신중절 추세를 분석하였다. 현대 일본의 초저출산율의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성행위, 피임방법 사용, 그리고 인공임신중절 등의 성관련 행위들을 동시적으로 검토하고, 일본 여성들의 성행위 및 생식행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Sato and Iwasawa 2006).^{주16)}

나. 분석방법

분석을 위하여 5년 단위 연령대별 여성들의 연간 인공임신중절 숫자와 비율을 포함한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모든 자료들은 일본정부 통계자료로부터 인용하였다.

연간 출산수와 5년 단위 연령대별 여성들의 숫자 또한 정부통계(특히 주요 통계와 인구통계조사(the Vital Statistics and the Population Census))를 인용하였다.

통계분석의 첫 단계로서 임신율의 차이 및 인공임신중절률의 차이와 함께 인공임신중절률 추세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A는 연간 인공임신중절 숫자, W는 연간 평균 여성인구, 그리고 P는 연간 임신숫자를 나타낸다.

$$A = W \times P / W \times A / P \quad (1)^{\text{주17)}$$

or,

$$A / W = P / W \times A / P \quad (2)$$

or,

$$a = p \times c \quad (3)$$

주16) 일본 내 인공임신중절 보고체계 및 피임약 복용 수준과 추세에 관해서는 연구자들의 이전 보고서를 참고(Sato and Iwasawa 2006).

주17) 본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혹은 출산 사이의 시간차는 무시하였음.

여기서 a , p , 그리고 c 는 각각 “인공임신중절률,” “임신율,” 그리고 “인공임신중절 비율”을 나타낸다. 비록 관찰되지 않은 임신을 포함하는 모든 임신의 경우까지 다 계산하기는 어려워도 실제적으로 출산 숫자와 인공임신중절 숫자를 합쳐서 총 임신숫자로 간주할 수 있다.

x 년에 있어서의 인공임신중절률인 $a(x)$ 와 y 년의 인공임신중절률인 $a(y)$ 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x 년의 임신율인 $p(x)$ 와 y 년의 임신율인 $p(y)$, x 년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인 $c(x)$ 와 y 년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인 $c(y)$ 로 분리하였다.

$$a(x) - a(y) = (p(x) - p(y)) \times \\ + (c(x) - c(y)) \times \quad (4)$$

여기서 x 년과 y 년 사이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에 관해서는 오른 쪽에 나타나는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을 임신율의 변화 및 인공임신중절 비율의 변화의 결과로 본다.^{주18)}

인구통계조사가 시행되는 연도(1955년부터 2000년까지 5년 간격으로)별로, 그리고 가장 최근 년도인 2004년도의 a , p , 그리고 c 값을 계산하였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본 내 여성인구 통계(W)^{주19)}를 이용하여, 연간 인구통계치와 정부통계자료에서 보고된 5년 연령대별 인공임신중절(A)과 출산(P) 숫자를 참고하여 매년 10월 1일 기준으로 한 5년 연령대로 나누어 통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1955년부터 2004년 사이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전체 기간을 두 기간으로 나누어 1955년부터 1975년까지와 1975년부터 2004년까지의 비율을 분석하였다. 전후 기간을 1975년을 기준으로 하여 나눈 이유는 195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초까지 사이에 대체수준(약 2.1)에 근사하게 머물렀던 합계출산율(TFR)이 도표 1.1.1에서 볼 수 있듯이 1970년대 중반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003년도에는 최저기록인 1.29로 떨어짐으로써 일본이 “초

주18) 이 분석기법은 Kitagawa(1955)를 따랐음.

주19) 2004년도에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4년도 인구통계는 인구 추정치 형태로 제공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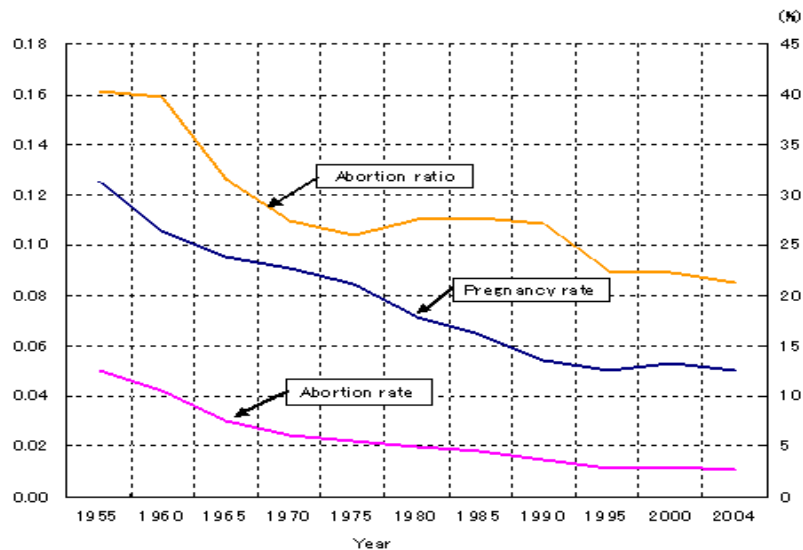
저출산율” 국가 집단으로 분류되게끔 하였다.

다. 분석결과

1) 1955년부터 2004년 사이의 변화

[그림 6-6]에서는 1955년부터 2004년 사이에 15~49세 연령대 여성들의 인공 임신중절률, 임신율, 그리고 인공임신중절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인공임신중절률과 임신율(좌축에 표시됨)은 전체 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인공임신중절률은 0.050에서 0.011로, 임신율은 0.125에서 0.051로). 반면에, 인공임신중절 비율(우축에 %로 표시됨)은 세 단계 유형을 보인다.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1955년에 40.3%에서 1975년 26.1%로 하락하였다. 1985년 잠깐 27.7%로 증가한 후 2004년도에는 21.4%로 다시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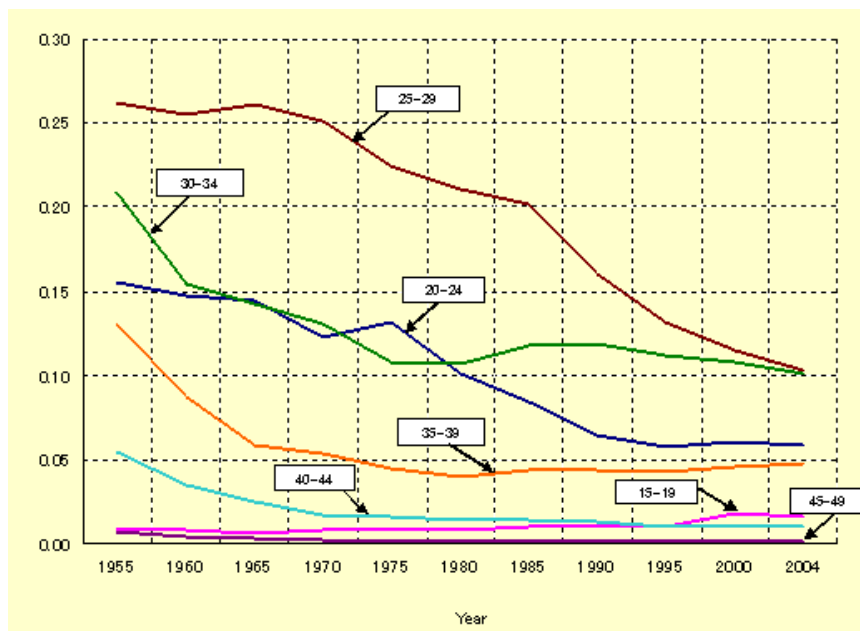
[그림 6-6] 인공임신중절률, 임신율 및 인공임신중절 비율: 1955~2004



연령별 임신율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전체 기간 중 가장 높은 율을 유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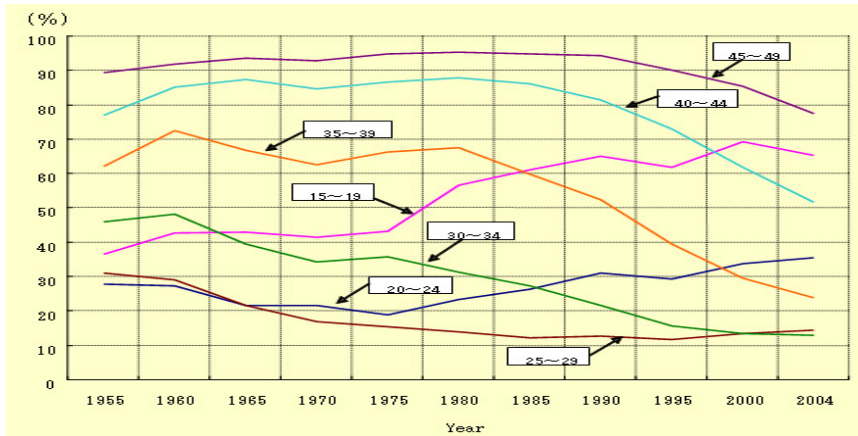
25~29세 연령대의 임신율은 1955년도 0.263에서 2004년도 0.103으로 하락하였다. 1980년대 이래 20~24세 연령대 여성들의 임신율도 크게 하락한 반면, 다른 연령대의 임신율은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6-7] 연령별 임신율: 1955~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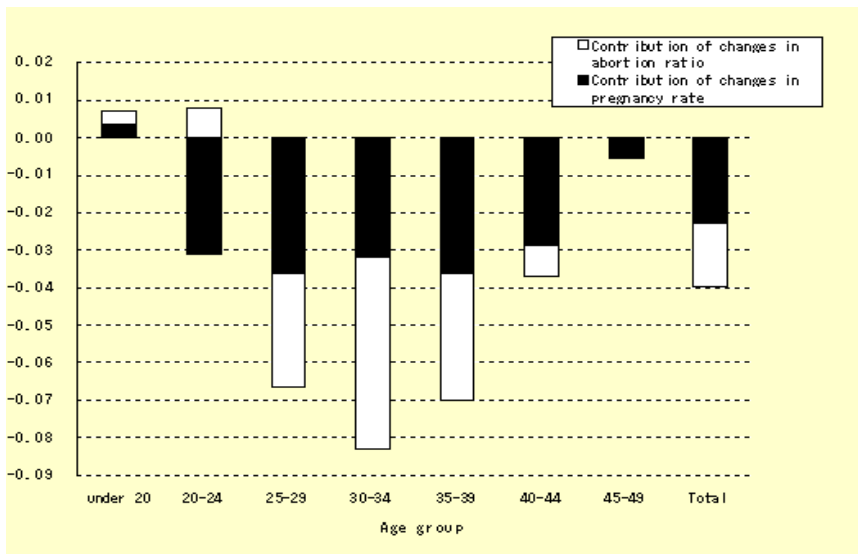


[그림 6-8]은 연령 범주별 인공임신중절률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까지는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인공임신중절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1980년대 이후, 35~39세, 40~44세, 45~49세 연령대 여성들 사이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15~19세와 20~24세 연령대 여성들의 증가추세와는 대조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림 6-8] 연령별 인공임신중절 비율: 1955~2004



[그림 6-9] 1955년부터 1975년 사이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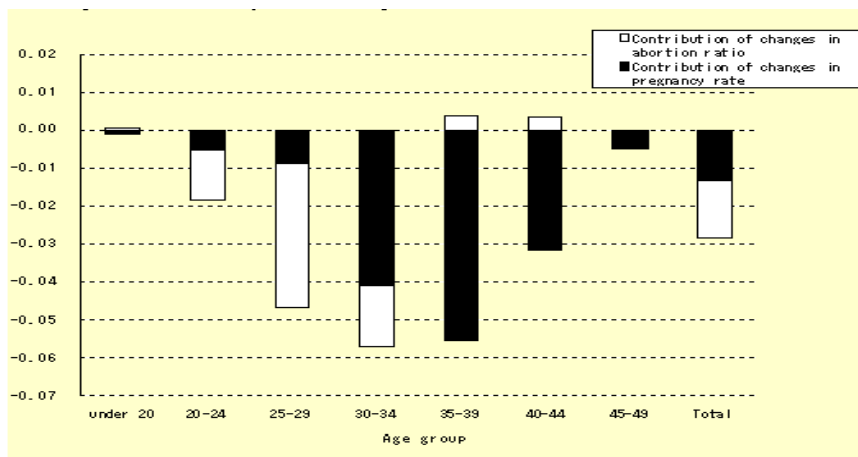
[그림 6-9]에 보인 1955년부터 2004년 사이의 기간 동안의 분석에 의하면, 인공임신중절률 감소율(0.040 (0.050 에서 0.011을 제한))은 0.023 (57.9%)의 임신율

감소, 그리고 0.017(42.1%)의 인공임신중절률 감소에 의한 것이다. 임신을 감소는 전 연령대 여성들, 특히 20~24세, 40~44세, 44~49세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의 인공임신중절 감소로 이어졌다. 반면, 가장 왕성한 출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연령대인 25~29세, 30~34세, 35~39세 연령대 사이의 여성들 사이에서는 인공임신중절률 감소가 두드러졌다.

2) 1955년부터 1975년 사이의 변화

이 첫 기간 동안 15~49세 연령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률은 0.050에서 0.022로 감소한 반면, 15~49세 연령대 여성들의 임신율과 15~49세 연령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각각 0.125에서 0.085로, 40.3%에서 26.1%로 감소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감소된 인공임신중절률 0.028 (0.050에서 0.022를 제한)은 임신 감소율 0.013(47.1%)과 인공임신중절 비율 0.015(52.9%)로 나눠볼 수 있다. 임신감소는 30~34세, 35~39세, 40~44세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의 인공임신중절 감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임신후 인공임신중절의 감소는 20~24세와 25~29세 연령대 여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그림 6-10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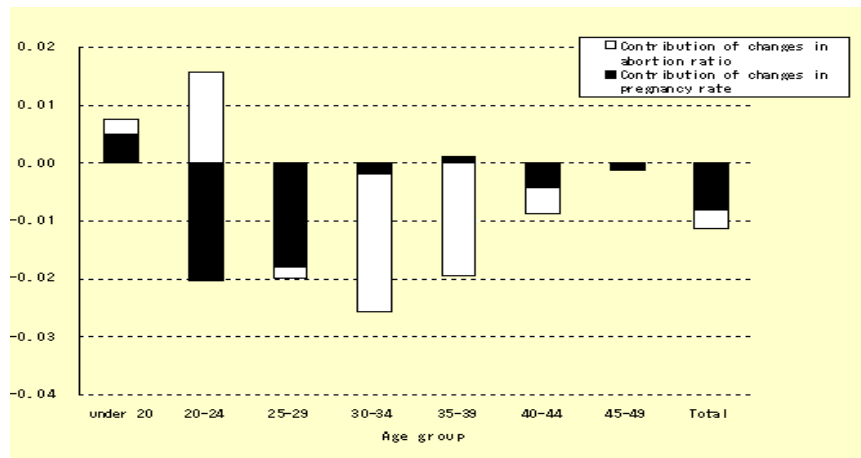
[그림 6-10] 1955년부터 1975년 사이 인공임신중절을 변화 분석



3) 1975년부터 2004년 사이의 변화

이 제2차 시기에는 15~49세 사이 연령대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률은 0.022에서 0.011로 감소한 반면, 동일 연령대 여성들의 임신율은 0.085에서 0.051로 감소하였고, 인공임신중절 비율은 26.1%에서 21.4%로 감소하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감소된 인공임신중절률 0.011(0.022에서 0.011을 제한)은 감소된 임신율 0.008(71.7%)과 감소된 인공임신중절 비율 0.003(28.3%)으로 나뉘볼 수 있다. 이는 인공임신중절률 감소에 있어서 임신 감소효과와 임신후 인공임신중절 감소효과는 제1차 시기에서는 거의 동일(47.1% 대 52.9%)하였는데, 반면 제2차 시기에 있어서 전자는 후자보다 훨씬 영향력(71.7% 대 28.3%)이 컸음을 의미한다(그림 6-11참조).

[그림 6-11] 1975년부터 2004년 사이 인공임신중절률 변화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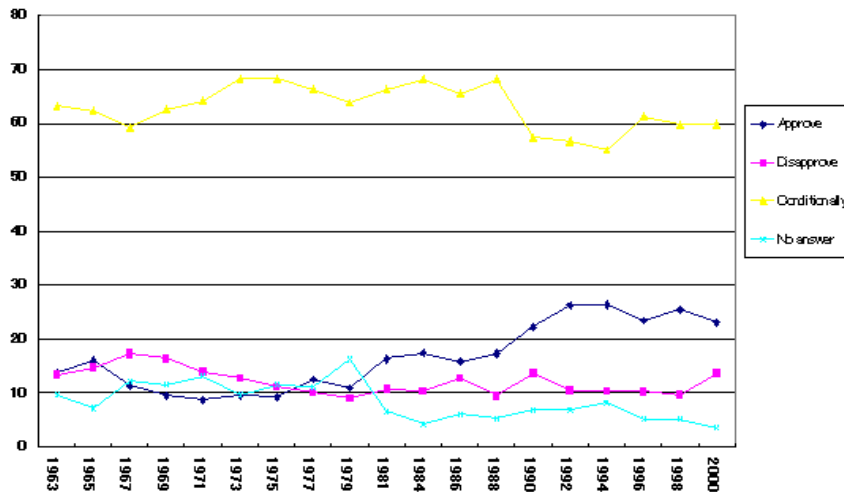
30대 여성들에 있어서 인공임신중절 선택 감소가 인공임신중절 감소에 큰 감소효과를 끼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20대 여성들에 있어서는 임신 감소가 인공임신중절 감소에 큰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세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임신 감소와 임신후 인공임신중절 선택의 증가는 전자가 후자보다 우

세한 경우 상반되는 효과를 낸다. 15~19세 사이의 여성들 사이에서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은 둘 다 증가하여 인공임신중절률을 증가시켰다. 한편, 40~44세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이 모두 감소하여 인공임신중절률 감소를 초래하였다.

라.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심리적, 윤리적 태도는 인공임신중절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의 하나로 간주된다. 가족계획에 관한 국가설문조사(NSFP) 년차별 보고 결과는 출산가능 연령대의 기혼여성들 사이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에 대한 추세를 제공해준다(그림 6-12참조). 1970년대 중반 이전에는 인공임신중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반응 비율이 무조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비해서 높았다. 1980년대 이후 무조건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인정하는 의견이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23%에 달하였다.

[그림 6-12]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태도



자료: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Mainichi Shimbu.

항상 다수를 차지했던 의견은 조건부 인공임신중절 찬성으로서 늘 60%의 비율을 유지하였다. 이들에게 다음 세 가지 조건 하에서의 인공임신중절 승인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피임실패의 경우”, “어머니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미혼이거나 혹은 결혼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1998년(PPRC2000)에 각각의 조건에 관한 인공임신중절 승인비율은 각각 38.4%, 66.4%, 그리고 81%였었다.^{주20)} 일본여성들이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서 미혼상태를 든 것은 사생아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정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2. 피임

가. 기혼부부간의 피임행위의 변화

1) 장기적인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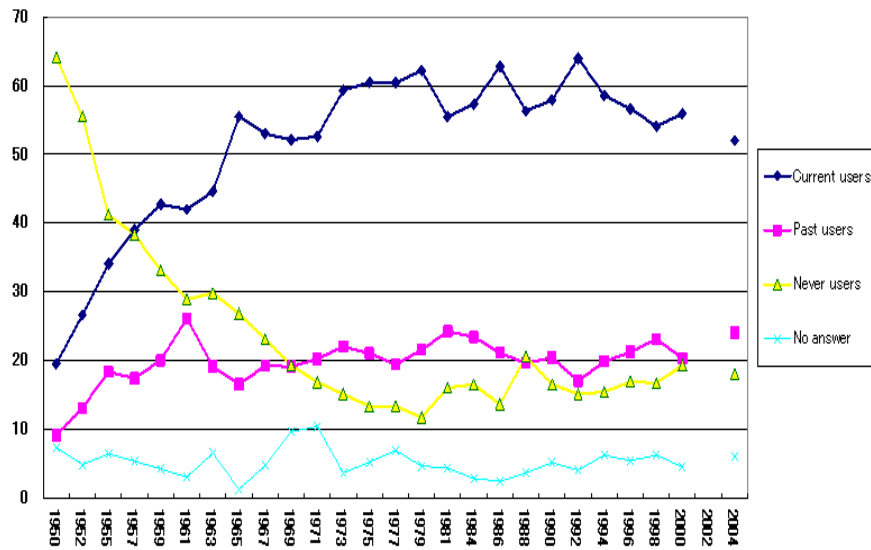
가족계획에 관한 국가설문조사 연차 보고서에서는 출산연령대 기혼여성들 사이의 피임방법 사용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준다(그림 6-13 참조). 이 설문지에서 응답자들은 다음 중에서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1) 현재 피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2) 피임방법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하지 않고 있다, 혹은 (3) 전혀 피임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다.

1950년도 조사에서 피임방법 사용자는 20% 선에 머물렀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60% 선까지 급격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 이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최근 1994년도 59%에서 2004년도 52%로 감소세를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출산연령대 기혼여성들의 연령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 40대 부인들보다 훨씬 성적으로 왕성하다고 믿어지는 20대, 30대 연령대 부인들의 비율이 최근 만혼 현상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게다가, 현대 일본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부부간의 성관계 갖지 않는 현상

주20) Atoh 1988, Muramatsu 1990, Hayashi 1996 참조.

의 일반화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림 6-13] 기혼여성의 피임실태



자료: :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1950~2000) and Survey on Population, Family and Generation (2004), Mainichi Shimb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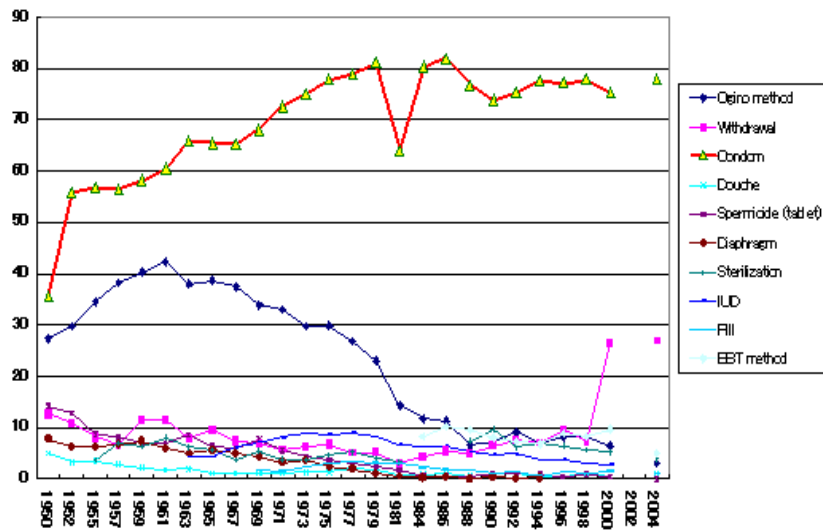
[그림 6-14]에서는 설문조사 당시 피임하고 있는 출산연령대 여성들 사이의 피임방법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950년을 제외하고는 설문조사에서 복수의 응답을 할 수 있었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림에 나타난 대로 콘돔 사용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았다(1981년도에 감소했던 것은 그 해 설문지 무응답률이 매우 높았던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임방법 사용자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피임약, 자궁내 피임기구, 불임시술 등과 같은 의학적 피임방법 사용자 비율은 극히 낮았다.

2000년도에 성행위 중단법 사용자 응답비율이 급증한 것은 설문지에서 사정취소를 뜻하는 단어를 “중절성교(Coitus interruptus)”에서 “질외사정(Extravaginal ejaculation(coitus interruptus))”으로 바꾼 데 기인하는 듯 하다. 일본인들

사이에서의 성교회수의 감소와 저조한 의학적 피임방법 사용을 고려한다면, 저조한 피임약 사용율과 다른 효과적인 피임방법 사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성교빈도가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부분적으로나마 미미하다.

[그림 6-14] 기혼여성의 사용 피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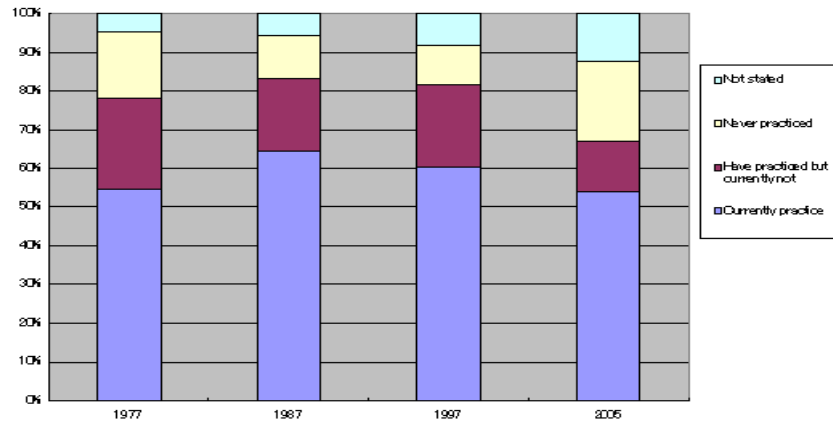


자료: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1950~2000); Survey on Population, Family and Generation, Mainichi Shimbu, 2004.

2) 최근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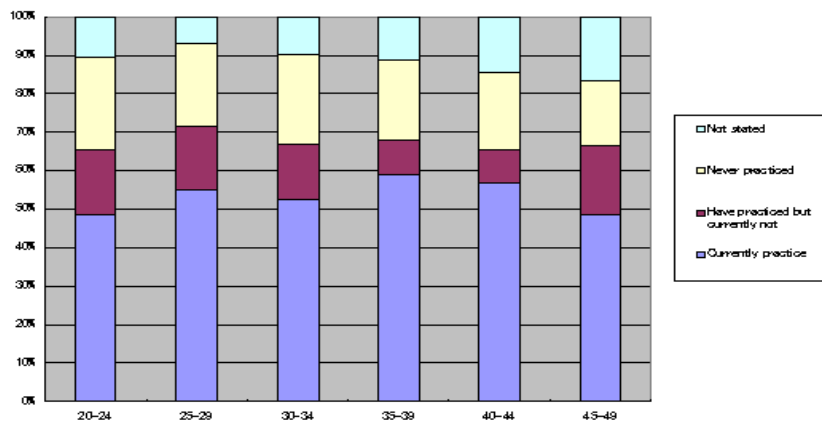
1977, 1987, 1997, 2005년도 JNFS결과를 보면 기혼 여성들 사이에서의 최근 피임수준과 유형을 알 수 있다. 15~49세 연령대 기혼여성들 중에서 피임방법 사용자의 비율은 1977년 54.6%에서 1987년 64.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7년 60.4%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갑자기 54.3%로 급락하였는데 이는 1977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그림 6-15 참조).

[그림 6-15] 기혼여성의 피임실태



현재는 30대 여성들의 피임방법 사용비율이 가장 높다(2005년도 피임방법 사용 연령별 유형에 대해서는 그림 6-16 참조). 현재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여성들 중 더 이상 출산을 원치 않는 여성의 비율은 한 명 혹은 두 명의 자녀를 더 갖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에 비해서 항상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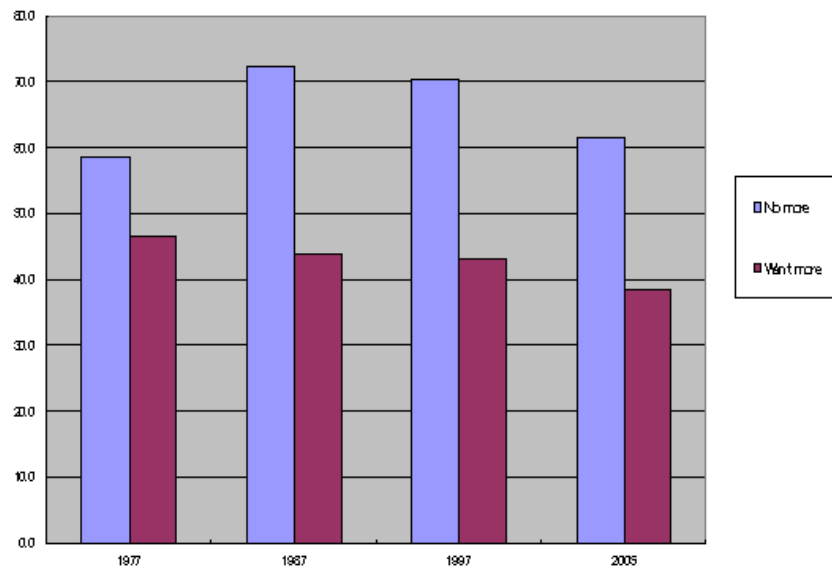
[그림 6-16] 기혼여성의 연령별 피임실태



그러나 그 비율은 1987년의 72.4%에서 2005년의 61.7%로 점차 감소되었다(그림 6-16 참조). 일본 부부들에 있어서 피임방법 사용의 보급이 피임방법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집단들 사이에서조차 현저하게 낮은 현상은 주목할 만하다.주21)

대조적으로 피임방법을 사용하다가 설문조사 당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은 1997년의 21.2%에서 2005년 12.8%로 반감하였는데, 반면에 아무런 피임방법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0.3%에서 20.7%로 두 배 증가하였다(그림 6-17 참조). 이 결과는 신혼부부들 사이에서의 피임방법 사용의 감소 경향을 반영한다.

[그림 6-17] 다음 자녀를 갖기 전 희망 피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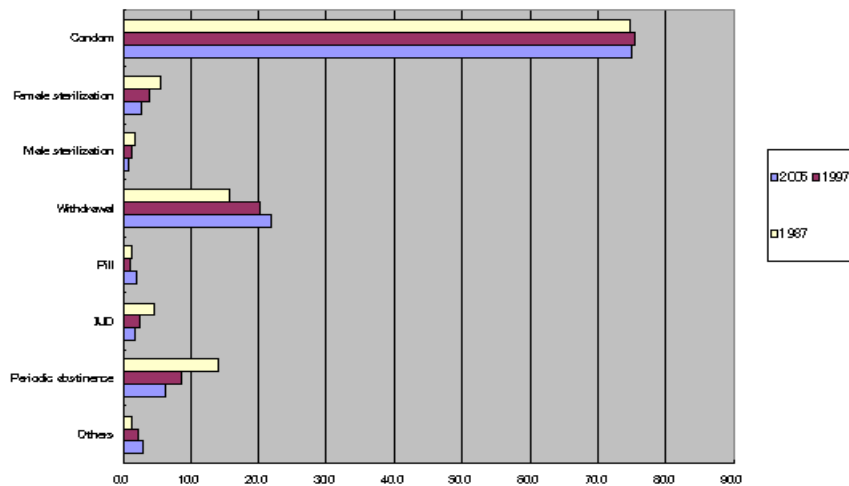


주21) UN(2006)의 보고(세계 피임방법 사용현황, World Contraceptive Use 2005, 2005)에서는 15~49세 연령대 기혼 혹은 다른 형태의 짝을 이룬 여성들 중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비율을 밝히고 있음. 일본은 55.9%(2000년)로서 더 개발된 지역들의 평균인 68.9%(1996년), 북부유럽의 78.9%(1999년), 서부유럽의 74.2%(1993년), 중국의 83.8%(1997년), 그리고 한국의 80.5%(1997년)에 비해서 낮음.

현재 피임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기혼여성들 중에서 콘돔 사용자의 비율은 매우 높은 반면 주기적 금욕법이나 성행위 중단법 사용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자궁내 피임기구 삽입, 피임약, 남성 불임시술 혹은 여성 불임시술 등의 피임방법을 사용한 사람들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그림 6-18 참조).

피임약, 자궁내 피임기구 삽입, 불임시술 등의 의학적 피임방법 사용이 인기를 끌고 있는 서양 국가들과는 대조적으로 일본 부부들은 콘돔, 성행위 중단법, 주기적 금욕법 등의 비의학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불임시술, 자궁 내 피임기구 삽입, 그리고 피임약을 사용한 사람들의 비율은 최대 10% 정도이다. 세 가지 설문조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는 성행위 중단법(15.7%, 20.1%, 21.8%) 피임방법 사용 비율의 증가와 주기적 금욕법(14.0%, 8.6%, 6.2%), 자궁내 피임기구 삽입법(4.6%, 2.6%, 1.6%), 남성 불임시술(1.6%, 1.2%, 0.7%), 그리고 여성 불임시술(5.5%, 3.8%, 2.7%) 피임법 사용 비율의 감소이다. 1999년에 사용이 승인된 피임약 사용자 비율은 1997년의 0.9%에서 2005년도에는 1.9%로 증가하였다(그림 6-18참조).

[그림 6-18] 현재 피임 실천자의 피임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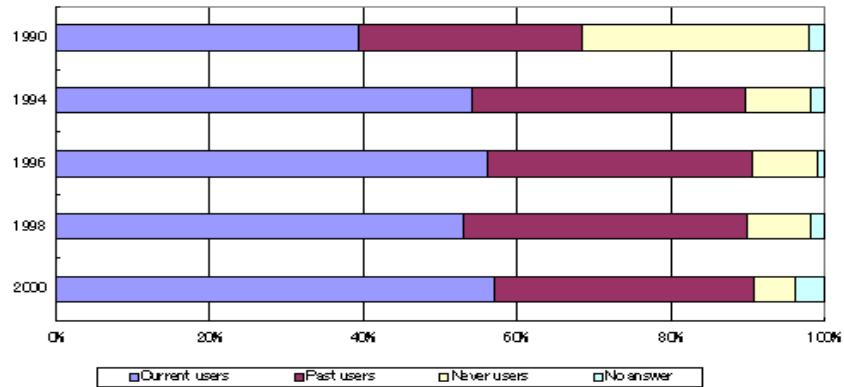
그러나 서양 국가들에 비해서 그 수준은 매우 낮았다.주22) 모든 연령대에 있어서 콘돔 사용자 비중은 꾸준히 높다.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궁내 피임기구 삽입과 불임시술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그 수준은 낮았으며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1977년부터 2005년까지의 JNFS 결과에 따르면 일본 기혼부부들 사이에서의 피임수준과 유형은 최근 NSFP 결과와 비슷하나 1977년과 2005년 사이의 피임실천율 감소는 상당히 크다.

나. 독신자들의 피임행태 변화

국가가족계획설문조사(NSFP)에서는 원래 50세 이하의 기혼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990년(1992년 제외)의 설문조사 이후 동일 연령대의 미혼여성들도 설문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그림 6-19]는 성경험이 있는 미혼여성들의 피임실태의 변화를 보여준다. 1990년의 사용자 비율은 40% 였는데 거의 60%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 전혀 사용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비율은 1990년에 거의 30%에 달하였는데 2000년에는 5% 정도만이 감소하였다. 이는 일본에서 1990년대에 성적으로 왕성한 미혼 여성들 사이에 피임 방법이 급속히 보급되었음을 의미한다(Hayashi, 1998; Wagatsuma, 1996, 1998).

주22) UN(2006)의 보고(세계 피임방법 사용현황, World Contraceptive Use 2005, 2005)에 의하면, 15~49세 연령대 기혼 혹은 다른 형태의 짝을 이룬 여성들 중 피임약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비율은 더 개발된 지역들의 경우 평균 15.9%(1996년), 북부유럽 19.2%(1999년), 서부유럽 46.9%(1993년), 중국 1.7%(1997년), 그리고 한국 1.8%(1997년)임.

[그림 6-19] 성경험이 있는 미혼여성의 피임실태



자료: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Mainichi Shimbu.

다. 일본 여성들 사이에 피임약이 인기 없는 이유

일본의 기혼여성들과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의 피임약의 저조한 보급 현상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실, 일본은 인공임신중절은 1948년부터 합법화하였지만 피임약은 최근에 와서야 합법화한 국가의 하나이다. 1960년에 피임약이 미국에서 처음 승인받은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은 월경불순이나 자궁 내막증과 같은 여성질환 치료용 의약품(피임의 목적은 아니었지만 피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함)으로 고용량 알약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그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면서도 더욱 효과적인 저용량 알약이 퍼지게 되었지만 1990년대에 이르러서도 후생노동성에서는(산업화된 국가들 중에서 일본의 HIV 감염이 기적적으로 낮은 데는 콘돔 사용이 기여한 바가 컸다는 가정 하에) 알약의 사용으로 인하여 콘돔사용의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향후 AIDS 확산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 승인을 망설였다. 피임약에 대한 법적 제약의 이면에는 전통 가족주의와 연관된 보수적인 태도가 엿보였는데,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는 의학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물론 다수의 여성들 사이에서도 또한 여성지향적인 피임방법으로 인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성관련 문제들에 주

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Atoh, 2001). 마침내 1999년, 저용량 피임약이 공식적으로 일본 여성들에게 허용되었지만, 현재까지 그 사용 증가는 눈에 띄지 않는다. 2000년 NSFP 결과에 따르면, 16~49세 연령대 기혼여성의 70% 이상, 그리고 동일 연령대 미혼 여성들의 50% 이상은 피임약 사용을 원하지 않으며, 이들 중 80% 정도가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부작용을 들고 있다(PPRC, 2000).

일본에서 피임약 사용이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후 일본에서는 콘돔사용과 주기 금욕법이 의사들이나 조산원 등과 같은 가족계획 상담자들에 의해서 권장되어 왔으며, 음성적 인공임신중절 또한 쉽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건강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피임약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일반 여성들의 마음속에 피임약이 부작용이 있다는 강한 생각을 심어주었다. 다른 하나는 피임약 사용시 감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다. 피임약을 원하는 여성들은 산부인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처방전은 연간 최소 40,000엔(미화 380불)이 소요되며, 게다가 국가보험금 지원대상도 아니다. 어떤 경우, 의사협회 권장에 따라 암 혹은 성병 등의 검사를 받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기도 한다. 피임약 사용을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비해서 훨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Norgren 2001).

제 3 절 성행위와 파트너십 행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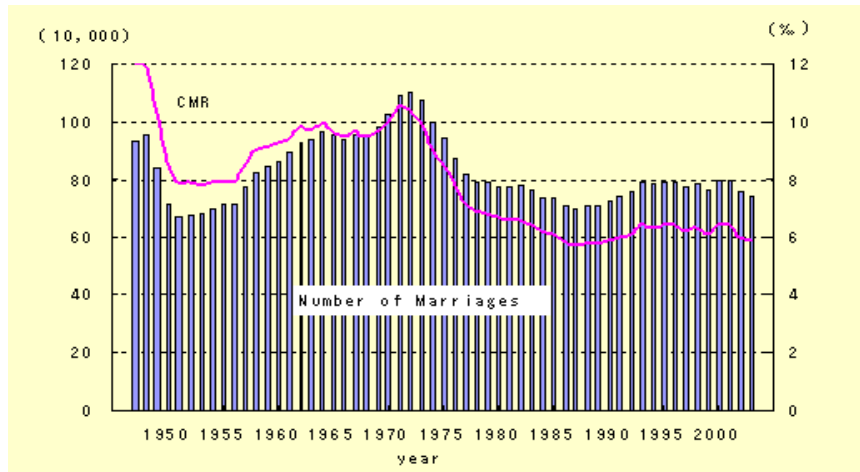
1. 독신자들 사이에서의 성행위와 파트너십 행위

가. 결혼 절차

1970년대 초반 이래 결혼이 감소하여 왔고 남편과 부인들의 결혼 평균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6-20, 6-21 참조). 일본 정부 주요 통계에 의하면 남편들의 초혼 평균연령은 1973년의 26.7세에서 2003년 29.4세로 늘어났고, 부인들의 경우에는 같은 시기에 24.3세에서 27.6세로 늘어났다. 25~29세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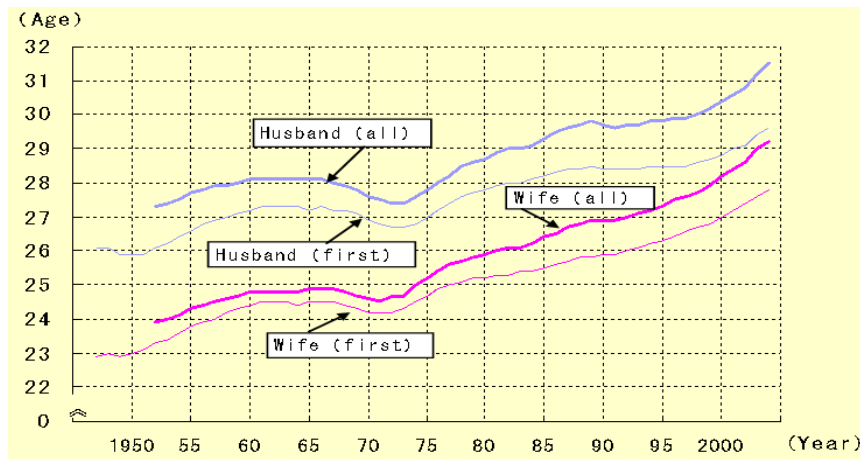
여성들의 결혼 비율은 1970년 80.4%에서 2000년 43.2%로 감소하였다(그림 6-22 참조).

[그림 6-20] 결혼수와 조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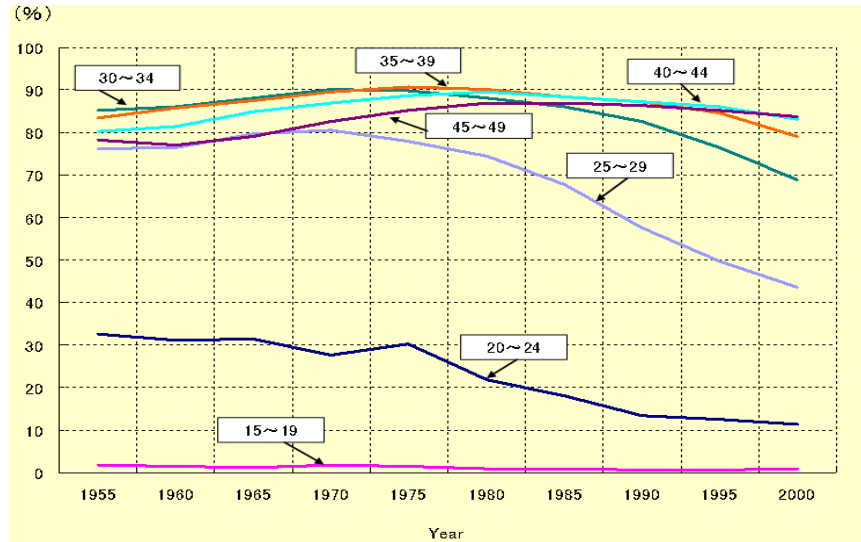
자료: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Vital Statistics*.

[그림 6-21] 평균 결혼연령(첫 번째 결혼 및 모든 결혼): 1947~2004



자료: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Vital Statistics*

[그림 6-22] 기혼여성의 연령별 비율: 1950~2000



자료: Population cen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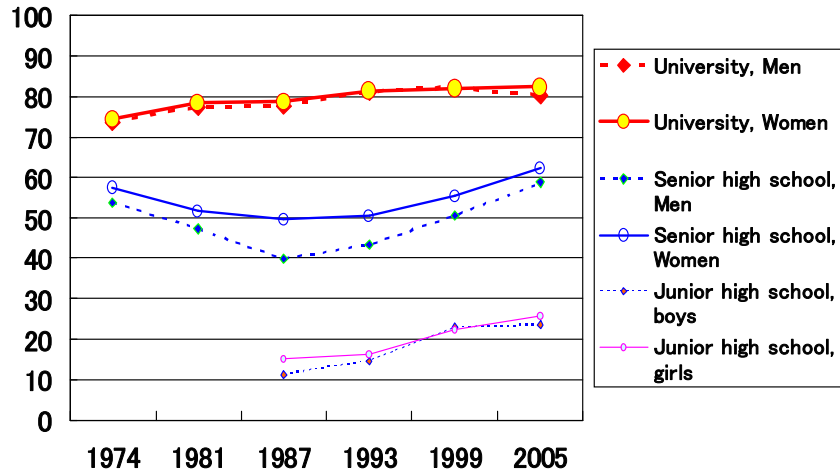
최근의 만혼 및 결혼 감소 현상은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는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동거율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25~29세 연령대 남성과 여성들의 동거 비율은 매우 낮다. 2002년도 JNFS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는 2.8%, 여자는 3.0%이다.

나. 연인관계와 성인 성관계의 시작

1) 첫 데이트 혹은 연인관계

남자친구/여자친구와의 연애는 성행위 및 출산행위로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이다. JASE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각각 20%, 50%, 80%의 여학생들이 연애 경험을 가지고 있다(그림 6-23 참조). 이를 달리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각각 80%, 50%, 그리고 20%의 여학생들이 전혀 연애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림 6-23] 연애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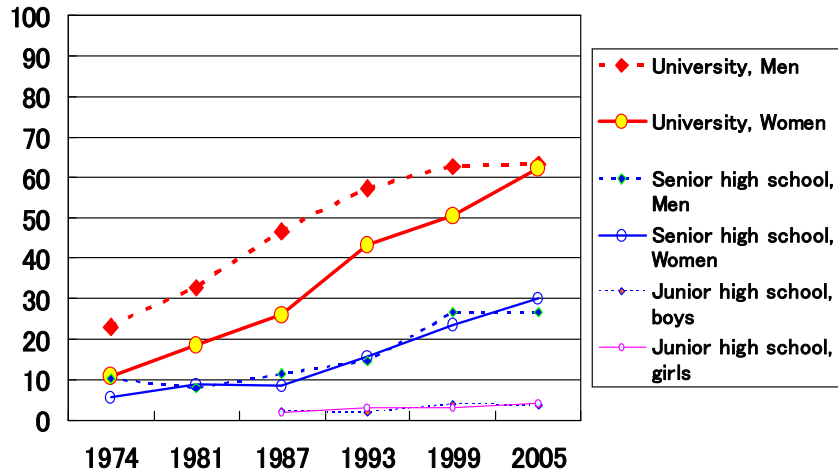
자료: JASE: Survey of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Youth.

2) 성경험 시작

1974년에서 2005년 사이에 시행된 학생 설문조사(JASE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기간중 성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비율은 남자 대학생의 경우 23.1%에서 63.0%로 증가하였고, 여자 대학생의 경우 11.0%에서 62.3%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이 10.2%에서 26.6%로, 여학생은 5.5%에서 30.0%로 증가하였다.^{주23)} 여학생들 사이에서 현저한 증가가 두드러진다(그림 6-24 참조).

주23) 일본의 학제 및 해당연령은 12~14세: 중학교 (1~3학년), 15~17세: 고등학교 (1~3 학년), 18~21세: 대학교 (1~4 학년)임.

[그림 6-24] 성행위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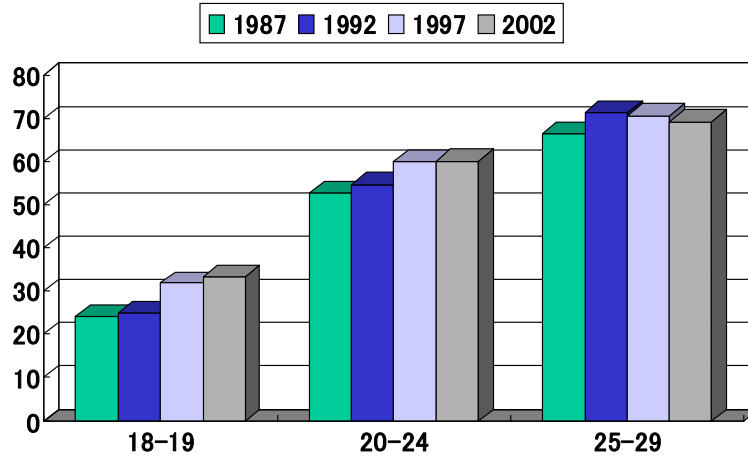


자료: JASE: Survey of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Youth.

[그림 6-25]와 [그림 6-26]에서는 JNFS 설문조사결과에서 밝혀진 성경험 있는 미혼 청년들의 비율을 시대별로 분류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더 높았다. 18~19세 연령대와 20~24세 연령대에 있어서 9차 및 11차 설문조사 사이에서 성행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증가하였지만 25~29세 연령 집단에서는 70% 선에서 평균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6-25참조).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경험 있는 미혼 여성들의 비율은 모든 연령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그림 6-26참조). 남자와 여자의 성행태 경향이 명백하게 일치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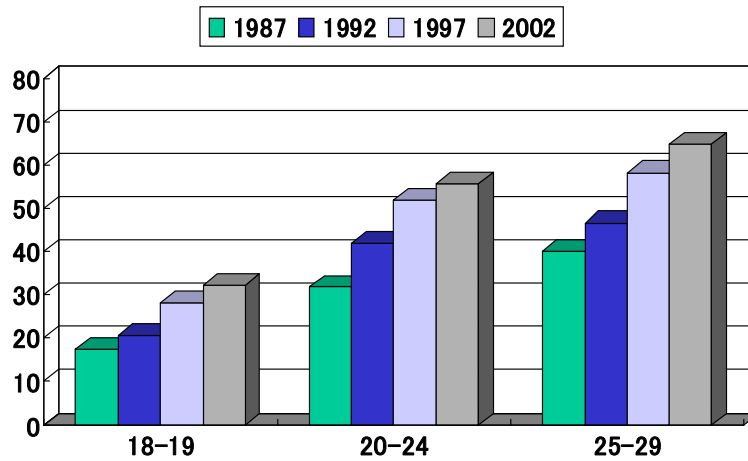
이들 설문조사에서는 성행위 시작연령에 대해서 직접 묻지는 않았으나, 젊은 남녀, 특히 여성들에 있어서 첫 성경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림 6-25] 성경험이 있는 미혼남성들의 비율



자료: The 9th, 10th, 11th, and 12th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그림 6-26] 성경험이 있는 미혼여성들의 경험



자료: The 9th, 10th, 11th, and 12th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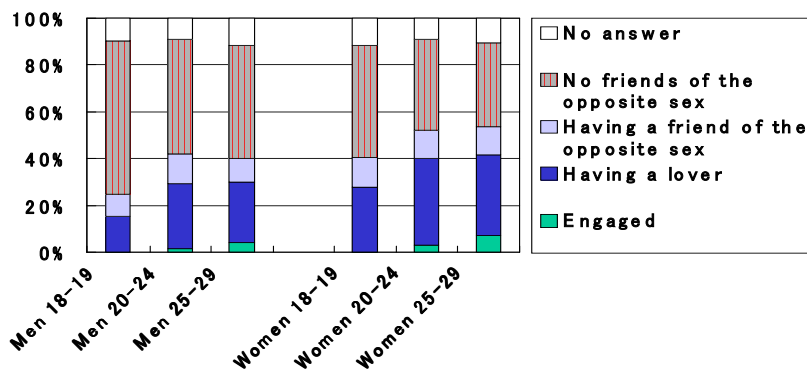
3) 임신과 출산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정부통계에서는 기혼 및 미혼 여성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15~19세 연령대와 20~24세 연령대 여성들의 최근 인공임신중절률 증가는 젊은 미혼 여성들 사이에서의 성행태의 변화에 기인하는 듯한데(일찍 성경험을 하고 전보다 더 많은 성행위 파트너를 갖는 경향), 15~19세 및 20~24세 연령대 여성들 중 미혼 여성들의 비율은 최근(2000년에 각각 99.1%와 87.9%) 매우 높았다.

4) 젊은 남녀 사이의 파트너십 행위

JNFS는 또한 일본 내 젊은 남녀들 사이의 파트너십 상황도 밝혀 주었다. 도표 3.1.8에 보인 대로, 2002년의 제12차 설문조사에서는 18~19세 연령대 미혼 여성 응답자중 47.5%만이 이성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하였다. 남성은 65.4%였다. 18~19세 사이 젊은 층의 절반 이상이 이성 친구가 없는 상황은 오늘날 개발국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림 6-27] 미혼남성과 여성들의 파트너십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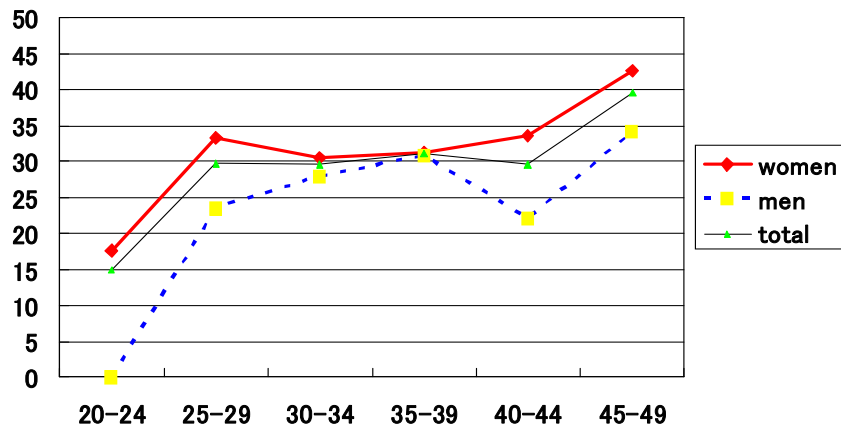


자료: The 12th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 2002

2. 기혼부부들의 성행위

최근 병원을 찾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들에 관한 최근 보고가 관심을 끌고 있다. 2004년에 시행된 전국 대상 성행위 설문조사인 남성과 여성의 삶과 의식에 관한 제2차 설문조사에서는 인구대비 일본 부부들의 성관계 빈도를 측정하여 이 문제를 조명하였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 설문조사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설문조사 전달에 성관계를 갖지 않은 기혼 여성들의 비율이 20~24세, 25~29세, 30~34세, 그리고 35~39세 연령대에 있어서 각각 17.6%, 33.3%, 30.5%, 그리고 31.2%임을 밝혀냈다(Kitamura, 2005). 이 자료를 놓고 볼 때, 최근 성관계를 갖지 않는 부부들의 비율의 증가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림 6-28] 연령별 기혼부부들의 성관계를 갖지 않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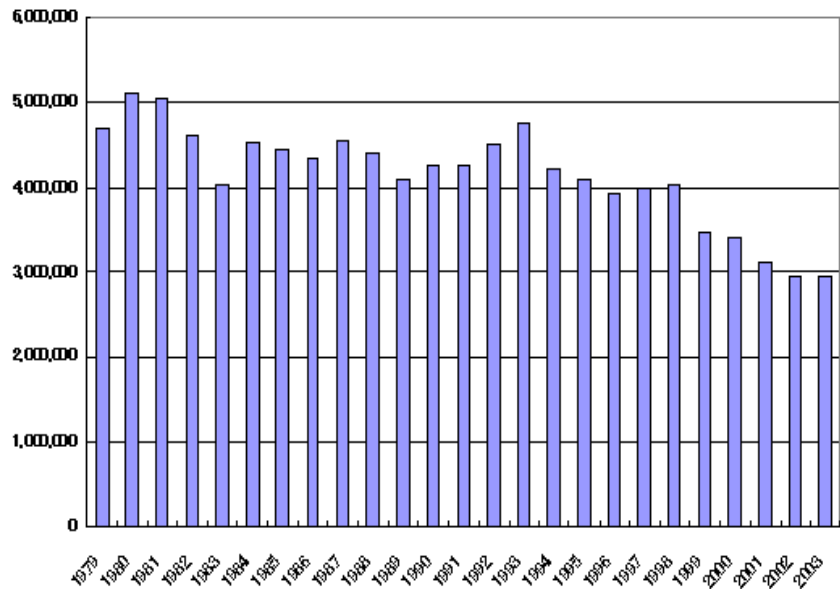


자료: The 2nd Survey on Life and Consciousness of Men and Women, 2004

성의학자들과 인구통계학자들이 최근 주목하게 된 주제로는 콘돔사용의 감소이다. 건강후생노동성 통계(제약업 통계)에서는 일본 내 콘돔 매출량 추세를 알 수 있다. [그림 6-29]에 보인 대로 1979년부터 1995년 사이의 연간 콘돔 매출량

은 400만개 이상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총 3백만 개 정도로 급감하였다. 콘돔이 항상 가장 주요한 피임 도구로 사용되어 왔음을 감안한다면, 최근 콘돔 소모량의 감소는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의 성관계 빈도의 감소를 부분적이나마 반영해준다고 볼 수 있다. 효과적인 피임방법 사용 감소가 임신에 미치는 영향은 성행위 빈도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상쇄될 수도 있다.

[그림 6-29] 일본에서의 콘돔 매출량(1979~2003년)



자료: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Statistics of Pharmaceutical Industry

연구자들은 최근 일본에서의 기혼 부부들 사이의 성관계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앞서 언급한 남성과 여성의 삶과 의식에 관한 제2차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추측을 입증해준다. 일본이야말로 첫 성관계 시기와 성관계 빈도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소극적인 국가인 것 같다.

제 4 절 생식관련 요인들의 변화

1. 여성연령과 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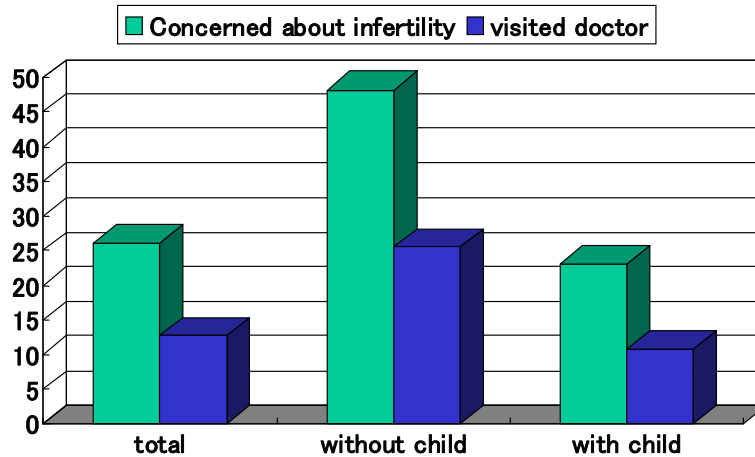
가. 결혼과 출산의 고령화

2003년에는 여성의 초혼 평균연령이 27.6세, 그리고 첫 아이 출산 평균연령도 28.3세에 도달하였다. 2005년도 JNFS에 의하면, 이상적인 평균 자녀 숫자(2.48)와 기대 자녀 평균 숫자(2.11) 사이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었다(NIPSSR 2006). 여성이 더 나이가 들어서 초산을 하게 됨으로써 기대하는 만큼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부부의 비율이 증가될 수 있다.

나. 불임부부 증가의 가능성

IVF-ET 등과 같은 최신 기술 등을 포함한 불임치료 문제가 최근 일본에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그 현황에 대한 국가적인 연구는 전문하다. 2002년도에 시행된 제 12차 JNFS에서는 기혼 부부들에게 불임 문제와 의사 진료 경험 등에 관하여 처음으로 설문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출산연령대 부인들의 26.1%(설문 당시 불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숫자 포함)가 불임에 대해서 염려한 적이 있고, 12.7%가 검사 및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그림 6-30 좌측 참조). 이들 중 자녀가 없는 부인들의 비율은 각각 48.2%와 25.5%였다(그림 6-30, 중간 참조). 설문조사에서는 상당한 숫자의 부부들이 불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부인과 의사들에 의하면 초경과 최초 임신 사이의 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한 자궁내막증 증가 현상이 있다고 한다.

[그림 6-30] 불임을 걱정하는 기혼부부의 비율



자료: The 12th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2002

2. 여성건강과 환경

가. 성병 확산

최근 설문조사에서는 가임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증상이 없고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클라미디아와 기타 성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가 과거에 비해서 최근 사람들이 복수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맺으며, 또한 콘돔 사용을 기피하는데 있다고 본다. 국제적인 수준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AIDS와 HIV 양성 환자들의 숫자가 훨씬 적긴 하지만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의 AIDS의 급속한 확산은 일본에서도 그 숫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걱정을 피할 수 없게 만든다.

나. 여성들 생활양식의 변화

최근 일본에서는 직장 여성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그들 중 일부는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도 하게 되면서, 여성들의 생활양식이 남성들과 비슷해져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남성 흡연자 비율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여성 흡연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반면, 후생노동성의 국가영양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표준체중 편차 범위 내에서 “마른” 여성들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또 다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욕감퇴로 고통 받는 여성이 전체 여고 3년생의 2%에 달하고, 10%는 불임이나 기타 다른 건강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식습관 문제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환경요인

최근, 일본 연구자들은 내분비계 질환과 기타 환경요인들이 인간의 출산과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정액 농도와 출생시 성비 등의 변화 등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제 5 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1. 인공임신중절의 변화와 관련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

<표 6-1>은 인공임신중절 수준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목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임신율과 임신비율의 변화를 통하여 인공임신중절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의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임신율과 인공임신중절 비율을 주요한 근거로 사용하여 전후 일본에서의 인공임신중절률(임신과 인공임신중절의 비율)의 경향과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여 보았다.

〈표 6-1〉 인공임신중절 수준과 관련되는 요인들

<p>A. 임신율과 관련된 요인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행위 빈도와 관련 요인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의 성관계 집단 참여 비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혼 여성의 비율 (2) 미혼 여성의 성관계 집단 참여비율 2) 성관계 집단 내에서의 성관계 빈도 2. 피임과 임신확률 관련 요인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임방법 보급과 효과, 임신의 생물-인구통계학적 확률 2) (효과적인) 피임방법 사용 관련 행위 요인들 3) (효과적인) 피임방법 사용 관련 사회 요인들 <p>B. 인공임신중절(인공임신중절률) 선정 요인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간의 출산 의도 (희망 자녀 수, 시기, 등) 2. (기혼, 미혼) 파트너와의 관계 3. 태아 관련 의식 (선천성 기형, 성별 선택, 등) 4. 모성건강 5.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심리, 윤리적 태도 6. 인공임신중절 수용 용이성
--

15~49세 연령대 여성들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률이 1955년도 50.2에서 2004년 10.6으로 낮아졌다는 분석 결과가 말해 주듯이, 임신율 감소는 약 60%, 그리고 인공임신중절률 감소는 40%를 설명해준다(그림 6-9참조). 게다가, 1955년도에서 1975년 사이에 있어서 이 두 가지 요인들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각각 50%였지만 (그림 6-10 참조), 1975년도부터 2004년도 사이에는 각각 70%와 30%를 차지하였다(그림 6-11참조).

1955년도부터 1975년 사이에 임신율 하락은 30~34세, 35~39세, 그리고 40~44세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 대규모 인공임신중절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 이는 두 자녀 갖기 운동의 급속한 확산, 그리고 일본 부분들 사이에 자리 잡은 가족계획에 대한 관념을 반영하는 듯 하다. 같은 기간 중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요인은 자발적 인공임신중절의 감소가 20~24세, 그리고 25~29세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 커다란 인공임신중절 감소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전쟁 파괴로부터 사회적 안정성 회복으로 인하여 젊은 임신여성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유로운 태도를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중반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본 남성과 여성들 사이에서 결혼 및 출산을 미루려는 경향은 임신과 임신 후 인공임신중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만혼 경향은 20대 여성들 사이에서의 임신 감소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 이는 자신들이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갖지 못한 더 많은 30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공임신중절 선택 감소를 초래하였다. 한편, 최근 20~24세와 15~19세 사이 연령대 여성들 사이에서 인공임신중절 선택은 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볼 때, 미혼 남성과 여성들이 자녀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 문화적인 강력한 규범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은 일본에서 아직 연구가 미진한 분야이다. 본 연구분석을 첫 걸음 삼아, 이 분야의 연구를 계속해나갈 것이다.

2. 문화적 배경: 가족제도와 성 제도

일본과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매우 낮은 출산율은 전 세계적 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현안이다. UN의 세계인구 전망: 2004년도 수정판(the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의 중간치 자료를 참고한 2000~'05년 기간 중 전 세계 국가들에 있어서의 합계출산율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인구대체수준을 밑도는 출산율이 전 세계 산업국가들에 있어서 보편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출산율 수준에 있어서 전 세계 국가들을 두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보다 약간 낮은 국가들(합계출산율 1.5~2.1명), 그리고 출산율이 대체수준보다 많이 낮은 국가들(합계출산율 1.5명 이하로서 “매우 낮은 출산율”이라고 불림.)이다. 전자에는 북부와 서부 유럽 국가들(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스웨덴)과 소위 “신대륙”으로 불리는 지역의 국가들(미국과 호주)이 포함된다. 후자에는 남부와 동부 유럽 국가들과 과거 소련연방에 속했던 국가들(이태리, 스페인, 독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이 속한다. 매우 흥미롭게도, 합계출산율이 1.5 이하인 국가들이 집단을 이루어 마치 동쪽(일본과 한국)에서 서쪽(스페인과 포르투갈)으로 펼쳐진 띠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들과 같이 세계적으로 매우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을 거치지 않고도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결과는 경제발전 수준만이 유일한 저출산율의 요인이 아니고, 문화, 역사적인 배경 또한 저출산율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문화,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특별한 종류의 “가족계획”이 예외 없이 관여해왔다. 초저출산율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21세기 후반기에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발생한 또 다른 흥미로운 세계적인 출산율 변이 유형이 있다. 첫 번째는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들(전형적으로 “A 유형 국가들”)에 있어서 출산율과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전형적으로 “B 유형 국가들”)에 있어서 장기간에 걸친 출산율 감소과정이 역전되어 왔다는 것이다. 비록 이 가설은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북부와 서부유럽의 국가들은 “A 유형”,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B 유형”에 속한다.

“B 유형” 문화에 있어서 부모-자식 관계, 혹은 “수직적” 관계(이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일본의 “상하” 제도(“ie” system))가 강력하며, 부부관계 혹은 “수평적” 관계는 미약한데, “A 유형” 문화에서는 부모-자식 관계는 약한 반면 부부관계는 강하다. 1970년대 이래 모든 산업화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의 활발한 정치 참여와 출산율 통제(인공임신중절의 합법화와 효과적인 피임방법의 확산)라는 두 가지 극적인 변화에 직면하였다. 이 두 변화는 “A 유형”과 “B 유형” 국가들 모두에서 일반적이었는데, 이 변화들은 다양한 형태의 영향을 끼쳤다. “A 유형” 국가들에서는 결혼은 감소하였지만 연인 관계가 유지되면서 동거 및 혼외 출산은 증가하였다. 그 결과로 출산율이 억제되었다. 반면에, “B 유형” 국가들에 있어서는 결혼 감소는 동거 증가 및 혼외 출산 등의 현상을 보이지 않은 채 출산율에 있어서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B 유형” 국가들이 “A 유형” 국가들에 비해서 출산율 전이를 보이기 전에 높은 출산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상하” 제도가 본질적으로 인간 번식을 지향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A 유형” 국가들이 출산율 전이 이전에는 “B 유형” 국가들에 비해서 일찌감치 개인주의가 발전하였고, 일평생 미혼으로 사는 여성들의 숫자가 작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낮은 출산율을 유지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앞 장에서 논의한 내용은 현대 일본에 있어서 자녀에 대

한 전무후무한 수요를 유발하고 출산율 억제를 초래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들을 보여주었다. 한 가지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초래된 생식력의 감소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성본능에 관한 부정적이고 성편파적인 태도와 문화이다.

이상의 상황은 일본의 성문화, 혹은 성을 부정하거나 혹은 상업적인 태도로 간주하는 사회의 경향, 성에 관한 모호한 견해, 모든 연령대 남성들과 여성들 사이에서의 불충분한 토론과 의사소통, 정보 및 상담을 위한 시스템 부재 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인구의 성의식에 관한 전반적인 규모의 설문조사에 근거한 포괄적인 연구가 부재한 까닭에 이는 단지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파트너십 형성의 미발달, 성병 확산, 성행위에 대한 불만, 그리고 성-관련 차별과 폭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성편파적인 태도와 문화인데, 이는 일본 내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성행위에 있어서 젊은 여성들의 남성 파트너에 대한 의존성, 그리고 여성들이 마른 체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 등을 알려 주는 설문조사에도 드러난 바와 같은 이러한 경향은 일본에서의 남성 우위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하다.

정책 차원에서는, 성 평등에 입각한 출산장려를 위한 건강과 성교육 장려가 한 가지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출산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건강문제의 해결과 성에 관한 평등하고 긍정적인 문화적 태도의 실현, 그리고 성행위에 대한 개인 통제권 확대의 결과로서 출산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비록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에 근사할 정도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일본이 초저출산율 수준에서 벗어나리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이는 성교육에 있어서 가장 발전된 국가들인 스웨덴과 네덜란드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대 일본에서 출산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주요 출산 건강 문제들을 다루었다. 성본능에 관한 부정적이고 성편파적인 태도는 오래 된 문제들이다. 사회여건과 문화를 염두에 둔 성교육 개선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출산 건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함의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배경에 중점을 두고 성의식과 생물학적인 인구통계학의 관점에서 일본의 초저출산율 수준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첫 부분은 정부통계 및 기타 다양한 설문조사 자료에 근거하여 성행위와 출산행위에 관한 주요 지표들의 경향과 유형을 살펴보았다. 출산율 통제 행위(인공임신중절과 피임)와 성행위 및 파트너십 행위, 그리고 출산능력 등의 요인들에 있어서의 사회적 변화도 살펴보았다. 인공임신중절 비율에 관해서는 수치를 임신율 변화와 인공임신중절 비율(임신 후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여성의 비율) 변화로 분리하여 특별히 관심을 기울였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의 결과, 인공임신중절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은 것은 낮은 임신율에 기인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피임방법 사용 증가 혹은 피임 효율성의 향상 등이 없이도 낮은 임신비율이 유지되는 것은 낮은 성행위 수준에 기인할 수도 있음을 발견하였다. 낮은 수준의 성행위는 출산 연령대 여성들 중 결혼 혹은 동거를 통해서 성관계 집단을 형성하는 여성들의 비율 감소에 기인한다. 부부들 간의 낮은 성행위 수준은 일정 부분 초저출산율에 기여하였다. 달리 말해서, 일본 부부들 사이에서의 “성관계 없는” 관계 혹은 낮은 빈도의 성관계를 갖는 관계는 일종의 “피임효과”를 초래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노동경제이론만으로는 일본의 초저출산율을 전적으로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만일 자녀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이 저출산율의 주된 원인이라면, 가임연령대 여성들은 출산율을 열심히 통제하려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피임약과 같은 효과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 이론과 일치하지 않는다. 피임약 사용 비율은 1999년 정부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출산능력(자녀출산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이 최근 일본에서 감소해 왔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이 없다. 그러나 출산능력과 관련된 요인들의 경향은 좀더 관찰해야만 하는 현안들이다. 하지만 여성들의 평균 초혼 연령이 매년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불임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지

적해야 하겠다.

본 고에서는 또한 일본의 성행위 및 출산 상황의 이면에 깔려 있는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성통제 및 출산을 통제 행위(피임과 인공임신중절)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일본의 성문화는 가족제도(전통적인 “ie” 제도와 그 변형들)와 성제도(전통적인 남성 우월성 개념과 여성에의 권력이양으로 인한 남성 우월성의 퇴조) 등과 같은 문화적인 영향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영향으로 인하여 초저출산율이 초래되었다.

출산, 성본능, 그리고 문화 전반을 고려한다면, 현대 일본에서의 극적인 출산율 저하와 관련하여 “변화한 것들”과 “변화하지 않은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구조와 경제구조는 크게 변해왔는데,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거의 남성들의 수준으로 높아졌고, 여성들의 공무원야 업무참여도 급속히 진전되었다. 반면에, “변화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다. 현재까지도 “상하” 의식과 남성우월의식은 강하게 남아 있다. 피임약 사용은 여전히 매우 낮은데 동거와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 문화적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사회 내부조화는 오늘날 일본의 초저출산율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제안으로서, 1994년도 카이로 회의(인구개발 국제회의) 이후 회자되기 시작한 새로운 개념인 출산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출산건강에는 성관계 조기 초기화, 만혼, 낮은 수준의 동거, 파트너십 형성의 미발달(혹은 “미성숙한 연애 문화”), 부부들 간의 낮은 성행위 빈도, 미량 투약 피임약의 낮은 사용률, 침대들 사이에서의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성병의 확산, 여성 생활양식의 변화, 만산, 증가일로에 있는 불임에 관한 염려, 등과 같은 새로이 부각되는 현안들이 포함된다. 본 연구결과는 출산 건강 문제가 일본의 초저출산율과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출산정책에 대하여 출산건강과 성평등에 입각한 성교육의 장려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 7 장 일본 가족정책 및 이민정책의 동향과 함의

제 1 절 개요

1990년의 "1.57 충격 (1989년 일본 출산율이 기록적으로 1.57에 불과하였다는 신문방송 보도)" 이후 저출산율은 갑자기 주된 정책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1992년판 국민생활백서(경제기획단 Economic Planning Agency 1992)에서 "소자화"(아이 덜 낳으려는 성향 혹은 베이비 버스트: 출산율 급락현상)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 신문방송뿐만 아니라 학자들, 정책가들, 정치가들, 그리고 경제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소자화대책"(베이비 버스트 대책) 또는 가족정책이라는 표현으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대책 혹은 정책들은 지난 10여 년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2005년 9월 일본내각의 조각에서는 소자화(小子化)대책과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가 창설되어 장관이 임명되고 동시에 새로 조각된 아베 수상 내각에 포함되었다. 이는 한국에서 2005년 6월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재편성된 것과 거의 같은 시기이다. 그러나 여권확장운동(feminism)과 가족주의(familism)가 때때로 정치현장에서 갈등을 빚어온 유럽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르다.

1947년부터 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숙련된 노동자들의 대규모 은퇴현상이 2007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5년 말부터 시작된 인구감소현상은 일본 내에서도 정책현안이 되었다. 이미 2004년부터 남성 인구 감소가 관찰되어 왔다. 인구감소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나마 불균형적인 국제이주의 결과이기도 하다. 자연인구증가의 정체시기에 인구증가는 주로 국제이주의 영향을 받는다.

베이비 버스트에 관한한 일본만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을 포함하는 아시아의 모든 신흥 공업 경제 국가들은 현재

일본보다도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기인하여 인구 노령화가 일본보다도 훨씬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가족정책은 과거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들 국가는 급진적으로 가족정책이 변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들 국가들에 있어서의 인구정책, 출산율 변화 및 국제이주 변화양상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인구정책과 출산율에 대한 태도변화 등을 포함하여 인구관련 태도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결혼이민 등의 국제이주를 통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인구통계학적 통합 현상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제 2 절 출산율과 가족정책의 최근 발전 동향

1. 출산율 변화의 동향

일본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표 7-1 참조). 그 후, 출산율은 대체출산율 수준(합계출산율 2.1명)에 머무르다가 1970년대 중반 들어서서 더 감소하였다. 제1차 석유위기 이후 많은 유럽 국가들에서 출산율 감소가 시작될 때까지 일본은 개발국가들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저조한 국가였었다. 1974년에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이하인 2.05까지 떨어진 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96년을 제외하고는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5년도에 1.26이라는 최저점에 도달하였다. 2006년 12월에 새로 출판된 인구추계 중간등급에 의하면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향후 30년간 1.21에서 1.25 사이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NIPSSR, 2006b).

한국과 대만도 1980년대 후반에 대체출산율 밑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최근 몇 년간은 최저 출산율에 있어서 일본을 추월하였다. 2000년에 일본은 출산율 1.36으로서 1.47이었던 한국에 비해서 약간 낮았었지만 1.68인 대만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았었다. 그러나 2001년에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33으로

서 한국(1.30)보다 높았고 대만(1.40)보다는 약간 낮았다. 비록 한국이 2002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긴 했어도 상대적인 지위는 비슷하였다: 즉, 일본이 1.32였고 한국은 1.17, 그리고 대만은 1.34였다. 그러나 2003년에 일본(1.29)은 한국(1.19)과 대만(1.24)에 추월당하였다. 2004년 한국(1.16)과 대만(1.18)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1.29에 머물렀다. 2005년 한국(1.08)과 대만(1.12)이 경쟁하는 가운데 일본(1.25)과의 간격은 약간 증가하였다. 조만간 대만이 한국을 최저 출산율에 있어서 앞지르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대만정부가 2004년에는 중국본토로부터, 그리고 2005년에는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신혼 여성 배우자 숫자를 엄격하게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그 숫자를 줄인데 기인한다.

〈표 7-1〉 결혼연령에 따른 출산율 및 결혼율 성향: 1950~2005

(단위:%)

구분	합계 출산율	남			여			합계출산율	
		25~29세	30~34세	35~39세	25~29세	30~34세	35~39세	한국	대만
1950	3.65	34.3	8.0	3.2	15.2	5.7	3.0	-	-
1955	2.37	41.0	9.1	3.1	20.6	7.9	3.9	-	-
1960	2.00	46.1	9.9	3.6	21.7	9.4	5.4	-	-
1965	2.14	45.7	11.1	4.2	19.0	9.0	6.8	-	-
1970	2.13	46.5	11.7	4.7	26.9	18.1	7.2	4.53	4.00
1975	1.91	48.3	14.3	6.1	20.9	7.7	5.3	3.74	2.83
1980	1.75	55.1	21.5	8.5	24.0	9.1	5.5	2.83	2.52
1985	1.76	60.4	28.1	14.2	30.6	10.4	6.6	1.67	1.89
1990	1.54	64.4	32.6	19.0	40.2	13.9	7.5	1.59	1.81
1995	1.42	66.9	37.3	22.6	48.0	19.7	10.0	1.65	1.78
2000	1.36	69.3	42.9	25.7	54.0	26.6	13.8	1.47	1.68
2001	1.33	-	-	-	-	-	-	1.30	1.40
2002	1.32	-	-	-	-	-	-	1.17	1.34
2003	1.29	-	-	-	-	-	-	1.19	1.24
2004	1.29	-	-	-	-	-	-	1.16	1.18
2005	1.23	71.4	47.1	30.0	59.0	32.0	18.4	1.08	1.12

주: 미혼 비율은 매년 10월 1일 기준이며 오키나와 포함.

자료: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원(2006)과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한국 국립 통계청, 대만 국립 통계청(Homepages of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Statistics Bureau,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ROC National Statistics.)

사생아 출산율이 2% 이하인 일본에서 합계출산율의 감소는 두 가지 구성 요인 각각의 추세로 설명될 수 있는데, 첫째는 기혼여성들에 있어서 출산율(기혼 출산율), 둘째는 여성결혼비율(결혼율)이다. 기혼 출산율이 1990년대 초반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결혼율은 특히 지난 30년간 급격히 감소하였다(Kojima & Rallu, 1997, 1998). 즉, 고연령 결혼과 높은 미혼율은 20대 여성들의 결혼율을 급격히 감소하게 하여 최근 합계출산율의 감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구결정요소로 간주될 정도가 되었다.

<표 7-1>에서 알 수 있듯이, 25~29세 사이 남성 미혼율은 1975년의 46.5%에서 2005년의 71.4%로 50% 증가하였다. 그러나 30~34세, 35~39세 사이 남성 미혼율은 각각 4배와 6배 이상 증가하였다. 2005년도 25~29세, 30~34세, 그리고 35~39세 여성 미혼율(각각 59.0%, 32.0% 그리고 18.4%)은 1975년(20.9%, 7.7% 그리고 5.3%)에 비해 세배 증가하였다.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 또한 1975년의 24.7세에서 2000년의 27세, 그리고 2005년 28세로 꾸준히 늘어난 반면 남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같은 기간 동안 27세에서 29.8세로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한국과 대만에서도 여성 결혼율이 더욱 급감하였다.

그러나 세 사회에서는 자국여성이 아닌 외국 여성과 국제결혼 하는 내국 남성들로 인하여 출산율 감소는 완화되었다. 2004년도 일본의 국제결혼은 전체 결혼의 5.5%로서 한국(11.4%)과 대만(23.8%)에 비해서 훨씬 낮았다. 2004년 일본 내 국제결혼의 출산은 전체 출산의 약 2%를 차지하여 한국과 대만(13.3%)보다 낮았다.

2. 가족정책의 발전

상기한 바와 같이 일본정부가 저출산율에 명백한 우려를 표명하게 된 것은 1990년의 1.57 충격 이후였다. 소자화대책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지난 16년여의 기간에 걸쳐서 다양한 새로운 방법들이 채택되고 낡은 방법들이 소자화대책으로 개명되었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효율적인 방법이 채택되지 못한 데에는 지도력과 재정력의 부재에 기인할 수

있다. 한국과 대만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일본의 수상은 정책을 극단적으로 변경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특히 각 부서에 책정된 예산액은 해당부서에서 새로운 예산출처를 확보하지 않는 한 쉽사리 변경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표 7-2〉 주요 소자화 대책(가족정책안) 연보

년도	각종 정책관련 사건
1990	‘1.57 충격’ 일본정부 각 성내 아동출산 지원 위원회
1991	아동양육 휴가법
1994. 12	‘엔젤플랜’+아동양육을 위한 5개년 비상대책(1995~’99)
1995	아동양육과 가족휴가법
1999. 12	소자화 대책 기본안, ‘신엔젤플랜’(2000~’04 회계연도)
2001. 7	완전아동양육안
2002. 9	소자화 대책+1
2003. 7	소자화 대책 기초법, 차세대 발전 지원을 위한 대책법
2004. 6	소자화 대책 근본안
2004. 12	‘자녀지원과 양육을 위한 계획안’(2005~’09 회계연도)
2005. 4	지역자치단체와 기업별 실행 프로그램 작성 및 시행
2006. 6	신 소자화 대책에 대하여
2006. 12	3세 이하 아동 지원금 2배 증액, 아동양육 휴가 보상금 40%→50% 상향 조정

자료: 내각성, 2006; Suzuki, 2006; NIPSSR, 2003.

고이즈미 수상의 강력한 지도력에 힘입어 2005년 9월 소자화 대책을 책임질 새로운 정부 부처가 출범하여 2006년 6월 ‘신 소자화 대책’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새로운 가족정책은 수상의 교체와 예산 지원 부족으로 인하여 실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Nihon Keizai Shimbun, 2006). 2006년 6월에 원래는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또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상태(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에 있거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자녀들을 부모들이 지원하는 경우 세금우대 혜택을 주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전용할 계획이었지만,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고용에 장려 정책은 앞서 말한 세금우대혜택을 폐기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내각부(the

Cabinet office)는 모든 연령대 자녀들에 대한 지원금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하여 비례세 공제액 폐지로 발생하게 되는 세수입 증가분의 일부를 재분배할 것을 제안하였다. 2006년 12월 말에 간행된 2007 회계연도 예산에 따르면 경제회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계정의 재정상태가 호전됨에 따라서, 3살 미만 아동들에게 현재 월 5000엔씩 지원되는 지원액이 두 배로 증가하고,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보상금은 40%에서 50%로 인상된다. '신 소자화 대책'에서는 각 부처와 재무부 간의 예산 삭감 협상, 그리고 각 현과 시에서의 재정 적자로 인하여 비교적 사소하면서도 비용이 덜 소요되는 대책들이 시행되면서 고비용 대책들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될 것으로 여겨진다.

3. 가족정책이 인구통계에 미칠 수 있는 효과

Kojima(1989, 1994, 1996, 2003, 2005b)는 가족정책이 인구통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서양의 연구문헌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Kojima는 단지 세 가지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첫째, 가족정책은 출산율 증가보다는 일차적으로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입안되었다. 둘째, 비록 가족정책이 일관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도 분명 하나의 체계로서 여겨져야 하며 따라서 다른 국가에서 한두 가지 대책을 도입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 비록 가족정책이 출산율 증가에 동인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이는 다만 임시적으로 도입시기와 사회적 환경이 우호적인 특정 지역 혹은 사회계층에 있어서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역 가족정책이 지역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에 초점을 집중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2005년도 지역 인구통계 자료가 없는 관계로 비록 아직 모색단계에 있긴 하지만 Kojima(2005b)는 지역 수준의 인구통계 및 사회경제 지표들과 참의원 사무국에서 조사한 지역정부 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 가족정책이 결혼과 출산율에 끼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 10월 지방자치 행정단위(구, 시, 읍, 그리고 마을)에 있어서 '소자화 대책'을 관할하는 공무원들에 대상으로 하여 지역별 출산성향과 정책 반응

통계조사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를 시행하던 당시 Kojima는 참의원 특별검사관으로서 세부자료를 살펴볼 수 있었다. 통계 조사 대상은 200,000명 이상의 인구를 갖는 모든 지방자치 단체들과 인구규모 범주에 따른 비례가변으로 추출한 하위 샘플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을 포함시켰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1993~1997년, 그리고 1998~2002년까지의 기간중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후생노동성 산하 통계정보부에서 간행한 주요통계자료들의 Bayesian 추정치로부터 추출하였다. 각 지방자치 단체별 미혼자 비율은 지역경제자료 CD-ROM(Toyo Keizai Shimposha, 2003)에서 구했다. 기타 인구, 사회경제지표들도 같은 CD-ROM에서 구하였다. 이들 지방자치 단체별 지표들은 출산율 및 결혼율 결정요소 분석을 위하여 동일한 지방자치 단체별 소자료에 첨부되었다. 출산율 종속변수에는 1998~2002년 기간중 합계출산율 추정치와 1993~1997년 기간 대비 1998~2002년 기간중 합계출산율 비율이 포함된다. 결혼율 종속변수에는 20~24세, 25~29세, 그리고 30~34세 연령대 성별 미혼자 비율이 포함된다.

독립변수로는 2003년도 지방자치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의 결과로 얻어진 58개의 정책변수들을 포함시켰다. 이 변수들은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유형의 가족정책방안(소자화 대책)을 광범위한 의미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혹은 시행을 계획 중인지를 보여주는 더미변수로 회귀모형에 포함시켰다. 58개 중 34개의 변수들만이 최소한 한 가지 유형의 모형(완전모형 포함)에서 최소한 한 가지 독립변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는데, 이 변수들은 <표 7-3>의 첫째 패널에 열거되어 있다. 이 모형은 <표 7-1>의 둘째 패널에 열거한 통제변수들로서 지역경제자료집으로부터 얻은 17개의 지표들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표 7-1>의 셋째 패널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 지방자치단체별 인구규모, 그리고 미혼율 등의 통제변수들도 포함하였다. 연관된 자료들에 독립변수들을 단계적으로 선택한 회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출산율과 결혼율에 대한 정책방안들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표 7-3> 계속

구분	합계출산율		미혼자 비율					
	추정치 증감률		여성			남성		
	1988- 2002	2000/ 1995	20~ 24세	25~ 29세	30~ 34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미혼자 비율)								
20~24세 미혼여성 비율	----							
25~29세 미혼여성 비율	----							
30~34세 미혼여성 비율	----	++						
20~24세 미혼남성 비율		---						
25~29세 미혼남성 비율		----						
30~34세 미혼남성 비율		+++						

주: +/- p<0.10, +/- p<0.05, +++/- p<0.01, ++++/- p<0.001

합계출산율 증감율 = 1998-2002 합계출산율/1993~'97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1998~2002년 추계와 2000년 인구조사 결과의 미혼자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00년 현 및 가임동향과 정책반응에 대한 조사, 1998~2000년 의료센터 및 지방자치단체 인구동태 추계, 지역경제 2003년 자료(CD-ROM).

<표 7-3>은 완전모형을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1998~2002년 기간 중 합계출산율 결정요인을 보이는 첫째 칼럼에서는 “10-1 지역 ‘엔젤플랜’ 정책 입안”, “10-3 아동보육지원을 위한 주민조직,” “11-4 방과후 아동보육 확대”, 그리고 “13-3 불임시술비용 지원”에 비하여 “10-2 특별구역설정”, “12-4 판매용 적정 주택 제공”, “13-6 독신청년 교류 이벤트”, “15-1 아동보육지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16-3 소아과 의사의 균형배정”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여기서 하이픈이 붙은 숫자들은 질문과 하위질문의 번호이다. 모든 긍정적인 효과들은 타당해 보이지만 “13-6 독신청년 교류 이벤트”는 결혼율을 상승시킴으로써 출산율을 간접적으로 상승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효과는 미혼자 비율을 통제한 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이는 결혼과 출산과 상관된 결혼율과 이주율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록 이 정책방안들의 긍정적인 효과들은 타당하긴 해도, 이 정책들이 친가족 방안들임을 가정할 때 부정적인 효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도 역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가령 이 방안들이 저출산율에 대한 대응으로 시행되었고, 특히 정책변수들이 2000년, 그리고 종속변수들 또한 2000년과 1998~2002년 사이의 기간들에 해당하는 것들이어서 그러한 듯 하다.

합계출산율(2000/1995) 결정요인들을 보이는 둘째 칼럼은 “11-9 공공시설 아동 보육서비스”, “15-1 아동보육 지원 봉사자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16-1 교육비 지원” 등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출산율 감소를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반면, “국가표준을 상회하는 아동수당”, “11-8 아동보육 집단 지원”, “16-5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적응교육”, 그리고 “16-7 가정 내 폭력예방 네트워크 구축” 등은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첫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는 이들의 친가족 성향을 놓고 볼 때 이해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역인과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할 듯하다. 마지막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 또한 역인과관계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으며, 이는 결혼율 급락으로 인한 출산율 급감이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적응교육 및 가정폭력예방교육을 필요로 하는 국제결혼을 장려한다는 것과, 공식거주 외국인의 비율이 높고 가정폭력이 빈번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듯 하다.

제3칼럼부터 제5칼럼까지는 20~24세, 25~29세, 30~34세 연령집단에서 여성 미혼율에 관한 가족정책 변수의 효과를 보인다. 제3칼럼에서는 20~24세 연령군의 여성 미혼율에 있어서 아무런 정책변수의 긍정적인 영향도 보이지 못하는 반면 “10-4 소자화 대책을 위한 지방조례 입법” “13-1 결혼지원자금법”, “13-3 불임치료비 지원”, 등은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첫 두 가지 부정적인 효과는 친결혼 성향을 고려할 때 타당한 듯 하다. 세 번째 정책안은 친인구증가정책 성향임을 감안할 때 부당하지는 않지만 다소 간접적이다. 친가족적인 성향이 강한 거주자들의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에서 결혼율과 출산율에 대한 기대가 높을 수 있다. 제4칼럼에서 “12-3 공공주택배정시 가족 우선권”은 25~29세 연령대의 여성미혼자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12-5 도시거주자와 아동용 공원”은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만일 전자의 정책이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에게 낮은 우선권을 준다면 긍정적인 효과는 타당할 것 같다. 만일 후자의 정책이 공원을 데이트 장소로 여기는 도시 독신거주자들에게 혜택으로 여겨진다면 부정적인 효과 또한 타당하다. 제5칼럼에서 “12-2 아동전용 방 지원”, “15-2 비영리(NPO) 개인 훈련 지원”, “16-4 귀국자녀들 적응교육”은 30~34세

연령층의 미혼여성들 사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반면 “유아의료비 지원”은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이 부정적인 효과는 친가족 성향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긍정적인 효과는 이들 또한 친가족적임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이들 정책들인 저결혼율, 저출산율을 보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데에서 기인하는 역인과관계로 볼 수 있다.

제6칼럼부터 제8칼럼까지는 세 연령집단에 속하는 남성미혼율에 대한 가족정책변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6칼럼에서는 “13-7 '결혼중매인 지원”, “16-2 노년과 아동 교류 증진” 등은 20~24세 사이의 남성 미혼자들 사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반면 “10-4 소자화 대책을 위한 지방조례 입법”과 “13-1 결혼지원 자금”은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비록 긍정적인 효과가 타당하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는 그것이 친결혼 성향임을 가정할 때 타당치 않아 보인다. 이는 결혼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결혼중매인 지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역인과관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긍정적인 효과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인과관계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듯하다. 제7칼럼에서는 “15-2 비영리(NPO) 인력훈련지원”이 25~29세 사이의 남성미혼자들 사이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지만 “14-3 유아 의료비 지원”은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친가족 성향으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효과는 예상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역인과관계의 영향인 듯 하다. 제8칼럼에서는 “11-10 아동보육조언확대”와 “12-2 아동전용방 지원”이 30~34세 사이의 미혼남성들에게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11-1 국가표준 상회 아동 지원금”과 “13-4 유아 의료비 지원”이 부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만일 이들 대책들이 공공 결혼중개자 지원이나 신혼부부 주택지원 등의 친결혼 정책들 대신 시행되었다면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혼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들 대책을 통하여 나이든 어머니를 도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효과는 역인과관계에 기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대안의 효과는 인구 혹은 사회경제통제변수들의 효과에 비해서 훨씬 미미하다. 역(逆) 인과관계의 영향으로 정책효과는 반드시 일관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정책시행을 통해서 몇 가지 흥미로운 결과들을 관

찰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큰 지역효과 또한 지역적 특색과 지역거주자들 그리고 정책입안자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정책대안들 간의 교류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2005년도 출산율 추정치가 간행되면 정책효과들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국제이주와 관련 정책의 최근 동향

1. 국제이주 추세

한국, 대만, 중국본토로부터의 대규모 일본인 송환이 이루어졌던 2차 세계대전 직후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의 순수이민은 상대적으로 낮다. 대량송환 이후 남미 정착을 위한 일본인들의 이민, 그리고 한국과 대만으로부터의 외국시민들의 송환이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시작된 196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표 4 참조) “스미소니언 협약”(Smithsonian Agreement)에 따라 일본 엔화의 재평가가 있었던 1971년까지 소규모 이민이 이어졌다. 이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함과 동시에 일본인들의 외국인민도 시작되었고 같은 시기에 외국인들의 일본이민도 증가하였다. 1985년의 “플라자 조약”(Plaza Accord)과 그로 인한 엔화 재평가 이후 이 두 가지 추세는 가속화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100,000명 이하, 혹은 전체 인구의 0.1% 이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국적과 성별분포를 조사한 결과 순수이민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여성 순수이민자는 남성 순수이민자보다도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부터 남성 순수이민자가 늘어났는데 이는 부양가족 없는 일본인 해외근무 지배인 혹은 계약직의 증가에 기인하는 듯하다(Kojima, 2004a). 그러나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에 남성 순수이민자가 여성 순수이민자들보다 많았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 이후 여성 순수이민자가 추월하였는데 이는 일본으로의 국제이주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신부'의 증가에 기인한다. 2004년도에

여성인구가 증가한 반면 남성인구가 감소한 원인들 중의 하나는 결혼이주를 통한 여성 외국인 배우자의 숫자가 수천 명에 달한 것인데, 2004년도에 일본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는 12,071명이고 일본 여성과 결혼한 외국 남성은 3,228명이었다.

〈표 7-4〉 성별 국적별 순이민자수: 1960~2004

구분	전체			일본			외국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1960	50,178	29,992	20,186	14,022	9,047	4,975	36,156	20,945	15,211
1965	4,199	2,245	1,954	1,196	751	445	3,003	1,494	1,509
1970	9,822	11,913	2,091	5,991	10,095	4,104	3,831	1,818	2,013
1975	3,314	1,402	4,716	10,981	2,019	8,962	7,667	3,421	4,246
1980	7,738	10,517	2,779	4,175	3,936	8,111	11,913	6,581	5,332
1985	13,082	4,343	8,739	6,969	6,214	755	20,051	10,557	9,494
1990	2,319	7,367	5,048	29,758	12,397	17,361	32,077	19,764	12,313
1995	49,783	24,787	24,996	49,814	24,326	25,488	31	461	492
2000	37,589	2,130	39,989	49,849	36,182	13,667	87,708	34,052	53,656
2001	145,781	51,847	93,934	66,283	21,517	44,766	79,498	30,330	49,168
2002	50,788	60,492	9,704	103,870	77,783	26,087	53,082	17,291	35,791
2003	67,832	23,044	44,788	3,164	4,886	8,050	64,668	27,930	36,738
2004	35,076	30,572	4,504	77,095	49,179	27,916	42,019	18,607	23,412

자료: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원, 2006.

한국과 대만도 최근 3D(Dangerous, Dirty and Difficult) 업종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늘고 있고 많은 사업가, 학생, 그리고 가족들이 외국으로 출국하였다. 대만 사업가들 중 최소 50만명 이상은 중국본토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몇 년간 큰 숫자의 중국 본토, 그리고 외국인 신부들이 대규모로 대만으로 들어왔고 이는 정치적 이슈가 되어 왔다. 한국도 많은 한국계 중국인 신부들을 받아들였는데 이로 인하여 한국계 중국인 남자들 사이에는 결혼상대자 부족현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중국의 한국계 중국인들 사이에서 자손번식을 위하여 많은 숫자의 북한 여성들을 불법으로 중국으로 데려오는 현상을 야기하게 되었다. 과도한 숫자의 일본내 중국 이주자들 또한 한국계 중국인들인데 이

는 중국 내 결혼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였다.

2. 국제이주정책의 발전

국제이주 분야에 있어서 앞서 보인 바와 같이 정책은 비일본시민들의 국제이주 경향에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 7-5>에서는 최근의 성향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이주정책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 1991년의 수정된 이민통제법령의 시행으로 일본계 후손들은 일본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머무르며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남미 일본계, 특히 브라질계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2005년 말 현재 302,080명의 브라질인, 그리고 57,728명의 페루인이 일본에 등록되어 있다. 비록 일본계 브라질인들은 영구적으로 일본에 머무르게 되기가 쉽지만, 일본정부는 이들을 위한 아무런 체계적 이민 혹은 사회통합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는 이민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대중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정책 현안은 사회보장, 특히 건강보험의 혜택을 이들에게도 확대하는 것이다. 통계자료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계 브라질인 응답자 중 1/3 이하만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보험 프로그램의 혜택범위와 종류는 이들의 건강추구 행동과 의료기관에서 겪는 문제점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Kojima, 2005c).

또 다른 정책현안은 브라질 아동의 교육인데 비록 자신들과 부모들, 그리고 일본 대중의 그들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는 다를 지라도 이들은 영구적으로 일본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동아시아 문화를 공유하는 한국인들이나 중국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라틴아메리카 문화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배타적으로 느낄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들이나 그 아이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EU내 이민통합정책에 관한 기본원칙에서 EPC/KBF(2005)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교육을 위한 노력은 이민자들, 그리고 특히 그들의 자손들에 있어서 사회에서 보다 성공적이고 활발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있어서 결정적이고," "학문적 미성취, 조기 학교 중퇴, 그리고 모든 형태의 이민 청소년 비행은 회피해야 하며 대중 개입에 있어서 최

우선 영역이 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도시와 교외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도심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몇몇 도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동화되지 못하고 배제된 브라질 청소년들에 대한 이러한 노력은 매우 시급히 요구된다. 비록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노령화와 베이비버스트로 인한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한 외국 노동자 유입에 반대하기는 하지만 2004년도 내무성에서 시행한 2004 국민의견 설문조사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은 사회보장과 교육에 있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뒤쳐져 있다고 인지하고 있다. 비록 외국 배우자들은 비교적 더 환영 받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들 또한 사회통합정책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일본정부는 CBP의 기본원칙에 따라 통합정책의 입안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표 7-5〉 주요 국제 이민정책 대안 연보

년도	국제이민정책 대안과 관련 사건
1952년	이민법
1983년	100,000명의 외국인 학생 수용안
1985년	'플라자 합의'와 엔화 재평가
1988년 5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일본 정부 성내 위원회
1990년	이민법과 난민인정법 수정(일본인 자손)
1992년 5월	이민통제를 위한 1차 기본안
1993년	기술 인턴십 훈련 프로그램
1999년 8월	이민법과 난민인정법 수정(체류기간 경과자), 외국인등록법 수정
2000년 3월	이민법 2차 기본안
2001년 9월	미국 9.11 테러
2002년 5~6월	한-일 월드컵
2004년 6월	이민법과 난민인정법 수정(체류기간 경과자)
2004년 12월	인신매매 방지법 실행안
2005년 3월	이민법 3차 기본안
2005년 6월	이민법과 난민인정법 수정 (인신매매)
2006년 3월	다문화 융합 증진을 위한 MIC 연구위원회 보고
2006년 5월	이민법과 난민인정법 수정(개인 신분정보)

자료: 법무성 웹사이트 등

3. "국제결혼이주"가 인구통계에 끼칠 수 있는 효과

최근 대만,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에서 국제결혼이 급증추세에 있어서 중국본토와 동남아시아로부터의 "외국인 신부"가 대규모로 유입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2003년에 전체 결혼의 31.9%가 국제결혼이었는데, 정부 통제의 영향으로 2004년에는 23.8%, 그리고 2005년에는 20.1%로 감소되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2004년 국제결혼이 각각 11.4%와 5.5%였다. 대만에서의 국제결혼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대만 내무성에서는 2003년 국제결혼을 한 300,000만 쌍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그리고 중국본토인 배우자들의 생활여건에 관한 인구조사를 시행하였다.

<표 7-6>은 1970년과 2004년 일본에서의 국제결혼 추세를 보인다. 전체결혼의 숫자는 크게 감소하였지만 국제결혼 비율은 1970년의 0.5%, 1980년 0.9%, 2000년 4.5%, 그리고 2004년 5.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80년대 증가세는 일본 인화의 재평가와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의 활황에 주로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에서의 증가속도는 훨씬 빠르다. 1970년대 초반 국제결혼 대부분은 일본여성과 외국 남성, 특히 미국인과 한국인 남성들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주류는 일본 남성과 외국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었으며, 이것이 최근에는 전체 국제결혼의 80%에 육박한다. 외국인 신부의 대부분은 한국인이었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필리핀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이후 1990년대 말부터는 중국본토 여성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현재 한국과 대만의 상황과 유사하다.

Kojima(2006e)는 최근 2000년 일본 인구통계자료와 2003년 대만 외국인 및 중국본토 배우자 통계조사에 근거하여 일본과 대만의 외국인 부인을 맞이한 국제결혼 커플들 사이에서의 가족구성에 관한 상대적인 분석을 하였다. 일본의 경우 35세 이하의 외국인 부인들의 국적별 분포 조사결과 42.3%가 필리핀인, 그 다음이 중국인 (대만인까지 포함하여 21.3%), 한국인 (17.5%), 타이인 (7.6%), 브라질인 (2.6%), 미국인 (1.0%), 그리고 인도네시아인(0.8%)이었다.

일본 남성들의 신부들 중에는 타이완에서와 마찬가지로 동남아시아 국가 국

적을 가진 중국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남미 신부들 사이에서는 일본계가, 그리고 한국 신부들 사이에서는 한국계 영주권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결혼적령기에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이주하는 한국 신부들의 숫자도 많았다. 그래서 결혼이주는 자손번식을 통한 기여 이외에도 일본 인구의 증가와 회복에 기여하였다.

〈표 7-6〉 외국인 결혼 비율(1970~2004)

(단위: 건, %)

구분	결혼 수	C-B	H-J/W-F (W's Nationality)	H-J/W-F (H's Nationality)
1970	1,029,405	0.5	0.2(KR 72.9)	0.3(US 45.7)
1975	941,628	0.6	0.3(KR 61.9)	0.3(KR 55.0)
1980	774,702	0.9	0.6(KR 56.0)	0.4(KR 57.4)
1985	735,850	1.7	1.1(KR 46.8)	0.6(KR 53.7)
1990	722,138	3.5	2.8(KR 44.6)	0.8(KR 48.6)
1995	791,888	3.5	2.6(PH 34.6)	0.8(KR 41.0)
2000	798,138	4.5	3.5(CN 34.9)	1.0(KR 31.6)
2001	799,999	5.0	4.0(CN 43.6)	1.0(KR 31.9)
2002	757,331	4.7	3.7(CN 38.5)	1.0(KR 30.0)
2003	740,191	4.9	3.8(CN 36.7)	1.1(KR 27.4)
2004	720,417	5.5	4.3(CN 38.6)	1.2(KR 26.7)

자료: 후생노동성, 정부주요통계자료(Vital Statistics)

<표 7-7>에서는 일본의 경우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인다. 35세 미만의 외국인 부인들 사이에서는 결혼연령 대체 초산연령이 25.47세로서 남편의 34.27에 비하여 9.54년의 연령차가 난다. 양 배우자에 있어서 초산연령에서 부인의 연령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고, 대만에서처럼 배우자들 간의 연령차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다.

일본의 국제결혼 커플들 사이에서 기혼여성 출생자녀 평균 숫자는 1.03이었다. 이 수치는 국제 결혼한 커플들 사이의 출산율이 대만인들 사이에서의 출산율에 비하여 명백히 낮았음을 보여준다. 기혼여성 출산자녀에 있어서 부인의 연령이 갖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되었다. 출산수에 따른 커플 분포에서는

35.2%가 무자녀, 34.7%가 한 자녀, 23.5%가 두 자녀, 그리고 6.6%가 셋 이상의 자녀를 가진 것으로 나왔다. 일본의 경우에는 출산수가 낮은 경우 부인의 연령이 부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표 7-7〉 35세 미만 외국인 신부의 이민 지위와 연령에 따른 가족구성 유형 (단위: %)

부인 연령	첫 번째 아		평균 연령차	평균 출생아 수	출생아 수에 따른 부인 분포			출생순위의 남아 비율			
	출생 평균 연령				자녀 없음	1자녀	2자녀	3자녀 이상	첫번째 자녀	두번째 자녀	3번째 자녀
	부인	남편									
총계											
분석대상 수	47,128	48,326	74,607	74,607	74,607	74,607	74,607	74,607	48,361	22,500	4,941
계	25.47	34.27	9.54	1.03	35.2	34.7	23.5	6.6	51.4	51.6	50.9
25세 미만	21.30	32.28	12.22	0.60	52.4	36.7	9.6	1.4	50.1	49.6	58.0
25~26세	23.15	33.26	10.60	0.78	44.1	37.3	15.9	2.7	53.6	52.5	53.8
27~28세	24.28	33.88	9.95	0.95	37.1	36.6	21.3	5.0	51.0	52.0	51.9
29~30세	25.40	34.41	9.54	1.04	33.9	35.6	24.1	6.4	51.5	51.2	51.6
31~32세	26.37	34.66	8.96	1.15	30.7	33.7	27.3	8.4	51.5	51.6	52.5
33~34세	27.25	34.88	8.30	1.23	28.9	31.4	29.6	10.0	51.1	51.7	47.7
최근이민자											
분석대상 수	12,960	13,526	27,953	27,953	27,953	27,953	27,953	27,953	13,537	3,752	570
계	26.24	36.21	11.08	0.64	51.6	35.0	11.4	2.1	51.2	50.9	51.4
25세 미만	21.68	35.48	14.53	0.49	59.9	32.4	6.7	1.0	50.1	51.9	48.8
25~26세	23.83	35.56	12.21	0.59	53.5	35.7	9.5	1.3	54.1	52.4	57.7
27~28세	25.44	35.80	11.17	0.66	49.5	37.2	11.3	2.1	50.7	49.5	55.7
29~30세	26.98	36.36	10.40	0.69	49.0	35.9	12.8	2.2	51.9	52.2	52.0
31~32세	28.42	36.80	9.72	0.69	49.3	34.8	13.5	2.4	50.9	50.2	55.6
33~34세	29.30	36.98	8.95	0.71	50.2	33.1	13.5	3.2	49.8	49.8	40.8
비이민자											
분석대상 수	34,168	34,800	46,654	46,654	46,654	46,654	46,654	46,654	34,824	18,748	4,371
계	25.17	33.52	8.62	1.26	25.3	34.5	30.8	9.4	51.5	51.7	50.8
25세 미만	20.86	28.50	8.05	0.81	38.8	44.4	14.7	2.0	50.2	47.8	66.0
25~26세	22.59	31.35	8.67	1.01	32.7	39.2	23.6	4.4	53.2	52.6	52.4
27~28세	23.67	32.83	8.99	1.08	27.3	36.1	29.2	7.4	51.2	52.7	51.0
29~30세	24.80	33.65	9.05	1.24	25.3	35.4	30.5	8.7	51.4	50.9	51.5
31~32세	25.80	34.09	8.65	1.34	23.1	33.2	32.9	10.8	51.7	51.8	52.2
33~34세	26.83	34.45	8.09	1.40	22.0	30.8	34.8	12.4	51.4	51.9	48.3

자료: 2000년 인구조사자료(일본)

그러나 자녀수가 많은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것이다. 대만과는 달리 출산수에서 남아비율은 일본에서는 첫 아이의 경우 51.4%,

둘째 아이의 경우 51.6%, 그리고 셋째 아이 혹은 그 이후의 경우는 50.9%로서 정상적인 분포를 보였다. 이 비율은 부인의 연령이 높거나 낮은 경우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대만에서는 부인의 연령이 높은 경우에만 낮아졌다.

그러나 이주현황에 의해 구분한 결과를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최근 이주자들(일본 거주 5년 이내) 중에는 배우자들 간의 평균 연령 차이는 대만의 경우에서처럼 더 커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 이주자의 출산율은 비이주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결혼기간이 짧았다는 데에 기인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것이 현실이다. 출산수에 따른 외국인 부인들의 분포에 따르면 비이주자들 중 1/4만이 자녀가 없는 반면, 최근 이주자들 중 절반이 자녀가 없다. 최근 이주자들의 겨우 13%만이 둘 이상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비이주자들의 1/3에 불과한 비율이다.

자료에는 같은 세대에 속하는 일본인 커플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이주 외국인 부인들도 일본인 남편과 결혼한 일본 부인들에 비교해서 출산율이 다소 낮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비록 일본 남자들의 결혼율 증가와 일본 여자들의 결혼율 감소에 기여하기는 해도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다. 어떤 여성들은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 남편들과 결혼하기도 한다. 이 경우, 특히 남편이 회교도인 경우, 부인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하며 자녀들도 회교도가 되는데 이로 인하여 동화할 이슬람 사회가 제한된 상태에서 부인과 자녀들이 일본을 떠나게 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국적이나 종교가 무엇이건 외국인 남편과 그 가족전체가 일본을 이탈하는 것은 일본인들이 외국인 남성근로자에게(외국인 아내에게는 좀더 친화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그다지 친화적이지 못할 때에 더 심화된다.

제 4 절 인구관련 태도

사회 수준에서의 인구 변화는 개인 수준에서의 인구통계적 행위와 태도에 의

해 결정된다. 개인적인 태도는 정책입안과 시행에 포함될 수 있는 대중적 의견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1. 노령화(혹은 고령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태도

인구문제연구원(The Institute of Population Problems, 현재는 국립인구문제와 사회보장연구원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은 1990년과 199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성인 일본인구를 대표하는 견본집단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두 번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들에게 가까운 미래의 노령화가 “매우 좋다”, “좋다”, “대답하기 어렵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의 나누어 응답하게 하였다. 이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노령화를 늦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였다. <표 7-8>에서는 이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한 응답에서 “모르겠다”와 “무응답”을 제외한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을 각각 하나의 범주로 합친 후 응답자들을 성별로 나누어 교차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1990년에는 5.0%의 응답자들이 노령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42.9%가 중립적인 태도(“대답하기 어렵다”)를 보였다.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 응답자들에 비해서 중립적인 태도의 비율이 높았다. 노령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노령화를 늦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응답자의 52.1%) 중에서 4.5%는 이주 정책, 33.0%는 친인구증가정책, 9.3%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하였고, 5.3%는 불간섭에 찬성하였다. 여성 응답자들은 남성에 비해서 이민정책을 덜 선호하고 대신 친인구증가정책을 선호하였다.

1995년에는 3.4%의 응답자들이 노령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그리고 38.5%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1.57 충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1990년에 비해서 두 가지 태도에 약간의 감소가 있었다. 1990년도 설문조사와는 대조적으로 여성 응답자들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노령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노령화를 늦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본 응답자의 58.1%) 중에는 2.0%가 이민정책, 44.3%가 친인구증가정책을, 6.7%

가 두 가지 모두를 그리고 5.1%가 불간섭에 찬성하였다. 1990년 설문조사의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이민정책을 덜 선호하는 반면 친인구증가정책을 더 선호하였다. 또한 불간섭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이민정책과, 이민정책-친인구증가정책 두 가지를 동시에 선호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친인구증가정책을 선호하는 사람들을 1/3이 증가하였다. 이는 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 경제불황과 “1.57 충격”의 여파인 듯 하다(Kojima, 2000). 1990년과 1995년 사이의 변화는 1991년에 있었던 개정 이민통제법령의 시행과도 관련될 수 있다.

〈표 7-8〉 인구노령화와 그 지연책 선택에 대한 태도: 1990, 1995 (단위: %)

구분	분석 대상 수	긍정적 태도	중립적 태도	부정적인 태도			불간섭
				이주정책	친인구 증가정책	이주정책 + 친인구 증가정책	
1990							
전체	19,142	5.0	42.9	4.5	33.0	9.3	5.3
남자	9,648	5.7	41.4	5.8	31.2	10.5	5.4
여자	9,494	4.3	44.5	3.1	34.9	8.1	5.3
1995							
전체	19,797	3.4	38.5	2.0	44.3	6.7	5.1
남자	9,704	3.7	37.5	2.4	43.3	7.7	5.4
여자	10,093	3.0	39.5	1.6	45.3	5.8	4.8

주: 이 표는 두 질문의 답변을 합친 결과에 근거하여 작성됨.
 자료: Kojima, 2000.

2. 동아시아에서의 가치와 태도의 통합과 분기

UN 분류(2003)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서부유럽, 호주, 캐나다, 독일 등과 함께 고령초산, 고 무자녀 비율, 두 자녀 이상 갖는 성향의 저조함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에서의 출산율 급감은 출산율-관련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와 관련되어 있는 듯하다. 이는 또한 이들 국가들이 2단계 인구통

계 변이(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SDT))를 뒤늦게 경험하게 된 것과는 관계가 있다.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은 다수의 유럽 국가들처럼 초저 수준 출산율 국가에 합류하였지만, 한국과 대만은 여전히 출생시 높은 성비(최근 자료에 의하면, 110명의 남아 대 100명의 여아)에 반영되어 있듯이 강한 남아선호 사상이 유지되고 있어서 초저출산율 상황에서도 성비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일본, 한국, 대만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은 SDT를 겪고 있는데 동아시아에서의 출산율 감소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이는 또한 유럽에서의 SDT의 주된 요인들 중의 하나가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에 있었기 때문이다. <표 7-9>는 세 국가에서 시행된 설문조사에서 출산율-관련 태도에 있어서 연령별 차이를 보여준다. 첫 패널에는 결혼 후 자녀 갖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응답자들의 비율, 위로부터 두 번째 패널에는 소가족(0~2세 자녀)을 선호하는 응답자들의 비율, 그리고 마지막 패널에는 자녀들 중 남아 선호 응답자들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세 국가에서의 설문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자녀 불필요성에 대한 일치도는 상당히 낮게 나왔다. 그러나 세 국가 모두에서 연령에 따른 감소에 일치하는 성향이 보인다.

그러나 연령과 소가족 선호의 관계는 항상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연령에 따라서 소가족(2명 이하의 자녀) 선호도가 줄어들지만 일본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2000년과 2002년 일본에서는 연령에 따라서 감소하지만 60대에서는 약간의 증가세를 보인다. 60대에서의 증가세는 2001년도에도 관찰되었는데 이때는 증가세가 30대에서 가장 높았었다.

한국에서는 질문내용과 상관없이 남아선호는 연령에 따라서 증가했다. 대만에서는 30대에 있어서 남아선호가 가장 낮지만 그 이후 연령에 따라서 증가한다. 일본에서는 설문연도에 따라서 남아선호와 연령의 관계가 변화한다. 2000년과 2002년에는 20대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01년에는 60대에서 가장 높았다. 2000년에는 60대에서 가장 낮았고, 2001년에는 50대, 그리고 2002년에는 40대에서 가장 낮았다.

〈표 7-9〉 자녀 불필요성, 소가족 선호, 아들 선호에 대한 기혼여성의 동의 비율
(단위: %)

구분	일본			한국	(TW 유형)	대만
	2000	2001	2002	2002		2001
자녀 불필요성						
분석대상수	992	937	967	8,784	-	611
전체	46.9	46.6	45.2	8.2	-	50.9
20~29세	60.6	66.1	63.9	12.4	-	64.9
30~39세	57.4	55.3	58.0	9.3	-	54.8
40~49세	49.2	51.1	47.6	8.6	-	54.1
50~59세	40.0	39.9	39.8	5.3	-	38.7
60~64세	36.6	36.1	25.8	3.7	-	29.6
소가족 선호						
분석대상수	988	950	977	8,725	-	-
전체	32.4	34.0	36.4	67.6	-	-
20~29세	56.3	37.5	56.5	82.7	-	-
30~39세	45.0	51.6	40.4	71.8	-	-
40~49세	25.5	29.0	35.6	68.2	-	-
50~59세	25.4	27.1	31.8	59.0	-	-
60~64세	32.8	34.0	34.1	49.1	-	-
아들선호						
분석대상수	970	906	951	8,823	8,923	629
전체	22.6	26.8	24.6	47.4	25.2	42.1
20~29세	37.5	25.9	31.2	28.8	10.9	36.2
30~39세	22.7	25.9	26.8	33.7	12.9	28.8
40~49세	24.0	27.5	22.8	46.7	23.0	43.8
50~59세	19.9	23.6	22.9	67.1	42.6	55.4
60~64세	19.1	34.5	25.9	78.7	54.4	69.6

주: 한국인과 대만인들의 자녀 불필요성에 대한 답변은 일본측 답변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역전되어 있음.

자료: Kojima, 2005b.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여 필자는 최근 일본과 대만에서 50세 이하 기혼여성의 출생자녀 숫자와 직장생활의 관계를 비교하여 logit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과 자녀양육 이외의 다른 원인에 기인하는 직장 생활 장애요인은 일본과 대만 모두에서 무자녀 혹은 한 자녀만을 갖는 확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왔다. 결혼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직장 생활 장애요인으로 인하여는 한 자녀를 갖는 확률

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국의 경우 적절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을 때 유사한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다.

일본에서 동일한 자료(JGSS)를 이용하여 Yasuda(2006)는 2002년도 무직 부인들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 폐지 발표가 결혼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에 일시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끼쳤음을 발견하였다. 태도는 직접적으로 행동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 비친화적인 정책 대안 발표가 결혼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일본의 중앙 및 지방 정부들과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은 조심스럽게 GSS-유형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제 5 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인구통합적 측면

서구의 인구통계학 문헌들은 순수 이주 및 인구 자연증가에 있어서 결혼 이주의 기여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아마도 서구에서는 큰 중요성을 갖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는 몇몇 동아시아 국가들에 있어서는 인구증가에 기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인구유지에는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는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인구통계학적 통합에도 기여한다.

1980년대 초기 이후 장기적인 성비 불균형의 결과로 결혼시장에 있어서 여성의 상대적 부족으로 인한 결혼상대자 부족현상은 이미 한국과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시작되었다. 대만은 이미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제결혼의 상당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 Hudson & den Boer(2004)에 의하면 2025년에 중국에서는 3,000만 명의 남성초과 현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규모의 남성초과 현상이 인도에서도 추정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제결혼시장에 방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틀림없다. 이는 왜냐하면 동아시아 전체 결혼에 있어서 국제결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있어서의 인구통계학적 통합은 이미 진행중이다. 가까운 미래에 동아시아

아와 동남아시아는 국제결혼을 권장하고, 또한 결혼 파트너, 그리고 성노동자로서 여성의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합의를 보아야 할 것이다(Iguchi & Kojima, 1997).

동아시아에서든 유럽에서든, 인구감소, 노령화, 그리고 베이비버스트 현상은 친인구증가정책, 국제이주정책 또는 두 가지 모두를 통해서 대처할 수 있다. 비록 친인구증가정책은 개별국가 정부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지만, 국제이주정책은 초국가적인 단위 수준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 아마도 국제결혼을 포함하는 국제이주정책은 ASEAN+3(혹은 북한, 몽골, 그리고 대만을 포함한 ASEAN+6)과 같은 세계지역단체 혹은 연합에 의해서 보다 잘 입법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구, 가족, 그리고 사회정책들은 국민국가에 의해서 시행되지만 사회번식은 전 지구적인 과정임을 명심해야 한다(Folbre, 1994).

제 8 장 한일 양국의 초저출산의 원인과 국가정책의 비효율성

제 1 절 개요

1990년대 유럽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인 경우를 “초저출산”으로 정의하였다(Kohler et al., 2002). 21세기로 접어들어서 초저출산은 동아시아에도 퍼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에서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도에 1.08이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2005년도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5로서 출산율이 낮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보다 낮았다.

초저출산의 출현은 집합적 수준에서 사회경제학적 결정인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다양한 반전을 동반하였다. 1970년대와는 달리, 오늘날의 저출산 국가들은 여성의 낮은 노동력 참여도, 건실한 결혼 제도, 그리고 강한 가족 유대감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따라서 초저출산을 초래하는 것은 제 2차 인구변이이론(van de Kaa, 1984)에서 강조했던 개인화 및 세속화를 향한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출산 결정요인들과 초저출산 국가들에 있어서의 변하지 않는 가족 가치관 사이에서의 부조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초저출산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일본과 한국 사이의 구체적인 비교를 시도한다. 두 국가간의 최근의 변화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출산의 차이도 설명할 것이다. 속도 왜곡의 효과를 살핀 후, 출산율 감소를 결혼율과 결혼 출산으로 분리하고자 한다. 그 결과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욕구는 급격히 감소하지 않으며, 또, 초저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최근의 출산율 감소는 변화하는 가족 가치관이 아니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의 장애로 인한 것으로 설명한다. 자녀에게 소요되는 직접비용, 청년 구직 활

동의 어려움, 그리고 여성의 노동참여에 따르는 기회비용 등의 장애들이 검토된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 노력의 역사를 살펴 본 후, 아동수당, 육아휴직, 그리고 보육 서비스 등의 정책적 방안들의 효과를 검토한다. 일본측 문헌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방안들은 기대만큼 효과적이지 않다. 그 결과, 저출산과 초저출산 사이의 차이의 대부분은 정부의 노력보다는 문화적 요인들이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는데서 비롯됨을 밝히고자 한다. 출산에 관한 문화결정론적 견해는 출산이 초저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저출산 국가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문화적 요인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는 가족정책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며, 정부의 노력이 출산율을 적절한 저출산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회복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인다.

제 2 절 양(quantum)과 속도(tem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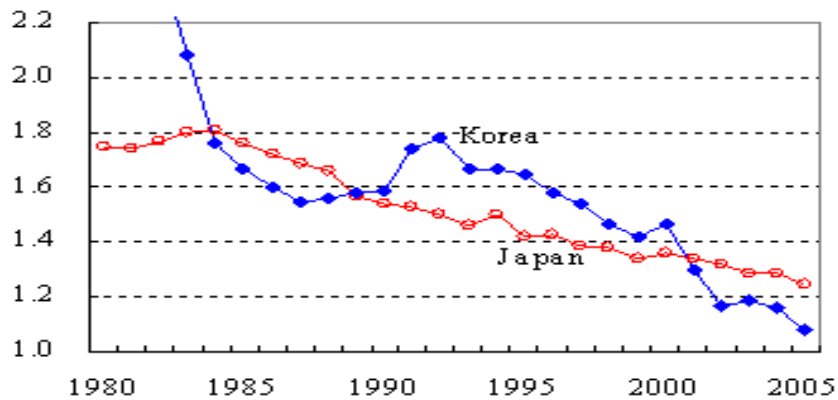
[그림 8-1]에서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합계출산율을 비교하고 있다. 비록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4년부터 1988년 사이에는 일본에 비해서 낮지만, 1990년대에 한국은 더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였다. 2000년도 즈문동이 봄이 일고 난 후,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Bongaarts & Feeney(1998)는 합계출산율에서 속도 왜곡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들의 수정 합계출산율(Adjusted Total Fertility Rate, ATFR)은 출산 지연 현상이 없을 경우 실현될 수 있는 가상의 합계출산율이다. 다음에서 $f_i(x)$ 는 특정연령별 i 의 출산순서로 본 출산율이고 r_i 는 출산시 평균연령의 연간 변화율이다. 전체 수정 합계출산율은 출산순서별 출산율(ATFR $_i$)의 합계이다.

비록 나중에 Bongaarts & Feeney(2000)는 자신들이 산정한 수정 합계출산율이 동년배 출산의 추정치 혹은 예상치가 아님을 밝혔지만, 그들이 처음으로 제시한 예들은 출산 동년배들(birth cohort)의 완결 출산(completed fertility)의 개념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정 합계출산율이 동년배 출산 측정방법으로 여겨지게 되자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었다(van Imhoff & Keilman, 2000; Kim & Schoen, 2000; Inaba, 2003). 그러나 Kohler & Philipov(2001)는 합계출산율의 수정이 동년배 출산을 참고하지 않고서도 정의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고, Zeng & Land(2001)는 수정 합계출산율의 확실성을 예시하였다. 수정 합계출산율이 동년배 출산 측정방법으로 오해되지 않기만 한다면, 수정 합계출산율은 자녀출산 지연효과를 제외한 타당한 기간 출산율 측정방법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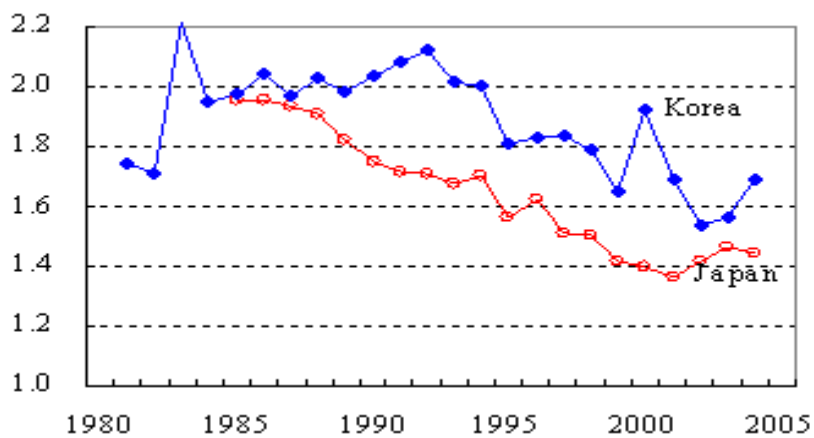
[그림 8-1] 일본과 한국의 합계출산율



[그림 8-2]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수정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일본보다 높다. 만일 자녀 출산 지연이 2004년에 중단되었다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69명으로 상승하였고,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45명으로 회복되는데 그쳤을 것이다. 그러므로 “왜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일본보다 자녀출산의 지연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연이 실제로 한국이나 일본에서 조만간 중단될 것 같지는 않다. 결혼과 출산 지연은 양국에서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장기적인 추세이다 (Suzuki, 2003). 또한 결혼과 출산의 지연왜곡과 단순히 나타난 수로만 보는 것은 출산율과 관련된 모든 결정요소들이 지연과 감소를 동시에 촉진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

는다. 그 대신 결혼율과 유배우출산율로 나눈다면 더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림 8-2] 일본과 한국의 수정 합계출산율



제 3 절 결혼율과 유배우출산율

혼외출산은 일본에서 매우 희귀하며, 2004년도 전체 출산에 있어서 1.99%만을 차지한다. 비록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혼외출산은 한국에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은기수, 2003). 그러므로 일본과 한국에서의 출산은 거의 모두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일본에서 1990년대까지 특정 연령별 유배우출산율(AMFRs, Age-specific Marital Fertility Rates)은 결혼율과 유배우출산율로 나누어 조사되었다(Atoh, 1992; Kong, 1995; Tsuya & Mason, 1995; NIPSSR, 1997). 만일 $f(x)$ 가 일반 특정 연령별 출산율이고 $\phi(x)$ 가 현재 결혼한 여성들의 비율이라면, AMF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AMFR을 이용한 분해분석은 사회 전반에 결혼 지연 추세가 일고 있는 경우

특별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유배우출산율은 연령뿐만 아니고 결혼의 지속에도 종속되는데, AMFR을 이용한 분해분석은 연령대 간의 결혼의 지속의 변화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축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 인구통계 전문가들(Hirosima, 2001, 2003; Kaneko, 2004a, 2004b)은 최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으나, 한국 인구통계 전문가들(Jun KH, 2002; Eun KS, 2003; Kim SK, 2004)은 여전히 AMFR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 인구통계 전문가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방법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Hirosima(1999)는 실제 기혼 여성들과 기혼 여성들의 평균 자녀 숫자의 비율을 활용하여 결혼율 감소와 유배우출산율 감소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Kaneko(2004a)는 결혼 지연과 산정된 새 특정연령별 출산율에 따라서 특정 연령별 출산율 $f(x)$ 를 수정하였다. Kaneko(2004b)는 연령을 종속변수로 삼아 패리티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ith parities)을 통해 분해하였다.

이 연구들은 특정연령별 출산율에 계속 의존하고 있지만 Iwasawa(2002)는 결혼 당시 실제 평균 자녀 숫자를 도입하였다. 자녀출산이 끝나는 β 세까지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또한 a 세에 결혼한 여성이 β 세까지 $N(a)$ 명의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가정하자. 만일 $\rho(a)$ 이 결혼 밀도 함수 라면, 실제 기혼여성들 사이에서의 실제 평균자녀수(EAC, Eventual Average number of Children)는 다음과 같다.

만일 $N(a)$ 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연령대의 $\rho(a)$ 를 적용한다면, 유배우출산율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상의 실제 자녀 평균 숫자를 얻게 된다. 완전 출산율(CFR, Complete Fertility Rate)은 더 이상 출산 계획이 없는 어떤 동년배 집단의 평균 자녀 숫자로서, 실제 자녀 평균 숫자와 β 세 기혼 여성들의 비율과를 곱한 것이다. 가상의 실제 자녀 평균 숫자와 기혼 여성들의 비율을 곱한 수치와 실제 완전 출산율을 비교해보면 완전 출산율에 있어서 결혼율의 효과를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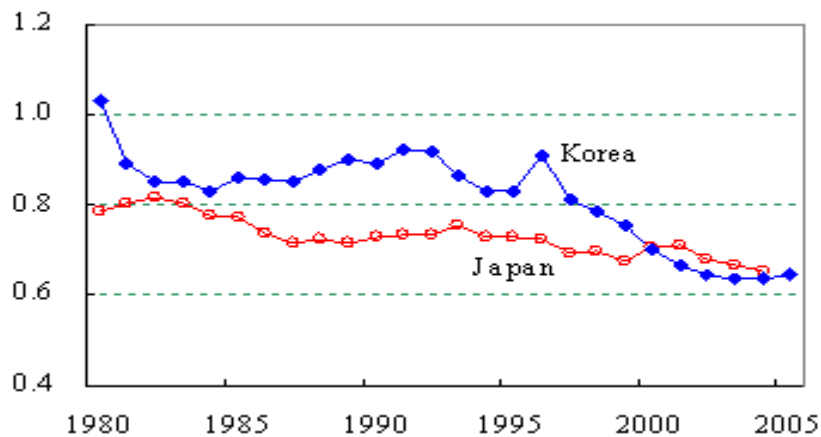
이 방법은 가상의 동년배 집단에 대한 $N(a)$ 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 출산율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 여기서, 유배우출산율이 결혼 당시 연령보다는

결혼지속기간에만 종속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Iwasawa가 제안한 방법을 단순화 시킨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다. t 년도에 x 세 연령대의 결혼지속기간 분포는 여성의 초혼율의 년도와 연령($\phi(t,x)$)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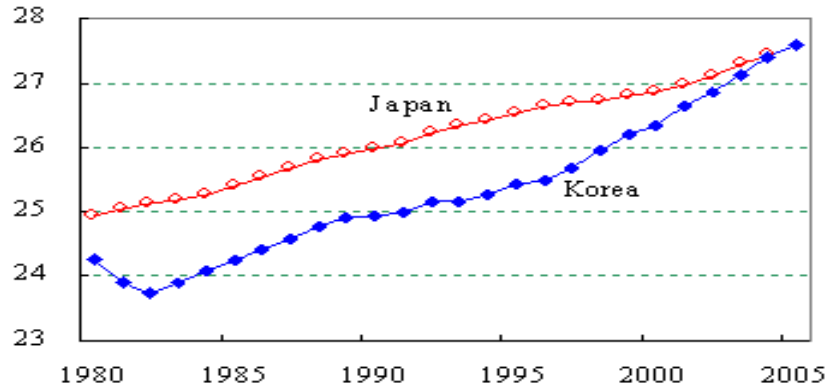
만일 $m(y)$ 가 결혼지속기간 동안의 평균 출산율이라면, 가상의 특정 연령대 출산율은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f^*(t,x)$ 를 요약하면 결혼율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때 가상의 합계출산율을 알 수 있다. 이를 실제 합계출산율과 비교함으로써, 결혼율 감소의 효과를 짐작할 수 있다. 특정 연령별 초혼율과 출산율은 일본과 한국에서 출간된 주요 통계와 최근 인구예측에 근거하여 산출되었다. [그림 8-3]과 [그림 8-4]는 각각 일본과 한국에서의 합계초혼율(TFMR, Total First Marriage Rate)과 평균 초혼연령(MAFM, Mean Age at First Marriage)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도표에서는 비록 한국의 결혼율이 급격히 감소하긴 하여 일본 수준이 되었지만,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의 출산율보다 낮게 만들 정도는 아님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볼 때 두 국가 사이에서의 최근 출산율 차이를 초래하는 것은 결혼율이 아니고 유배우출산율임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림 8-3] 일본과 한국의 합계초혼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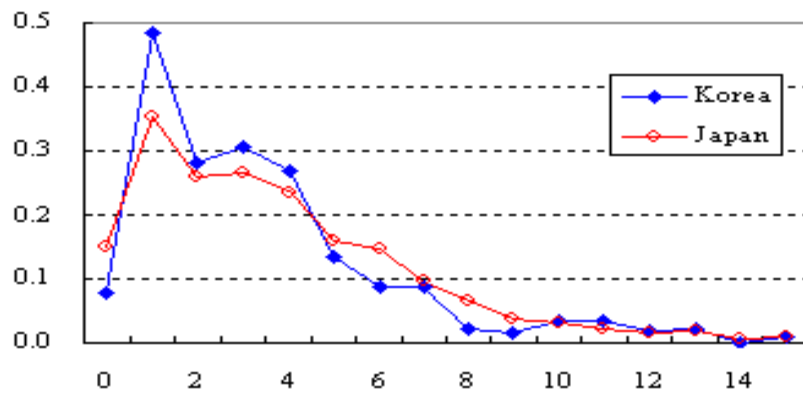


[그림 8-4] 일본과 한국의 평균 초혼연령



이를 계량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방법을 사용하여 가상 합계 출산율을 산출하였다. [그림 8-5]는 이 방법을 적용할 때 필요로 하는 결혼지속 기간별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 비율은 두 국가에서 시행한 견본 설문조사인 일본 국가인구사회보장연구원이 시행한 2002년도 제 12차 일본 국가 출산율 설문조사와,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2000년도 출산율과 가족건강 설문조사에서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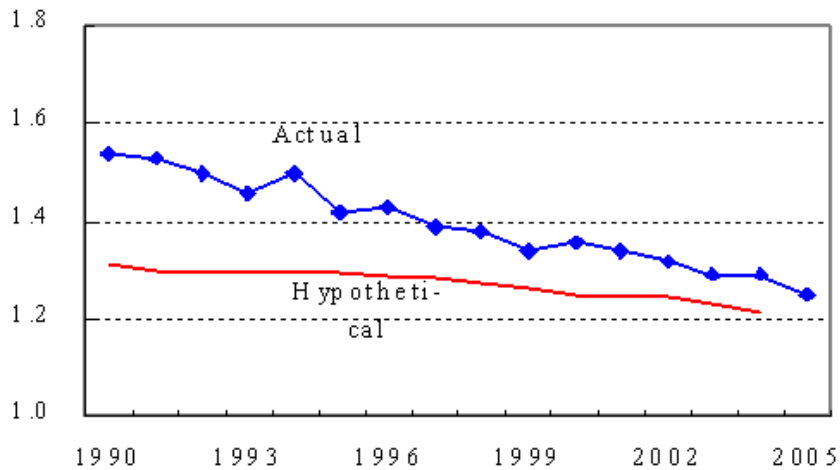
[그림 8-5] 일본과 한국의 결혼지속기간별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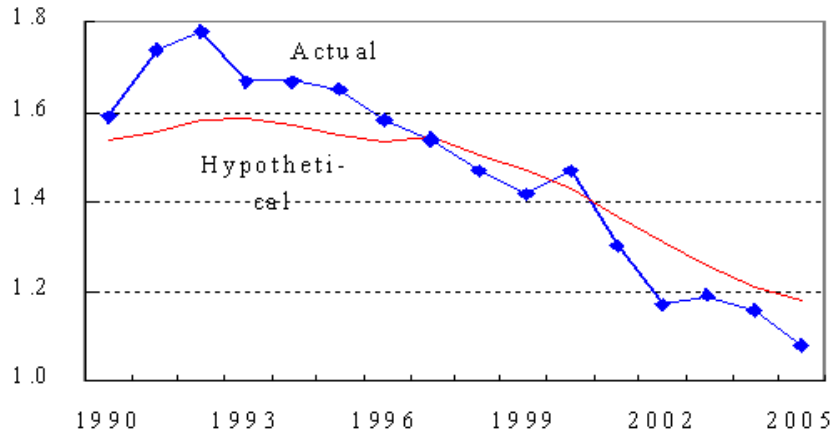
가상 합계출산율 산정에 있어서의 가정은 첫째, 유배우출산율은 연령 보다는 결혼지속기간에 종속된다. 둘째, 임신가능 연령 중 이혼 혹은 사망하지 않는다. 셋째, 혼인신고가 지연되지 않았다. 넷째, 결혼 후 10년 이상 된 부부들은 출산을 하지 않는다 등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가정은 출산율에 있어서 과장된 결과를 낳을 것이고,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가정은 축소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만일 해당 기간 중 전체 추정 오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면 가상 합계출산율과 실제 합계출산율 비교를 통해서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림 8-6]과 [그림 8-7]은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의 그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합계출산율은 결혼율과 유배우출산율 감소의 결과이지만, 결혼율에 변화가 없다고 할 때, 가상 합계출산율 경로가 출산율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분명히, 두 개의 요인들은 양 국가에서의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였다.

[그림 8-6] 일본과 한국의 가상 합계출산율



[그림 8-7] 일본과 한국의 실제 합계출산율



<표 8-1>은 3년 단위로 합계출산율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실제 합계출산율이 1.54에서 1.29로 16.2%가 감소하였다. 이 수치 중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은 결혼율 감소에 기인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결혼율 감소의 영향은 커지는 경향이 있다. 1990년부터 2004년 사이 한국에서는 27.0%(1.59에서 1.16으로)의 합계출산율 감소가 있었다.

〈표 8-1〉 합계출산율의 감소율

구분	일본		한국	
	실제 감소율	가정한 감소율	실제 감소율	가정한 감소율
1990~'95	-7.8	-1.3	3.8	0.5
1996~2000	-4.2	-3.4	-10.9	-7.6
2000~'04	-5.1	-2.7	-21.1	-15.5
1990~2004	-16.2	-7.3	-27.0	-21.5

이중 약 4/5는 결혼율 감소에 기인하였다. 결혼율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기간 선택에 민감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왜냐하면 출산율이나 결혼율 모두 단조롭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한국에 있어서의 급속한 출산율 감소(21.1%)는 이 기간 동안 합계출산율 감소가 9.7%에 그친 것을 감안한다면 결혼율 감소에 대부분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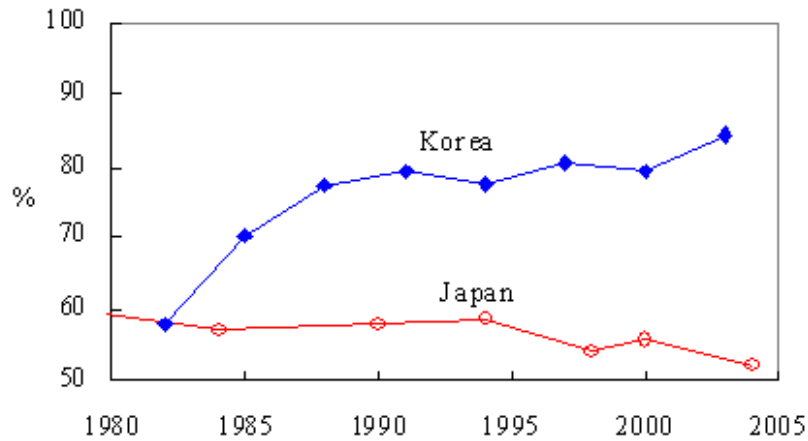
제 4 절 출산율 결정요인

1. 근사 결정요인들

결혼이 출산율 감소 전체를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유배우출산율에 있어서 현저한 감소를 초래한 유사 결정요인들이 있게 마련이다(Bongaarts, 1978). 이러한 결정요인들에 대한 시계열 자료는 일부밖에 없다. [그림 8-8]에서는 일본의 매일신문에서 시행한 가족계획 설문조사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시행한 국가출산율 설문조사에서 발췌한 부인들의 피임 비율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피임실천율이 1980년대에 급격히 증가하여 일본보다 훨씬 높았다. 한국 내에서의 피임실천율은 포화상태에 도달하여 더 이상 변화가 거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2000년과 2003년 사이 더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최근 출산율 감소에 있어서 피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일본에서는 인공임신중절과 사산이 감소하여 왔다. 출산 후 1년 반이 지나면 다수의 일본 엄마들은 모유수유를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인공임신중절, 태아 사망, 혹은 산후 월경불순 등은 최근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지 못한다. 나머지 유사 결정요인들은 성교빈도 및 불임증이다. 장시간 노동 혹은 강화된 모친-자녀 연대 등으로 인하여 성교를 하지 않는 부부들이 증가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또한, 결혼연령 증가, 환경 호르몬, 그리고 성병으로 인한 불임 증가를 가정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을 계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필요한 자료가 부족한 까닭에 무척 어렵다.

[그림 8-8] 일본과 한국의 기혼부인 피임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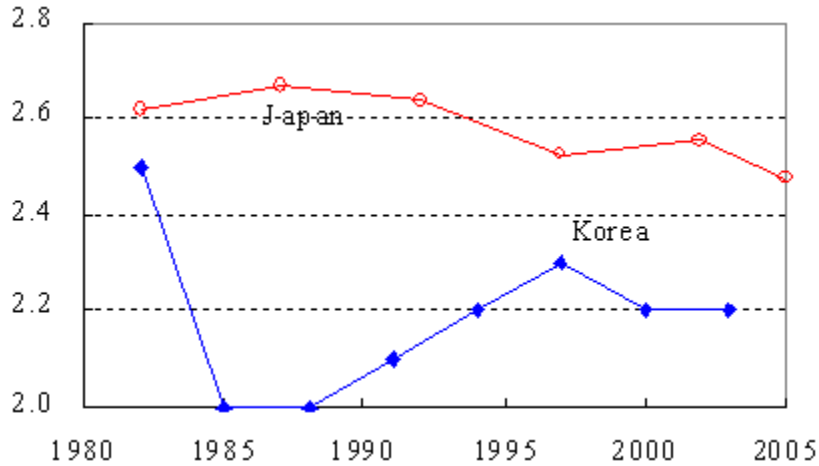
자료: NIPSSR, Kim et al., 2004b.

2. 자녀에 대한 수요

[그림 8-9]에서는 양국가의 국가 출산율 설문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이상적인 자녀 숫자를 비교하고 있다. 이 방법은 수입 제약을 고려하지 않은 수요로 볼 수 있다. 비록 한국의 부인들은 일본 부인들보다 지속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였지만, 이러한 차이의 일부는 설문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한국 부인들은 개인의 희망사항을 밝혔지만 일본부인들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답하였다.

1차 인구통계 전이 기간중 보이는 한국 부인들의 자녀수요 감소는 대단히 이상적이다. 이상적인 자녀수는 1960년의 5.0에서 1984년 2.0으로 감소하였다(전광희, 2002).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강력한 정부 주도의 가족계획 캠페인의 영향이었는데, 이 감소세는 한국 정부가 매우 강력한 인구억제정책을 철회하면서 다소 회복되었다(Yamaji, 2003).

[그림 8-9] 일본과 한국의 이상자녀수 비교



자료: 김승권 외, 2004.

그러나 1997년 이래, 한일 간의 차이는 적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혹은 설문지 탓인지를 밝히기가 어렵다. [그림 8-9]에서 참고한 김승권 외(2004)에 의하면, 한국 부인들의 이상적인 자녀수는 2.2명으로서 2000년과 2003년 사이에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최근 급격한 유배우출산을 감소의 원인은 수요 자체보다는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서의 장애물을 찾는 것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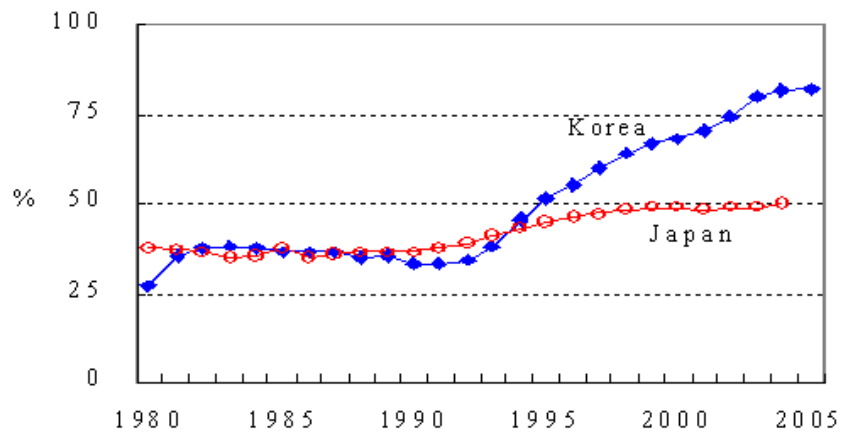
3. 직접 자녀양육비용

한국에서 가장 큰 장애는 자녀양육비용으로 보인다. OECD 통계에 의하면, 한국에서 교육기관 지출비는 2001년도 GDP의 8.2%에 달하여 관련 자료가 확보된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높았었다. 일본의 수치는 4.6%로서 27개 국가 중 21위였다. 한국 여성들은 인력투자에 대한 막중한 부담을 느낀다. Chang HK (2004)에 따르면, 출산을 감소에 대한 가장 흔한 대답(선다형 설문에서)은 “교육

비가 너무 높다”(51.6%)와 “교육 이외의 자녀양육비용이 너무 높다”(52.8%)이다. 2003년도 국가출산율 설문에서는 “자녀양육과 공공교육비”, 그리고 “사설교육비”가 가사비 지출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김승권 외, 2004).

[그림 8-10]은 최근 한국에서의 “교육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과잉공급으로 말미암아 교육에 따른 수입차이를 좁혔고 또한,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구직이 어렵게 되었다(Lee CY,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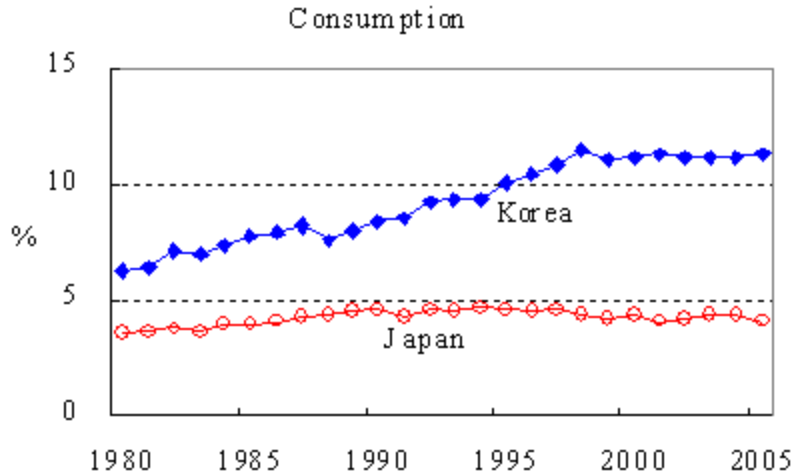
[그림 8-10] 일본과 한국의 대학 입학비율



자료: NIPSSR, NSO.

[그림 8-11]은 가계비용중 소비액의 비중으로 본 교육비를 비교하여 보여준다. 1980년에 한국은 이미 그 비중이 커졌으며 차이는 더욱 커지고 있다. 비록 대학 등록율만큼 성장률이 높지는 않지만, 실제 체감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최근 출산율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8-11] 일본과 한국의 가계소비 중 교육비 비율



자료: NIPSSR, NSO.

4. 여성 노동력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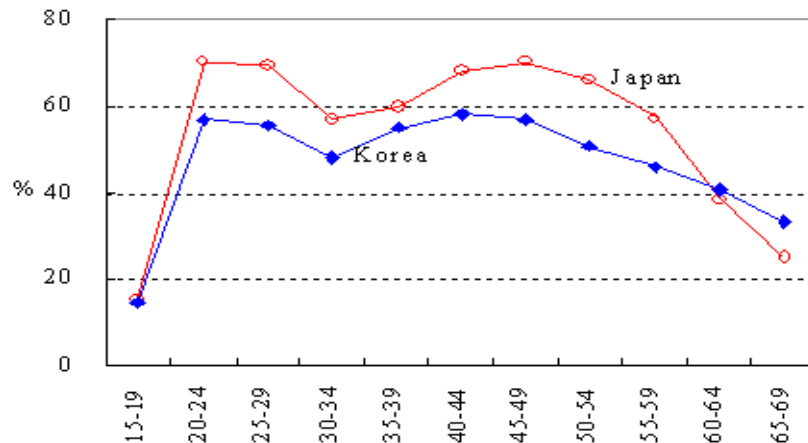
Becker(1991)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이후 가족 변화의 주된 요인은 여성의 경제력 상승이었다. 여성들의 구직 기회가 확대되면서 시장활동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고 자녀 기회비용도 증대하였다. 노동의 성-기반 분배가 줄어들면서 결혼의 장점이 감소되고 이혼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호주, 동거, 혼외출산의 증가를 초래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여성의 노동력 참여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부인이 직장을 갖는 것이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한다는 수많은 경험적인 증거들이 있다(Asami et al., 2000; Oi, 2004; Oyama, 2004; Sasai, 1998; Shichijo & Nishimoto, 2003; Tsuya, 1999; Fukuda, 2004; Fujino 2002; Yashiro, 2000; Yamagami, 1999; Yamaguchi, 2005). 그러나 거시적 수준에서는, 개발국가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과 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는 1980년대에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되었다

(Engelhardt & Prskawetz, 2005; Billari & Kohler, 2002; Atoh, 2000). 집합적인 수준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직장과의 양립에 있어서 이 둘 사이의 이질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양립성이 높은 국가에서는 출산율과 여성 노동력 참여가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양립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여성 노동력 참여의 증가는 출산율을 초저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는 직장과의 낮은 양립성은 연령대별 참여율이 M형 곡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그림 8-12참조). 비록 M형 곡선은 뉴질랜드에서도 볼 수 있지만, 25~29세 연령대와 30~34세 연령대 사이의 감소는 일본에서 가장 급격히 일어난다(Furugori, 2003). 그래서 많은 일본 여성들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가 있지만 자녀출산을 위해서 포기해야만 한다. 이러한 비양립성은 성역할에 대한 태도, 가사에 대한 남편의 낮은 참여, 노동시장의 특성, 그리고 가족친화적정책의 미발달 등에 기인한다(Atoh & Akachi, 2003; Meguro & Nishioka, 2000). 한국에서는, M형 곡선의 최근 변화가 과연 양립성의 개선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Park KS & Kim YH, 2003).

[그림 8-12] 일본과 한국에서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성평등에 관한 한, 일본과 한국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UN 개발프로그램에서 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는 입법, 직업, 그리고 수입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비율을 의미하는 여성권 부여 기준(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5년도 0.534로서 28개 OECD 회원국가들 중 25위이다. 일본 남편들은 미국 남편들(Tsuya & Bumpass, 2004)이나 스칸디나비아 국가 남편들(Tsuya, 2003)에 비해서 아주 적은 시간을 가사에 쓰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간한 시간활용과 여가활동 설문조사에 의하면 1981년과 1996년 사이에 남편들의 가사일 참여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Atoh, 2000, p.205) 일본보다도 낮은 한국의 GEM 점수(0.479, 27th)를 고려하면 심각한 양립성 부재 문제가 남게 된다.

5. 노동시장 여건과 경제적 불확실성

급속한 경제발전 시기에 성장한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의 생활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되면, 젊은이들을 위한 노동시장 여건은 악화되게 된다. 기대하는 생활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되면 젊은이들은 결혼과 자녀출산을 망설이게 된다(Easterlin, 1978; Yamada, 1999).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경제는 불황이었다. 실직률은 1990년의 2%에서 2003년 5%로 급증하였다. 악화된 노동시장 여건은 젊은이들의 경력달성을 심각하게 좌절시켰다. 안정된 직업을 구한 사람의 비율은 1988년도 77.8%에서 2004년도 55.8%로 감소하였고, 무직 혹은 임시직을 구한 사람은 동일한 기간에 9.4%에서 24.6%로 증가하였다. 상급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6.5%에서 11.8%로 증가하였다.

Nagase(2002.)에 의하면, 비정규직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 있어서 초혼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 준다. 24~27세 연령대 정규직 여성들에 있어서 초혼의 위험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이 가속현상은 비정규직 여성들에게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Takayama 외(2000)에 의하면, 아버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은 젊은 남성들은 결혼을 기피한다. 과거에는 30대 남성의 수입은 아버지 수입을 상회하여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과 결혼하게끔 동기유발을 해주었다. 그러나 최근,

나이든 남자와 비교하여 젊은 남자들의 상대적인 수입은 크게 감소하였고, 젊은 남성들은 결혼 상대자로서 매력을 잃게 되었다.

최근 일본의 경제불황은 결혼율뿐만 아니라 유배우출산율까지도 저하시켰다. 유배우출산율에 있어서 남편의 수입이 지니는 긍정적인 효과는 그 동안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Yamagami, 1999; Fujino, 2002; Oyama, 2004; Morita, 2006). 이러한 맥락에서 월간 노동통계 설문조사에서의 임금지수는 1997년과 2003년 사이에 6.7% 하락하였다. 경제불황은 수입수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미래 예상 수입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내각부에서 실시한 일련의 의견 설문조사 결과는 개인의 생활에 대한 비관적인 기대치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Suzuki, 2005). 2005년 6월, “내 삶은 더 악화될 것이다(my life will go worse)”라는 답의 비율은 “내 삶은 더 개선될 것이다(my life will go better)”라고 긍정적인 응답은 18%나 초과하였다. 미래에 대한 이러한 불확실성이야말로 최근 일본에서의 초저출산율의 주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1990년대에 경제불황을 겪는 동안 한국은 1997년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은기수(2003)는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재구조화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였고, 미래의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 높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로 결혼율 감소를 통한 출산율 감소를 야기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삼식 외(2004)는 최근 낮은 결혼 성향이 경제위기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다고 제안하였다. 비록, 적절한 시계열 자료는 없지만, 일본에서와 같이 결혼율과 유배우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준 미래에 대한 비관적 태도가 증가할 수 있다.

제 5 절 정부노력의 비효율성

1. 일본과 한국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

1989년 일본 정부는 1.57명이라는 역사적으로 낮은 합계출산율에 놀라서 1990년에 출산율 감소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간 회의를 가졌다. 1991년 전체 예산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급기간은 단축하였지만 아동 수당의 액수가 상향조정되었다. 육아휴직법(전 “자녀 육아 휴직과 가족 부양 휴직을 포함하는 자녀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직장인들의 복지에 관한 법령”)이 1991년 5월 입법되어 1992년 4월 시행되었다. 1994년 12월, 1994년부터 1999년까지의 기간에 시행될 천사계획(the Angel Plan)을 공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과 육아 사이의 양립성 확보와 공공 육아 지원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의 일부로 수입 지원 및 사회보장비용 면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육아휴직법 수정안이 1994년 제안되었다. 1997년에는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를 위해서 만족할만한 아동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중요한 개혁이 가해졌다.

1999년 12월, 일본정부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될 신 천사계획(the New Angel Plan)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성평등과 근로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하였다. 2000년 5월 육아휴직법과 아동수당 법령 수정안에서는 휴직 기간 중 월급의 4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아동수당 지원은 1991년 규정된 3세 이하에서 취학 전 아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2003년 7월 입법된 차세대법(The Next Generation Law)에서는 지방정부와 대회사들이 차세대 양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동시에 아동 감소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법령을 통하여 내각부에서는 급속한 출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2004년 4월에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아동수당 지원 확대가 법제화되었다.

2004년 12월 일본 정부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 동안 시행될 신신천사계획(the New-New Angel Plan)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육아 지원과 성

평등 개선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회사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추가로, 이 문서는 젊은이들의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2006년 회계연도부터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되었다. 추가로, 어머니 노동 시장 재진입 지원 계획도 시작되었다. 이 계획에는 어머니들이 직업학교에서 재취업 과정을 밟는 다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어머니를 돕는다거나, 또는 전국적으로 “어머니 직업 갖기”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대안들이 포함된다. 2006년 6월, 정부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정책에는 출생 후 첫 3년간 아동수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하고, 출생시 1회에 한해서 현금지원 혜택을 주는 데 있어서 지불방안 개선, 임신기간 중 의료진료 비용 지원, “가족의 날”과 “가족의 주일” 등을 제정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아마도 장기적으로 지속된 고출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출산제한 정책에서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신속하지 못했다. (Kojima, 2005, p. 4) 2002년도 1.17이라는 합계출산율에 충격을 받아서 한국 정부는 출산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에 나섰다. 2004년 1월, 청와대 특별위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국가 전략”을 출간하였다. 이 문서에서는 노동시장, 노인복지, 그리고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졌다. 모성휴직 기간 중 임금상승, 부모휴직 기간 중 대리 사원 채용 지원, 불임 치료비 지원, 그리고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녀 있는 집안의 가사일 돕기 등의 정부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아동수당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고, 이를 도입하는데 부정적이었다. 한편, 정부는 국립 탁아소를 2004년도 5.3%에서 2008년도에는 10%로 그 비율을 늘린다는 구체적인 목표수치를 정하였다(Seo MH, 2004).

2004년 6월, 여성부와 노령화 미래 사회 위원회는 “미래인력 육성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육아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다. 모성휴직을 활성화하고 영아가 있는 집안에는 보모를 파견하며, 육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운영, 그리고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특별 과정 창설 등과 같은 것들이 제안되었다.

2005년 8월, 정부는 201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1.6으로 높인다는 목표수치를

천명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출산 노령화 사회 특별위원회는 자녀출산과 노인수발을 위한 특별 정책안들을 세워서 “희망한국 21”이라는 기초안을 2006년 1월 공표하였다. 이 기초안은 다양한 이익집단 대표들의 검토를 거쳐서 2006년 7월 승인되었다. 이 문서는 어린이(새로)와 노인(마지)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에서 “새로마지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다.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탁아 비용 정부지원, 다양한 공공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젊은 부부 주택 지원, 불임 치료비 보조, 가족 친화성과 성평등 문화 장려 등의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2. 아동수당

일본에서는 아동수당이 1971년부터 지원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이후, 첫째 및 둘째 자녀에게 월 5,000엔씩을, 그리고 셋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000엔을 지원해주고 있다. 2000년 5월까지 3세 이하의 자녀에게만 지원되었다. 2000년 6월부터 2004년 3월 사이에 모든 유치원생들까지 대상에 포함하게 확대되었다. 2004년 4월, 연령제한이 초등학교 3학년으로 상향조정되었다. 2006년 4월, 연령제한이 다시 12세 이하의 모든 초등학생들을 포함하도록 상향조정되었다. 일본의 아동수당은 자산조사 방식이다. 2003년 2월에는 6,880,786명의 아동들이 아동수당 혜택을 받았다(NIPSSR, 2005). 이는 전체 유치원생 숫자의 85%에 해당한다. 그러나 약 15%의 아동들은 부모의 고액수입으로 인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의 새로마지플랜은 “아동수당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비록 열린우리당에서 둘째 자녀 이후의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을 지원할 것을 제안하기는 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부 위원들이 회의적이기도 하고 또 아동수당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하였다 (E-Daily, 7th, June, 2006).

〈표 8-2〉 일본내 아동수당의 효율성

구분	Yamagami	Oyama	Morita
남편 수입증가	연간 10,000엔	월 10,000엔	표준
부분 회귀분석 계수	0.00244	0.01	0.043
아동숫자를 0.1명 증대시키기 위한 아동수당 액수	34	100	946

아동수당 제도의 효과는 남편에게 추가 수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평가될 수 있다. 부인의 수입은 수입효과와 기회효과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그 일부로 봐서는 안 된다. <표 8-2>에서는 세 논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Yamagami와 Morita의 경우에 남편의 수입은 10% 수준에서 유의미하지만, Oyama의 경우에는 1% 수준이다. Yamagami의 출산율 함수는 연간 남편 수입이 10,000 엔 증가하게 되면 자녀 숫자가 0.00244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Oyama의 분석에 따르면 월 10,000 엔의 수입증가는 자녀 숫자를 0.01 증가시킬 것으로 본다. Morita의 OLS 결과는 남편 수입에 대한 출산율 탄력성을 0.043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효과는 매우 작아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액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 표는 또한 아동 숫자를 0.1명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아동수당의 액수도 제시해주고 있다. 만일 Morita의 탄력성이 정확하다면, 어떠한 경제적 지원 정책도 출산율에 유의미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비록 Yamagami의 계수에 의존한다고 해도, 합계출산율을 0.1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을 월 34,000 엔씩 지급해야 한다. 스웨덴에서는 16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월 950크로나(15,000 엔)가 지급된다(METI, 2005). 그러므로 필요한 금액은 가족수당을 매우 풍족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웨덴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두 배 이상의 금액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가계수입이 출산율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이삼식 외, 2004). 만일 이 결과가 옳다면, 아동수당, 세금감면, 혹은 1회에 한한 현금 우대혜택 등을 포함하는 경제지원 대책들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반면, Lee IS (2005, p.79)의 다중회귀모델은 월 10,000원의 가계수입 증가는 자

녀 숫자를 0.001 늘려 줄 것이라고 본다. 합계출산율을 0.1 늘리기 위해서 월 100,000원의 보조금이 필요하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둘째 이후의 자녀에게 월 10,000원씩을 지급하는 자산조사 제도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Money Today, July 14, 2006). 2004년에 전체 출산에서 약 49%가 둘째 혹은 그 이상이었었다. 만일 월 100,000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면, 합계출산율은 $0.01 \times 0.49 = 0.0049$ 증가하게 될 것이다. 만일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대로 보조금이 엄격하게 자산조사 방식으로 집행된다면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3.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1991년 5월 일본의회에서 승인되어 1992년 4월 시행되었다. 비록, 이 법령에 따르면 여성 직장인 혹은 남편이 자녀 첫 생일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현금혜택이 없었다. 1994년 6월의 수정안에서는 월급의 25%에 해당하는 현금혜택과 휴직기간 중 사회보장 부금 면제 혜택을 합법화하였다. 이러한 수정안들은 1995년 4월 시행되었다. 2001년 11월 수정안에서는 현금혜택을 40%로 올려서 2002년 4월 시행되었다. 현 제도 하에서는 휴직기간 중 30%가 매월 지급되고 10%는 직장으로 복귀한 후 지급된다. 비록 자녀의 첫 생일까지 휴직이 기본적으로 허용되긴 하지만, 공무원들은 셋째 생일까지 휴직할 수 있다. 다른 직장인들은 맡길 탁아소가 없을 경우, 6개월까지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기간 동안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현금혜택은 없다.

2003년도 여성 취업관리 기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2회계연도 중 출산한 여성 직장인들의 73.1%가 육아휴직을 하였다. 그러나 출산 이전 퇴직한 많은 여성들은 분모에 포함되지 않았다(Atoh, 2005). 1년간 지속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지 않거나 복직계획이 없는 여성 직장인들 또한 배제되었다. 2003년도에 육아휴직 기간중 현금혜택을 받은 경우는 103,478건이었다(NIPSSR, 2005). 이는 연간 출산숫자의 겨우 9.2%에만 해당하였다.

한국에서는 육아휴직이 1987년에 정의되었다.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서 2004

년 이후 월 400,000원이 지급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에 따르면, 2005년도에 모성휴직을 한 어머니들의 26%만이 육아휴직을 하였다. 2004년에 육아휴직을 한 어머니의 숫자는 9,304명이었다. 이는 연간 출산 숫자의 겨우 1.9%에 해당하며 일본의 9.2%에 비해서 훨씬 저조하다. 한국에서의 가족 친화도는 매우 낮은 것 같다. 모성휴직(90일)을 한다 해도 한국 여성들은 신경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

<표 8-3> 일본에서의 육아 휴직의 효과

구분	Suruga & Nishimoto (2002)	Shigeno & Matsuura (2003)	Yamaguchi (2005)	Suruga & Chang (2003)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부인과 할 수 있는 부인 사이의 출산율(b)	0.0231	0.1244	0.1886	0.22298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부인과 할 수 있는 부인 사이의 출산율의 교차비율(exp(b))	1.0234	1.1325*	1.2076*	1.2498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부인(f_0)	0.0368	0.0364	0.0362	0.0361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부인(f_1)	0.0376	0.0411	0.0434	0.0447
출산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육아휴직 모의 비율	0.092	0.092	0.092	0.092
합계출산율을 0.1% 올리기 위해 필요한 비율	-	0.424	0.709	0.490

주: * exp(b/5)

일본에서는 육아휴직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가 여러 건 있었다. <표 8-3>에서는 이중 네 개의 연구에서의 부분 회귀계수를 보인다. 개별 계수 b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성들과 그렇지 못한 여성들 사이의 출산율의 log-odds ratio를 보여준다고 가정하며, exp(b)는 odds ratio이다. Shigeno & Matsuura(2003)와 Yamaguchi(2005)는 5년간 출산율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표에서는 exp(b/5)가 보이고 있다. Suruga & Nishimoto(2002)는 구노동성에서 시행한 여성 취업관리 기본 설문조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 세 연구들은 가정경제연구

원에서 시행한 소비자 일본패널 설문조사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원천자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표식이 약간 복잡하긴 해도, 각각의 매개변수에 적절한 값을 부과한다면 f_0 의 값을 결정할 수 있다. <표 8-3>에서 합계출산율=1.29와 $p=0.092$ 가 적용되었다. 일단, f_0 와 f_1 의 값을 결정한다면, p 의 상승효과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비율을 모의 추출해 볼 수 있다. 합계출산율을 0.1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가상비율이 <표 8-3>에 나타난다. 만일 실제가 Suruga & Nishimoto의 분석에 근사하다면, 육아휴직으로 합계출산율을 0.1 올리는 불가능하다. 비록 다른 세 연구에 의존한다 하여도 9%에서 40% 이상으로의 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10년 안에 그러한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4. 육아서비스

여성의 직업과 출산 사이의 양립성은 일본 정부의 일차적인 정치목표였다. 1994년 공표된 천사계획은 “육아와 직업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지원”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1997년에 아동복지법에 중요한 수정이 더해졌고, 공공탁아 서비스는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하던 체계에서 부모들이 선호하는 탁아소를 선정할 수 있게 해주는 쪽으로 변경되었다. 1999년의 신 엔젤플랜은 지속적으로 양립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었다. 2004년의 신천사 계획 또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성, 그리고 직장관습의 재고”에 관한 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육아 서비스는 “아동육아를 위한 신 지원 및 연대책임”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논의되었다. 이 장에는 지방 탁아소 강화, 다양한 아동육아 서비스 지원, 아동육아 자원봉사 활동 보조, 공공 탁아 서비스 확대,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운영 등과 같은 다양한 현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내각부는 2001년 7월 “탁아 프로그램 무대기자 명단” 안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최근까지도 부분적으로는 성공하였다. 아동가족부에 따르면, 대기자 명단에 들어 있는 아동의 숫자는 2003년도 26,383명에서 2005년도

23,338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탁아 서비스는 아주 어린 영아들의 경우에 일본 내에서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전체 인구 중 2세 미만인 0.47%가 이에 해당한다.

2005년 4월 탁아소에 위탁된 2세 미만 아동의 숫자는 632,011명(전체 인구의 18.6%)이었다. 1998년도에는 13.4%였는데 2005년까지 5.2%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양육 서비스 개선이 일본의 출산율에 기여한 것 같지는 않다. Choi EY(2004)에 의하면 2003년에 등록률은 14.1%로서 올해 일본의 17.0%에 비해서 낮았다.

부인의 직장과의 출산 사이의 양립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모든 부인들 중에서 직장이 있는 어머니의 비율일 것이다. 이 방법은 출산율과 여성 노동력 참여 사이의 관계에서 미시-거시 패러독스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g 는 직장이 있는 어머니의 비율, m 은 모든 어머니의 비율, 그리고 w 는 모든 직장인의 비율로 가정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분할표를 작성할 수 있다.

	자녀가 없음	자녀가 있음	
비취업자	$1 - w - m + g$	$m - g$	$1 - w$
취업자	$w - g$	g	w
	$1 - m$	m	1

전체 네 개의 셀이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0 < g < m$ 이고 $0 < g < w$ 이 외에도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1 - w - m + g >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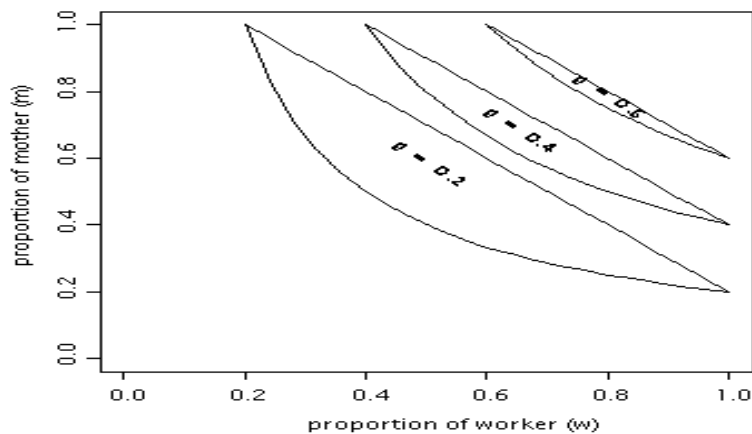
부인의 직업 여부와 자녀의 유무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g 는 독립모형의 기대 값보다 작아야만 한다.

$$g < w \cdot m.$$

만일 수평축에 직장인의 비율(w), 그리고 수직축에 어머니 비율(m)을 놓는다면 직선과 쌍곡선에 포함되는 구간은 위의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도표 13은 $g = 0.2, 0.4$, 그리고 0.6 인 경우에 그러한 영역을 보여주고 있다. 양립성이 증가하면 영역이 우측 상단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패러독스 상황은 양립성 증가의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부인의 직업과 자녀양육이 덜 양립적일 때, 모든 국가들은 그래프의 좌측 하단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양립성을 개선하는데 성공한 국가들은 우측 상단으로 움직인다. 이런 방식으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거시수준에서 볼 수 있고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미시적인 수준에 머물게 된다.

[그림 8-13]이 의미하는 또 다른 바는 양립성이 높아질수록 미시-거시 패러독스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은 좁아진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양립성이 높은 국가는 그 영역에서 쉽게 이탈할 수 있고, 또 미시수준의 상관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기대해볼 수 있다. 이 기대는 최근 미시수준 분석을 통해서 여성의 직업이 출산율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 스웨덴에서 실제로 구현되었다(Hoorens et al., 2005). 그러나 [그림 8-13]은 일본, 한국과 같이 양립성이 낮은 국가에서는 큰 폭의 출산율 감소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8-13] 부정 상관관계를 보이는 영역



<표 8-4>는 일본과 한국의 30~34세 연령대 기혼여성의 직업여부와 자녀 현황에 관한 분할표이다. 이 연령집단은 양 국가에서 공히 M형 노동력 참여유형의 기저층을 이루고 있어서(그림 8-12참조) 양립성이 가장 심각함을 보여준다. 일본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비율을 증가시키고,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 노동참여의 증가 비율을 증가시키는데 실패하였다. 한국에서는 직장생활을 하는 어머니의 비율이 일본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한국 부인들이 일본 부인들에 비해서 일찍 결혼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자녀의 연령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양립성을 누리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내에서 미시자료를 분석한 연구들의 결과로 부인들의 직장현황에 대한 육아 서비스의 영향이 밝혀졌다. 예컨대, Oishi(2003)는 탁아비용이 부인들의 노동력 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다변량 분석에서는 육아 서비스가 출산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밝히지 못하였다. Shigeno & Ohkusa(1999)는 탁아 서비스 대기자 명단, 유아 보육 및 야간 보육 가능성 등을 모델에 포함시켰지만, 이들 중 어떠한 것도 최근의 출산율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였다.

<표 8-4> 30~34세 기혼 여성의 노동력 참여와 모성

(단위: %)

구분		일본		한국	
		무자녀 부인	유자녀 부인	무자녀 부인	유자녀 부인
1997	비취업자	9.6	47.1	-	-
	취업자	11.9	31.4	-	-
2000	비취업자	-	-	3.7	60.9
	취업자	-	-	3.2	32.2
2004	비취업자	8.2	48.7	-	-
	취업자	12.9	30.2	-	-

자료: Employment Status Survey(Japan), Census(Korea).

Shigeno & Matsuura(2003)는 지역 육아 서비스에 대한 응답자들의 실제적인 평가를 출산율 함수에 포함시켰으나 그 t값은 1.19였다. 한 가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나왔지만, 그것은 이변량 분석이었고 순수 효과는 아니

었다(Shigeno, 20069). 그래서 비록 육아 서비스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순수효과가 있었다 해도 그 폭은 명백히 검증되기에는 너무 적었다. 육아서비스의 순수효과가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장된 것(Kojima, 2005; Choi EY, 2006)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유형이 있는 듯하다.

제 6 절 비교적 관점에서 본 저출산과 정책노력

1. 유럽과 아시아에 있어서의 초저출산의 확산

초저출산은 1990년대에 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어 유럽 지역의 인구통계지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2차 인구통계 전이이론(van de Kaa, 1987)에서는 서구 및 북구 유럽 국가들에서 일기 시작한 새로운 현상을 대체 출산율 이하 그리고 동거나 혼외출산 등과 같은 초현대적인 행동의 출현이라는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구자들은 적절히 낮은 출산율에 머무른 반면, 그 이후 세대들은 초저출산으로까지의 예상 밖의 급락 현상을 보였다. 이 변화는 유럽 출산율의 지형적 유형을 역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총초혼율, 혼외출산 비율, 그리고 여성노동 참여율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도 역전현상을 초래하였다(Kohler et al., 2002).

<표 8-5>에서는 2000년 이후의 초저출산 국가들을 나열해 놓았다. 1999년에 Kohler et. al.(2002)은 14개 국가를 나열하였지만 이 새 목록에는 20개 국가가 나열되어 있다. 한국은 2001년에 1.3의 문턱에 도달하였고, 이어서 2003년에 일본과 대만도 그렇게 되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Bosnia-Herzegovina), 헝가리(Hungary), 폴란드(Poland), 루마니아(Romania), 그리고 리투아니아(Lithuania)가 2000년 이후 그 그룹에 합류하였다. 반면, 에스토니아(Estonia), 아르메니아(Armenia) 그리고 러시아(Russia)는 초저출산에서 벗어났다. 벨라루스는 최근 자료가 부재하여 표에서 제외되었다.

〈표 8-5〉 2000년 이후 초저출산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일본	1.36	1.33	1.32	1.29	1.29	1.25
한국	1.47	1.30	1.17	1.19	1.16	1.05
대만	1.68	1.40	1.34	1.24	1.18	1.12
[남유럽]						
보스니아	1.28	1.44	1.23	-	-	-
그리스	1.27	1.25	1.27	-	-	-
이탈리아	1.24	1.23	1.26	1.29	-	-
슬로베니아	1.26	1.21	1.21	1.20	-	-
스페인	1.24	1.26	1.27	1.30	-	-
[동유럽]						
불가리아	1.30	1.24	1.21	1.23	-	-
체코	1.14	1.14	1.17	1.18	-	-
헝가리	1.32	1.31	1.30	1.28	-	-
폴란드	1.34	1.29	1.24	1.22	-	-
루마니아	1.31	1.27	1.26	1.27	-	-
슬로바키아	1.30	1.20	1.19	1.20	-	-
[소련연방]						
아르메니아	1.11	1.02	1.21	1.35	-	-
라트비아	1.24	1.21	1.24	1.29	-	-
리투아니아	1.39	1.30	1.24	1.26	-	-
몰도바	1.30	1.25	1.21	1.22	-	-
러시아	1.21	1.25	1.32	1.32	-	-
우크라이나	1.09	-	1.13	1.17	-	-

자료: Japan(Statistics and Information Dpt, MHLW), Korea(Korea National Statistics Office), Taiwan(Taiwan Directorate - General of Budget, Accounting and Statistics), Europe(Council of Europe, Recent Demographic Development in Europe 2003, 2004).

2. 출산장려정책의 비효율성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출산에 대한 정부노력의 효과는 별로 높지 않다. 출산과 수입 간의 탄력성은 매우 적어서 출산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으로 큰 금액의 경제지원이 필요하다. 육아휴직의 효과 또한 매우 적어서 이를 통해 출산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 역시 불가능하거나 또는 노동 관례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탁아 서비스를 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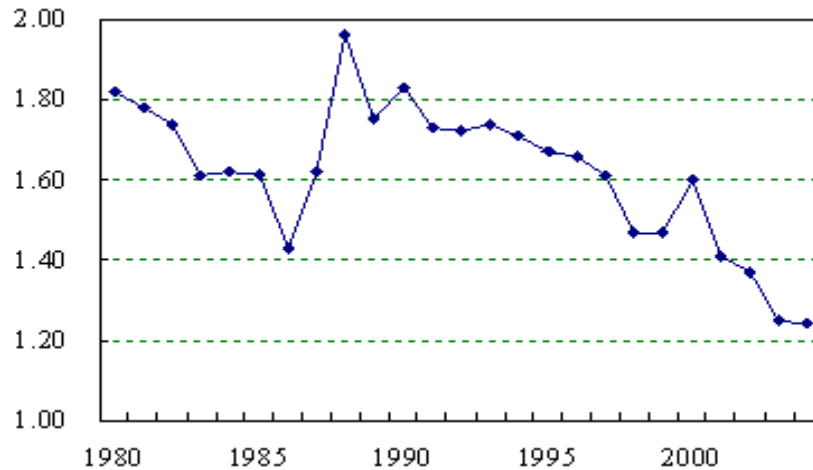
한 정부의 노력은 직장과 가정 간의 양립성을 높이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탁아 서비스의 순수효과는 통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출산장려 정책이 다소 효과가 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는,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프랑스, 프랑스 지배 하의 독일 자르지방, 1970년대까지의 동부유럽 사회주의 국가들, 그리고 1990년경의 스웨덴 등이 있다(Chesnais, 1998; Atoh, 2000; Caldwell et al., 2002). 이러한 역사적인 예들 이외에도 풍부한 미시자료 계량분석 결과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의 효과가 입증되었다(Kojima, 1989, 2003). 따라서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0은 아니라는 것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일본에서 정책 개입을 통해서 적당히 낮은 출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정책대안에 대해서 갖는 출산의 탄력성이 낮음을 감안하면, 일본과 적절히 낮은 출산을 유지하고 있는 서구 및 북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영어권 선진국들 사이의 차이를 좁히기는 어렵다.

비록, 정책적 간섭이 성공한다 해도, 그 효과가 필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는다. [그림 8-14]는 싱가포르에서의 출산율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87년 3월에 싱가포르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도입하였다. “여유가 있다면 셋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갖자.”는 슬로건 하에 셋째 자녀 혹은 그 이후의 자녀들에 대한 세금감면, 탁아 비용 보조, 대가족 주거혜택 등의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들이 도입되었다(Sasai, 2005). 그 결과, 합계출산율은 1986년의 1.43에서 1988년에는 1.96으로 급등하였다. 그러나 1989년부터 비록 1986년 수준까지 떨어지는데 15년이 걸리기는 하였으나, 합계출산율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출산장려 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한국 인구 통계 전문가들의 태도는 다양하다. Park ST(2002)는 이미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안들에 추가적으로 대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교육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Kim SK(2004)은 정부정책의 효과적인 개발을 통해서 10년 안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1.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림 8-14]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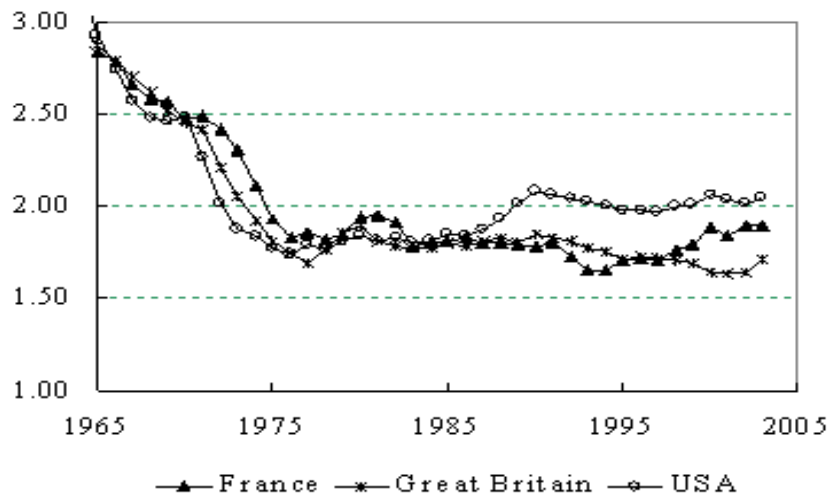
Jun KH(2005) 또한 1950년대 프랑스와 1970년대 동독의 경험을 예로 제시하면서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강조하였다. 반면, Kim DS(2005)는 급속한 인구 노령화와 젊은 한국 여성들 사이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출산장려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하였다. Lee SS(2006)는 출산장려 정책 예산과 출산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고, 그러한 예산들이 비용만 소모하면서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3. 출산율에 대한 문화결정론적 견해

프랑스는 출산장려 정책을 통한 정부 노력을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1939년에 이미 가족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족법(The Family Code)이 시행되었고, 이것은 1945년에 사회보장 시스템에 통합되었다(Kojima, 1996; Caldwell et al., 2002). 배경에는, 19세기에 영국보다도 출산율이 낮았던 것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우려가 있었다(Chesnais, 1998). 프랑스와는 반대로 영국은 출

산장려 정책이 없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Hiraoka, 1996; Atoh, 2000; Kamano, 2003). 육아휴직이 26주이고, 아무런 현금혜택도 없어(Fukuda, 2003), 일본에 비해서 미흡하다. 정부 차원의 탁아 서비스도 미흡하고 비영리 단체들이 주된 역할을 한다. 둘째 및 그 이후의 자녀들에 대해서 보조금 액수는 첫째 자녀보다 낮다(Neyer, 2002). 이러한 상반된 정책 방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영국의 합계출산율은 대단히 유사한 경로를 보인다. [그림 8-15]에 보인 대로, 출산율에 있어서 프랑스가 영국을 지속적으로 앞지르게 된 것은 1998년에 와서이다.

[그림 8-15] 프랑스, 영국, 미국의 합계출산율



정책간섭이 그다지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른 영어권 국가들을 놓고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미국은 영국에 비해서 가족정책에 더욱 무관심하다. 자녀 보조금 제도도 없다. 육아휴직은 현금 혜택 없이 12주에 머무른 상태이다(Kamano, 2003). 정부의 노력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이후 프랑스에 비해서 꾸준히 높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앵글로-색슨 국가들에는 프랑스에 비해서 높은 출산율을 유지시키는 사회-문화적인 특성들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영어권 국가들에 있어서 출산율의 연령 유형의 두

드러진 특징(Chandola et al., 2002)이 그러한 추측을 지지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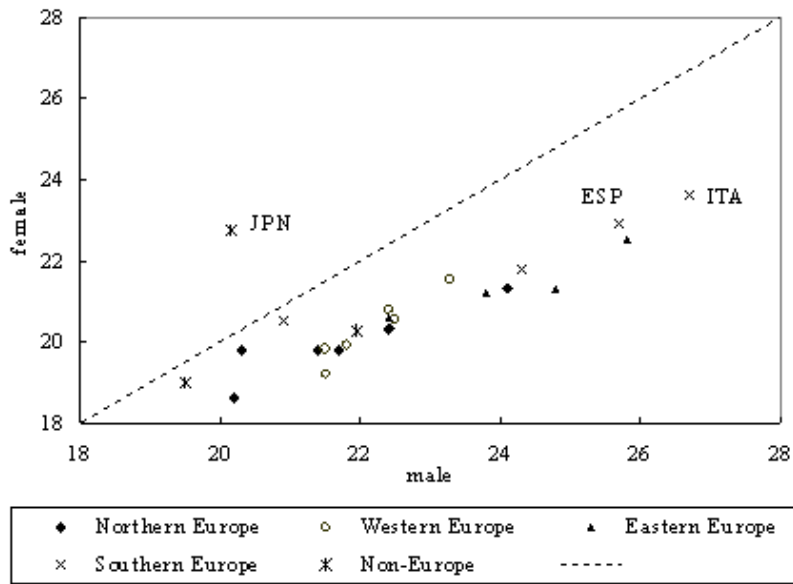
적절한 저출산과 초저 혹은 저출산 사이에는 문화적인 격차가 존재한다. <표 8-5>에 제시한 대로, 모든 서구 및 북유럽 국가들과 영어권 국가들은 초저출산을 성공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다. McDonald(2005)는 적절한 저출산과 매우 낮은 수준의 저출산의 경계선을 1.5로 보았다. 그가 말한 문화적 격차에 의하면, 모든 북유럽 국가들, 모든 영어권 국가들, 그리고 모든 프랑스어권, 독일어권 유럽 국가들이 1.5 혹은 그 이상의 합계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는 국가들은 모든 동아시아 선진국들, 모든 남부 유럽 국가들, 그리고 모든 독일어권 서부유럽 국가들이다. 정책 개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McDonald는 이 격차가 깊은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서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Atoh(2005)는 전통적 가치관의 영향을 가족정책에 앞서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초저출산 현상이 유럽에서 문제가 되었을 때, 초저출산 국가들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일단 초저출산이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도 번지게 되자, 이러한 노력은 그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일게 되었다. 서부 유럽, 동부 유럽, 그리고 동아시아에 있어서 초저출산 현상은 매우 상이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현상은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여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초저출산을 면한 국가들은 예외적인 국가들로서 설명을 요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Suzuki(2003)가 토론했던 내용을 확대하여 서구와 북유럽, 그리고 선진 영어권 국가들에 있어서의 적절한 수준의 저출산의 문화적인 결정요소들을 검토해본다.

Reher(1998)는 서부 유럽과 동부 유럽의 약한 가족관계, 그리고 남부 유럽의 강한 가족관계 사이의 차이는 깊은 역사적 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남부 유럽에 영향을 미친 동양적 가족 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서양적” 구조는 부부관계에 기초하였으며, 대륙의 북쪽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높았다. 종교개혁은 결혼의 의미를 성스러운 것에서 민간인간의 계약으로 변화시켰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켰으며, 가부장적 권위를 낮추고 개인주의를 장려하였다(Reher, 1998). 그

러므로 적절히 낮은 출산을 유지하고 있는 현대 국가들에 있어서의 성평등과 부인의 직장과 육아 간의 양립성은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국가들이 보모, 가정교사, 아동보육 전문가 및 기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부모 의존적 자녀양육 활동을 발전시켜 온 이유이다. 대조적으로, 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성기반 양육에 의존하고 있다. 2003년도 제3차 국가가족설문조사(NIPSSR)에 의하면 82.9%의 일본 부인들이 “어머니는 출산 후 3년간 일하지 말고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데 동의하였다. 어머니의 승고한 역할에 대한 이와 같은 강조는 출산에 미치는 육아 서비스의 효과를 차단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림 8-16] 1960년대 경 태어난 동년배들의 가정 이탈 평균 연령



자료: Billari, et al., 2001; Goldscheider & Goldscheider, 1994; Ravanera et al., 1995; Suzuki, 2003b.

서-북부 유럽 및 유사 지역의 또 다른 두드러진 특징은 자녀들이 일찍 가정 을 떠난다는 것이다. 이 국가들에서는 산업화 이전 단계에 젊은 남성과 여성들

이 결혼 전 부모의 집을 떠나서 직업을 구한다(Reher, 1998; Wall, 1999). 이와 같이 결혼 전 젊은 남녀 대다수가 집을 떠나는 전통은 오늘날도 남아 있다. (Billari et al., 2001). 결혼 전 집을 떠나는 것이 합의 결합과 격식 갖춘 결혼을 통하여 결속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남부유럽 청년들은 지연 증후로 고통을 받는데, 이는 자신들의 생활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의사결정 능력을 저하시킨다(Dalla Zuanna, 2001; Livi-Bacci, 2001). [그림 8-16]에서와 같이 일본은 남자들이든 북부 유럽 사람들만큼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는 반면, 여자들은 남부 유럽 사람들과 같이 늦게 집을 떠나는 현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늦게 집을 떠나는 것은 결속성 형성에 좌절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일본은 남부 유럽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거와 혼외 출산에 있어서의 명백한 문화적 차이가 관찰된다. 이와 같은 포스트 모던식 행위는 한 때, 출산율을 대체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행위의 빈도가 낮게 유지되는 것은 초저출산에 있어서 좋은 전조증세이다. 일본은 매우 건전한 결혼관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도표 17에 보인 대로, 일본의 혼외 출산은 남부 유럽의 초저출산율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극히 낮다. 2004년도 비율은 1.99%였는데 1980년도의 0.80%에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이 결혼을 통해서 생식하는 한, 지연 증후군, 자녀 과잉보호,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자녀 양육비, 그리고 사회화된 자녀양육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 가족 떠나기, 동거, 그리고 혼외출산의 유형은 불분명하다. 한국 내에서 어느 인구 통계 전문가도 젊은이들이 집을 떠나는 행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떤 한국인 인구 통계 전문가는 비록 아무 증거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혼전동거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Jun KH, 2002; Byun HS, 2002). 그러나 2004년도 Ochanomizu 대학에서 실시한 선구적 성연구 설문조사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동거를 경험한 미혼남녀의 비율은 일본만큼 낮았다(Takezawa, 2005). 그러므로 현재 동거중인 젊은 여성의 비율은 실제로는 0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록 한국에서의 혼외출산의 경우는 매우 희귀하다고 널

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혼외출산에 대한 자료는 전무하다(Cho BY et al., 1999; Eun KS, 2003; Lee SS et al., 2004).

제 7 절 요약 및 분석결과의 함의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정의되는 초저출산력은 2000년대에 들어와 동북아로 파급되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 모두 최근의 출산력 저하에 결혼력의 저하와 함께 결혼출산력의 저하도 기여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결혼출산력의 저하는 성교빈도 저하와 불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으며 자녀비용의 급상승, 청년 노동시장의 악화, 불확실성의 증가, 여성의 노동력 참가 등이 이들 수요의 충족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 출산장려대책들의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 북서 유럽이나 영어권 선진국들과의 출산력 차이는 정부노력의 차이보다는 문화유형의 차이에서 찾아야 한다.

일본은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책대안들을 채택하여 확충하여 왔다. 그러나 그와 같은 노력은 출산감소를 예방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정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정책노력의 효과는 미흡하다. 그러므로 적절히 낮은 출산과의 차이에 있어서 주된 부분은 정부의 노력보다는 문화적 요인들의 직접적인 효과에 기인한다. 이는 한국과 대만에 적용될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부 유럽과 북부 유럽에서 사용된 정책개입을 채택한다면, 합계출산율이 적절히 낮은 수준으로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환상일 뿐이다.

비록 성평등이 널리 알려진 정치목표이긴 하지만, 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부-북부 유럽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젊은이들이 일찌감치 집을 떠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는 분명히 복지모(welfare mothers)의 숫자를 증가시킴으로써 혼외출산을 유도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족유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출

산율을 지속적으로 회복시키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비록 남부 유럽에서 서부-북부의 약한 가족유형에 동화해가려는 증세가 있긴 해도 그러한 변화는 동아시아에서 일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동아시아의 초저출산은 유럽지역 국가들에 비해서 더 오래 지속되고 또 더 많이 낮아질 수도 있다.

제 9 장 정책적 제언

일반적으로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로 정의되는 초저출산 사회인 한국과 일본의 인구체제를 비교하고, 아울러 낮은 출산율을 일찍 경험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서 논의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들 두 국가에서 출산율을 지금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분석되었다.

따라서 실적위주(實績爲主)의 사업에 집착하여 지나치게 성급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면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어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담만을 안겨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과 함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주요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제 1 절 초저출산 사회의 사회정책방향

한국과 일본의 인구체제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초저출산 사회의 사회정책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란 5년 이상의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종합적 사회정책이란 혼인(결혼, 이혼, 재혼) 및 가족정책, 영유아보육정책, 아동정책, 여성정책, 노동정책, 주거정책, 교육정책, 사회문화정책(가치관정책), 보건정책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둘째,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이 상호 보완적인 차

원에서 병행 추진되어야 효과적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와 민간영역(NPOs, NGOs, 기업 등)이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정책 및 사업의 대상을 확실히 하고 서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자녀출가 기간동안의 단계별로 지출되는 비용규모를 감안하여 결혼과 자녀출산으로 인한 부담을 단계별로 균등한 사회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결혼~자녀출가 기간의 사회적 지원은 주로 영유아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는 개인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녀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전체 단계에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제고함으로써 수혜자의 폭을 넓히고 국민의 추가부담을 유도한다.

넷째, 국민부담이 과중한 현금지원을 지양하고, 사회서비스와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단기간의 현금지원에 의한 출산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 부담이 선진국 수준에 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현금중심의 사회적 지원은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정책적 효과는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군다나 한번 지급된 현금지원은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선불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제 2 절 저출산 대책의 세부 방안

1. 결혼(가족형성)지원 강화

첫째, 미혼남녀의 결혼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적절한 결혼환경을 조성
토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결혼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인데, 이는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저리융자제도를 강화하거나 전세금을 보조해주는 방법, 신혼제품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고비용 결혼절차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의 시민단체나 주민운동과 연계하는 “결혼문화 개선운동”의 전개 등이 바람직하다.

결혼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결혼상담업(결혼중매, 미혼자데이트서비스)의 건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건전한 민간 결혼정보회사를 육성,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국공립 결혼정보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혼적령기 미혼남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정적
일자리를 대폭 확충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의 창출 방안, 청년층이 학교졸업 후 짧은 기간 안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취업정보 제공, 장학금 제도 활성화를 통한 자기개발 증진, 청년층 취로사업 지원(공공부문의 직업훈련, 연수기회 장단기 일자리 제공 확대 등), 영유아보육 및 노인수발의 사회화 등을 통하여 가족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강화한다.

2. 철저한 임신·출산 관리

첫째, 인공임신중절을 최소화하고, 혼외임신 및 혼외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정상출산을 늘리고, 모성건강을 증대시킨다.

기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이 매년 약 15만건 이루어지고 있고, 미혼여성의 인공임신중절도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공임신중절이 예방된다면 현재의 출산율은 획기적으로 상승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위해성을 홍보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고령출산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30대 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산전·후 관리를 일선 보건소 및 민간병의원을 통하여 철저히 한다.

현재 고령출산 여성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여성 중에서도 추가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약 10%를 상회하고, 생각중인 경우도 다소 있음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자보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인구자질 향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들의 평균 초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불임에 대한 우려가 높으므로 불임예방, 불임치료 개발 및 지원 등을 강화한다.

일본의 경우 결혼력의 저하와 함께 결혼출산력의 저하가 저출산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출산력의 저하는 불임 증가와 성교빈도 저하에 기인한 것이라 한다.

한국사회에서의 불임발생율은 약 1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향은 환경오염, 성인병 발생 등의 영향과 함께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원하는 자녀를 갖게 하는 권리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출산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된 정책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의 초저출산율과 매우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출산건강과 성평등에 입각한 성교육의 장려 등과 같은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출산건강에는 성관계 조기 초기화, 만혼, 낮은 수준의 동거, 파트너십 형성의 미발달(혹은 “미성숙한 연애 문화”), 부부들 간의 낮은 성행위 빈도, 미량 투약 피임약의 낮은 사용률, 침대들 사이에서의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성병의 확산, 여성 생활 양식의 변화, 만산, 증가일로에 있는 불임에 관한 염려, 등과 같은 새로이 부각되는 현안들이 포함된다.

3. 일과 가정의 양립정책 강화

첫째, 젊은 여성들이 자아성취를 실현시키면서 일과 결혼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가족친화적인 고용문화의 창출, 결혼으로 인한 기업의 고용차별 철폐, 결혼 및 자녀양육 후 재취업 지원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한다.

둘째, 자녀양육과 가사에 남녀가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근무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4. 민간차원의 의식개혁 운동 지원

첫째, 셋째 아 이상의 출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적으로 불식시키기 위한 사회문화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이 1.3명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셋째 이후의 출생아 수가 2000년 이후 꾸준히 14%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결과에서 보

듯이 한국사회의 출산율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셋째 아 출산 비율이 증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래 출산을 담당할 청소년의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인식의 전환을 위한 국민적 운동을 추진한다.

혼인과 출산을 담당할 연령층의 혼인과 출산에 대한 다양성을 수용하는 가치관이 필요하며,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출산율 회복의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원래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므로 사회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혼인과 출산이 25~34세에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을 강구한다.

초저출산수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0세 전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결혼과 결혼 후 즉시 첫째 아와 둘째 아의 출산을 하고 거의 모두 단산을 하는 현재의 혼인 및 출산행태에 변화가 요구된다. 젊은 연령에서의 결혼부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만혼부부의 철저한 모성건강관리가 요구된다.

5.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적응 정책 강화

첫째, 이주가정 및 이주근로자를 사회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인식개선이 요구된다.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의 인구이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인구증가에 기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인구유지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유입된 외국출신 인구 또는 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를 포

용할 수 있는 국민의 공감대 형성도 요구된다.

둘째, 국제이주정책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이주인구의 질적 관리를 위한 국제공조를 추진한다.

국제이주정책은 초국가적인 단위 수준의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 아마도 국제결혼을 포함하는 국제이주정책은 ASEAN+3(혹은 북한, 몽골, 대만을 포함한 ASEAN+6)과 같은 세계지역단체 혹은 연합에 의해서 보다 잘 입법되고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태환, 「출산력변천의 과정과 의미」, 권태환 등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1997.
- 권태환·전광희·조성남, 「미혼여성의 성, 피임 그리고 인공유산: 수출공단지역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제19권 제1호, 한국인구학회, 1996.
- 권태환·김태현·최진호, 『한국의 인구와 가족』, 일신사, 1995.
- 권태환·김두섭, 『인구의 이해』, 제2판,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 김두섭, 「출생성비의 불균형과 지역별 격차」, 권태환 등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1997.
- 김승권, 「우리나라 부인의 피임실패임신과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연구」, 『보건사회논집』 제12권 제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2.
- 김승권, 「출산력 저하와 가족정책의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10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김승권,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 김승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 김승권, 「최근 한국사회의 출산율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제27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2004.
- 김승권, 「이상자녀수」, 『인구(통계)사전 편찬연구』, 한국인구학회 통계청 용역보고서, 2005a.
- 김승권, 「자녀의 가치」, 『인구(통계)사전 편찬연구』, 한국인구학회 통계청 용역보고서, 2005b.
- 김태현, 「차별출산력의 변동과 그 요인」,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 김태현, 「저출산수준과 강한 남아 선호관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 한국인구학회지, 16(2), 1993.
- 김태현, 「인구전망과 사회적 영향」, 권태환 등,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1997.
- 김태현·이삼식, 『출산력 저하의 원인-출산행태와 출산력 차이』, 대통령자문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2005).
- 김한곤, 「선별적 인공유산의 결정인자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0(1), 한국인구학회, 1997.
- 김현지·주경미, 「출산정책: 장애와 역제를 넘어서」, 『현상과 인식』, 2004년 가을호, 2004
- 변화순, 「혼인상태」,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 박경숙·김영혜, 「한국 여성의 생애 유형: 저출산과 M자형 취업곡선에의 함의」, 『한국인구학』, 제26권 제2호.
- 박상태, 「인구정책」,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 박상태, "인구정책",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 배은경,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 박사학위논문, 2004.
- 변화순, 「혼인상태」,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 서문희, 「최근 보육 제도 및 정책의 변화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실, 『산부인과학』, 군자출판사, 1999.
- 손승영, 「한국사회 저출산 원인과 가족친화적 정책대안」, 『가족과 문화』, 17(2), 2005.
- 은기수,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6), 한국사회학회, 2003.
- 은기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로짓분석과 생존분석의 비교」, 『한국인구학』, 24(2), 한국인구학회, 2001.
- 은기수·권태환, 「한국 유배우 여성의 인공임신중절의 실태 및 결정요인」, 2002.

- 이삼식, 「자녀의 성구성에 따른 인공중절중태행위 분석」, 『보건사회연구』, 18(2), 1998.
- 이삼식,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1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이삼식 외,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이성용, 「남아선호와 출산력간의 관계」, 『한국인구학』, 26(1), 한국인구학회, 2003.
- 이성용, 「성선호 원인에 대한 한국과 자메이카의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38(3), 한국사회학회, 2004.
- 이인숙, 「저출산의 요인분석과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복지학』, Vol. 57, No. 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
- 이장영, 「교육수준」,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 장지연,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장혜경, 「저출산 원인 및 정책 욕구 관련 여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 국회보고자료, 2004.
- 전광희·김태현·조영태,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출산사망예측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회, 2005.
- 전광희, 「출산력」, 김두섭·박상태·은기수(편), 『한국의 인구』, 통계청, 2002.
- 전광희, 「출산력 변화의 메카니즘」, 권태환 등,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일신사, 1997.
- 조남훈·김승권·조애저·장영식·오영희, 『1997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조혜자·방희정, 「결혼과 출산기피의 한 이유: 여성의 관계역할」, 『한국심리학회지』, 10(1), 2005.
- 천혜정, 「둘째 자녀 출산희망에 대한 배우자 간 차이와 이에 따른 집단간 특성 분석」, 『한국가정관리학지』, 23(3), 2005.
- 최은영, 「한국보육정책의 공공성 평가: 공급과 재정부담을 중심으로」, 『보건복

- 지포럼』, 제9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최은영,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제111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80~2000.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80~2000.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80~2000.
- 통계청,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SIS)
- 통계청, 「1996년 장래인구추계」, 1996.
- 통계청, 「2001년 장래인구추계」, 2001.
- 통계청, 「2005년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 통계청, 「2006년 장래인구추계」, 2006.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DB.
- 홍문식, “출산력 억제정책의 영향과 변천에 관한 고찰”, 『한국인구학』, 21(2), (1998).
- [국외문헌]
- Ashford, L., New population policies: advancing women's health and rights, *Population Bulletin*, 56(1), 2001.
- Atoh, Makoto, "Chapter 5: Induced abortion" in Summary of Nineteenth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The 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The Mainichi Shimbun (Tokyo), 1988.
- Atoh, Makoto, "Traditional family values of unmarried women: In relation to the phenomenal rise in the proportion never married" in Summary of the Twenty-fourth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Tokyo: The Mainichi Shimbun, 1998.
- Atoh, Makoto, *Gendai Jinnkou-gaku*, Tokyo: Nihon Hyoron-sha (in Japanese), 2000.
- Atoh, Makoto, "Why are cohabitation and extra-marital births so few in Japan?" Paper presented at the EURESCO conference,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Europe," Bad Herrenalb, Germany, 2001. June

- Balk, D., "Defying gender norms in Bangladesh: a social and demograph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 1997.
- Bankole, A. & S. Sing, "Couple's fertility and contraceptive decision-making in developing countries: hearing the man's voice",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 24, 1998.
- Becker, Gary S., *A Treatise on the Family*, Enlarg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1.
- Beckman, L. J., 'Communication, power, and influence of social networks in couple decisions on fertility" in R. A. Bulatao & R. D. Lee (eds.)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Academic Press, 1983.
- Berghardt, Eva, "Is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 Useful Concept for Demography?" pp 25-28 in Vienna Yearbook for Population Research. Vienna, Austria: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2004).
- Billari, Francesco C. & Hans-Peter Kohler, "Patterns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WP-2002-040, 2002..
- Billari, Francesco, Dimiter Philipov & Pau Baizán, "Leaving Home in Europe: The Experience of Cohorts Born around 1960,"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Working Paper WP 2001-014, 2001.
- Bongaarts, John,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roximate Determinants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4, No. 1, 1978.
- Bongaarts, John, "The fertility impact of changes in the timing of childbearing in the developing world." *Population Studies*, 53, 1999a.
- Bongaarts, John, "'Fertility decline in the developed world: Where will it end?" *American Economic Review*, 89(2), 1999b.
- Bongaarts, John, "The end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3), 2002.
- Bongaarts, John & Griffith Feeney,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1998.
- Bongaarts, John & Griffith Feeney,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Repl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6, No. 3, 2000.
- Bongaarts, John & Griffith Feeney, "The Quantum and Tempo of Life Cycle Events," in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115-151. Austria Academy of Science, Vienna, Austria, 2006.
- Cabinet Office, Japan, Public Opinion Survey on the Acceptance of Foreign Workers", http://www8.cao.go.jp/survey/h16/h16_index.html (in Japanese), 2004.
- Caldwell, J. C., *The Theory of Fertility Decline*, New York: Academic Press, 1982.
- Caldwell, John C., Pat Caldwell & Peter McDonald, "Policy Responses to Low Fertility and Its Consequences: A Global Survey,"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Vol. 19, No. 1, 2002.
- Chandola, T., D. A. Coleman & R. W. Hiorns, "Distinctive Features of Age-Specific Fertility Profiles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Common Patterns in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the United States, 1970-98," *Population Studies*, Vol. 56, 2002.
- Chesnais, J. C., "Fertility, family and social policy in contemporary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2(4), 1996.
- Chesnais, Jean-Claude,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the European Union (EU-15): Facts and Policies, 1960-1997,"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No. 7, 1998.
- Chesnais, J. C.,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the European Union (EU-15): Facts and Policies, 1960~'97."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7, Tokyo, Japan: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1998.
- Chesnais, J. C., "Population History and Policy in France." 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Koreana Hotel, Seoul, December 15-16, 2005. Hosted by

- the Korea Institute for Population and Social Affairs, 2005.
- Choi, Eunyong, "Lowest Fertility and Policy Challenges in Kore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15-16 December, 2005, Seoul, Republic of Korea, 2005.
- Cleland, J., N. Kamal, & A. Sloggett, "Links between fertility regulation and the schooling and autonomy of women in Bangladesh" in R. Jeffrey and A. Bsu (eds), *Girls Schooling, Autonomy and Fertility in south Asia*, new Dehli: Sage, 1996.
- Coleman, David, "Immigration and Ethnic Change in Low-Fertility Countries: A Thir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2006.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Green Paper "Confronting demographic change: a new solidarity between the generations." Brussel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OM(2005)94 final, 2005.
- Dalla Zuanna, Gianpiero, "Thebanquet of Aeolus: A Familistic Interpretation of Italy's Lowest Low Fertility," *Demographic Research*, Vol. 4, No. 5, 2001.
- Donaldson, P., D. J. Nichols & Ehn Hyen Choe, "Abortion and contraception in Korean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Studies*, 36(2), 1982.
- Donaldson, P., D. J. Nichols, "The changing tempo of fertility in Korean," *Population Studies*, 32, 1978.
- Easterlin, Richard A., "What Will 1984 Be Lik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Recent Twists in Age Structure," *Demography*, Vol. 15, No. 4, 1978.
- Engelhardt, Henriette & Alexia Prskawetz,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on the Rel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IUSSP XXV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Tours, 2005.
- Eun Ki-Soo,. "Understanding Recent Fertility Decline i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Supplement to Volume 1, 2003.
- European Policy Centre and King Baudouin Foundation, "Beyond the Common

- Basic Principles on integration: The next steps." EPC Issue Paper, 27 (Revised), 2005.
- Folbre, Nancy, *Who Pays for the Kids? Gender and the Structures of Constraint*, London: Routledge, 1994.
- Goldscheider, Francis K. & Calvin Goldscheider, "Leaving and Returning Home in 20th century America," *Population Bulletin*, Vol. 48, No. 4, 1994.
- Golini, Antonio,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 in some developed count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Europ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Population)*, Supplement to Volume 1. Tokyo, Japan: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3.
- Goto, A., C. Fujiyama-Koriyama, A. Fukao and M. R. Reich, "Abortion Trends in Japan, 1975-95" *Studies in Family Planning*, 31(4), 2000.
- Gusafsson, S., "Optimal age at motherhood.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on postponement of maternity in Europ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 14(2), 2001.
- Han, Seung Hyun & G. Feeney, "The emergency of a new pattern of childbearing: fertility in Korea during the 1980s" *The Journal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16(1), 1993.
- Hayashi, Kenji, "Chapter 6: The transition of contraception and abortion: In relation to lowering fertility" in Summary of Twenty-third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pp.171-187, The 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The Mainichi Shimbun, 1996.
- Hayashi, Kenji, "Chapter 6: Public awareness of the low dose pill" in Summary of Twenty-fourth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pp.207-229, The 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The Mainichi Shimbun, 1998.
- Henshaw, Stanley K., "Induced abortion: Prevalence" in Paul Demeny and Geoffrey McNicoll (eds.) *Encyclopedia of Population*, Macmillan Reference, 2003.
- Henshaw, Stanley K., Susheela Singh, & Taylor Hass, "The Incidence of Abortion

- Worldwide" *International Family Planning Perspective*, 25 (Supplement): S30-S38, 1999.
- Henshaw, Stanley K., Taylor Ann Haas, Kathleen Berentsen, & Erin Carbone, *Reading on Induced Abortion, Volume 2: A World Review 2000*, The Alan Guttmacher Institute, 2001.
- Hirosima, K., "Another Tempo Distortion: Analyses by Age-specific Marital Fertility Rate," Max Planc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Internal Reports, 2003.
- Hoorens, Stijn, Andrew Parkinson and Jonathan Grant, "Sweden's Varying Success in Offsetting Low Fertility,"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ow Fertility and Effectiveness of Policy Measures in OECD, 15-16 December, 2005, Seoul, Republic of Korea, 2005.
- Hudson, Valerie M., & Andrea M. den Boer, *Bare Branches: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Asia's Surplus Male Population*. Cambridge, MA: The MIT Press, 2004.
- Johnson-Hanks, J., "On modernity of traditional contraception: time and the social context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 2002.
- Iguchi, Yasushi, & Hiroshi Kojima, "Overview of Trafficking in Women to Japan" and "Policy Recommend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ed.), *Trafficking in Women to Japan for Sexual Exploitation: A Survey on the Case of Filipino Women*. Geneva: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1997.
- Inaba, Hisashi, "Resolving a Confusion in the Bongaarts and Feeney's Tempo-Adjusted Total Fertility Rate," "人口學研究" Vol. 32, 2003.
- Iwasawa, Miho, "Estimation of unintended fertility in Japan"(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in Atlanta, May 9-11, 2002.
- Iwasa, Miho, "On the Contribution of the Changes in First Marriage Behavior and Married Women's Reproductive Behavior to the Recent Decline in TFR of

- Japan." Joint Eurostat-UNECE Work Session on Demographic Projections, Vienna, 21-23 September 2005.
- Jun, Kwang-Hee, "The Transition to Sub-Replacement Fertility in South Korea: Implication and Prospects for Population Policy."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Vol. 3, No. 1, Tokyo, Japan: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5.
- Kaneko, Ryichi, "Cohort Processes to the Lowest Fertility in Japan: Application of An Empirically Adjusted Coale-McNeil to the Estimation and Projection of Lifetime Measures of First Marriage and Birth." Joint Eurostat-UNECE Work Session on Demographic Projections, Vienna, 21-23 September 2005.
- Kim, Doo-Sub, "Theoretical Explanations of Rapid Fertility Decline in Korea,"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Vol. 3, No. 1, 2005.
- Kim, Young J. & Robert Schoen,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Limits to the Bongaarts-Feeney Adjustmen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6, No. 3, 2000.
- Kitagawa, Evelyn M., "Components of a difference between two r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50, No. 272, 1955.
- Kitamura, Kunio, "Takametai damnjokanno communication skill" *Kazoku to Kenko*, No. 615, 2005(in Japanese).
- Kohler, Hans-Peter, Francesco C. Billari & Jose Antonio Ortega, "Towards a Theory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2001.
- Kohler, Hans-Peter, Francesco C. Billari & José Antonio Ortega,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8, No. 4, 2002.
- Kohler, Hans-Peter & Dimiter Philipov, "Variance Effects in the Bongaarts-Feeney Formula," *Demography*, Vol. 38, No. 1, 2001.
- Kojima, Hiroshi, "International Marriages." *Statistics*, Vol.40, No.2, 1989a(in

- Japanese).
- Kojima, Hiroshi, "The Effectiveness of Pronatalist Policies." *Jinko Mondai Kenkyu, J. of Population Problems*, Vol.45, No.2, 1989b(in Japanese).
- Kojima, Hiroshi, "International Migrants and Marriage." *Jinko Mondai Kenkyu, J. of Population Problems*, Vol.48, No.1, 1992a(in Japanese).
- Kojima, Hiroshi, "International Migrants and Fertility." *Jinko Mondai Kenkyu, J. of Population Problems*, Vol.48, No.2, 1992b(in Japanese).
- Kojima, Hiroshi,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the Philippines to Japan." *Japan Institute of Labour (ed.), Internationalization of Labour Market and Its Effects on Japanese Economy and Society*, Tokyo, Japan Institute of Labour, 1996(in Japanese).
- Kojima, Hiroshi, "Determinants of Fertility Change and Policy Impacts in Developed Countries."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ed.), Contemporary Families and Social Security*.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94(in Japanese).
- Kojima, Hiroshi, "Pronatalist and Family Policies and Their Effects in France." *Makoto Atoh (ed.), Population Issues in Developed Countries: Fertility Decline and Family Policy*, Tokyo: University of Tokyo Press, 1996(in Japanese).
- Kojima, Hiroshi, "Japan: Hyper-aging and Its Policy Implications." *V. L. Bengtson, K.-D. Kim, G. C. Meyers and K.-S. Eun (eds), Aging in East and West: Families, States, and the Elderly*, New York: Springer, 2000.
- Kojima, Hiroshi, "Fertility Trends and Family Policies in French-Speaking Societies." *Jinko Mondai Kenkyu, J. of Population Problems*, Vol.59, No.2, 2003(in Japanese).
- Kojima, Hiroshi, "Aging Societies with Fewer Children in East Asia and Changes in Social Structure."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Institute,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ed.), Training Text*(<http://www.esri.go.jp/en/tie/ea7-1e.pdf>, [ea7-2e.pdf](http://www.esri.go.jp/en/tie/ea7-2e.pdf), [ea7-3e.pdf](http://www.esri.go.jp/en/tie/ea7-3e.pdf)), 2004.

- Kojima, Hiroshi (ed.), Final Report of the FY2002-2004 Project on "Low Fertility and Family Policy in Korea, Taiwan and Singapore" (supported by a Scientific Grant,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05a (in Japanese).
- Kojima, Hiroshi (ed.), "Shoshika Taisaku at Local Level, Total Fertility Rates and Proportions Never-Married." Shigesato Takahashi (ed.), Final Report of the FY2002-2004 Project on "Studies on the New Phase of Fertility Decline and Family and Labor Policy Responses"(supported by a Scientific Grant,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2005b(in Japanese).
- Kojima, Hiroshi, "Low Fertility and Policy Responses in Asian NIEs: An Introduction Focusing on the Review of Possible Policy Effects." Jinko Mondai Kenkyu, *J. of Population Problems*, Vol.61, No.2, 2005c(in Japanese).
- Kojima, Hiroshi, "Return Migration of Japanese Managers and Their Health."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Vol.15, No.2, 2005d.
- Kojima, Hiroshi, "A Comparative Analysis of Fertility-Related Attitudes in Japan, Korea and Taiwan." *F-GENS Journal* (Ochanomizu University), No.5, 2006a.
- Kojima, Hiroshi, "Foreign Workers and Health Insurance in Japan: The Case of Japanese Brazilians."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Vol.4, No.1, 2006b.
- Kojima, Hiroshi, "Variations i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Foreign 'Muslim' Population in Japan: A Preliminary Estimation."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Vol.4, No.1, 2006c.
- Kojima, Hiroshi, "Population decline and its demographic correlates in Japan." European Policy Centre (ed.), The Second EU-Japan Think tank Roundtable, Global Governance, Brussels, 14-15 November 2005, Conference papers, European Policy Centre (EPC Issue Paper), 2006d.
- Kojima, Hiroshi, "A Comparative Analysis of Cross-Border Marriages in Japan and Taiwan."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oss-Border Marriages with Asian Characteristics? Transnational Marriages between Southeast and Northeast Asia, October 20-21, 2006, Academia Sinica, Taipei,

- Taiwan, 2006e.
- Kojima, Hiroshi, et Jean-Louis Rallu, "La fécondité au Japon et en France," *Population (INED)*, Vol.52, No. 4-5, 1997.
- Kojima, Hiroshi, and Jean-Louis Rallu, "Fertility in Japan and France." *Population: An English Selection*, Vol.10, No.2, 1998.
- Kwon, Tai-Hwan, "Exploring socio-cultural explanations of fertility transition in South Korea" edited by Leete, R., and I. Alam, *The Revolution in Asian Fertility: The Revolution in Asian Fertility*. New York: Clarendon Press Oxford, 1993.
- Leete, R., "The post-demographic transition in East and South Asia: Similarities and contrasts with Europe" *Population Studies* 41, 1987.
- Livi-Bacci, M., "Too Few Children and Too Much Family," *Daedalus*, Vol. 130, No. 3, 2001.
- Liu, Jihong, U. Larsen & G. Wyshak, "Factors affecting adoption in China, 1950-87", *Population Studies*, 58(1), 2004.
- Lutz, W. and V. Skirbekk, "Policies Addressing the Tempo Effect in Low Fertility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005.
- Lutz, W. and V. Skirbekk, & M. R. Testa, "The Low Fertility Trap Hypothesis"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Vienna: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2005.
- Mason, K. & H. Smith, "Husband's versus wives fertility goals and use of contraception: the influence of gender context in five Asian countries" *Demography*, 37, 2000.
- McDonald, Peter, "Theory pertaining to low fertility."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Working Group on Low Fertility,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Low Fertility: Trends, Theories and Policies, Tokyo, 21-23 March 2001.
- McDonald, Peter, "Sustaining Fertility through Public Policy: the Range of Options."

- Population (English Edition) 57(3): 417-446.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3), 2002.
- McDonald, Peter,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XXV International Population Conference, 2005.
- McDonald, Pete,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2, no. 3, 2006.
- McNay, K., P. Arokiasamy, & R. H. Cassen, "Why are uneducated women in India using contraception? A multilevel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7(1), 2003.
- Morgan, S. P., S. Stash, H. L. Smith & K. O. Mason, "Muslim and non-Muslim differences in female autonomy and fertility: evidence from four Asian countri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3), 2002.
- Moursund, A. & O. Kravdal, "Individual and community effects of women's education and autonomy on contraceptive use in India" *Population Studies*, 57(3), 2003.
- Muramatsu, Minoru, "Chapter 4: Induced abortion" in Summary of Twentieth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The 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The Mainichi Shimbun, 1990.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 Social Security Research,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2001~'50. Tokyo: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2(in Japanese).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 Social Security Research, Child Related Policies in Japan. Tokyo: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3.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 Social Security Research, Latest Demographic Statistics 2006, Tokyo: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6a(in Japanese).
-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 Social Security Research,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December 2006): 2005-2055, with Long-range Population

- Projections: 2056-2105.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6b(in Japanese).
- Neyer, Gerda, "Family Policies and Low Fertility in Western Europe",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Population Study*, Supplement to Vol. 1, 2002.
- Nihon Keizai Shimbun,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child allowance.'" November 27, 2006.
- NIPSSR, Summary of the 13th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 (Couples Survey), (released on June 27, 2006),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okyo), 2006(in Japanese).
- Norgren, Tiana, *Abortion Before Birth Control: The Politics of Reproduction in Postwar Jap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Ortega, Jose & Hans Peter Kohler, "Measuring Low Fertility: Rethinking Demographic Methods." MPIDR Working Paper WP 2002--001. Max Plank Institute for Demographic Research. Rostock, Germany, 2002.
- Park, Chai-Bin & Nam-Hoon Cho, "Consequences of son preference in low-fertility society; imbalance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1(1), 1995.
- Park, Jung-Kwon, "A review on Induced Abortion i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Health Studies*, 8(2), 1988.
- PPRC, Summary of the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From the First to the Twenty-fifth, Tokyo: The 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The Mainichi Shimbun, 2000(in Japanese).
- Rallu, Jean-Louis & Toulemon, "Period Fertility Measures: The Construction of Different Indices and their Applications in France, 1946~'89. *Population* (An English Selection) 6, 1994.
- Ravanera, Z.R., F. Rajulton, F., & T. K. Burch, "A Cohort Analysis of Home-Leaving in Canada, 1910-1975,"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Vol. 26, No. 2, 1995.

- Reher, David Sven, "Family Ties in Western Europe: Persistent Contras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4, No. 2, 1998.
- Republic of China Republic of China, Manpower Planning Department, 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 Projection of Population of Taiwan Area, 2004~'51 (issue number (93) 042.804), 2004.
- Ryder, Norman B., "Components of Temporal Variations in American Fertility." in *Demographic Patterns in Developed Countries*. Vol 19, edited by Robert W. Hiorns. Symposia of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Human Biology. London: Taylor and Francis, 1980.
- Sato, Ryuzaburo & Miho Iwasawa, "Contraceptive use and induced abortion in Japan: How is it so unique among the developed countries?"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Vol.4, No.1, 2006.
- Suzuki, Toru, "Fertility Decline and Policy Developments in Japan,"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Vol.4, No.1, 2006.
- Suzuki, Toru, "Why is Fertility in Korea Lower than in Japan?" *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Vol. 61, No. 2, 2005.
- Suzuki, Toru, "Lowest-Low Fertility in Korea and Japan." *人口問題研究*(Journal of Population Problems) 59-3, 2003.
- Tsuya, Noriko O. & Larry L. Bumpass, "Gender and Housework," in Noriko O. Tsuya & Larry L. Bumpass (eds.), *Marriage, Work and Family Life in Comparative Perspective*,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 Tsuya, Noriko O. & Karen Oppenheim Mason, "Changing Gender Roles and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Japan," in Karen Oppenheim Mason and AnMagritt Jensen (eds.), *Gender and Family Change in Industrial Countries*, Oxford, Clarendon Press, 1995.
- United Nations, *Partnership & Reproductive Behaviour in Low-Fertility Countries*. New York, United Nations, 2003.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4 Revision Population*

- Database. New York: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05.
- United Nations, World Contraceptive Use 2005, 2006.
-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06 Revision Population Database. New York: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07) (<http://esa.un.org/unpp/>).
- Van de Kaa, Dirk,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Vol. 42, No. 1, 1987.
- Van de Kaa, Dirk J., "The Idea of a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Industrializ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Tokyo, Japan: The National Institute of Population and Social Security Research, 2003.
- Van Imhoff, Evert & Nico Keilman,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Comment,"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6, No. 3, 2000.
- Wagatsuma, Takashi, "Chapter 7: Sexual behavior of unmarried women: Sexual experience, contraception (oral pills), pregnancy and abortion" in Summary of Twenty-fourth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The 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The Mainichi Shimbun, 1996.
- Wagatsuma, Takashi, "Chapter 6: Public awareness of the low dose pill" in Summary of Twenty-fourth National Survey on Family Planning, ,, The Population Problems Research Council, The Mainichi Shimbun, 1998.
- Wall, Richard, "Leaving Home and Living Alone: A Historical Perspective," *Population Studies*, Vol. 43, No. 3, 1999.
- Yasuda, Tokio, "The Relevance of the JGSS as Repeated Cross-Sectional Surveys: Merits of Short Survey Intervals." *Annals of Sociology* (Waseda University), Vol.47, 2006(in Japanese).
- Zeng, Yi & Kenneth C. Land, "A Sensitivity Analysis of the Bongaarts-Feeney Method for Adjusting Bias in Observed Period Total Fertility Rates." *Demography* 38(1), 2001.

- 鈴木透, “近年の結婚力と出生力の低下について” 『季刊家族経済研究』 47, 2002.
- 日本内閣府 共生社会政策担当, 「少子化社会に関する国際意識調査」報告書, 平成18年3月 内閣府政策統括官 (共生社会政策担当), 2006 平成17年度.
-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人口推計: 平成9年1月推計』. 研究資料 291号, 1997.
-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人口推計: 平成14年1月推計』. 研究資料 303号, 2002.
-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人口推計: 平成18年12月推計』, 2006a.
-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人口統計資料集-2006年版』, 2006b.
- 日本 厚生労働省 社会保障審議会 人口構造の変化に関する特別部会, “出生等に對する希望を反映した人口試算”, 2007.
- 阿藤誠, 『現代人口學』 日本評論社, 2000.
- 廣鳴清志, “出生率低下をどのようことらえろか?-年齢別有配偶出生率の問題性-” 『理論と方法』 30(2), 2001.
-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人口推計: 平成9年1月推計』. 研究資料 291号, 1997.
- 日本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日本の将来人口推計: 平成14年1月推計』. 研究資料 303号, (2002).
- 鈴木透, “近年の結婚力と出生力の低下について.” 『季刊家族経済研究』 47, 2002.
- [internet resources]
- http://www.coe.int/t/e/social_cohesion/population/demographic_year_book
- <http://library.mohw.go.kr/volcanoi/index.html>
- <http://www.mhlw.go.jp/index.html>
- <http://www.meti.go.jp/report/tsuhaku2005/index.html>
- <http://www.nso.go.kr/newns0/main.html>
- <http://www.ipss.go.jp/syoushika/tohkei/Popular/Popular2005.asp?chap=0>
- http://www.oecd.org/topicstatsportal/0,2647,en_2825_495609_1_1_1_1_1,00.html

<http://www.moi.gov.tw/stat/>

<http://www.dgbas.gov.tw/mp.asp?mp=1>

<http://hdr.undp.org/reports/global/2005/>

□ 저자 약력 □

• 김 승 권

미국 University of Hawaii 사회학 박사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저서〉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공저)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
연구원, 2002. (공저)

• 전 광 희

현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김 태 현

현 교원대학교 일반사회학과 교수

• 이 성 응

현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Kojima Hiroshi

현 일본 후생노동성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 국제관계부장

• Suzuki Toru

현 일본 후생노동성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 국제관계부 제3실장

• Ryuzaburo Sato

현 일본 후생노동성 국립인구·사회보장연구소 국제관계부

연구보고서 2006-22-1

초저출산 국가의 출산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한일 비교연구

A Study on the trends of Fertility Behaviors and policies in the
lowest fertility countries, Korea and Japan

발행일	2006년 12월 일	값 10,000 원
저 자	김 승 권 외	
발행인	김 용 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산42-14 (우: 122-705)	
	대표전화: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대명기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ISBN 978-89-8187-418-6 93330